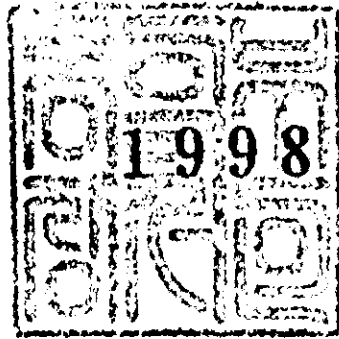


제17회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입선작

# 대학생 통일논문집



통일교육원



## 책 머리에

올해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해이면서도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대와 설레임을 낳았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분단 반세기의 대립과 갈등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개선하기 위해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누구나 분단의 장벽을 넘어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시대를 이끌어 갈 젊은 주역들로부터 대북 정책과 제에 대한 참신한 지혜를 모으기 위하여 1982년부터 『전국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제 17회 째를 맞이하였는데 그동안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훌륭한 의견들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전국 64개 대학에서 114편의 논문이 응모되었으며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8편의 입선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논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최근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듯 주제가 다양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제시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예년에 비해 분석기법과 논증면에서도 향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통일논문 공모사업이 새 세대들의 통일의지를 북돋우고 통일에 대비하는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대학생들의 참신한 의견을 담은 이 논문집이 미래지향적인 통일논의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8년 12월

통 일 교 육 원

# 심 사 평

정 세 구  
(서울대 교수)

통일교육원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올려진 22편의 논문을 심사하면서 느낀 소감은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매우 넓은 시각과 건전한 통일관을 지녔다는 것이었다. 6·25를 경험한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매우 편협한 관점과 북한의 선전논리에 부화뇌동하는 통일관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심사한 논문들은 기성세대의 편견을 일시에 불식시키는 우수한 논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본선에 오른 논문은 모두가 우수하였지만 그중의 몇편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그 논문들이 높은 수준의 학문적 근거를 지녔다기 보다 대학생의 논문다운 참신함과 효용성이 돋보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논문은 우리에게 통일이 실현될 경우 혹은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경협이 본격화된 경우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인만큼 그 훈련의 기초계획을 세워 본 것이었다. 특히 최근 현대그룹 기업인들의 방북과 함께 경제 특구의 북한 개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 논문은 매우 시의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2편의 논문 또한 많은 장점을 지녔다고 하겠다. 한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한국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형성을 위한 교육계획을 설계함으로써 매우 미래지향적인 그러면서도 실용가능성이 높은 연구를 추진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의 의식과 그에 따른 여론의 형성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언론 특히 영향력이 높고 특별한 사회 계층을 대변한다고 알려진 대표적 일간지의 사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방향을 정확하게 밝혀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논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심사평에서 밝혔듯이 대학생들의 연구는 기존의 학자들의 연구처럼 학문적인 수준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기보다는 우리의 현실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비한다는 미래지향적 자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응모할 대학생들은 이런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끝으로, 주최측에 대한 당부말씀은 대학생들에게 이와같은 논문들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 공모'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만큼 IMF시대라고 삭제 혹은 축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 심 사 평

백 영 옥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제고와 건전한 통일외식 합양을 위해 통일교육원이 주관한 『98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에 응모한 114편의 논문중 제3차 심사에 올라온 22편의 논문을 심사하면서 대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더불어 연구분야도 몇몇 특정분야중심에서 점차 타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었다.

제3차 심사대상인 논문 22편의 주제를 보면 새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개선과 관련된 논문이 5편, 통일교육과 관련된 논문이 4편,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방안에 관한 논문이 3편,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언론대책방안에 관한 논문이 2편, 기타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치경제학, 남북통일환경에서 북한주민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방안, 통일후 한반도 국토개발 구상, 통일후 남북한 통화 통합,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모색, 통일한국을 위한 민족문화 발전방안, 청소년의 대북 이질감 완화방안 연구 등이었다.

이러한 논문들은 근대 한국 경제발전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실직자가 양산되고 졸업을 앞둔 4학년들의 취업이 암담한 현실에서 취업준비에 매달리는 학생들 사이에선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쓰여진 것이라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과거보다 여러 분야에서 7천만 우리민족의 명운이 걸린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적

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여 당선작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남북통일환경에서 북한주민을 위한 직업훈련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는 북한주민의 직업훈련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다는 남북한 현실을 반영한 보다 더 적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은 남았지만 통일과정에서나 통일 이후에 가장 시급히 해야 할 북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세계화에 따른 통일논의의 개선과 통일에 대비한 통일교육 방안-초등학생 교과서를 중심으로'한 연구는 조금 더 보완한다면 당장 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을 위한 언론의 개혁과 역할-김대중정부 이후 조선·동아·한겨레 신문사설을 중심으로'한 연구는 주요 일간지의 사설의 내용분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가끔 자의적인 해석으로 치우친 점이 아쉬웠다. 위에 열거한 당선작 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들도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했다면 수준 높은 논문이 될 수 있었으리라 믿는다.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통일된 조국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는 통일된 한국을 이끌어 나아갈 대학생들의 책무이기에 내년에는 보다 더 질 높은 많은 논문들이 제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 심사 후기

박 영 호

(민족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잠재적으로나마 생각을 하게되는 관심 영역중의 하나이다. 그 만큼 분단극복의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다. 금년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추진·시행되고 있다. 남북간에 불신과 대립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남북대화가 처음 시작된 70년대초와 비교해볼 때, 새로운 세기를 바로 눈앞에 둔 지금의 남북관계는 분명히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속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청년학생들에게 통일 문제가 여전히 생활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믿음은 금번 98년도 전국 대학(원)생 통일논문을 심사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통일논문을 심사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금년처럼 다양한 분야에 걸친 논문들을 접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남북관계의 영역이 넓어진 이유도 있겠으나, 대학(원)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특정 전공영역을 뛰어 넘어 여러 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을 발견한 것같이 기쁜 마음으로 심사에 임했다.



본심에 올라온 논문들은 모두 논문작성자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열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성의가 담겨 있었다. 어떤 학생들은 그 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문제에 도전하였으며, 또 다른 학생들은 논문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비교적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러 학생들이 새로운 시대적 흐름의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논문작성자의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에 뒷받쳐주기 위한 자료의 활용, 내용 분석의 방법, 논리전개 등에서 창의성, 체계성, 객관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미비점은 앞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입상한 학생들은 물론 아깝게 입상하지 못한 모든 학생들의 성의와 노력, 그리고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자세를 칭찬해주고 싶다. 금번 통일논문 현상공모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21세기 통일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을 앞장서서 주도할 역군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도 통일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진해줄 것을 기대한다.



# 차 례

## ◆ 최우수작

- ▣ 남북통일환경에서 북한주민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방안 ..... 3  
한 상 복, 송 지 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디자인과 4학년)

## ◆ 우수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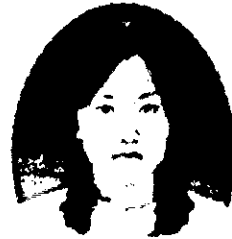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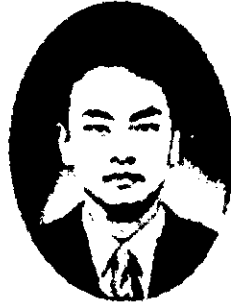
- ▣ 세계화에 따른 통일논의의 개선과 통일에 대비한  
통일교육 방안 ..... 61  
홍 기 금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 통일을 위한 언론의 개혁과 역할 ..... 129  
김 양 근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

## ◆ 가 작

- ▣ 정보화 세대의 특성과 통일교육 방향 ..... 185  
김 현 식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 ▣ 통일한국의 국가능력 강화를 위한 정당성 확보 및 바람직한  
통일의 모색 ..... 225  
김 선 남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	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75
	김희연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	사이버 세대의 의식구조 특성과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	313
	장은영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	재정위기하에서의 통일정책의 방향 .....	359
	최은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남북통일환경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방안



성 명 : 한 상 복  
          송 지 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디자인과

## 〈 목 차 〉

- I. 문제인식
- II. 문제연구
- III. 문제해결
- IV. 결    론



# 제 I 장 문제인식

## 1. 문제 제기

통일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職業問題, 經濟問題, 신분의 문제 등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의 變換과정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독일통일과정에 있어서도 구 동독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혼란기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었던 것들은 통일 독일이후 경제의 주도권이 서독으로 변해가면서 동독주민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되었고, 동독인에 대한 직업문제가 社會問題로 擡頭 되었으며, 동독인들은 자본주의 체제변환과정에서 구 서독인들과 심리적 갈등, 고 실업률에 대해서 정신적측면에서 자신들은 식민지배나 자본주의에 의한 예속된 결과로 민족의 통일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국가에서 한쪽의 국한된 문제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통치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전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대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환경 준비에 적합한 方案들이 많은 論文을 통해서 발표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지 못하고 終論을 해왔다. 그래서 직접적인 대안과 방안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직업훈련측면에서 북한주민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의 경험과 유사한 독일의 결과를 교훈 삼아 우리의 통일환경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한다.

獨逸의 사례처럼 경제적, 체제적 격차가 있는 두 개의 體制가 하나로 통

합 될 때는 선진환경에서 생활한 국민보다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생활을 하던 국민의 적응문제가 더욱 심하다. 따라서 共產主義체제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변화되어진 산업환경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統一政府의 役割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이 남북통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직업훈련방안을 모색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경제적인 격차와 갈등을 조기에 해소함과 동시에 동등한 통일국가의 국민으로서 직업적 자아실현을 위한 職業訓練 방안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 범위와 연구방법

본 주제의 연구범위는 職業訓練을 중심으로 우리의 환경과 비슷했던 독일의 통일과정에서의 구 동독에 대한 직업훈련의 정책, 실시방법, 직업정책의 변화 단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북한의 직업훈련상황과 직업 및 직장의 상황을 통해 문제점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여, 남북통일환경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다. 본 연구는 문제제기, 문제연구, 문제해결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의 연구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문제 제기 단계는 본 연구의 해결을 위한 문제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문제연구단계에서 직업훈련의 역할과 정의를 통해 통일과정에서의 직업훈련의 역할을 알아보고, 통일국가의 예로서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직업훈련의 실시 방법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며, 다음으로 북한의 직업훈련 상황과 직업의 구조를 알아본 후 문제점을 파악한다. 독일의 사례와 북한의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이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업훈련의 효과적인 방향 알아보고자 한다. 문제해결단계에서는 문제연구단계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와 방안을 우리의 통일환경에서 북한주민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방안을 제시하고 직업훈련 실시 분야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고 결론을 짓고자 한다.

## 제 II 장 문제 연구

### 1. 직업훈련의 정의, 역할, 분류

#### 1-1. 직업훈련의 정의

직업훈련이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나 취업한 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 시키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광의로 定義하는 경우에는 어떤 직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또는 그 직업에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형식(formal) 또는 비형식(informal)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모든 직업교육에 해당한다. 협의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 미만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및 성인들을 교육시키는 형식 또는 비형식 교육의 일부라고 정의된다.

직업훈련의 정의를 정리하면 개인이 학사학위 미만의 학력을 요구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 신체적 특성, 가치관 등에 알맞는 일을 선택하며, 그 일에 필요한 지식, 기능, 이해, 판단력, 일에 대한 습관 등을 개발하거나, 또 이미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일을 개선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사회교육, 그리고 일의 현장을 통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全體教育의 일부이다.<sup>1)</sup>

이러한 직업훈련은 국가와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직업훈련은 이런 인력개발에 앞서 개인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는 일의 세계를 탐색, 선정, 유지, 개선 토록하여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가의 인력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하

---

1) 이무근, 직업교육학원론, 교육과학사, 1996.2 24p.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이란 직업훈련교육이 단순히 생계 유지 수단으로 직업준비를 하는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의 대가에 경제적 보수가 따르지 않더라도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부름 받은 일(calling)까지도 포함된다. 이 경우 직업훈련은 vocational training이라고 칭하여 진다. vocational training과 occupational training은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나 구체적으로는 vocational training은 일의 대가로 경제적 보수를 받음으로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occupational training은 일의 대가로 경제적 보수를 받음으로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 1-2. 직업훈련의 역할

### (1) 직업훈련의 목적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 향상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 (2) 직업훈련의 필요성

무기능 유휴노동력을 생산인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산업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고 급격한 산업기술변화에 따른 기술혁신에 부응할 기능수준의 고도화를 피하며 직업생애에 걸친 자기개발 의욕 충족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직업전환을 원활화 시키기 위함이다.

### (3) 직업훈련의 원칙

- 1) 직업훈련은 근로자의 직업생활 전기간을 통하여 단계적, 체계적으로 실시
- 2) 직업훈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육과 산업사회와의 밀접한 관련하에 실시

3)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은 중요시하게 실시

4) 중고령자, 신체장애자, 고용촉진대상자 및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은 중요시하게 실시

### 1-3. 직업훈련의 분류

#### (1) 훈련주체에 따른 분류

1) 공공직업훈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직업훈련

2) 사업내직업훈련 :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

3) 인정직업훈련 : 공공직업훈련 및 사업내직업훈련외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

#### (2) 직업훈련기관 형태 및 직종

형 태		교육 훈련 직 종
공 공 훈 련	공 공 단 체 (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각 산업별 공통수요 직종으로서 사업내직업훈련으로 양성이 어려운 직종(금형, 기계공작, 용접 등) ○ 수출전략직종(보석가공, 염색, 제직 등) ○ 첨단 및 신수요직종(전산용용기계 등) ○ 기술자 양성
	정 부 기 관	○ 수용자의 직업능력 배양을 위한 직종 (조적, 미장 등)
	지방자치단체	○ 수요가 많은 직종(용접, 자동차정비 등) ○ 농가수입증대 및 농촌필요 직종 (편물, 봉제, 전기 등)
사업내 훈련 (1,000인이상 사업체)		○ 자체 수요직종의 단능공 및 준다능공 (선반, 전자, 건축목공 등)
인 정 훈 련		○ 공공·사업내 직업훈련으로 양성하기 곤란한 직종(조리, 인쇄, 정보처리, 도배 등)

(3) 훈련과정에 따른 분류

- 1) 양성훈련 :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 2) 향상훈련 :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 3) 전직훈련 :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 4) 재 훈련 :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4) 훈련과정 및 기간

훈련과정		훈련생의자격	훈련기관	
양성훈련		14세 이상인 자. 다만, 직업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직종 및 내용에 따라 연령 및 학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개월이상	
향상훈련	자격취득향상훈련	상위등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4주이상	
	직무능력향상훈련	일반훈련	신기술 등의 직무능력을 추가로 습득 또는 향상시키려는 자로서 당해 훈련직종의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3일이상 (24시간이상)
		관리감독자훈련	관리 감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추가로 습득하거나 향상시키려는 관리·감독자로서 당해 훈련직종의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4주이상
전직훈련		전직자 또는 전직예정자	4주이상	
재 훈련		당해 훈련직종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직무의 보충이 필요한 자	1주이상 (40시간이상)	

\* 중소기업등의 향상훈련 및 재훈련과정은 훈련생 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5) 직업훈련수준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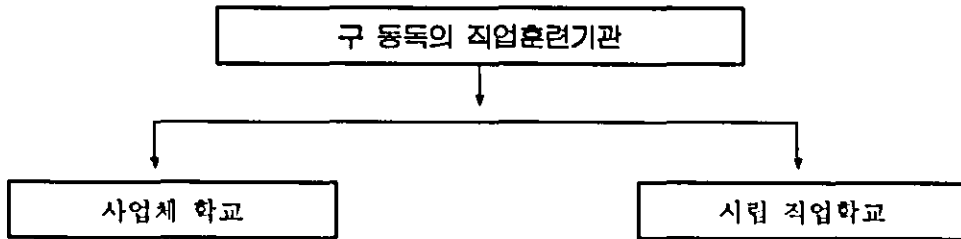
과 정 별	수업연한	과 정 내 용
기능장	야간 1년·2년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직업관리 및 소속기능인에 대한 지도감독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는 과정
다기능기술자	주간 2년	2가지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공정에서 생산성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과정
기능사양성 2년	주간 2년	기술변화에 요구하는 제품의 생산계획, 설계, 가공 생산 및 기계설비의 설치, 보수, 유지관리 등의 기술전반에 관한 지식과 적용력을 갖춘 고급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
기능사양성 1년	주간 1년	산업현장에서 제품생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기능을 갖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과정
자격취득향상	야간 1년	산업현장에서 신기술변화에 대응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전문지식, 기능 등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

(6) 훈련방법에 따른 분류

- 1) 집 체 훈 련 :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자체훈련과 위탁훈련으로 구분)
- 2) 현 장 훈 련 :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 3) 산학협동훈련 : 집체훈련·현장훈련 및 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육이 상호 연계된 직업훈련(공고 2+1훈련)

## 2. 독일 통일 과정에서 舊 동독지역 주민을 위한 직업정책 사례 연구

### 2-1. 舊 동독의 직업훈련



동독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공산당에 의한 중앙 통제식 경제사회 제도를 유지시켜왔다. 한마디로 동독은 생산품과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각계각급의 학교 졸업생들의 생산 보급면에 있어서도 통제되어 왔다.

소위 도제훈련목록을 이용하여 경제계의 필요에 따라 학교 졸업생들을 배당하였다. 각 지방에는 직업지도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사업체, 학교, 정치 조직집단 및 언론매체와의 협력으로 국가의 필요와 청소년 직업희망을 조정하고 일치시키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우선 관심분야를 보면 물론 국방분야가 최우선이고 다음으로 공업, 건축, 농업분야의 순서였다.

전체학교 졸업생90%가 최고로 선호하는 직종의 훈련을 받았다는 이데올로기적인 공식주장과는 달리 사실은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분야를 배웠는데 이것은 훈련동기의 불충분과 훈련후의 불균형적인 재분배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동독에서는 동구권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사업 내 훈련을 중요하게 여겨 학교 직업교육과 밀접하게 연결 지었는데 이는 독일의 전통적인 이원화 직업훈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은 직업훈련 내용의 선정 및 편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도제(훈련생)는 모든 책무를 가진 직원으로서 학생이 아닌 노동자 계급인 주도사회계급의 일원으로 간주되었다.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은 '사업내 직업학교' 인데 정부가 설치한 학교이자 동시에 기업의 일부분으로서 이론과 실기 두 가지를 모두 가르친다. '사업내 직업학교' 외에 시립직업학교를 운영하여 자체 사업내 직업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에서 훈련 받는 도제들을 수용하였다.

사업체들은 이 밖에도 '기능인' 또는 '기능장'이 되고자 하는 성인근로자의 훈련도 실시하였다. 사업체들은 이를 위해 '산업대학(Enterprise Academies)'이나 사업장내의 직업학교에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하였는데 통칭 '사업체 학교'라 불렀다.

특히 대기업들(구 동독에서는 '콤비나트'라 칭함)은 훈련내용 결정, 교과과정 및 훈련계획의 개발, 발전에 대한 책임을 떠맡았다. '콤비나트'의 종업원(기사, 기술사, 훈련교사, 기능사, 기능장, 노동사회학자, 심리학자, 노동조합 간부)들은 직업훈련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도제들의 실기훈련은 주로 생산직무를 기초로 실시되었으며 이들 직무에는 기업의 일반제품생산이나 회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무가 포함되었다.

실기훈련의 일부는 작업(노동)집단 특히 소년단에서 수행되었다. 훈련기간의 마지막 40~70일은 장래의 취업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에 할당하였다. 사업체들은 소위 '기능지도직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자를 선택하여야 했다. 구 동독에서는 약 100,000명의 '기능지도직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사회, 노조 그리고 소년단에 의해 공동 선출되는 사람들이다.

사업체들은 미래에 그 필요가 예상되는 자질구조와 성인근로자 훈련을 포함한 직업양성 및 향상훈련을 위한 프로그램과 과정을 계획하였다. 또한 사업체들은 직업훈련용의 기술장비를 갖추 의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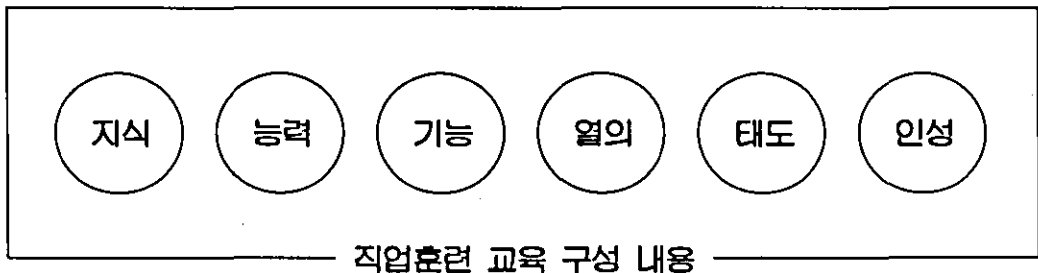
실기훈련교사(기술교육자, 경제교육자, 교육기능장)들과 성인직업교육 실시 요원들은 회사 종업원들이었으며 이러한 관계로 이들이 생산과정의 제반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곧 생산라인에서의 훈련생에 대한 요구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장점이라고 생각 하였다.

비용면에서는 사업체들이 실기훈련비용, 훈련장비 및 시설투자비와 작업 향상 훈련을 위한 투자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

기능장이 경영하는 수공업체에는 훈련실시가 허용되었다. 수공업체에서는 그러나 실기훈련만 담당하였고 이론지도는 "시립직업학교"에서 실시하였다.

### 2-1-1. 舊 동독의 기능근로자와 이들의 교육 및 훈련

기능 근로자들은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직업의 표준구성내용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었으며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계속적으로 심화 시키도록 하였다.



#### (1) 교육대상자 분류기준

- a) 일반기초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전공을 가진 기능근로자
- b) 일반기초훈련을 받고 한가지 전공훈련을 받은 기능근로자

#### (2) 대표적인 훈련 방식

- 9년간 일반교육을 받은 후 2.5~3년간에 걸친 직업훈련 이수(68직종)
- 10년간 일반교육을 받은 후 대체적으로 2년간에 걸친 직업훈련 이

수 (238직종)

- 기능사 직업의 일부 직무요소만 훈련(기간:1.5년)

(3) 이론수업 구분

- 일반교양과목
- 직업기초훈련
- 직업전공

평균적으로 직종마다 매년 10~20개의 과목을 이수해야 했으며 이론수업은 강의실에서나 견학의 형태로 실시하였다.

(4) 실기교과는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일반생산직무에 따라서 전공교사에 의해 그룹단위로 실시되었는데 1개 그룹은 보통 8명부터 14명까지의 훈련생으로 구성된다.

(5) 실기수업의 주요 운영 형태

- 실습장에서의 훈련
- 실험 훈련
- 훈련생 자율훈련
- 노동집단, 특히 소년단내에서의 훈련

(6) 교사, 교사양성교육 및 근로조건

1990년초에 49,000명의 직업훈련교사와 5,000여명의 생활지도교사가 존재하였다. 기업체에 고용되어 실기훈련지도를 담당하는 "기능지도직원"은 10만명 이었다. 이론교사의 93%와 실기교사의 70%가 교육학을 이수하였다.

이론지도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4년 과정으로 11개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사람은 이공계의 석사 겸 교육자 학위를 받는다.

실기훈련교사는 보통 전문학교와 교사양성훈련기관에서 3년간에 걸쳐 양성되는데 22개 과목을 배우며 졸업자격은 이공계 기사 겸 교육자이다.

동독의 종말기에는 직업 학교 교사들의 연령층이 점차적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교사의 봉급인상률이 다른 경제 분야에 비해 더 낮았기 때문이었다. 직업훈련 시설 및 장비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아주 초라해지기까지 하였다.

#### (7) 점정

여러 가지 과목과 직업훈련과정은 수료시험합격과 함께 종료된다.

수검자들에게는 점정의 필수 부분으로서 필기숙제가 부여되었고 회사에서는 직종별 시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장이나 기사로서 해당분야 전문가이어야 한다.

시험위원으로는 노동조합이나 소년단의 회원이기도한 교사들이 임명되었다. 시험위원회는 이론문제, 실기문제와 함께 필기숙제의 주제도 결정하였다. 이론시험, 실기시험, 필기숙제의 합격 여부 결정 등의 시험절차는 시험위원회에서 관리하였다. 수험생의 전체특점은 규정 및 시험규칙에 따라 시험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시험위원은 모두 매년 시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했으며, 시험진행 회의록은 기록 유지되었으며 기능 근로자들의 자격증 사본은 시의 문서고에 보관하였다.

#### 2-1-2. 독일 통일과정에서 舊 동독에 대한 직업정책의 변화단계2)

통독이전 1990년 2월 이후부터 통독 후까지도 동독의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법률, 즉, 고용촉진법이 계속해서 개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직업훈련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은 통일 전 모드로프(Modrow) 정부 하에서 국가의 지원과 전환훈련을 지원했다.

1990년 2월 동독정부는 이미 서독과의 통일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동독의 각의는 직업소개 기간 중에 ' 직업 소개기간 중 국민에 대한 국가지원 및 기업의 조정지원 보장을 위한 시행령 '을 의결하여 헌법에 보

---

2) 정연택, 독일통일과 고용보험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8. 4. 34p

장된 '노동에 대한 권리'를 약화시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용이하게 하였다.

동독의 노동법전에 규정된 전환교육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했는데,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1990년 2월 8일 각의의 결의에 의해 근로청(Amter)이 개편되기 시작하였고, 직업소개 및 전환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정부산하에 존재하던 직업지역상담소의 경험, 인원, 재정 등이 근로청으로 이양되었다.

동독 각의는 '국민의 직업전환교육과 직업활동 보장을 위한 시행령'을 추가적으로 제정하여 직업소개 및 전환 교육시에 국가와 기업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근로청은 직업훈련으로 인해 생기는 비용, 즉 강의료, 강의도구, 교통비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동독의 직업훈련 관련 법 규제의 변화는 다음 3단계로 변화를 이루어 갔다.

1단계 -1990년 5월 국가협약의 규정 (제1차 국가 협약)

국가협약은 독일 통일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 된다. 총 제6장 제38조로 구성된 국가 협약 중 제17조~25조는 사회부분과 관련되며, 특히 제17조, 19조, 24조, 25조는 고용과 관계된다.

제17조는 노동법 질서에 대한 기본 원칙이 언급 되었고, 동독에서 존재했던 노동조합조직의 경영참가권은 삭제 되었으며, 대신 쟁의에 대한 규정이 삽입 되었다.

제19조에는 실업보험과 고용촉진의 규정이 도입되었고, 동독의 노동행정기관의 설립에 대한 지원도 합의되었다.

제24조에는 공적부조제도가 규정 되었으며, 제25조에는 실업보험을 위한 연방의 재정보조가 규정되어 1990년에는 20억 DM, 1991년에는 30억 DM을 보조하도록 합의 하였다.

2단계: 1990년 6월 22일 동독 고용촉진법의 제정

1990년 6월 22일 제정된 동독의 고용촉진법은 제1차 국가협약의 시행(1990년 7월 1일)을 앞두고 입법 되었는데, 이 국가협약은 실업보험과 고용촉진에 대해 동독이 서독의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독의 고용촉진법은 서독의 고용촉진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예상되는 동독지역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몇몇 조항이 수정되었다.

특히 실업수당, 단축근로수당, 직업전환교육 및 향상훈련 및 향상훈련, 고용창출사업등에서는 지원조건이 완화되었으며 특히 고용창출사업은 통일 이후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되었다.

고용창출사업으로 통일이후에도 유효했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독 고용촉진법의 제93조 제1항에 의해 199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직업소개를 받으려는 근로자를 실업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되었다.

둘째, 제91조 제4항에 의해 1991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이 결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높게 유지하였다.

셋째, 제95조 제3항에 의해 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지원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법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낮은 지원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었다.

동독과 서독 노동부 관계자의 입법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독 고용촉진법은 동독상황에 맞지 않는 규정을 담고 있어서 실시 후에는 현실성 있는 적용지침이 일부 규정을 대체하였다.

3단계 : 통일협약의 규정 (제2차 국가 협약)

통일협약중 고용촉진법과 관련해서는 제7장 제30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30조는 구 동독지역의 "만 57세를 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퇴직 전환금이 지급된다"고 규정하며 노령연금 수급, 퇴직전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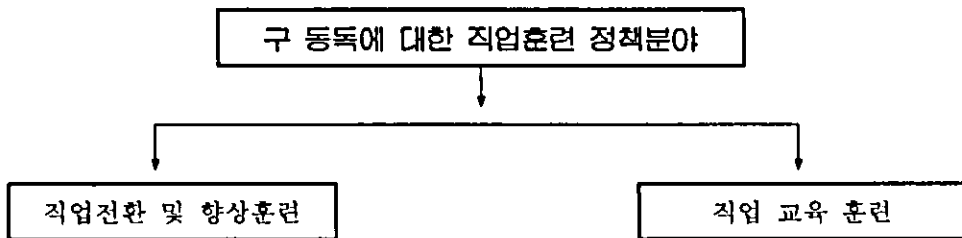
의 급여액, 수급권 및 법규정의 유효기간등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연방고용청은 퇴직전환금을 신청한 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퇴직전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2차 국가 협약 부록의 제1장 E분야에서 제249d조는 직업교육 및 약천후 수당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에 대한 시설지원, 외국인 직업 훈련생 및 학습지진 또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독일 직업 훈련생에 대한 지원, 직업전환교육 및 향상교육에 대한 개별지원, 직업이동 촉진지원, 고령근로자에 대한고용촉진 등의 시행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독을 전후한 독일의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법규정의 변화는 3단계의 과정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 2-2.독일통일 후 舊 동독 지역에 대한 직업훈련 정책



### 2-2-1.직업전환 및 향상 훈련

직업전환 및 향상훈련이 1990년 7월 1일 시행되기 시작한 동독 고용촉진법과 '직업훈련 지원에 대한 시행령'에 따라 향상교육과 전환 교육시 생기는 비용중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행정기관이 부담하도록 되었다.

당시 동독지역노동시장정책의 최상위 조직인 중앙노동관서( Zentral Arbeitsverwaltung)의 지침에 의해 이들 법규의 지원조건이 구체화되었

는데 이는 하위 기관인 고용사무소의 직업훈련 지원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독지역에서는 서독지역에서 이미 시행되는 직업훈련의 검토 절차를 삭제하였고, 강의도구, 작업복, 기타항목에 대한 비용은 고용사무소와 수행기관의 직접 접촉에 의해 지불되었으며, 위임사업의 경우 몇 달에 걸쳐 지원될 경우 매월 비용이 지급되도록 하고 지원이 끝난 후에 정산되도록 하는 등의 특별규정에 의해 향상훈련 및 전환훈련이 지원되었다.

동독지역의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의해 변경된 사항들을 보면,

첫째, 고용촉진법 제 40c조 제 4항에 의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청소년의 양성훈련 지원

둘째, 실업의 직접적인 위험이 아니라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환교육이나 향상교육에 생계비 지원.

셋째, 1991년 말까지 단축근로사업을 직업교육과 연계 시키기 위해 급여가 인상된 단축근로수당지급.

넷째, 고용창출사업과 연계한 10%, 20% 또는 절반의 근로시간에 대한 직업교육으로 199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독일에 적용 등이다.

## 2-2-2. 직업교육훈련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결정 또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등은 사업주나 근로자 등 경제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촉진법에 의한 노동시장정책은 근로자가 다른 방법으로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지원하며, 직업훈련 전체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통독 후 동독지역에서의 직업훈련 지원은 구조적인 실업의 성격과 관련되어 아주 적합한 노동시장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즉 동독당시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도 체제전환에 의해 새로운 직업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동독지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우선 1995년 말까지 특별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실업의 다급한 위험이 없는 경우라도 생계비에 대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었다.

· 또한 직업훈련기관으로는 전문대학, 대학 및 유사훈련기관으로 지원대상 범위가 넓어 졌다.

이 규정은 직업훈련기관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1991년 중반에야 비로서 연방고용청이 지원하는 높은 지원금에 자극받아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많아 졌거나 서독지역의 직업훈련기관이 동독지역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혔다.

1992년 연방고용청의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비는 111억DM로 전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고 42만 5천명이 지원을 받았다. 1992년의 경우 민영화된 기업근로자의 28%와 신탁관리청 기업관리자의 17.6%가 기업내 계속교육에 참가하였다.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촉진법 10차 개정법은 연방고용청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지원규정을 변경하여 지원범위를 축소 시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훈련의 목적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강화되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조건이 더욱 강화 되었다. 또한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동일근로자의 영속적인 참가도 의무대기기간의 도입으로 어렵게 되었다.

1993년 중순 이후 직업교육에 대한 참가자는 감소되고 있으며, 10만명 이상의 참가자가 이 사업이 끝난 후 고용 가능성이 불투명 해졌다.

1993년의 지원액이 전년에 비해 10%가 감소한 것은 질적인 향상과 사업에 대한 철저해진 것에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1월 1일 부터는 이전에는 순입금의 73% 및 65%가 지원되던 생계비가 실업수당의 급여율(67%와 60%)로 감소되었다.

통제집단의 부재와 선택상의 왜곡문제 때문에 동독지역에서의 직업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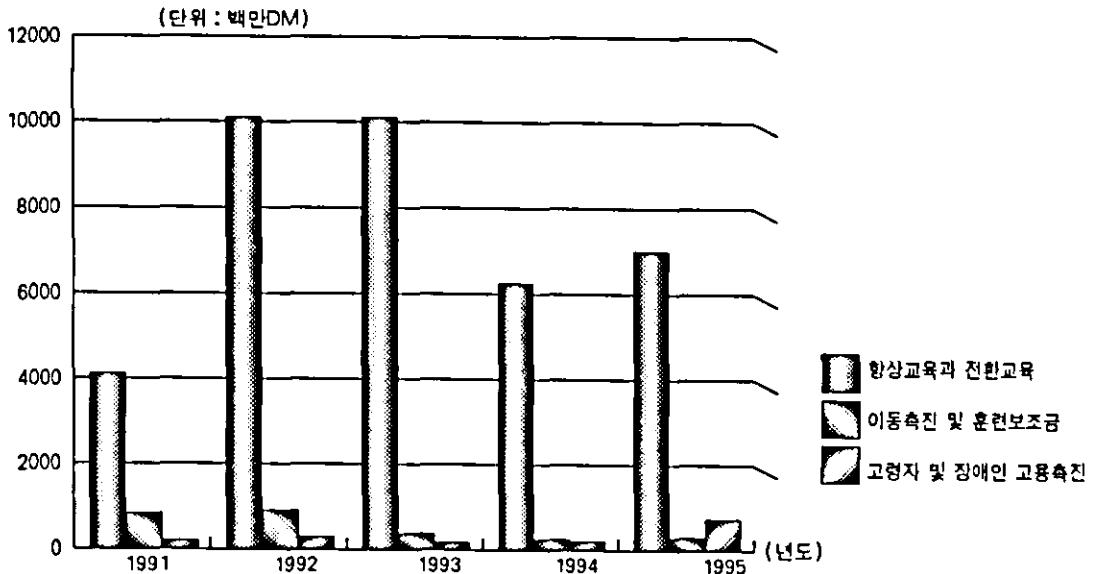
의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보조지표를 통하여 개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입사(교육훈련)보조금과 사업장의 입사훈련 프로그램은 종료 후에 고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들이 실제 사업주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무임승차효과의 위험이 있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여기서 무임승차효과는 사업주가 지원 없이도 실시 하려고 하는 직업훈련을 연방 고용청에서 지원한 경우이다. 이것은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로 실제로는 지원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표는 동독지역에 대한 연방고용청의 지출규모중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미래지향적 사업부분의 직업훈련부분의 지출 규모이다.

위의 사업비의 규모 중에서 가장 많은 지출은 동독인의 직업향상교육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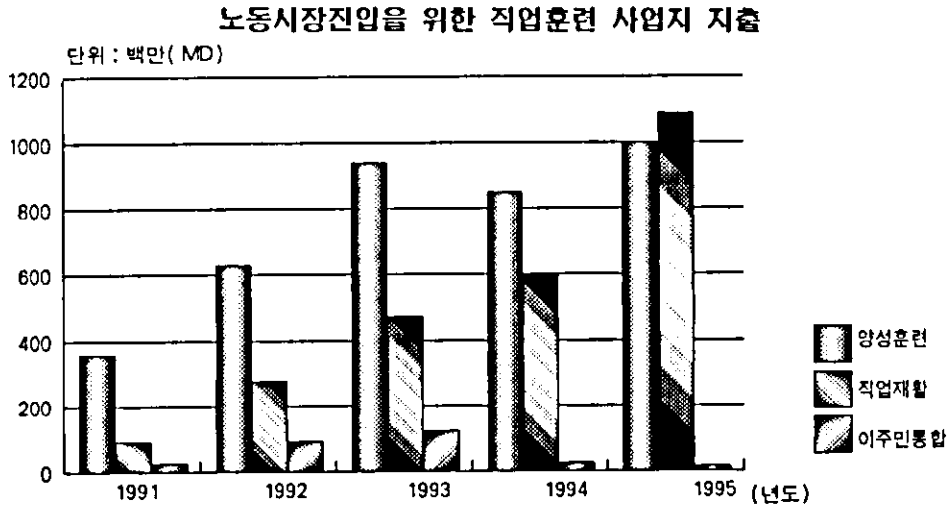
적극적 직업훈련에 대한 연방고용청의 사업비 지출



자료 : Europäische Kommission (EC), 1995.

전환교육비용이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바와 같이 구 동독인의 직업훈련에 대한 지출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비용의 지출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자료 : Europäische Kommission (EC), 1995.

위의 동독지역에 대한 연방고용청의 지출에 있어서 양성훈련 분야에 있어서 지출비용이 고르게 지출되고 있으며 새로운 인력양성 훈련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동독지역 국민에 대한 직업재활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데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3. 독일통일과정에서 舊 동독지역 국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 방안

독일통일과정에서 노동시장정책의 목적 및 과제는 고용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업무수행과 수행결과는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노동관서를 전제로 한다.

통일이전에 동독에는 임금에 의해 노동력의 수요, 공급이 정해지는 시장

경제적 의미의 노동시장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노동력의 질적, 양적 수급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정책도구와 규모는 작지만 담당행정기구는 존재하였다.

통일이 전망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경제체제하의 노동시장정책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적인 기초와 행정기관이 준비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의 동독 정부는 1990년 7월 1일로 예정되었던 경제, 화폐 및 사회통합으로 인한 고용의 감소 및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때문에 서독제도와는 독립적인 노동시장정책의 발전 틀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서독의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 7월 1일부터 동독지역에는 서독의 고용촉진법에 몇 개의 특별규정이 첨가된 소위

‘동독의 고용촉진법’이 시행되었으며 이시기에 서독적 의미의 노동행정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 2-3-1. 동독의 노동시장정책<sup>3)</sup>

동독에는 1947년 1월 28일 입법된 ‘실업에 대한 강제 보험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나 1977년 6월 16일 새로운 노동법전의 입법에 의해 삭제되어 그 후에는 실업보험에 의한 급여가 없었다.

실업급여가 삭제된 이유에 대한 의무가 보장된 “사회주의 체제인 동독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며, 동독의 사업이 감축 될 경우 근로자들에게 동질의 일자리를 다른 부서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동독의 통계연보는 1958년에 마지막 실업통계를 보면 실제로 1961년 베를린 장벽건설 때까지 동독은 서독으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해 노동력의 만성적 부족에 시달렸고, 이 현상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동독정부는 여성근로자 및 고령근로자 등 잠재노동력동원과 산업합리화에 의한 근로시간의 단축 노력에 의해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처했다.

---

3) 정연태, 독일통일과 고용보험제도, 한국노동연구원, 66p

1977년 노동법전은 실업급여의 삭제와 함께 변경협약 및 이양협약에 의해 고용관계를 보장하고 이양수당을 지급하였다.

이양수당은 합리화 조치 또는 구조조정에 의해 직업훈련 후에도 이전까지의 평균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동독에서 비록 완전고용이 이루어져 광범위한 실업은 아니더라도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이나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였는데, 경제체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되지는 않았다.

특히 은폐된 실업으로 표현되는 임금을 받는 유휴인력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완전고용을 추구한 결과 라기 보다는 합리화를 위한 투자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본시장 비율에 기인한 기업의 유휴 인력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79년에는 동독내각위원회는 계획 경제에서의 노동력의 수급조정 및 할당을 위해 시나 군 지역에 근로청을 설립하였고, 1980년에는 직장이동을 원하는 약35만명의 근로자가 방문하였다.

근로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근로자의 정당하지 않은 이동을 억제하며, 스카우트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적 중점사업의 해결을 위한 노동력의 중개, 주요 생산단위의 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등이었으며, 개별사업장이 더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해결을 위한 노동력의 중개, 주요 생산단위의 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등이었으며, 개별 사업장이 더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명령권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직장에 대한 소개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근로청의 과제 중 문제가 없는 부분이었으나 근무태만으로 즉시 해고된 구직자에 대한 소개는 어려웠다. 이 경우 근로청은 사업장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의무고용에 대한 지침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었다.

동독에서 직업상담과 직업훈련은 근로청과 별도로 지방 행정단체의 직업상담 및 직업교육부서에서 담당 하였으며 교육부가 관장 하였다.

### 2-3-2 동독지역 노동행정기관의 설립과정

동독지역의 노동행정기관의 형성과 그 역할은 전환과정의 역동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동독지역 노동행정기관의 발전은 통일이전부터 현재 까지 대략적으로 3 단계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각 단계별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이전의 근로 및 근로청의 업무가 확대되는 시기 (1990년 2월~7월)<sup>4)</sup>

동독에는 지방위원회에 속한 지방 근로청이 15개소가 있으며, 시·군 위원회에 속한 근로청이 227개소 있었다. 이 행정 업무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노동 및 임금담당 차관 있었으며, 1990년 3월 이후에는 노동 및 임금 부 장관이었다.

직업상담은 군 및 지역위원회의 직업훈련과 직업상담부서에서 담당했으며, 실업보험은 헌법에 의한 완전고용 원칙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을 위해 1990년 2월 동독의 각의는 직업 소개 기간중 국민에 대한 국가지원 및 기업의 조정지원 보장을 위한 시행령과 국민의 직업전환교육과 직업활동 보장을 위한 시행령, 조기퇴직금 보장을 위한 시행령과 동독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조건하에서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근로청의 개혁 사업등을 의결하였다.

이로 인해 직업소개와 직업상담에 대한 조직이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지역고용사무소조직으로 병합되고, 일시적으로는 주고용청의 업무를 대신할 중앙노동행정기구가 베를린에 설립되었으며 인원의 증원이 있었다.

서독은 동독의 요청에 따라 노동 행정기관의 설립에 대한 인원과 기술적 측면에서 처음 지원을 하였다.

---

4) 정연택, 독일통인과 고용보험제도, 한국노동연구원, 66p

연방고용청과의 첫 협약은 1990년 2월에 있었으며, 연방고용청은 동독에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노동행정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고 동독의 고용촉진법은 서독의 노동부 공무원의 협조로 3개월만에 만들어진 것이다.

제2단계 실질적인 노동행정기관의 설립시기(1990년 7월~1992년 후반기)

경제, 화폐 및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협약이 유효하기 시작한 1990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지역고용사무소의 담당지역이 새로이 정해 졌으며 중앙노동행정기관이 베를린에 설치 되었다.

1990년 10월에는 동독지역의 고용사무소가 연방공용청의 책임하로 편입되었고, 단계적으로 노동행정기관의 건립 및 업무조직화가 이루어 졌다.

기본구조는 1990년 말에 이미 완성 되었으며 반티코프 행정학교 및 드레스덴의 중앙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1991년에는 주고용청이 설립되었는데 맥클렌부르크-포퓰머른주의 관할 주고용청은 기존에 존재했던 북부 주고용청이, 브란덴부르크의관할 주고용청은 베를린 주고용청으로 되었으며, 작센주와 작센-안할트-튀링엔주에 대해서는 새로이 주고용청이 설치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노동행정기관은 1991년 해체 되었다.

주고용청에는 자치행정기구로서 행정위원회 대표의 선임이 이루어 졌고 자문위원회가 해체되었으며 1991년 후반기에는 지역고용사무소에도 행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노동행정기관의 직원은 이 단계에서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1990년 초 근로청의 직원은 3600명이었는데 반해 지방고용사무소의 직원은 1990년 말에는 13000명, 1992년에는 약24,000명에 달했다. 동시에 서독지역에서 파견된 인원이 증가하였는데 1990년에는 약 500명 있던 그 수가 1991년에는 2000명으로 확대되었다.즉 이 단계에서 노동행정기구는 엄청난 폭의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조직화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고용감소에 따른 노동시장 정책을 실시하기위해서 였다.

제3단계 직원의 업무능력향상 및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제고의 시기 (1992년말이후)

이 시기는 견고화의 단계로 조직의 양적 팽창 시기가 끝나고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노동시장정책의 효과제고 등 질적인 정책이 우선되었다.

이 시기의 다른 특징은 1992년 후반기에 고용감소추세가 둔화되었고 대부분 특별규정의 경과기간이 끝났다는 것이다. 고용사무소의 직원들도 초기에는 업무를 익히고, 초과근무까지 해야 했지만, 1992년-93년 이후에는 필요한 경험과 능력이 배양되었다고 평가되는데, 특히 연방고용청의 직원교육이 기여를 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도 훈련의 필요성은 존재하는데 처음에는 범규정과 관련된 업무를 배웠지만 이제는 직업분야 및 행정지식, 사회적 행위에 대한 지식, 법률지식 및 응용, 현대적인 기술 및 업무를 넘어선 헌법 및 행정법에 대한 법률적 지식, 경제학적 기초 등이 필요하다.

고용사무소가 그 업무를 다른 행정 기관보다 신속하고 효과 있게 처리했다는데 대해서 이견이 많지 않지만 업무수행이 최적이 아닌 경우도 있었으며, 급여지급이 늦어진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동독지역의 고용사무소가 통일이전 서독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했음을 고려하고, 노동시장의 정보제공자 및 업무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동독지역 근로자와 사업장에 홍보를 통해 알려야 했고 그 업무능력을 보여야 했음을 고려할 때 그 기능이 과소 평가될 수가 있다.

## 2-4 구 동독지역의 직업훈련실시에 따른 결과와 문제점

### 2-4-1 동독지역 직업훈련 실시결과

대규모 경제정세 변화와 수많은 기업들의 파산결과에 따른 훈련기회(훈

련제공처)의 감소

과도기적 문제의 본질은 구 서독의 직업훈련제도는 부분적으로만 행정규제를 받으며 시장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특성을 갖는 반면 구 동독의 직업훈련제도는 완전히 행정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제도라는데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구 동독의 직업훈련제도는 국가에 의해 조정되는 관리 모델이었던 반면 구 서독의 경우는 국가 조정형 시장 모델이었다.

일본과 같이 "자유"시장 모델인지 아니면 독일처럼 국가가 조정하는 시장모델인지 이기간에 시장모델을 갖기 위한 전제조건은 사유회사가 존재할 때에만 가능하다.

정부 규제식으로 관리되어오던 구 동독 직업훈련제도의 와해는 곧바로 시장원칙에 근거를 두고 질적으로 더 우수하게 관리되는 모델로 즉 대체되어야 했기 때문에 학교 졸업생들에게 충분한 수의 훈련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구 동독의 청소년들에게 숫자적으로 충분한 훈련기회를 수궁할만한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과도기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하였다.

과도기적 조치들은 긴 안목으로 볼 때 국가가 지향하는 직업훈련제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따를 수 있으며 이들 과도기적 조치들이 결과적으로 영구적인 조치가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에 따라 독일은 단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전국적으로 이원화 훈련제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분법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직업학교나 공동훈련센터(그룹훈련센터)에 전일제 훈련과정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는바 여기에 따른 문제의 초점은 바로 이원화 훈련에서와 같이 사업체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연방직업훈련연구소에서 구 동독지역의 이원화 훈련제도 발전에 관하여 최근 발표한 한 연구결



과는 대부분의 훈련지원자의 수용을 위해 동독의 사업체들이 충분한 수의 훈련 수용력을 마련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독의 경우는 훈련 수용력이 훈련 지원자수를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독에서는 훈련지원자수가 98,000명(94년 3월)인데 비해 사업체의 훈련실시 인원은 34,000명 밖에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현재까지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동독의 기업에 관한 수치는 에누리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 2-4-2. 동독지역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문제점

(1)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에서 무임승차효과와 직업훈련기관의 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통일과정에서 사업체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서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이 되었고, 사회적인 분위기에 동승하여 질적 수준이 낮은 훈련기관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직업훈련의 본질이 흐려졌다.

(2)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지원된 사업의 노동시장 적합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될 수 있다.

즉 공공의 재정으로 지원되는 직업훈련사업을 직업훈련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예측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서독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동독지역의 경우 그 정도가 심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 후의 근로자를 받아들일 일자리가 없다면 직업훈련 전략은 불필요할 것이다.

장기실업대신 직업훈련은 개인적 관점에서는 직업능력의 감퇴와 심리적 불안정에 대처하고 후의 직업활동에 대한 가능성을 제고 시키며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유지시켜 산업입지 요인인 잠재노동력을 확장 시켜 장래의 발전에 건인차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고용전망이 불

투명할 때 그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훈련과 고용 관계를 연관지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독지역에서는 지역부흥위원회와 지역 직업훈련 발전센터등의 새로운 조정기구를 만들었으며 지역부흥위원회는 전황초기에 공공행정기관 내에서 투자와 노동시장 지원을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활동했다.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지역직업훈련 발전 센터는 연구 및 상담기관으로서 지역수준에서 직업훈련의 발전을 분석하고 지역의 교육기관과 사업장에 대해 조언하는 과제를 맡았다. 그러나 이 기관은 한시적인 기구였으며 직업훈련의 수급조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3) 동독지역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기업경쟁력의 상시로 동독산업이 붕괴되고 그에 따라 대량실업이 발생했다는 것이 직업 정책의 실효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4) 직업 훈련 교사들의 자격 불일치

동독의 직업훈련교사와 서독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의 불일치로 인해서 혼란이 증대되었고, 교육의 질이 격하되었다.

### **3. 북한의 직업상황 연구**

#### **3-1. 북한 직업훈련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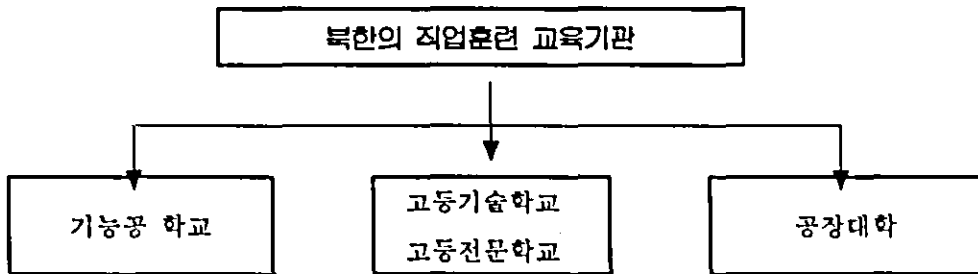
북한에서의 직업훈련의 개념은 정확하게 정의되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으나 구 동독의 예에서 처럼 국가 관리형 폐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정의 하는 직업훈련은 남한의 직업훈련의 개념에 맞추어 북한의

직업훈련을 분류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와 고용기회를 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직업전문학교, 기능공학교, 고등기술학교, 공장학교 등을 통하여 직업교육훈련 및 기능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각 도와 주요도시에 설립되어있는 고등전문학교는 2~3년제의 직업학교로서 각 산업분야에 필요한 숙련공과 기능공을 양성한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은 고등전문학교에 진학하기를 종합 대학 등 일반대학 못지않게 희망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당원이나 행정간부가 되기 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많고 잡수입이 많은 직업을 선택하여 생활에 도움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이후 매년 수십개의 고등전문학교가 설립되고있다.

1977년 사회주의 교육체제 발표이후 15년동안 공장대학은 2.2배가 증가하였고, 고등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킨 곳도 있다.

현재 북한에는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고등전문학교가 560여개로 추정되고 16만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학교의 입학은 해당학교별로 8월중에 시험을 실시, 입학하게 된다.

입학구비서류는 입학원서, 이력서, 자서전, 출신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 추천서, 신체검사증,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명서 사본 등이다.

제출처는 희망 학교가 아닌 거주지 시(구역), 군 행정위원회 이다.

시험과목은 학교별로 상이하나 조선역사, 김일성혁명활동, 국어, 수학, 물리, 화학 등이다.

또한 1972.7 당 제5기 4차 전원회의에서는 동년 9월 1일부터 전국적 11년제 의무교육제 실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1975.9.1 신학기 부터 전국적으로 11년제 의무교육이 실시 되고 있다..

직업교육과 별도로 북한이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치중하고 있는 교육방향은 교과목 편성에서 사상 정치과목 및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 내용 편성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김일성 부자 혁명역사 및 혁명활동, 국어, 역사 등의 과목에 대한 시간 배당률을 높였다.

동시에 자연 기초과목에도 치중, 1인 1기 기술교육을 위하여 자동차, 트랙터의 운전과 유무선통신 기능과목에 대한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는 산업용 기술을 터득시키도록 한다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 졸업 후 군사기술로서의 즉각적인 활용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11년제 의무교육제는 현대과학 및 기술의 발전 추세와 경제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교과내용을 개편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케 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체력을 위해 체육교육의 강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개인보다는 국가의 필요에 의한 교육인 셈이다. 이렇게 북한의 직업훈련 정책은 인본중심이 아닌 당본중심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 3-2. 직장배치의 절차<sup>5)</sup>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 31조에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고 규

---

5) 북한실상종합자료집, 내외통신사 부설북한문제연구소, 1996.7, 263p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만 16세 이상이면 직업을 가져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북한은 비록 헌법 70조에서 “노동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규정되어 있듯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국가 차원의 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이때 성분과 당성이라는 정치적 측면이 주요 기준이 된다.

직무수행 능력은 부수적인 역할밖에 하고 있지 못하다. 직장선택이란 용어보다 직장배치란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이런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서 직장배치 대상자를 크게 보면 고등중학교 졸업생, 대학 졸업생, 군 제대자 등 3부류로 나눌 수 있다.

고등중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다음의 단계를 밟게 된다.

우선 거주지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이력서, 신원진술서, 취직희망서,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작성한 다음 학교에 제출한다. 학교장은 이에 대한 평정서를 작성해 학교 정치담당 부교장에게 넘기게 된다. 이후 정치담당 부교장이 이것을 졸업 3개월전쯤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 제출하면, 노동과에서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직장을 배치하게 된다. 고등중학 졸업생의 경우는 대학이나 군에도 가지 못한 부류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분도 당성도 더욱이 학력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부분 최말단 노동자나 농장원으로 배치된다.

전문학교 졸업자는 각 도 및 직할시의 노동처로부터, 대학 졸업자는 중앙당 간부과로부터 직장을 배치받게 된다.

군 제대자는 출신지역 시군 행정경제위원회 노동과로부터 배치 받게 된다. 일부는 대학 진학이나 당지도원, 사무원으로 배치되나 대부분 공장, 탄광 등지로 「무리배치」 된다.

이 때문에 군 복무에 대한 회의감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군관(장교) 출신자는 계급에 따라 지도원급 이상으로 배치된다.

### 3-3. 북한에서의 직업 분류<sup>6)</sup>

북한은 노동인력을 근로자로 통칭하고 있다. 근로자라 함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사무원)를 말한다. 노동자와 농민은 육체노동자이며, 근로인테리는 자기의 지식으로써 사회에 복무하는 정신 근로자이다.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수첩」을 소지하고 있다. 「로동수첩」은 근로자들의 직장생활을 연대적으로 기록한 법적 문건으로서 노동경력, 기술자격, 표창, 휴가 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다.

#### (1) 기능급수에 의한 분류

기능급수는 노동의 질에 따른 노동자 분류 방법이다.

기능급수는 부문별, 직종별에 따라 최고 8등급까지 나누어져 있다.

운전수의 경우 최하 4급에서 최고 1급까지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기공의 경우 최하 8급에서 최고 1급까지 8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통상적으로는 1~4급을 직장 자체에서, 그 이상을 시군 인민위원회에서 사정한다.

북한 노동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능공들은 기능공학교와 직장 자체에서 조직하는 단기견습반, 기능전습반을 통해 양성된다. 이중 기능공학교(6개월~2년) 졸업생에게는 해당 직종 급수 종류에 따라 보통 2~4급 자격이 부여된다.

전기부문 기능공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부문 기술자의 「기능급수」 등급은 최고 1급에서 최저 8급까지 8단계이다.

---

6) 북한실상종합자료집, 내외통신사 부설북한문제연구소, 1996.7, 266p

5급~8급은 소속 기관기업소의 시험위원회에서 매년 등급별로 1시간의 필기시험과 8시간의 작업시험을 시행, 합격자에게 부여한다.

3~4급은 각 기관기업소에서 5급(또는 4급)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중 일부를 선별, 화학공업부에 추천하여 비준을 받아 부여하고 있다.

1급~2급은 국가과학위원회에서 2~3건의 창의고안 실적이 있는 기술자에게 부여한다.

이중 4급이상 등급은 기관기업소 자체로 부여할 수 없는데다가 그에 상응하는 높은 보수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격취득이 어려운 편이다.

#### 기능급수에 의한 노동자의 분류

구 분	내 용	비 고
단순노무자	일반노동자	무 기능자
기능공	특정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숙련 및 경험을 가진 자	부문 및 직종별로 1급에서 8급까지 기능급수가 있다.
기술	고등기술학교나 고등전문학교졸업생 또는 기술검정시험을 합격한 기술자	자격시험
기사	독자적으로 기술력을 가진 기술자, 주로 대학 졸업생	자격시험

자료 : 북한실상종합자료집, 내외통신사, 1996.7

#### (2) 노동분류에 의한 분류

노동분류는 노동의 양에 따른 노동자 분류 방법이다. 이 분류는 노동의 강도에 따른 분류로서 보수 및 식량 배급량에 차등을 두기 위함이다. 「기능급수」만으로 노동자들의 완전한 임금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 노동분류에 의한 노동자의 분류

분 류	대 상 자
1부류 노동자	조립등 단순 노동자
2부류 노동자	각종 수리공등 경노동자, 전체 노동자의 70% 이상을 차지
3부류 노동자	건설등 중노동자
4부류 노동자	기관사, 지하광부등 위해분야 노동자
특부류 노동자	용해공, 업산제조공등 작업시 건강에 직접 해로운 위해분야 노동자, 1일 6시간 노동자

자료 : 북한실상종합자료집, 내외통신사, 1996.7

### 3-4. 북한의 직업훈련에 대한 문제점

북한에서의 직업훈련에 대한 개념과 의미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여기서 평가하는 북한의 직업훈련은 특별히 규정된 정책의 분야로서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는 데서 문제점이 있다.

- (1) 북한의 직업교육체제는 기능공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전문학교 대학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본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훈련과 교육은 북한의 당발전과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을 함으로서 질적으로 낙후되고 통제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 (2) 중앙 집권적 계획 통제 방식에 의한 직업교육체제로 인해서 북한 주민은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한 직업교육환경에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이 현실로 다가오면 북한식 교육으로 인한 폐단교육으로 새로운 환경에 주민들이 적응하기는 더욱 힘이 들 것이다 .
- (3) 북한의 직업훈련 관리체제는 동독의 사례보다 더 폐쇄적인 국가에



의해서 조정되는 관리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식의 직업 훈련을 정치적인면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

- (4) 북한의 직업교육의 대부분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북한의 GNP의 약25%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직업훈련의 목적을 간과하고 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훈련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5)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의 낙후로 인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어렵다. 북한에서의 직업훈련은 정책적인 지원이 없고 기사나 기수와 같은 특별한 시험이 원시적인 자격 검정 실시로 인해 효과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 (6) 북한에서 직업훈련교사의 양성체제가 없음으로 인해 교육훈련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교사는 현장근무에서 경험을 많은 사람이 신규 노동인력에 대한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단순 노동자에 대한 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 **4. 통일환경에서 북한주민을 위한 직업훈련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 **4-1. 설문조사의 목적**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일시대의 주체 세대인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통일의 관심과 북한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의 중요도와 방향을 알아봄으로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통일정책과제 중 직업훈련 분야의 효과적인 방안을 세우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또한 문항개발에 있어서는 독일의 직업훈련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와 북한의 실상을 고려해서 개발하였다.

설문대상의 선정은 내용의 전문성 때문에 대학 재학생2~3학년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1) 설문조사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디자인공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통일환경에서 북한주민을 위한 직업 훈련 방안에 관한 논문작성을 위해서 대학생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성심껏 설문에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성별      1. 남      2. 여

2. 당신이 예상하는 남북통일의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5년 이내                      2. 5~10년 이내                      3.10~15년 이내  
4.15~20년 이내                      5. 20년 이후

3. 당신이 생각하는 남북의 합리적인 통일방식은?

1. 남한으로의 흡수통일                      2. 남북의 연합정권체제 통일  
3. 연방제통일 후 흡수통일                      4.기타 (                      )

4. 당신은 남북통일이 된다면 북한주민이 통일환경에 가장 적응하기 힘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직업문제      2. 의사소통문제      3.경제적문제      4.정보수용의 문제  
5. 기타(                      )

5. 당신은 남북 통일 시 북한주민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직업훈련                      2. 언어 및 국어통일교육                      3. 이념교육
- 4. 경제적인 원조                      5. 고용문제                      6. 행정적인 원조
- 7. 기타(                      )

6. 당신이 통일과정에 있어서 북한주민을 위한 직업훈련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1. 직업전환 및 향상교육훈련                      2. 신 기능 및 기술교육
- 3. 북한측 산업중심교육훈련                      4. 장애인 직업훈련
- 5. 기타 (                      )

7. 통일을 대비한 직업훈련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1. 통일대비 직업훈련교사의 양성
- 2. 통일대비 직업훈련기관의 준비 및 대책
- 3. 통일대비 직업훈련비용 마련
- 4. 직업훈련의 효과적인 과목개발과 체계개발
- 5. 통일대비 직업훈련실시에 대한 연습훈련실시
- 6. 기타(                      )

8. 통일과정에서 직업훈련의 합리적인 실시 방안으로 생각하는 방안은?

- 1. 북한측 직업훈련교사를 양성 후 자체지역에서 실시
- 2. 남한측 직업훈련교사의 재교육을 통한 북측기관 활용
- 3. 남한측 직업훈련교사와 기관을 활용
- 4. 기타 (                      )

9. 남북통일 시 북한주민의 계층에서 가장 먼저 직업훈련을 실시 해야 할 계층은?

- |                      |              |
|----------------------|--------------|
| 1. 단순노동자(농,수산업,어민 등) | 2. 기술노동자 계층  |
| 3. 사무직노동자 계층         | 4. 공산당 간부 계층 |

10. 북한주민 중 학력수준별 직업훈련 우선 실시방안 대상자로 생각하는 것은?

- |         |              |
|---------|--------------|
| 1. 국졸이하 | 2. 중등 학교졸 이하 |
| 3. 대졸이상 | 4. 영재학교 이수자  |

성심껏 설문에 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설문 일시: 1998. 7. 23 ~ 25

(3) 설문 장소: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4) 설문 대상: 대학재학 2~3학년 남:50명, 여:50명

(5) 설문 방법: 설문지 문답식

#### 4-2. 설문결과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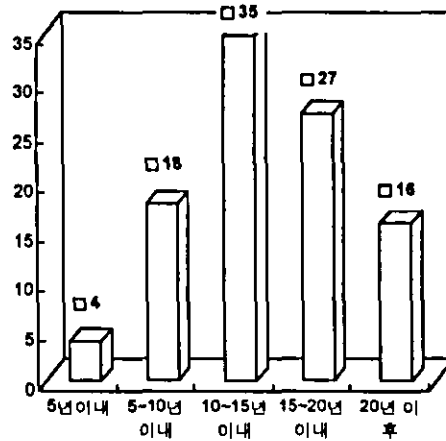
질문 1. 당신이 예상하는 남북통일의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5년 이내     | 2. 5~10년 이내 | 3. 10~15년 이내 |
| 4. 15~20년 이내 | 5. 20년 이후   |              |

### 분석결과

남북통일의 시기는 10~15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각 항목의 결과 응답자 수는 순위별로 보면 10~15년이내가 35명, 15~20년 이내가 27명, 5~10년 이내 18명, 20년 이후가 16명, 5년이내가 4명이 답하여 통일의 시기를 10~20년 이내에 될 것이라고 답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고 답을 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주민을 위한 직업훈련 준비기간을 10~15년 정도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질문 2. 당신이 생각하는 남북의 합리적인 통일방식은?

1. 남한으로의 흡수통일
2. 남북의 연합정권체제 통일
3. 연방제통일 후 흡수통일
4. 기타 ( )

###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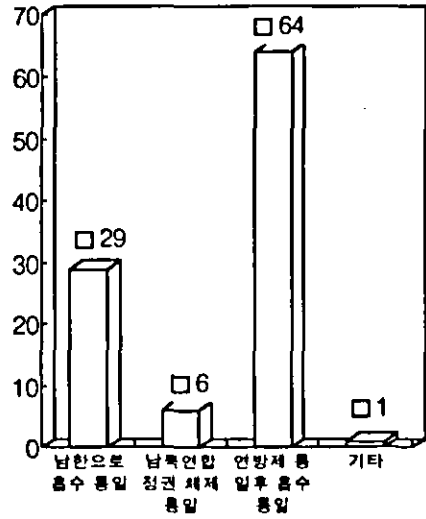
학생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통일 방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답을 한 경우는 연방제 통일 후 흡수 통일 방식에 많은 응답을 했다.

기타 의견에서도 정치적 행정적인 면에서의 일부 통일과 연방제를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부작용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응답자들의 많은 수가 연방제를 답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직업훈련에 있어서 북한지역에서의 선 교육후에 남한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북한 주민에게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질문 3. 당신은 남북통일이 된다면 북한주민이 통일환경에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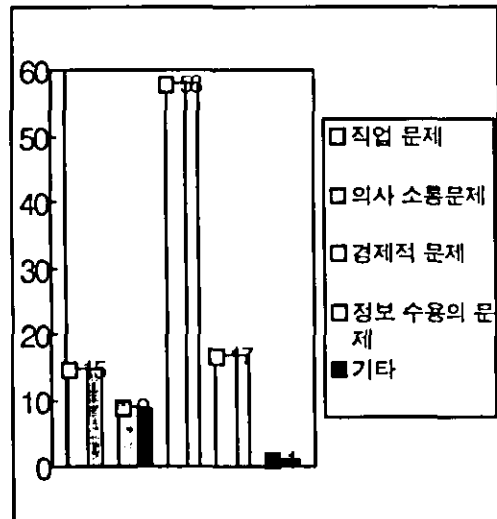
적응하기 힘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1. 직업문제
2. 의사소통문제
3. 경제적문제
4. 정보수용의 문제
5. 기타( )

### 분석 결과

통일환경에서 북한주민의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문제, 정보수용, 직업문제, 의사소통 순으로 응답했는데, 이것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로 발생할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환경에서는 북한주



민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서 문화의 문제가 추가되었다.

질문 4. 당신은 남북 통일 시 북한주민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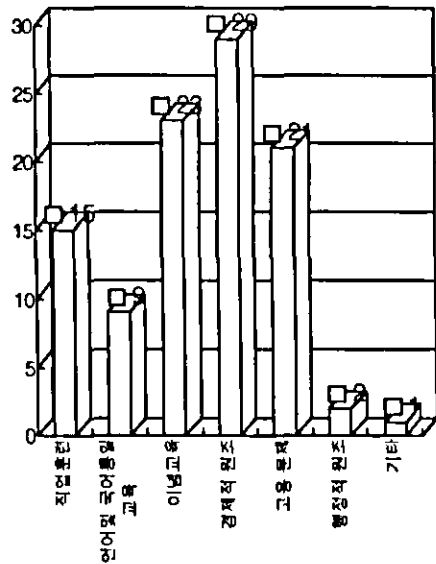
- 1. 직업훈련                      2. 언어 및 국어통일교육      3. 이념교육
- 4. 경제적인 원조                5. 고용문제                      6. 행정적인 원조
- 7. 기타(                      )

**분석결과**

통일 시에 북한 주민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은 경제적인 원조, 이념교육, 고용문제, 직업훈련의 순으로 응답을 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념적인 체제 변화에 대한 환경 적응 교육과 북한 주민의 고용과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결과이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이산가족문제를 답해 주었다.



질문 5. 당신이 통일과정에 있어서 북한주민을 위한 직업훈련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 직업전환 및 향상교육훈련
3. 북한측 산업중심교육훈련
5. 기타 ( )

2. 신 기능 및 기술교육
4. 장애인 직업훈련

**분석결과**

통일과정에 있어서 북한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직업훈련은 북한 쪽의 산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과 새로운 기술과 기능, 그리고 직업전환교육 순으로 응답해 주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연방제통일 후 흡수통일의 방식을 선호한 결과와 비교할 때 북한 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북한 측의 산업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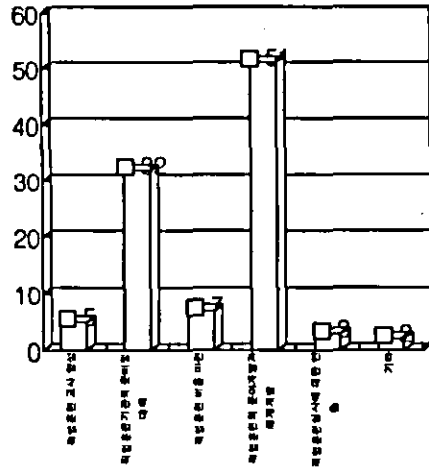
질문 6. 통일을 대비한 직업훈련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 통일대비 직업훈련교사의 양성
2. 통일대비 직업훈련기관의 준비 및 대책
3. 통일대비 직업훈련비용 마련
4. 직업훈련의 효과적인 분야개발과 체계개발
5. 통일대비 직업훈련실시에 대한 연습훈련실시
6. 기타( )



**분석결과**

북한 주민을 위한 직업훈련 준비에  
서 대답은 직업훈련의 과목과 체계의  
개발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직업훈  
련 기관의 준비 및 대책마련이 가장  
우선 순위로 응답을 했다. 이러한 결  
과는 통일 과정에 대비한 직업훈련  
준비에 더욱 세부적인 계획과 준비를  
세움으로서 독일의 경우처럼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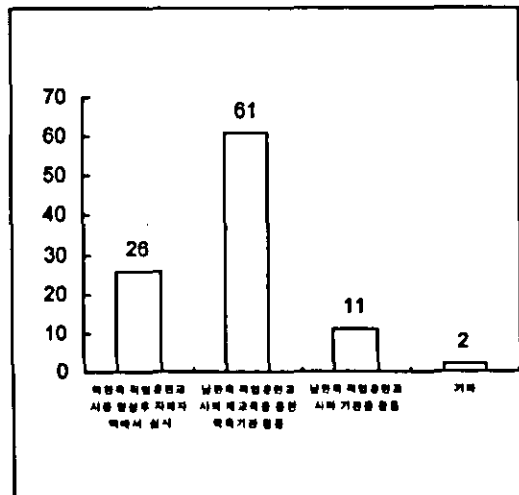


질문 7. 통일과정에서 직업훈련의 합리적인 실시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1. 북한측 직업훈련교사를 양성 후 자체지역에서 실시
2. 남한측 직업훈련교사의 재교육을 통한 북측기관 활용
3. 남한측 직업훈련교사와 기관을 활용
4. 기타 ( )

**분석결과**

통일과정에서 직업훈련의  
합리적인 실시 방안으로 61  
명이 남한측 직업훈련 교사  
를 재교육시켜 북측기관을  
이용해서 북한주민을 직업훈  
련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음이 북한측 직  
업훈련 교사를 양성 후 북측



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순으로 응답을 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을 대비한 직업훈련 교사를 교육시킬 필요성이 제시되고, 기관의 활용은 현재 북한에 있는 것을 이용함으로써 비용의 절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한과 북한측의 직업훈련교사의 적절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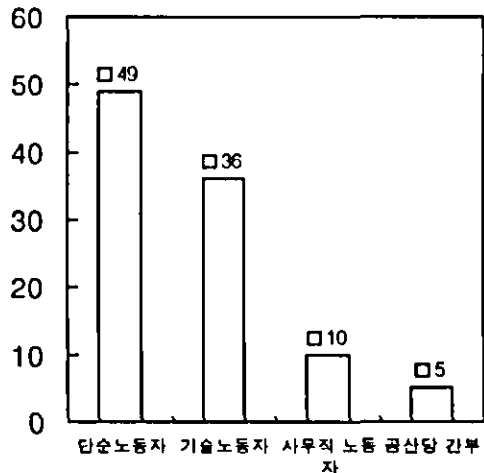
질문 8. 남북통일 시 북한주민의 계층에서 가장 먼저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할 계층은?

- 1. 단순노동자(농,수산업,어민 등)
- 2. 기술노동자 계층
- 3. 사무직노동자 계층
- 4. 공산당 간부 계층

### 분석결과

북한 주민중에서 남북통일시에 가장 먼저 직업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직업 계층으로 단순 노동자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해주었다. 다음으로 기술 노동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단순 노동자 계급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술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독의 경우에도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우리도 이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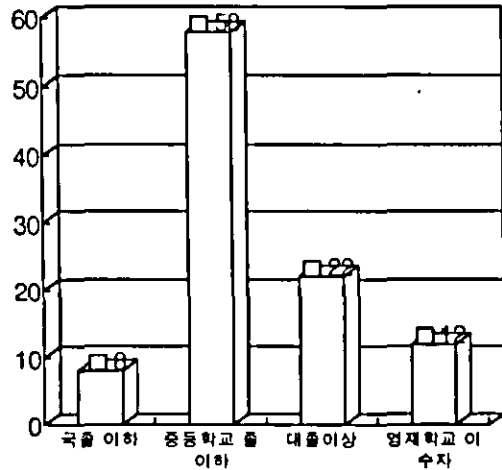


질문 9. 북한주민 중 학력수준별 직업훈련 우선 실시방안 대상자로 생각 하는 것은?

- |         |             |
|---------|-------------|
| 1. 국졸이하 | 2. 중등학교졸이하  |
| 3. 대졸이상 | 4. 영재학교 이수자 |

**분석결과**

학력별 우선 실시 대상은 중등학교 이수자, 즉 의무교육 정도의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가장 많은 답변을 했다. 이는 비교적 통일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들의 직업 훈련에 있어서 통일국가의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제 III 장 문제 해결

### 1. 남북 통일환경에서 직업훈련 방안

#### 1-1. 문제연구를 통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남북통일 환경에서의 해결방안

남북통일에 있어서 북한주민의 직업훈련 실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동독의 경우에는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대한 후유증이 예상보다 크다는데 있어서 실업문제와 주민의 직업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동독주민들에게는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

통일전 동독지역에서는 비록 완전고용이 이루어져 광범위한 실업은 아니더라도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이나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였는데, 사회주의 체제로 인하여 겉으로는 표출 되지는 않았다.

특히 은폐된 실업으로 표현되는 임금을 받는 유희인력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완전고용을 추구한 결과라기 보다는 합리화를 위한 투자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본시장 비율에 기인한 기업의 유희인력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동독지역에서 직업상담과 직업훈련은 근로청과 별도로 지방 행정단체의 직업상담 및 직업교육부서에서 담당 하였으며 교육부가 관장하였다. 그래서 직업문제와 직업훈련분야의 연관성 있는 부분이 독립되어 있어서 동독주민에게는 혼란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동독지역의 직업 훈련의 실시로 발생한 문제를 참고로 하여 남북 통일과정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북한주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무임승차효과와 직업훈련

## 기관의 질에 대한 문제

남북통일 시 직업훈련에 있어서 무임승차효과는 사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자체 수요에 의해서 훈련을 시킬 수 있으나 통일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모든 북한 주민에게 직업훈련과 수당등과 같은 필요이외의 경비를 지출한다는 데서 무임 승차효과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과 실시방법에 있어서 기준과 자격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직업훈련 기관의 질에 있어서 현 기능공학교와 고등기술학교, 고등전문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질은 동독보다 낮은 수준이며 더욱 폐쇄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직업훈련기관의 정비와 직업훈련교사 자격에 대한 일치를 시키며 통일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질의 직업훈련 기관의 난립을 사전에 예측하여 기준과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2)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원된 사업의 노동시장 적합성의 문제.

공공의 제정으로 지원되는 직업훈련교육 사업이 고용분야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진행된다면 적절한 분야에 알맞은 훈련생을 배치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북한측 산업의 발전 방향과 업체의 요구사항(모집분야 및 필요인원)을 참고로 하여 교육을 시키는 '선구인 후교육'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3) 통일시에 북한 지역에서의 임금 상승과 산업의 붕괴로 인한 대량실업 발생에 따른 직업 훈련 대책의 문제.

북한측의 임금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시키면서 점차적으로 자율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해 가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시장 개입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통제에 길들여진 북한 주민들이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 1-2. 통일환경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 직업훈련단계 방안

### 1단계 직업소개 과정

북한 주민이 통일 환경에서 새로운 직업전환과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소개를 받을수 있는 체계적인 기관을 통해 직업의 종류를 찾아서 직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는데 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은 직업소개 기관의 설립으로 북한주민을 위한 서비스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 2단계 직업 기초훈련 과정

북한 주민이 직업훈련을 받는데 있어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직업훈련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본인의 의사에 의해 곧바로 전공과정의 직업훈련을 받는다면 인적, 물적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훈련 전에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훈련 방식이라 볼 수 있으며, 동독의 경우에서처럼 직업훈련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3단계 직업전공훈련 과정

직업기초 훈련과정을 통해 북한주민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능력을 검비한 후 직업전공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직업적 자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공과정에서의 분야는 북한측의 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며 고용문제에서도 북한측 산업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이원화된 교육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원화된 교육훈련은 직업훈련기관과 사업체내에서 실시된다.

동독의 직업훈련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직업훈련 후 훈련생의 낮은 고용률이었다. 따라서 북한측의 산업 활성화 방안 또한 중요한 역할과 필요성을 함께한다는 것이다.

### 1-3. 북한 주민의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대비 방안

#### 1-3-1. 북한 주민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분야

##### (1) 직업전환 및 향상교육 훈련 프로그램

통일 환경에서의 북한 주민의 직업 전환 및 직무 향상을 위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다.

##### (2) 신기능 및 신기술 교육 훈련 프로그램

동종 분야 종사자를 위한 신기능 및 신기술 교육을 통해서 북한주민이 통일 환경에서 새로운 기능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다.

##### (3) 북한측 산업활성화 중심 교육 훈련 프로그램

통일 환경에서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대량 이주를 막기위한 북한측 산업활성화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로 북한 지역에서의 고용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중고령자, 장애인 및 여성,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통일시에 북한주민의 중고령자, 장애유형별 장애인, 여성,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 1-3-2. 통일을 대비한 직업훈련 준비 분야

##### (1) 통일 대비 직업훈련 기관의 준비 및 대책

통일에 대비한 전문 직업훈련기관과 통일대비 직업전문 요원에 대한 준비.

##### (2) 통일대비 직업훈련교사의 교육

통일에 대비한 직업훈련교사의 통일교육과 북한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통일환경에서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 (3) 북한 주민을 위한 효과적인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

우리의 환경과는 산업구조의 차이가 심하므로 북한측 산업중심의 직업훈

런 분야의 개발을 준비해야 한다.

(4) 통일예산에서 직업훈련분야의 충분한 예산의 편성.

독일의 예에서처럼 통일 비용의 막대한 비용 지출 규모 중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비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비용을 통일 예산에 편성 해야 할 것이다.

1-3-3. 통일과정에서의 직업훈련 실시 방법에 대한 분야

통일과정에서 직업훈련 실시 방법에서 기관과 교사에 대한 방안으로 다음 세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남한측 직업훈련교사의 양성으로 북측의 직업훈련기관을 활용

둘째, 북한측 직업훈련교사의 재교육을 통해서 북측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셋째, 남한측 직업훈련교사와 기관을 이용한 실시



## 제 IV 장 結 論

統一 環境에서 職業訓練의 실시는 중요한 부분이며 당면한 현재와 미래의 課題이다. 또한 통일환경에서 북한 주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생계수단의 對策이라 본다. 따라서 統一環境에서 북한 주민의 생계 대책으로서 職業訓練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발생 될 것이다.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구 東獨에서 실시한 직업훈련 사례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方法과 結果 측면에서 問題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알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환경에서의 북한 주민을 위한 직업훈련의 方案이나 對案의 목표는 북한 주민중에서 소외 받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準備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업훈련의 실시는 失業과 雇用の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따른 역할과 문제는 항상 내재하고 있다. 즉 실업을 고용으로 승계시키기 위해서는 職業轉換이나 職務向上 訓練을 통해 새로운 고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고용이 불안정 할 때는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묻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이원화된 직업훈련 체계로서 사업체에서의 훈련이 더욱 고용 효과가 컸다는 것이 동독의 예에서 알 수 있었고, 북한의 경우도 공장 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의 개념인 공장학교와 같은 분야의 職業訓練施設이 運營되고 있으므로 통일 환경에서의 職業訓練 實施方案으로서 이러한 북한의 시설을 效果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社會主義와 民主主義 體制의 결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훈련 분야의 문제는 통일 전에 준비가 미흡 할 경우 통일후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동독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통일 세대인 대학생들의 생각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공통성 있는 생각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남북통일환경에서 직업훈련은 북한주민

이 統一環境에 適應하는 基本이 되며 우리의 통일 환경에서 중심 문제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現實性 있는 남한측의 직업훈련 분야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지금까지 직업훈련의 方案과 方向을 제시했던 내용은 우리의 통일 환경에서 북한 주민의 직업문제를 직업훈련을 통해 우리의 통일 환경조건에서 동독이나 지금의 북한의 상황 보다는 효과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도 北韓 離脫 移住民에 대한 직업훈련 實施結果에 따르면 가장 큰 問題點이 用語의 혼란과 이주민의 용어에 대한 理解도가 직업 훈련과정에서 가장 어렵다는 것이다.<sup>7)</sup>

즉, 통일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직업훈련 실시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에서 전문적인 문제까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러한 직업훈련측면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한 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안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주민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분야로서 職業轉換 및 職務向上訓練 프로그램의 개발, 신기능 및 技術教育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통일 환경에서의 新 技術과 技能의 직업훈련 교육, 북한측 산업의 특성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대비 방안, 북한의 현실이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많은 수의 장애인과 직업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대비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을 대비한 직업훈련의 實施準備分野로서 통일 대비 職業訓練機關의 選定을 통한 준비 및 대책의 수립, 현재의 통일요원에 職業訓練教師를 포함시켜 직업훈련교사의 통일 준비, 북한주민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과목과 프로그램의 준비, 통일 비용에서 직업훈련비용에 대한 준비 등으로 세부적인 실시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

7) 신광호 외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직업훈련 방안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 1997.12

셋째, 통일환경에서의 직업훈련 실시 방식에 대한 방안으로서 남한측 職業訓練教師의 養成으로 북측의 직업훈련 기관을 활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방안과 북한측 직업훈련교사의 再教育과 訓練을 통한 북측내에서의 북한주민을 위한 직업훈련의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남한측 직업훈련 기관과 직업훈련교사를 활용한 북한주민의 직업훈련 실시 방안이 있다.

마지막으로 統一環境에서는 北韓住民이 職業訓練을 통해서 早期에 適應을 할 수 있도록 이들 방안이 세부적인 실시 계획과 준비가 더욱 필요해질 것이며, 우리의 통일이 모든 國民이 함께하고 북한 주민이 統一環境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북한이해 , 통일연수원, 1996
- 2) 통일문제이해, 통일연수원, 1996
- 3) 북한문제연구소, 북한의 실상, 1995.6
- 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
- 5) 이무근, 직업교육학 원론, 교육문화사, 1996.2
- 6) 김종서 외, 최신 교육학계론, 교육과학사, 1997.2
- 7) 북한실상종합자료집, 내외통신사, 1996.7
- 8) 통일이후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연구, 국회도서관 입법 조사 분석실, 1997.11
- 9) 통독전후의 경제 사회상 비교, 통계청,1996.7
- 10) 통일백서, 통일원, 1996
- 11)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1996
- 12) 전홍석 외1, 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전망, 한국개발연구원, 1997.2
- 13) 김승용, 북한기순자의 직업교육훈련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6
- 14) 김덕수, 북한의 산업기술교육과 노동행정관리 실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직업훈련연구소, 90.5
- 15)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탈북자 증대와 대책 연구보고서, 1997.2
- 16) 남북문제연구소, 탈북자가 증언하는 북한의 현실, 1995.5
- 17) 직업훈련연구소, 직업훈련에 있어서의 지도의 이론과 실제, 1986.9
- 18) 산업기술인력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기술인력연구소, 1996.5
- 19)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65호, 1998.3
- 20) 독일의 주요경제지표와 금융시장의 경향,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 1997.10

- 21)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동향, 1996.4
- 22) 오길남, 북한의 노동력 구조, 한국노동연구원, 1996.12
- 2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 97년 여립호, 1997
- 24) 강수을, 독일 공공부분 노사관계의 구조와 동향, 1997.2
- 25) 정연택, 독일통일과 고용보험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8
- 26) 노동부, 직업훈련사업현황, 1996.8
- 27) 해외노동시리즈 독일, 한국노동연구원, 94-4
- 28) 직업훈련교사양성과 재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기술인력연구소, 1994.2
- 29) 한국직업교육학회, 21세기를 향한 직업교육체제 개혁의 방향, 학술발표자료집, 1995.9
- 30) 한국노동경제학회, 선진국진입을 위한 직업훈련의 개선방향, 1995.11
- 31) 하태현 외2, 한국개발연구원, 복지사회의 인력정책과 직업안정, 한국개발연구원, 1981.3
- 32) 직업훈련연구소,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의 역할과 효율적 연계, 1990.12
- 33) 선진승, 한국노동연구원, 북한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인력활용방안, 1995.12
- 34) 정연택, 직업안정기관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7.7
- 35) 김유배 외2, 통일에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과 인력정책의 방향,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노동연구소, 1997.11
- 36) 직업훈련 비율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기술인력연구소, 1995.2
- 37) 직업훈련기준 체제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989.12
- 38)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정보 활용 방안,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기술인력연구소, 1994.2

- 39) 사업내 직업훈련 의무비용의 개선,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기술인력 연구소, 1993.2
- 40) 한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직업훈련 정책 동향, 직업훈련연구소, 1990.7
- 41) 산업인력개발 정책방향 모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기술인력 연구소, 1993.2
- 42) 한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직업훈련 정책 동향, 직업훈련연구소, 1990.7
- 43) 산업인력개발 정책방향모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기술인력 연구소, 1993.2
- 44) 사업내 교육훈련 촉진을 위한 모델 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기술인력연구소, 1996.2
- 45) 이원적 직업훈련 제도에 관한 연구, 직업훈련 연구소, 1983.12
- 46) 직업훈련 소요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 직업훈련연구소, 1981.12
- 47) 서독의 직업훈련, 직업훈련연구소, 1983.12
- 48) 직업구조 변혁기의 인재개발, 직업훈련연구소, 1990.4
- 49) 효과적 직업훈련의 설계, 직업훈련 연구소, 1987.
- 50) 독일 직업훈련의 기준개발 지침서, 직업훈련연구소, 1988.12
- 51) 독일의: 기능장 제도, 직업훈련 연구소, 1998 .3
- 52) 통일이후 구 동독지역의 경제재건, 한국은행 조사제1부, 1996.2
- 53) 주요체제 전환국 민영화 현황 및 특징, 한국은행 조사제1부, 1996.5

# 세계화에 따른 통일논의의 개선과 통일에 대비한 통일교육 방안

- 초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



성명: 홍 기 금  
청주교대 교육대학원

## 《 목 차 》

- I. 서 론
- II.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통일 환경
- III. 통일교육 실태와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 고찰
- IV.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안에 관하여
- V. 결 론





# 제 I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 세계는 21세기의 정보화 혁명의 시대로서,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큰 흐름과 함께 하나의 시공간적인 형태로 압축되어가고 있는 공동체로서 변모하고 있으며, 국가간, 민족간의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더불어 개방화, 다원화, 국제화 등의 하위 요소의 다각적 변화는 점점 더 상호의존적인 협력 체제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 세계화 시대의 흐름은 어느 한 민족이나 국가를 한 단위로 한정시키지 않으며, 통신, 교통,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결과로서 바로 세계의 모든 인류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정치·경제적인 공동의 상호 협력으로 이제는 인류 모두가 인류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요청에 편중하여 독자적인 세계화 전략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이 전략은 1997년 12월에 한국 경제의 금융 위기와 더불어 정치·경제·사회 속에서 서구 자본주의 체제의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는 점점 침체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대량 실업과 기업들의 부도에 따른 도미노 현상, 경제 빅딜로 인한 구조조정의 위기는 기존의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와 대북 정책에도 민감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우선,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우리나라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속에서 경제적인 난국에 직면하고 있으며, 북한은 상대적으로 경제와 식량난에서도 4자회담과 경수로회담 등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고집하는 등,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

는 반면, 미국의 입지는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기존의 통일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화와 가치관의 급속한 변화는 우리 민족의 생활양식과 더불어 통일 의식의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쟁의 위협성을 인식하면서도 국제사회속에서의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가치관은 기존의 통일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다. 즉 지금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신세대들은 기존의 대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공동체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자본주의 산업체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개인중심의 이기주의가 팽창하게 되면서 통일에 대한 의식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으며, 서구의 물질자본주의적인 팽창감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韓민족의 주체성과 자아 정체성이 점점 흔들리게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세계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현 교육과정 체제의 교육과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과거 5·6 공화국 시절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기존의 체제 안정과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공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우월 중심의 이데올로기 교육에 치중하였으나, 문민정부의 6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이 점차 그 형태가 세계화 전략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그 성격이 변모하게 되었다. 즉 체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민족 공동체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었으며, 한반도 통일과 세계화에서 韓민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졌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에 따른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속에서 5·31 교육 개혁을 기초로 하여 교육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통일교육은 여전히 제자리를 견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와 각종 리서치 통계를 보면 청소년들 중에서 초등학생 14.5%, 중학생 15%, 고등학생 21.7%가 북한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보았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통일에 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특히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비율이 64.6%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민족 공동체 중심의 통일교육에 중점을 두면서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학교교육의 문제점들은 바로 통일에 대한 아동들의 가치관과 의식 태도가 점점 더 이질적으로 변해지고 있다2)는 사실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 사회는 통일이라는 사명을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겉으로는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과 시각을 내세우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북한을 서로 다른 사회나 민족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통일 이후 민족의 이질성 극복에 대한 새로운 문제 해결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앞에 여론조사에서도 보았듯이 현재의 통일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며, 보다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통일교육이 제기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의 분단되어 있는 현실과 민족 이질성의 극복을 위한 통일교육에서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일론과 더불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초등학교의 통일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방법과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1) 한겨레신문, 1998년 2월 25일, 7면.

2) 통일교육과 통일의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는 신문기사를 찾아보면 조선일보(1997년 11월 14일 7면, 6월 2일), 중앙일보(1997년 11월 13일 7면, 10월 3일 10면, 9월 24일 4면), 한겨레신문(1997년 10월 4일 7면, 6월 24일 27면, 6월 16일 6면, 5월 16일 13면, 5월 13일 26면, 1월 27일 6면), 경향신문(1997년 6월 24일 21면), 세계일보(1997년 6월 10일 29면, 3월 22일), 국민일보(1997년 6월 6일 27면)등을 들 수가 있다.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한 의식조사나 특정 기간의 특집기사로서 한계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현재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가치관 및 의식등을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

## 2. 연구 문제 및 내용

급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의 흐름속에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접근되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계화는 선진국의 경쟁적인 패러다임으로서, 우리에게는 불리한 입장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외 주변의 통일 환경과의 연계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런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속에서 그동안의 통일교육의 접근을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법과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일교육이 무엇보다도 현 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서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고찰한다. 특히 통일교육에 있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중요성과 더불어 통일교육이 과연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실천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교과서 기능의 진단으로 탐구도를 조사한다. 그래서 이를 기초로 하여 현 통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기존의 교육과정보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주제중심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현실적인 접근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표 1-1〉 초등학교 도덕·사회 교과서의 탐구도 조사 범위

도 덕	사 회
3-1학기. 7. 한겨레 한나라(pp. 67-75) 4-1학기. 7. 거래의 소망(pp. 74-81) 5학년. 16. 평화 통일의 방법 (pp. 170-181) 6학년. 8.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 (pp. 77-88) - 이외에 남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부분 포함	6-2학기. 4-(1) 통일과 민족의 앞날(pp. 111-121) -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 삽 화, 단원부분 포함 - 근현대사중에서 통일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 (사회교과서와 사회과탐구 3-6 학년을 중심으로)

탐구도 조사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으로서 초등학교 교과서의 범위는 <표 I-1>과 같으며,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학년 쉰 교과를 대상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및 의의

국내외의 통일 환경 변화와 세계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헌을 바탕으로 이론적 고찰을 하고, 교과서의 탐구도는 다음과 같은 범주 내에서 실시하였다. 교과서의 탐구도<sup>3)</sup>란 여러 가지 질문의 문장이나 그림 및 도표에 대하여 각각을 제시된 범주 중의 어느 하나에 지정하고, 그 수를 종합하여 탐구적 자료에 대한 비탐구적 자료의 비율로서 교과서에 대한 학생의 관련 지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교과서에 대한 탐구도를 조사함으로써 그 교과서에 진술되어 있는 문장들이 아동들에게 스스로 자기 학습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도록 서술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탐구도는 다음의 4가지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였고, 이것은 과학 교과서에 적용을 하는 분석 기준을 일반 교과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성에 대한 한계는 가지고 있다.

---

3) 김헌재·임영득, 『탐구적 과학 지도 기술』, 전파과학사, 1980, pp. 94-105.

1) 교과서의 문장에 대한 평가는  $e+f+g+h/a+b+c+d$ 로 계산한다.

- a. 사실의 진술: 학생보다는 다른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일부 데이터나 관찰을 나타내는 간단한 진술
- b. 결론(일반화): 일련의 사실에 대한 항목들 사이의 관계나 뜻에 따라 저자의 의견을 진술한 것
- c. 정의
- d. 질문이 있고 난 다음에 즉시 교과서에 답이 나온다.
- e. 질문이 학생에게 date를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 f. 학생에게 자기 나름의 결론을 만들게 하는 진술
- g. 학생에게 어떤 활동을 실행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지시. 즉, 학생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제기하는 진술
- h. 학생에게 흥미를 일으키지만 교과서에서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는 질문

2) 교과서의 그림 및 도표에 관한 평가는  $b/a$ 로 계산한다.

- a. 설명적인 목적을 위해 정확하게 사용된다.
- b.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 활동이나 date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3) 교과서의 절이나 장의 끝부분에서의 질문의 평가는  $c+d/a+b$ 로 계산한다.

- a. 교과서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답
- b. 정의
- c. 장에서 새로운 상황에 이르기까지 학습한 바를 응용할 것을 요구하는 질문
- d. 문제 해결을 하도록 요구하는 질문

4) 교과서의 활동 지수는  $a/b$ 로 계산한다.

a. 페이지 당 제기된 활동 수    b. 모든 페이지 수
----------------------------------

통일과 관련된 문헌의 고찰과 교과서에 대한 탐구도 조사를 토대로 하여 통일교육의 적절한 패러다임과 함께 초등학교 교과서의 각 교과를 동일한 주제하에서 통합시켜서 새로운 통일교육을 전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안들은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보다 다양한 접근을 토대로 실천적인 통일교육의 방법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II 장 국내외 정세와 통일 환경의 변화

최근의 국제 정세는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세계화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고, 국민의 의식이 점차적으로 빠르게 적용이 되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서구문화에 대한 개방과 함께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많은 문화들이 유입되어 공존하게 되었고, 자국위주의 가치관보다는 쉰 세계를 위주로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통일환경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화와 문제점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 1. 세계화의 등장과 세계화 전략의 실패

세계화는 경쟁과 공존이라는 상호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모든 다원주의와 정보화의 혁명을 포함하는 새로운 新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지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또다시 새로운 혁명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새로운 세계 질서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세계화는 국가발전의 전략으로 활용되면서 지구촌의 여러 문제에 직면하여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상호 경쟁과 공존의 협력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시장기능의 공간적 확대와 심화를 가속화시켜 세계 모든 체계의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켰고, 영토에 기반한 근대국가 관념이 무너지는 변화와 개혁의 방향으로 진행<sup>4)</sup>되었다. 이제 세계 자본주의는 경쟁의 세계화 시대이며, 세계화와 지역화가 혼합하여 'Glogionalization'의 현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

4) 윤영관, "세계화 : 민족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김경원·임현진 공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 1995. p. 40.



이러한 흐름속에서 김영삼 정부는 세계에서 경쟁을 통한 선진 사회의 진입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세계화 구상을 시도하였고, 이 구상은 각 부분에 걸쳐서 다양한 전략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안성호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를 하나의 사회현상, 즉 미래의 세계질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이데올로기의 한 형태로서 사용하고, 자본축적의 공간적 범위를 범지구적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 양식과 교환의 체계를 목격하면서 구성되는 인식의 틀이라고 정의<sup>5)</sup>내리고 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가 없었던 세계화 전략은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총체적인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즉 경쟁과 공존의 상호의존원칙을 무시한 경쟁중심의 전략은 곧바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결국은 무분별한 정책 등의 실행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과거의 권위주의적 제도를 청산하지 못한 채 형식상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방화에 따른 다원화된 가치관으로 인하여 전통 가치관과의 갈등과 아노미 현상의 증가,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과 취약한 내수시장 경제의 구조, 국내 경제 구조조정의 빅딜과 노사대립, 경제의 정치화와 금융 경제의 부실로 대외적인 경쟁력이 저하되고 결국은 외환위기까지 직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였으며, 자원 빈국과 공간 회소국으로서의 약점을 지닌 채 세계화의 본질과 자국문화의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자국중심의 자본주의적인 경제적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더더욱 대외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다. Harvey는 세계화를 시공의 압축화(Time-Space Compression)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시공의 수렴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자본주의 생산 관계의 확대가 계속된 결과<sup>6)</sup>라

5) 안성호 편지, 『세계화·지방화, 그리고 민주화』, 교육과학사, 1996, pp. 33-35.

6) 최재현, "세계화와 지방화 : 그 지리적 의미의 연속성", 『지리교육논총』 (3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학과, 1996, pp. 127-132.

고 주장한다. 이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축소되는 세계에서 권력과 부의 불균형이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을 차별화시켜 사회적인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sup>7)</sup> 즉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계층과 지역에 따른 시공간의 축소가 차별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위험성은 미국을 중심으로 종속되어 가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악영향으로 작용하여, 냉전 체제를 벗어나서 자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로 재편성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자국적인 위치에서 거시적인 측면을 예상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았고, 선진국과의 경쟁과 급성장속에서의 모순된 구조체제 등으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아직도 잔재되어 있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결부되어 새로운 국가전략으로서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통일환경에서도 혁신적인 방향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고 본다.

## 2. 한반도의 통일환경과 논의

1990년대 초 Marx이론의 공산주의가 붕괴를 하였고, 러시아는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중국은 개방정책과 시장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중국의 전통사회와 사회주의 질서체제와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냉전에서 벗어나서 경제체제가 중심이 된 새로운 국제질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계속되는 식량난과 기아, 빈민 등의 악조건 속에서 주체 사상을

---

7) 상계서.

중심으로 폐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경제난으로 인하여 정권 체제의 지지 기반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져 있으며, 계속해서 탈북자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정권유지를 위해 정전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탈퇴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위기감을 조성하였고, 핵무기 개발의 위협으로 계속적으로 긴장관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김영삼 정부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상호간의 동질성을 먼저 회복하여 민족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화에 맞춘 정치적 통일을 이루어 나아가자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추진하여,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등의 3 단계를 제시<sup>8)</sup>하였고, 新정부는 이를 유지하면서도 政·經을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햇살통일정책'을 제시하고, 남북 교류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대북 정책을 시대적으로 특징을 보면 과거 80년대 이전에는 국가주의적 통일론으로서 대중의 획적이고도 자율적인 의사의 표현 없이 국가의 정책 수립에 동조하기만 하였고, 대립과 국가안보 중심의 대북 정책이 시행되어져 왔었다. 통일에 관한 정보는 주로 정치적 필요에 의해 얻어지는 것일 뿐, 우리들에게 통일을 왜 하는지의 이유가 분명치 않았으며, 방법론에 대한 분분한 의견만이 무성하였다.<sup>9)</sup>

이런 경직된 체제 내에서의 논의는 지금의 세계화,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의 새로운 정보문화에 대한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성을 노출한 채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즉 근대화에 따라 서구의 물질주의와 기계론적 사고가 70년대의 비판 이론의 영향으로 청소년 세대에게 무질서

---

8) 공보처, 『문민정부 5년 : 개혁백서』, 1997, pp. 327-332.

9) 또 하나의 문화풍인 소모임,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또 하나의 문화, 1996, p. 15.

한 가치관의 비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자아 정체성의 불안을 가져왔고, 통일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추상적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통일에 대한 연구는 양적 증가와 남북 관계에 집중 현상을 보여왔으나, 계속해서 반공주의적 통일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체제 중심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각 분야별로 다양화되기 시작하면서 본질적인 접근을 시도하고는 있으나,<sup>10)</sup>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통일교육 분야에서는 그리 많지는 않은 편이다.

이제 세계화에 맞추어서 시민 사회에서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여건 변화에 맞는 통일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즉 통일은 민족 통합, 국가 통합, 사회 통합의 세 차원을 포괄하는 것<sup>11)</sup>으로서 이제 한반도에서도 세계화와 함께 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민족 구성원 모두를 염두해 둔 아래로부터의 횡적인 통일론과 정보문화 시대에 맞춘 통일론이 등장하고 있다.<sup>12)</sup> 정보문화 시대의 통일론은 단절된 대중의 민족 구성원 사이의 횡적인 의사소통을 회복하고, 아울러 그것을 심화,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전환점에서 구체성을 띠는 통일론으로서, 대중이 중심이 되어 세계의 평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통일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통일 논의 및 운동의 성격을 보면 현상 유지적인 성격과 함께 여전히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제한된 틀 속에서 통일논의 및 운동이 이루어짐으로서 '통일론의 통일'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적이 없었다.<sup>13)</sup> 또한 세계화

---

10) 김용현, "통일 연구의 현황과 과제", 『통일 문제 연구』 (26), 평화문제연구소, 1996, pp. 28-29.

11) 신문섭, "남북한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논총』 (18-2), 대우공업전문대학교, 1996, p.169.

12) 김광식, "정보문화 시대의 통일 주체와 방법을 위한 모색", 『졸뿌리 네트워크가 통일을 만들어 간다』, 풀빛, 1997, p. 43.

13) 노승우, 『민족 통일의 이론과 실천』, 진예원, 1996, pp. 13-15.

에 따른 시민들의 의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의식 변화는 없으며, 세계화에 맞추어서 접근하고 있는 통일 연구는 적은 편이다. 그래서 노승우는 정부가 민중을 배제한 채 안보론과 연결시켜서 집권수단으로 사용하였고, 통일이라는 명분 하에 민중지배를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외세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세를 의존하는 결과가 되었다<sup>14)</sup>고 본다. 즉 통일과 분단이라는 특수적인 환경을 세계화와 다원적인 입장에서 본질적인 접근을 하기보다는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분석·접근이 이루어졌으며, 민중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결과론적인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데 치중하였다.

게다가 대부분 비교분석을 통하여 수립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실질적 측면과 함께 상징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공통성을 수립하여 통일 국가를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치적 상징의 의미를 사용<sup>15)</sup>함으로써 논의의 성격을 자체적으로 제약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분석 시각의 틀을 보면<sup>16)</sup> 상징주의적, 행태주의적, 구조주의적인 시각으로 다각적으로 접근하려고 시도를 하고는 있으나, 정치적 성격의 논의의 한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통일 논의는 여전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제한된 사고와 패러다임으로서 통일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3.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의 회복

현재 통일논의에 있어서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래의 통일된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서 인

14) 상계서, p. 23.

15) 유영옥, 『한반도 통일 정책론』, 학문사, 1996, pp. 18-24.

16) 상계서, p. 32.

간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유와 평등, 복지 등의 기본 가치들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체제 이념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들 수 있고<sup>17)</sup>, 동질성 회복의 근거를 바로 민족주의에 두고 있다.

사회주의 실패로 인하여 자유 민주주의는 도덕적 집단이나 계급에 앞서 개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며, 투표권, 참정권등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족주의는 분단된 한민족이 정치적 공간과 문화적 공간을 일치시키는 통일 민족 국가의 형성에 근거하여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의 갈등을 용해시킬 수 있다. 또한 국민적 화합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비한 내부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능까지도 담당한다. 대외적으로는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내 민족의 이익과 입장을 내세우는 집단의식으로서 통일 후 세계체제(Global System)속에서 민족적 주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기본체제이념으로 볼 수 있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것보다 사회의 공존 공영을 추구하는 이른바 열린 민족주의(Open-Nationalism)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분단 이후 韓民族은 赤色嫌惡症(Red Complex)으로 인하여 근거 없는 불안과 긴장감에 사로잡히기 쉽고, 사고와 행동 양식에서 유연성과 자발성이 결여되기 시작했다.<sup>18)</sup> 여전히 이데올로기적 체제 교육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흑백 논리와 함께 지금까지 민주 시민성과 공동체적 사고 발달을 저해시켰다. 무엇보다 체제 우월성으로 인하여 민족 공동체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도식적 사고에 그대로 영향을 끼쳐서 이질성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절에서 말한 정보문화 통일론과 같이 이제는 이러한 도식적 사고에서

---

17) 박하진 외, 『통일 문제 이해』, 통일원, 1996, pp. 208-210.

18) 정진경, “문화 이해지-통일과 심리적 화합”, 또 하나의 문화통일 소모임, 전개서, pp. 58-63.

탈피하여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고 이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이질성을 배격하되 사회·문화적으로 이질성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흔히들 동질성에 대해서는 '5천년의 역사'단군의 자손'이라는 등의 상징이나 '가족주의'권위주의'등의 문화적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다.<sup>19)</sup> 실제로 이런 동질성은 다름을 이해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제로 상호 접촉작용을 할 때, 갈등을 줄이기 위해 문화적 상대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고 승화시켜서 생활화하는 것이다.

이질성에 대해서는 조형은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sup>20)</sup> 남북사회가 공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요소들은 전통에 기초한 가족주의, 권위주의, 혈연이나 지연 등의 집단주의, 개인, 가족, 지역 중심의 이기주의 성향, 분단 이후 강화된 상호 불신과 적대, 그리고 민족주의 성향 등은 동질적 요소이기는 하나, 통합을 유도하는 친화력으로 작용을 하기보다는 분리와 해체, 갈등을 유발하는 동질 요소일 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동질성 확대와 이질성의 극복은 정태적인 자세에서 시공간적 변화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의 주변 환경 변화는 카오스의 불안정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다원성의 조직화가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체계로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체제 특성에 따른 남북한 사회문화는 이중적인 구조를 내포한 채, 현대화에 따른 민족 전통 문화의 轉移현상이 나타나고, 이질성에 대한 격차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sup>21)</sup> 여기에서 사회 문화적 이질화를 체제 이질성과의 인과관계에서만 바라보는 인식 태도는 단순한 체제 경쟁으로 인한 대립적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며<sup>22)</sup>, 이러한 태도는 분단체제를 심화

---

19) 조혜정, "북조선과 남한의 동질성과 이질성", 삼계서, p. 46.

20) 삼계서, pp. 50-51.

21) 김학성, "문화적 이질성 극복과 통일 문화 형성", 한국문제연구원, 『한반도 통일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pp. 285-287.

시키고, 확대재생산적인 측면에서 작용하는 불안정한 카오스와 같은 구조 체계 속에서 인위적인 조화의 모색마저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에 대한 정의와 함께 韓民族으로서 공유하는 부분을 찾아야하는 것은 바로 통일 이후의 공동체적 생존과 연결이 되고 불안정한 카오스의 상태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에 맞추어서 韓民族이 정상적인 공동체로 생존을 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논의는 민주화가 정착된 지 10년이 된 지금의 체제하에서 단지 부분적으로 환용되어질 뿐이고, 이런 과정들이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으며, 민족 공동체의 의미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위험성과 사회구조적 모순성을 내포한 채 점점 더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

22) 상계서, pp. 288-290.



# 제 III 장 통일교육의 실태와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 고찰

2장에서 세계화와 통일 환경의 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실제로 韓民族 공동체를 지향하는 통일 정책과 다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이질감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져온 통일교육의 효율성과 관련지어서 현재의 통일교육의 실태와 현 초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통해서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고찰보고자 한다.

## 1. 통일교육의 진행 과정과 현황

통일교육은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더 나아가서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sup>23)</sup>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목표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여 민족 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목적은 통일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이해력을 원리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에서 배양하며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중점을 둔다.<sup>24)</sup> 이에 따른 교육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립<sup>25)</sup>하고 있다.

- ①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건전한 북한관, 그리고 통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제반 상황

23) 통일원, 『통일 백서』, 1997, p. 291.

24) 공보처, 『변화와 개회 : 김영삼 정부 국정 5년 자료집(3)』, 1997, p. 146.

25) 통일원, 진게서, p. 293.

과 통일 이후의 긴장 및 갈등에 대비 할 수 있는 상황 인식과 대응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③ 세계 속의 새로운 통일 조국 및 韓民族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는 통일 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거창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북한의 행정 구역에 대한 인지도조사에서 학생들의 인지가 10-20%밖에 해당되고 있어, 지리 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에서의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북한을 제대로 알기 수업'이 시급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sup>26)</sup>

방송 보도를 보면 북한에 대한 그림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시청하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여전히 북한은 빨갱이라는 식의 인식을 불어넣음으로서 적대감을 형성시키고 있다. 북한의 현 실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도, 북한의 낙후된 지역과 생활 모습들, 기아에 허덕이는 아동들의 모습, 폐쇄적인 사회적인 모습들을 단면적으로 심층, 부각시킴으로서 북한을 비하시키고, 탈북자들조차도 자기비하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동질성 회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통일관을 보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결코 높다고만 볼 수 없으며, 통일 이후에 나타날 사회적 혼란이나 IMF와 관련해서 경제적 부담 등을 염려하고 있다.<sup>27)</sup> 또한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지 않는 학생들은 북한의 호전적 태도와 행동을 경계하면서 무서운 사람들로 규정하거나 관계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분단 상태가 지속될수록 더욱 증가할 것이며, 세대간의 의식차이도 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기성세대는 북한을 과거의 전쟁경험을 통하여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서 인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

---

26) <http://www.unityinfo.co.kr/surmun/980603/980603-01.htm>.(통일교육에 관한 여론조사는 1장에 언급했던 신문이 외에도 통일 정보 신문을 참고하였다.)

27) 한만길, "남북한 학생의 통일 의식과 교육의 과제", 『제 5회 통일 대비 교육포럼』, 한국교육개발원, 1998.(<http://203.231.5.3/pub/forum/forum98.hwp>)

를 나눈 형제 또는 동포들로서 인정하려는 경향도 강하다고 할 수가 있다. 역사와 문화, 혈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로서 인식하려는 정서도 내재되어 있지만, 학생들은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이나 정서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sup>28)</sup>에서 통일교육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2장의 2절에서 밝힌 바대로 과거 통일교육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정당한 논리로써 강조하지 않은 채, 공산주의와의 대결구도 속에서, 올바른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의식의 확립을 가져오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의 방향이 오히려 정권의 보수화와 기존의 질서 체제 유지 등의 수단으로서 고착화되어지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국민 총화를 유도하는데는 성공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현실적인 통일론에 접근되지 못한 채, 세계화의 흐름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반공교육의 풍토와 정신은 그대로 남아서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반영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활동을 보면, 주입식과 강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을 위한 행동특성으로서 인지적, 정의적 측면의 조화가 요청되고는 있으나, 내용 없는 감정 지향적인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교육을 위한 학습과정에는 시사성이 관련성이 있는 학습 자료가 필요하나 수집하여 활용하기 어렵고, 시사교육은 특정시기에 치중되어 있어서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통일교육은 여건상 공산주의 비판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편이다.<sup>29)</sup>

---

28) 상계서.

29) 지원중학교, “토론 학습과 행사 참여를 통한 민주 통일 교육 방안”, 『97 통일대비교육 시범학교 운영 계획서(2/2차년도)』, 1997.(<http://210.121.210.1>)

〈표 III-1〉 초등 교원 양성기관의 북한·통일 관련 수강과목 개설현황<sup>30)</sup>

학교	수강과목	학점	학교	수강과목	학점
서울 교대	북한문제의 이해 (윤리교육심화 선택)	2	대구 교대	공산주의 이론비판 (계절제 윤리교육 심화)	3
	한국 민족주의론 (윤리교육심화 선택)	2		북한학(교양선택)	2
	전쟁과 평화(사회교육심화 선택)	2			
진주 교대	통일교육론(윤리교육 심화)	3	전주 교대	통일교육연구 (윤리교육 심화)	3
	한국사회와 통일(교양필수)	2		북한연구(교양선택)	2
청주 교대	남북한 통합 및 체제비교 (윤리교육 심화)	3	부산 교대	북한연구(윤리심화)	2
인천 교대	북한학(교양선택)	2	춘천 교대	통일문제연구(교양선택)	2
공주 교대	북한연구(윤리교육 심화)	2			

또한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 구성을 살펴보면,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대학교육의 부실함을 알 수가 있다. 교양 선택의 경우 북한과 통일에 관한 관심이 높지 않는 한 수강의 기회는 제한적일 뿐 아니라, 사범대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에 대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만, 교육대학교에서는 윤리교육과를 제외하고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통일교육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그다지 많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 체제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욕구를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수립을 하면서도, 색깔론적인 흑백 논리의 사고와 체제 우월성만 강조하는 과거의 교육적 영향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30) 대부분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나 대학교 요람 등에 나와있는 교육과정을 참고하였으나, 자료가 없는 일부 대학교는 첨가하지 않았다. 또한 수강과목 중에서 이데올로기에 관한 과목은 모든 사상을 범주로 해서 다루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어 학교 교육에서의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관심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장의 3절에서 제시한 민족 공동체로서 구현할 수 있는 체제가 열린 민족주의라는 것을 정당한 논리로서 아동들에게 이해시켜야 하며, 탐구적인 자세로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지만 이와 같이 현실적인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독일이나 예멘의 경우를 보면 통일 이후의 동질성 회복에 실패하여 후유증을 겪는 모습은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2.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은 그동안 이념과 체제, 사상과 제도와 같은 추상적, 포괄적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교육적 관점<sup>31)</sup>에서 다루어졌다. 이념과 구조에 관한 지식은 남북한의 차이점과 이질성을 크게 부각을 시켰으며<sup>32)</sup>, 그런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무비판적인 수용은 일상 생활과의 구체적이면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1996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6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은 과거 이데올로기적 도구로서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통일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세계화와 함께 통일 이후의 민족 공동체의 삶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에 토대를 두어 규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규범적 접근은 북한 사

31) 비교 연구는 문화보편적 연구로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준거틀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의 기준에 의해 비교될 때 문화의 다양성이나 상대성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 즉 남북한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 공통적 가치나 기준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동질성 회복도 소극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넓은 의사 소통과 공감대급 형성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김도태·이경화, 「통일교육 개선 방향 : 사회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통일 연구 논총』 (6-1),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5-6.)

32) 한만길, 「변화하는 시대의 열린 통일교육」, 『교육원보』 (174), 교육부, 1996, p. 36.

회에 대한 일정한 시각과 가치를 전제로 통일의 방향과 방법도 규정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하는 경향을 말한다.<sup>33)</sup>

이런 경향에 따라서 민주시민 공동체 의식과 태도, 통일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내용을 조정하고, 중점 교육활동의 하나로서 그 위치와 성격이 제시되고 있다. 초등학교 도덕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중에서 관련성이 있는 국가·민족 생활은 < 표 III-2 >와 같다.<sup>34)</sup>

〈표 III-2〉 6차 교육과정의 도덕과 내용체계에서 '국가·민족생활' 영역의 학년별 목표 및 주제

주요지도 요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목표	국가·민족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단극복의 의지를 가지게 한다.	국가와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생활태도를 가다듬고, 국가발전에 공헌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	국가·민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규범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과 국제우호를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국가에 민족에 국제우호 인류에	나라사랑 조상의 뜻 이어받기 분단의식과 통일의 필요성 외국인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나라발전에 협력하기 민족문화 유산 아끼기 통일조국의 미래모습 세계평화에 공헌한 사람	국가와 개인 해외동포들의 조국애 평화 통일의 방법 국제 문화 교류	살기 좋은 나라 민족의 긍지와 사명 통일을 위한 노력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내용차원에서는 '북한의 현실과 남북한의 비교', '통일 과정의 이해', '통일 상황 전망', '통일사회에의 적응'을 포함하고 있다. 통일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성향의 차원에서는 지식, 가치판단 능력 등의 인지적 요소와 '통일의 의지', '통일 준비', '통일 이후 대비'와 같은 정의적 태도 및 통일을 실

33) 상개서, p. 35.

34) 교육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4, pp. 51-66.

현시키려는 실천 동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35)</sup>

5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의 추상성과 더불어 구체적인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 하에 따라서 국가 생활과 통일 안보 생활을 국가·민족 생활로 통합하였으며, 통일의 방법을 구체적인 현실로서 인식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를 통한 탐구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영역별 비교를 보면 5차 교육과정<sup>36)</sup>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대화와 대결을 전제로 하는 안보 교육간의 조화를 모색하였고, 3, 4학년에는 각각 3/21(14.3%)을 차지하였으며, 5, 6학년에서는 3/22(13.6%)를 차지하였다. 배당시간은 각 내용 영역별로 비슷하였다.

개정된 교육과정<sup>37)</sup>에서는 통일안보 교육이 민족생활에 포함되었다. 내용의 비중은 3-6학년이 1/17(5.9%)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족애와는 별도로 구성되어 제시되고 있다. 개정의 중점은 인지적 영역에서 벗어나서 행동 영역을 중심으로 실천적 성격을 강화시켰고, 대신 시간은 주당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되었다.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과 관련된 목표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38)</sup>

두 교육과정을 보면,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시각과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정의적 접근은 객관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판단을 흐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도덕과의 주당시간을 1시간으로 축소하는 대신 교수 학습의 영역은 전 교과를 범위로 정한다는 것은 통일교육에서도 당연히 변화를 가져 올

---

35) 최은수,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내용과 통일 과정에서의 심리적 문제”, 『통일 연구 논총』 (6-1), 전개서, p.30.

36)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 도덕(3-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6, p. 16.

37) 상계서, p. 20.

38) 교육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II)』, 전개서, pp. 170-175, 222-223.

〈표 III-3〉 6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내용 체계 중에서 6학년 '공동생활'의 목표와 내용

영역		6학년
공동생활	목표	우리민족이 꼭 통일을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동안에도 통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이해시킨다.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복지사회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과 민족의 앞날</li> <li>- 평화 통일의 방안</li> <li>- 지속적 경제 성장의 과제</li> <li>- 정의·복지 사회의 구현</li> <li>·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에 대한 의지 가지기</li> <li>· 우리나라의 여러분야의 문제들을 상호 관련지어 생각하기</li> </ul>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도덕과가 교과로서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 교과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여건들이 필요하지만, 다른 관심사에 밀려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학교와 지역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이렇다할 체계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 편찬의 방향과 관련지어서도 교과서의 제재를 국내외 행사 및 학교의 행사에 적절하게 구성하여 도덕이 실생활과 밀접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함<sup>39)</sup>에도 불구하고, 현충일과 같은 특정 시기에 민족애 및 통일의 필요성을 지도하도록 교과서의 제재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교육의 성격상 맞지 않는 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열린교육의 추세는 아동들간의 학력차와 통일에 대한 관심 등에 대한 정도의 격차를 만들 수 있으며,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에 의해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의 내용과 연관지어 살펴보면 교수 학습 시간보다 너무 많으며, 그 난이도도 여전히 아동들의 발달단계 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거나 흥미수

39)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 도덕(3-1)」, 전개서, p. 2.



준과는 거리가 멀게 설정<sup>40)</sup>되어 있어서 과연 효율적인 교수 학습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남는다. 각 교과 교육과정과의 일관성과 더불어 연계성이 낮아서 현 학문구조 체계상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과정의 개정은 4-5년마다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통일 정책과 통일교육의 방향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역화와 자율적인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지역과 학교수준 및 환경에 맞추어서 재구성하고, 각종 여건들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최대한의 교육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둔다. 마찬가지로 통일교육도 지역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재구성하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이 개별화에 따른 교육의 극대화를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과정들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 3. 교과서 내용 및 삽화 고찰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국토 분단의 현실과 공산 집단의 실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우월성을 알아서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신념과 태도를 가지도록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동양적인 전통 문화와 서구적 민주주의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접근시키고 있다.<sup>41)</sup>

---

40) 일반적으로 사회과나 도덕과의 내용배열 원칙은 개인에서 국가 수준으로 나아가는 중심원적(지평)확대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학습자의 흥미나 수준을 무시한 채 단순히 시각적인 확대의 논리로서 인지발달단계와는 모순성이 있다. (류재명, "사회과 통합 운영과 지리과 교육과정의 개별적 조직방안", 『사회과학교육』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교육 연구소, 1997, pp. 55-82을 참고)

41) 유영옥, "남북한의 교육 신상 비교와 이점화 극복 방안(하)", 『국제문제』 (334), 국제문제연구소, 1996, p. 84.

<민주 정치>



<독재 정치>



(그림 III-1) 주 정치와 독재 정치의 비교  
(사회과 탐구 6학년 2학기 pp. 36-37의 일부분)

6차 교육과정에서 편찬된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보다도 가족이나 거래 중심의 민족의식을 부각시켜려는 데 있다. 종전의 사상 중심에서 벗어나서 점차 그 방향이 변화되어지고 韓民族의 미래 청사진을 포함하려는 측면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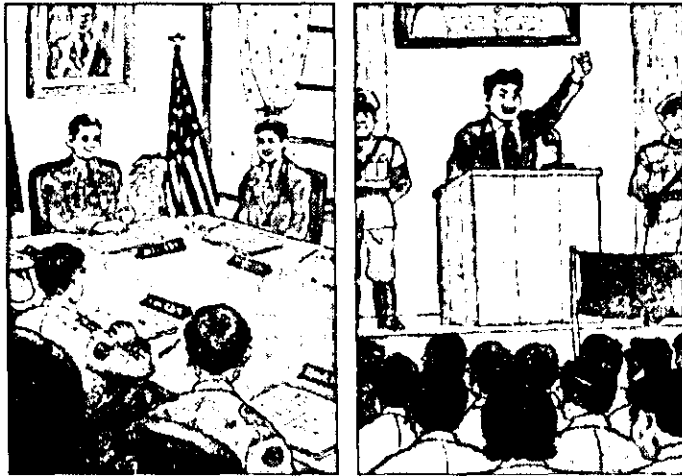
그러나 부분적으로 아직 개선되지 못하는 면도 있다. 통일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백두산의 그림이 항상 제시되고 있다. 통일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제시되었다고는 하나 너무 일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볼 수밖에 없다.<sup>42)</sup> 그리고 민족 공동체 중심으로 최근의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제시되

42)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의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 교과서 사진은 대체로 교과 내용과의 일치도가 높고(66.7%), 학습자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다고는 말하지만, 학습 흥미를 고취시키는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습효과도 떨어지고 진반적인 종합평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53%)가 더 높았다는 사실을 보면, 일반적으로 다른교과도 마찬가지로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김윤순,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의 평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45.)

고 있는 자료들 중에는 이미 오래된 자료들이 있으며, 북한을 아직도 적색으로 표시하여 적색 공포증을 아동들에게 유발시키고 있다.

민주 정치를 실시하는 우리의 생활과 독재 정치를 실시하는 북한의 생활을 비교해 보자.

위 그림을 보면 정치적인 비교 중심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물의 얼굴표정을 살펴보면 민주 정치는 웃는 얼굴로, 독재 정치에서는 험악한 인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한눈에 봐도 체제 비교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남한의 미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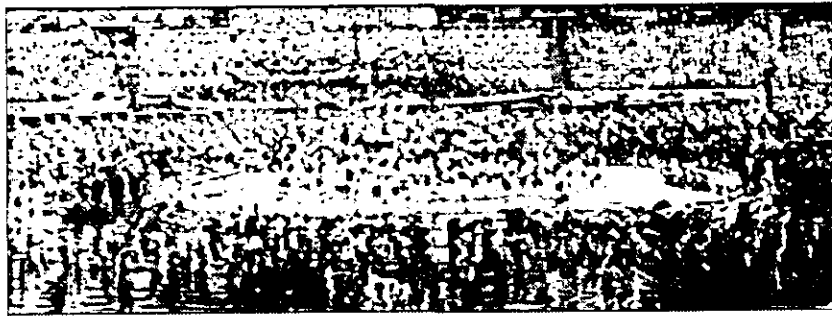
북한의 인민 위원회

(그림 III-2) 미군정과 북한 인민 위원회의 모습  
(사회과탐구 6학년 2학기 p. 7)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의 혼란했던 국내 정치상황을 보여주는 모습으로서 얼굴 표정의 대비에 주목할 수 있다. 같은 민족이 아닌 미군정은 웃는 얼굴로서 좋은 인상을, 같은 민족인 북한의 인민위원회는 험악한 얼굴을 함으로써 나쁜 인상을 심어주고, 마치 북한을 다른 민족의 침략자 처럼 보여지도록 하고 있다.



백두산 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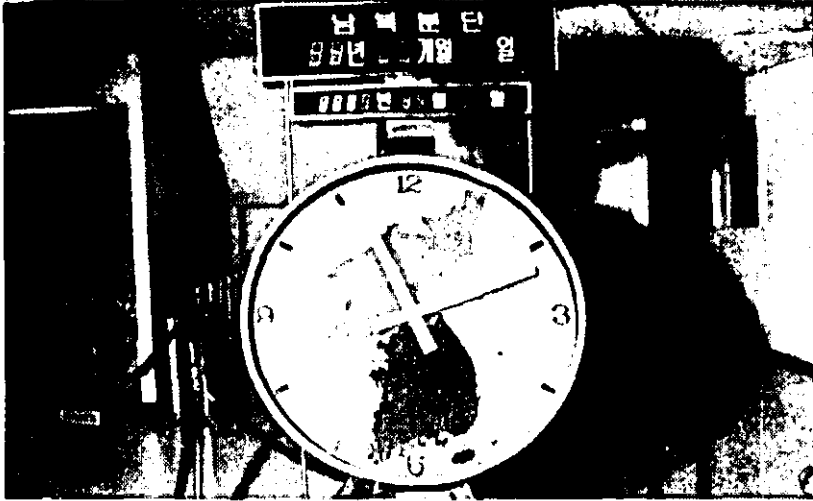
제 24 회 서울 올림픽

[그림 III-3] 백두산 천지와 제 24회 서울 올림픽  
(도덕교과서 4학년 1학기 p. 74)

또한 추상적인 내용이나 내용과는 다르게 필요성이 없는 그림을 제시하기도 한다. 도덕교과서 3학년 1학기의 p. 73을 보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이 많다. 남과 북이 서로 돕고 힘을 합쳐 더욱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은 통일에 대한 막연한 상상을 일으킬 뿐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감상적 통일 지향의 목표나 이점을 제시하는데 불과할 뿐이다.

[그림 III-3]은 통일에 대한 관련성에서 항상 제시되고 있는 백두산 그림과 함께, 통일과는 직접적 상관성이 없는 제 24회 서울 올림픽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III-4]는 통일에 대한 논의에 대한 글의 내용과는 전

히 맞지 않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한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림 III-4] 통일 염원 시계 (도덕교과서 6학년 p. 79)

#### 4. 교과서의 탐구도 조사

과거의 교과서는 체제비판과 정권의 유지, 정당성의 합리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일부분은 왜곡된 진술이 많았었다. 또한 진술의 객관성보다는 오히려 주관성이 개입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다.<sup>43)</sup> 무엇보다도 가치탐구보다 가치수용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강의식 수업 및 설명식 수업에 맞도록 설계되어져 왔기 때문에,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도 세계화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서 교과서의 기능과 구성방식에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피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도덕 교과서와 사회 교과서, 사회과 탐구를 대상으로 탐구도를 조사하였고, 결과는 <표 III-4>와 같이 나왔다.

43) 박자량, "문화 공산주의", (<http://www.21info.com/scr27.html>)

〈표 III-4〉 6차교육과정의 도덕·사회교과서 탐구도 조사 결과<sup>44)</sup>

	교과목		도덕					사회(사회과 탐구 포함)						총합	
	학년		3-1	4-1	5	6	합계	3-2	4-1	4-2	5-1	5-2	6-2		합계
1) 교과서의 문장에 대한 평가	A	a	12	16	5	21	54	1	0	37	6	2	138	184	238
		b	1	2	6	7	16	0	0	3	0	0	34	37	53
		c	0	1	0	8	9	0	0	5	0	0	3	8	17
		d	1	0	0	0	1	0	0	2	1	0	2	5	6
	B	e	0	0	2	0	2	0	0	7	0	0	0	7	9
		f	1	4	1	2	8	0	0	0	1	0	1	2	10
		g	5	6	7	4	22	0	2	21	13	2	21	59	81
		h	1	0	0	1	2	0	0	7	0	0	1	8	10
학생과의 관련지수	B/A	0.50	0.53	0.91	0.19	0.43	0.00	0.00	0.74	2.00	1.00	0.13	0.32	0.35	
2) 교과서의 그림·도표에 대한 평가	a	4	3	3	3	13	1	1	22	9	2	48	83	96	
	b	0	0	0	0	0	0	1	7	6	1	3	18	18	
학생과의 관련지수	b/a	0.00	0.00	0.00	0.00	0.00	0.00	1.00	0.32	0.67	0.50	0.06	0.22	0.19	
3) 교과서질이나 장의 끝부분에서의 질문의 평가	A	a	0	0	0	0	0	0	0	2	0	0	0	2	2
		b	1	1	0	1	3	0	0	1	0	0	0	1	4
	B	c	2	2	5	3	12	0	0	2	2	0	4	8	20
		d	3	3	1	1	8	0	0	1	2	0	1	4	12
학생과의 관련지수	B/A	5.00	5.00	0.00	4.00	6.67	0.00	0.00	1.00	0.00	0.00	0.00	4.00	5.33	
4) 교과서의 활동지수	a	7	9	10	6	32	0	2	23	13	2	21	51	83	
	b	9	8	13	12	42	1	2	29	19	12	53	116	158	
학생과의 관련지수	a/b	0.78	1.13	0.77	0.50	0.76	0.00	1.00	0.79	0.68	0.17	0.40	0.44	0.53	

1)번 항목에서 도덕 교과서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6학년에서는 설득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수값이 낮아졌고, 사회 교과서는 6학년의 역시 내용 서술로 인하여 지수값이 낮아졌다.

44) 지수 x의 정상기준은  $0.5 \leq x \leq 1.5$ 이고 지수가 낮으면 설명위주로, 지수가 높으면 탐구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번 항에서는 3절에서 지적한 바대로 그림은 교과서의 내용과는 관련성이 없거나 의미성이 별로 없음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다.

3)번 항에서 지수가 높게 나온 이유는 교과서 체제가 형성 평가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게 나온 것으로 본다.

4)번 항은 대체로 교과서의 질문이 아동들에게 활동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 교과서의 탐구도가 낮은 이유는 사회과 탐구의 구성이 설명식으로 되어 있어 탐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사회 교과서는 도덕 교과서에 비해서 탐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과 탐구의 역할이 탐구보다는 이해 전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근대사 이전의 역사 부분은 배제를 하였으나 6-2학기의 사실 부분이 많은 까닭은 이해 위주의 근현대사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5학년을 제외하고는 3-4학년에서는 지역 교과서, 6학년은 역사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지수값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도덕 교과서는 탐구도는 양호하나 그림과 삽화가 현실성에서 교과서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사회 교과서보다 능동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항과 4)항의 연관성을 보면 교과서의 내용이 활동보다 지수가 낮은 것은 여전히 교과서의 능동적인 성격이 약간은 미흡함을 의미하고 있다.

## 5. 교사용 지도서에서의 통일교육

교사용 지도서의 3-4학년에서는 주로 민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동질성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아직도 대립 중심과 동정심 유발의 문장이 서술되어 여전히 이질적인 문장이 서술되고 있다. 다음은 교사용 지도서 도덕에 진술되어 있는 문장중의 일부이고, 대체적으로 비교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비교를 하는 것은 군사력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남한 사회의 우

원적인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고 이것은 결국 아동들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보게끔 만들기 때문에 동등한 韓民族의 입장에서 통일을 바라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휴전선 근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화성기를 통해 남한을 비방 (3-1. p. 133)
- 남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을 비교함으로써 문제 의식을 갖게 한다.(4-1. pp. 120-121)
  -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은 여러분과 어떻습니까?
    - ⇒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이 다름.
    - ⇒ 오후에도 학교에 가서 일을 함.
    - ⇒ 배불리 밥을 먹는 것이 소원
    - ⇒ 북한 사람들이 잘살지 못함
- 북한 주민들은 공산당원과 노동자, 농민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나, 그들의 신분은 더욱 복잡하게 나뉜다. ( 4학년 1학기, p. 125)
- 출신 성분이 나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진학이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 연필로 쓴 위에 잉크로 쓰거나 벽지를 뜯어서 공책을 만들어 쓰기도 한다. (4학년 1학기, p. 127)
- 현재 군사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5학년, p. 268)

추상적인 내용과 논리에 전혀 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동에게 교수하기 위해서는, 신중성을 기하면서 점차 단계적으로 제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이를 일반화시키고 교과서와 같이 감상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 통일을 해야 하는 까닭은?
  - ⇒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음.(4-1. p. 122)



⇒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4-1. p. 123)

5학년 지도서에는 통일에 대한 반복 설명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고, 단계적인 경향을 가지지만, 심층적이지 못하다. 주로 남북한 실상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수업시간에 자료로서 활용하여 지도하고 있다. 6학년 지도서에는 통일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루고는 있지만, 통일의 기본 철학과 접근시각의 차원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등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공산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가 보다 우월한 체제.
-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실패하였다. (6학년, p. 153)

## 6. 통일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최영표의 연구<sup>45)</sup>에서는 체제에 대한 무조건 비판과 함께 교육 목표는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객관성이 부족하여, 분명한 방향성과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통일관련 교육 명칭에 대한 논의부족, 통일 문제에 대한 교육적 패러다임의 경험부족, 당면 문제 해결이라는 수단적 가치의 강조,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효과성의 강조로 인한 조급성의 일부 반영, 교재 내용의 추상성, 통일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관심 부족 등을 들고 있다.

---

45) 최영표, “중·고등학생의 통일교육 환심화방안-학교교육과 통일교육의 운영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연구-96년도 통일정책 포럼 자료집』,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96, p. 13.

오석중은<sup>46)</sup> 남한 체제의 우월성 논리에 따른 흑백 사고를 고취하여 이질화와 편협한 냉전논리에 따르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며,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한 진지한 이론적 체계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최은수<sup>47)</sup>는 체제의 변화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일종의 제도화된 사고 구조(Institutionalized Thought Structure)가 현재까지 통일교육의 잠재적인 내면가치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여전히 통일교육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의 북한에 대한 정확한 기초 지식을 학교와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으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일반 생활, 교육, 언어, 지리순으로 제시된다<sup>48)</sup>는 점에서 현재의 교과서가 통일의 당위성만 거론하고 생활면 등의 부분은 소홀히 하고 있다. 또한 일선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적 활용도와 필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IMF와 지방교육 재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위의 논의들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통일교육의 목표와 성격도 그에 맞는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舊체제의 경직된 이데올로기식 교육의 영향으로 통일교육의 다양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못한 채, 명확한 페러다임조차도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서는 사회주의보다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내부의 부정적 요소와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재인식의 가능성을

---

46) 오석중, "사회통합 모색을 위한 교육통합방안-남북한 도덕교육을 중심으로", 이은숙 외, 『남북한 사회통합론』, 삶과 꿈, 1997, pp. 244-246.

47) 최은수,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도산학술포럼』(5), 도산아카데미 연구원, 1996, pp. 94-95.

48) <http://www.unityinfo.co.kr/surmun/980610/980610-01.htm>

배제하고 있으며, 특히 IMF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에 학생들은 현실주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sup>49)</sup>로 하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체제 비판은 3절에서 살펴 본 교과서의 내용이나 그림과 같이 서구식 근대화론과 역사의 단선적인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 남북한이 서로가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등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sup>50)</sup> 자유 민주주의의 올바른 인식과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부족하고 단계적으로 凡국민적인 통일론과 통일교육을 발전시켜서 이를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도 흥미를 주지 못한 채, 통일의 추상성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방안들은 비교적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지적<sup>51)</sup>이 많았다. 한편으로 인류의 보편적 지향가치를 준거로 한 남북한 비교 교육의 강화와 북한 및 통일관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 등을 주장<sup>52)</sup>하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통일과 남북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길러줄 수 있고, 어느 한 체제의 우월성이나 비교교육보다는 보다 공통성을 수렴할 수 있는 성격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현재의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에서 개인차에 따른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쏠 학문체제를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만 하며, 통일교육에서도 주

---

49) 한만길, "남북한 학생의 통일 의식과 교육의 과제", 전게서.

50) 조혜정, 전게서, p. 47.

51) 유현석, "통일 한국에 대비한 민주시민 교육 연구", 『통일 연구』 (1-2),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p. 79.

52) 공보처, 『변화와 개혁 : 김영삼 정부 국정 5년 자료집(3)』, 전게서, p. 41.

제 중심의 통합교육과정이 모색되어야만 전 교과에 걸쳐서 전 기간에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로서의 한계점은 현 학문체계에서의 분과의 통합에 대한 반대와 학년제 등이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는 분과 형식의 학문체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갖가지 업무와 많은 교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특성상 쏠 교과에 걸쳐서 지도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거의 어렵다.

민족 공동체와 동질성 회복, 정체성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체제 이데올로기에 따른 영향으로 불안정한 카오스 구조체계로 접근하고 있고, 통일교육에서는 민족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한된 동질성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모든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화와 함께 열린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하지만,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아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통일국가 사회에서 당면케 되는 긍정적 문화적 충격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게 되거나 아노미 현상에 빠질 가능성<sup>53)</sup>이 있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아나키즘이나 전체주의적인 헤게모니가 등장하여 한국의 특수한 사회문화와 결부되어 새로운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

53) 박하진 외, 전게서, p. 238.

## 제 IV 장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에 관하여

2장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통일 환경의 변화와 통일 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현 실태와 문제점들을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살펴본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먼저 새로운 통일론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과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새로운 통일론의 방향과 통일교육

#### 1) 민족 공동체의 동질성 회복

다가오는 미래 통일논의의 핵심은 바로 민족 공동체의 동질성 회복과 의식의 통합 그 자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2장의 3절에서 언급했다. 이제는 통일교육의 중심도 민족 공동체의 동질성 회복과 의식 통합에 두어야 할 것이다. 민족적 동질성이 존재하는 요소에는 언어와 가족 문화의 동질성, 동질적인 유교문화, 민족주의, 인간 중심적인 사상 및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 등을 들 수 있고, 이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이미지도 객관적으로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sup>54)</sup> A. Etzioni는 남북한이 분단 반세기 동안 상호대결과 적대의식을 심화시켜 왔지만, 한편으로는 서로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다<sup>55)</sup>고 본다. 한 민족으로서 통일의 당위성을 서로간에 내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남북한은 통일의 형태와 방법과 같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54) 최은수,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내용과 통일 과정에서의 심리적 문제", 전거서, p. 38.

55) 이용필, "남북한 통합의 패러다임 : 체계론적 접근", 한림과학원 편, 「남북한의 체계론적 전환」, 소화, 1997, p.15.

서로 다른 인식을 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미지도 이전과는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회적 분화와 가속화로 인하여 脫산업사회적 문화 형태는 민족 공동체적 구심력이 점점 이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구심력의 적합성과 객관성을 냉철하고 비판적인 시각의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sup>56)</sup>, 새로운 통일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와 이론적 근거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변화를 민족 공동체 중심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교육 철학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의 6차 교육과정에서는 韓民族 공동체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북한의 도덕 교육에서는 25%정도가 예절교육, 전통 의식주 생활, 고유의 대가족 제도, 민족명절 등으로 서술되고 있다.<sup>57)</sup> 이를 동질성 회복의 기초로 마련하고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토대로 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시대 정신과 주체적인 교육개혁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세계화에 따른 세계 공동체와의 조화와 공존 의식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서 민족 공동체의 주체적인 의식은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새로운 경쟁체제에서의 우월성 확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미래 韓民族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 문화와 공존 의식은 전통 문화와 의식에 의해서 조화가 가능할 것이며, 외부의 이질적 요소들을 제거하면 한반도의 근대성과 전통의 동질성의 조화가 쉬울 것이다.<sup>58)</sup>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민족의 생활 감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공통의 언어

---

56) 김학성, 전개서, pp. 293-295.

57) 지항구,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도덕 교육의 비교연구 : 초등학교 3·4학년 도덕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 69.

58) 손봉삼, "남북한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도산학술논총』 (5), 전개서, pp. 326-328.

구조와 축적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 공간을 재결합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메카니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up>59)</sup>

셋째, 이를 기초로 해서 남북한 주민들간의 동질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질적인 측면들은 상호 이해하여 점차 동화시킬 수 있는 점진적인 통합의 자세와 다양한 관점의 수용과 조화가 필요하다. 특히 문화 특수적 접근의 논리<sup>60)</sup>보다는 문화 보편적 사고를 기초로 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접근을 해야 하며, 문화적·사회적 갈등 해소에는 특수적 사고가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韓民族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열린 민족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성립하는 것을 지향하고 이를 변증법적으로 초월해야 한다.<sup>61)</sup> 그러나 민족과 민족주의는 동일한 개념 적용을 피해야 하며, 한국 민족주의의 전통적 가치와 특수성의 논리화에 따른 현대화의 체계화 작업이 필요<sup>62)</sup>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과 미래지향적인 성격의 통일교육에 맞도록 민족주의도 정제된 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연구와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 2)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

이미 2장의 세계화에 대한 논의와 3장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체제 안보 중심의 정치적 성격에 의해서 경직성을 가진 채, 세계화에 대한 전략도 한국 사회의 시공간적 특수성과 결부되어 이미 전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통일교육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에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이를

---

59) 신문섭, 전계서, p 171에서 강민석의 글을 재인용.

60) 김도태·이경화, 전계서, pp. 13-15.

61) 손봉삼, 전계서, pp. 331-332.

62) 한경희, 「통일 후 국민 통합을 위한 국민형성 교육의 내용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 69-70.

교육적인 방향에서 연결을 시키지는 못한 채 대부분 사회 문화적인 방향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동질성과 이질성의 문제도 최근에 와서야 제시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비교 우위적인 입장에서 논의들을 해 왔으며, 아무리 세계가 급변하고 공산주의가 몰락을 했더라도 이 입장에 대한 태도는 기성세대일수록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실히 인식하면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의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하며, 통일논의와 보조를 맞추어서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성격의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한다.

패러다임의 정립을 위해서는 첫째, 이질화된 가치관, 사회규범, 도덕통합과 관련하여 교육부분의 통합을 다룰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이은죽, 1996)<sup>63)</sup>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정신적 구심점이란 사회통합 이론의 틀에서 말하는 상징적 일반화의 차원을 가리키는 말로서, 공통의 집합적 의식으로 성원들을 통일·단합시키는 과업에 해당한다. 언어와 가치관, 믿음, 규범, 지식등 정신적 측면의 문화적 상징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고 그러한 공통의 상징들에 의해서 정신적 일체감으로 조성하고 공인화 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정신적 구심점을 통해서 조국 분단의 원인과 배경에 관한 객관적 역사 사실에 입각해 분단의 현실을 인식하게 하고, 세계화에 따른 신국제 질서에서 韓民族은 열린 민족주의 추구하고 국가의 독립성에 따른 국가 정체성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는 비판적인 수렴논의를 통해서 통일의 공감대적 가치 질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주적 사고교육이 필요하며, 통일의 준비과정과 통일 이후 가치관의 혼란과 자아정체성의 일탈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격의 교육이 현실성에 맞게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표 IV-1>에서 보듯이 세계화와 다원화에 따라서 다양한 학문적

---

63) 오석중, 전개서, p. 223.



영역과 접근이 필요하다. 어느 특정한 영역(정치)에서는 더 이상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기가 어렵고, 이제는 단일 사회과학적 접근에 대한 정당성과 객관성마저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다. 따라서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후기 자본주의 사회 또는 다국적 자본주의 문화논리에 맞도록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新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 민족 통일 및 민주화라는 역사적·총체적 과업의 인식을 회색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sup>64)</sup> 때문이다. 결국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 속에서 찾을 수 밖에 없으며, 열린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전개되는 민족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표 IV-1〉 패러다임의 각 영역과 지향가치(전덕규)<sup>65)</sup>

영역	갈등적 위기 상황	대안적 모색	지향 가치
정치	민주주의의 중우정치화	시민사회·직접참여체제	평등적 자율화 지향
경제	자본주의의 반인간화	노사 공존·배분적 정당성	공동체적 생산 양식
사회	개인주의 사회로의 전락	기품있는 인격화 실현	신고전적 사회로의 지향
문화	상업주의의 범람	창조성과 공공성의 조화	문화 공동체적 지향
국제	주권국가 헤게모니 경쟁	다원적 국제 공존성의 모색	평화지향적 세계 정부 지향

### 3) 통일에 따른 교육 환경의 재조성

새로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 지향적인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심어주고 민족 사회를 실질적으로 내면적인 통합을 할 수 있는 정신 문화적 기반 요소가 확립되어야 한다.<sup>66)</sup>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에 맞는

64) 홍성훈·김경수, "포스트모더니즘과 교육과의 상관성", 『건양논총』 (5), 건양대학교, 1997, p. 365.

65) 이돈희, 『교과학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pp. 55-57.

66) 박하진 외, 전계서, p. 234.

여건과 통일교육 환경의 재조성이 필요하지만 현재에는 그러한 교육적 환경 자체가 구상에서 그칠 뿐, 구체적으로 준비에 따른 실천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다양한 패러다임의 접근에 따라서 다양한 체계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통일교육이 체계의 변혁을 시도하는 전환기에 서 있는 상황하에서, 체제의 기능은 유기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처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그 변화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끌어야 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쏘 학문체제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통일교육 종합 연구소 등이 설립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에서도 쏘 교과에 걸쳐서 지도할 수 있는 연구와 프로그램등의 소프트웨어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통일과 관련된 행사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등의 활성화는 보다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과 우리의 민족 주체성이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교육개혁이 먼저 선행되어져서 통일교육 환경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新기능주의적 접근에 의한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의 교육환경과 통일 국가로서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였을때의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연계성을 가지고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교육이 통일국가의 완성과 유지·발전을 뒷받침하고 통일 후 민족의 내면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들을 찾아서 내면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족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과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융합하는 교육, 세계 속에서 韓民族의 이상을 위한 세계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지방-학교간의 연계성과 더불어 정보화를 통한 교육지식(정보) 서비스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 2.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

### 1) 새로운 통일교육의 성격

세계화의 新국제질서의 재편 추세가 한반도의 통일 환경에 변화를 초래하였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북한을 포용하고 청소년들의 의식 개선과 동질성 회복,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적 체계와 이론적 근거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성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통일교육의 성격이 정치적으로 공식화된 관계만을 주목함으로써 사회적인 역동성에는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에<sup>67)</sup> 위로부터의 시각을 토대로 하여 지금의 교과서 체제에서도 이데올로기에 대한 교육의 방향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는 통일교육도 유기체적인 사회문화의 역동성을 근거로 열린 한민족 중심의 공동체를 수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 이후의 우리 민족이 경험하게 될 대내외적인 문제들과 도전,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교육으로서 전환되어야 하고, 새로운 환경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전망과 태도 습득, 그리고 통합된 민족 국가로서의 동북아시아 및 세계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sup>68)</sup>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및 세계질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며 교육내용도 이에 맞추어야 하며 이미 앞에서 언급을 했다.

---

67) 김연철, “북한 연구에서 ‘위로부터의 시각’과 ‘아래로부터의 시각’”, 『통일문제 연구』 (26), 평화문제연구소, 1996, pp. 10-13.

68) 안봉수, “통일과 안보의 균형적 시각 정립을 위한 고등학교 통일교육 방안”, 『교과서 연구』 (27), 한국2중 교과서 협회, 1997, pp. 54-57.

그래서 세계화와 지역화에 치중을 하고는 있지만 이보다는 전 교과 내용에서 남북한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내용과 다양한 영역이 필요하며, 민족공동체의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 최근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통일교육의 성격과 관련해서 제시를 하고는 있으나<sup>69)</sup>,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제시가 부족하다. 남북간의 잠재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필요하며 학생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갈등과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학생들간의 교류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리서치에 의한 결과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통일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 정치적 불안정을 예상하여 통일에 대한 소극적이고 기피하는 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일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 2)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초등학교의 통일교육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동질성을 먼저 학습하고 구체적인 통일 방법은 중·고등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야 하며, 심리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가장 중요시하므로 인지적인 영역보다는 정의적 영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앞에서 제기했던 논의들을 기초로 하여 ‘북한 현실의 이해’가 명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함과 동시에 통일의 준비라는 개념 자체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사회통합 문제의 영역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며<sup>70)</sup>,

69) 한국교육개발원, “남북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연구”, 1996. (<http://www.kedi.re.kr/korea/library/lib96/cr/96-37.html>)

70) 최은수,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내용과 통일 과정에서의 심리적 문제”, 전제서, p. 34.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교육과정의 개선에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의 접근을 위해서는 현재의 초등학교 통일교육이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쏠 교과에 걸쳐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실제 현장에서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주제중심의 교육과정의 실시라고 본다.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은 한 주제를 중심으로 쏠 교과가 그 주제에 맞추어서 전개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통합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통합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류재명은 6가지의 통합유형을 제시하였고, 그 중에서도 교과서 내용 영역 수준에서의 통합과 내용 주제 수준에서의 통합은 교과, 과목, 교과서의 구분 없이 학습 내용의 주제 차원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제시<sup>71)</sup>되고 있다. 물론 이 통합은 고수준으로서 학생의 학습 경험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그 효율성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자료로서 보다 다양한 문제를 나뉠대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나 이해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열린교육의 시초인 영국의 초등학교를 보면 한 학기에 두세 가지의 특정 주제를 제시하고 영어, 산수, 역사, 지리, 음악, 미술, 여행과 같은 과목들이 집중적으로 그 주제에 접근하는 주제 중심의 통합학습을 실시<sup>72)</sup>하고 있다. 과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우는가가 중요한 것이며,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 방법 자체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초등학교도 이와 마찬가지로 각 과목별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과목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

---

71) 류재명, 전제서, pp. 58-59.

72) 이종일, "영국 초등학교의 학습 진행 과정과 평가 : 범 교과적 통합을 중심으로", 『논문집』 (32), 대구교육대학교, pp. 62-64.

다.73)

따라서 이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은 통일교육이 어느 특정 시기에 가르치는 것보다 전 교과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쉰 기간동안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지역화에 맞도록 다시 재구성하여 이를 학습에 응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 교과서 내용에서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을 위주로 구조도를 작성하여 《부록 1》에 제시하였다.

### 3) 통일교육 내용 : 민주시민 교육 방안

통일교육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가 바로 통일된 민주사회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초기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통일교육보다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2장과 3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듯이, 앞으로의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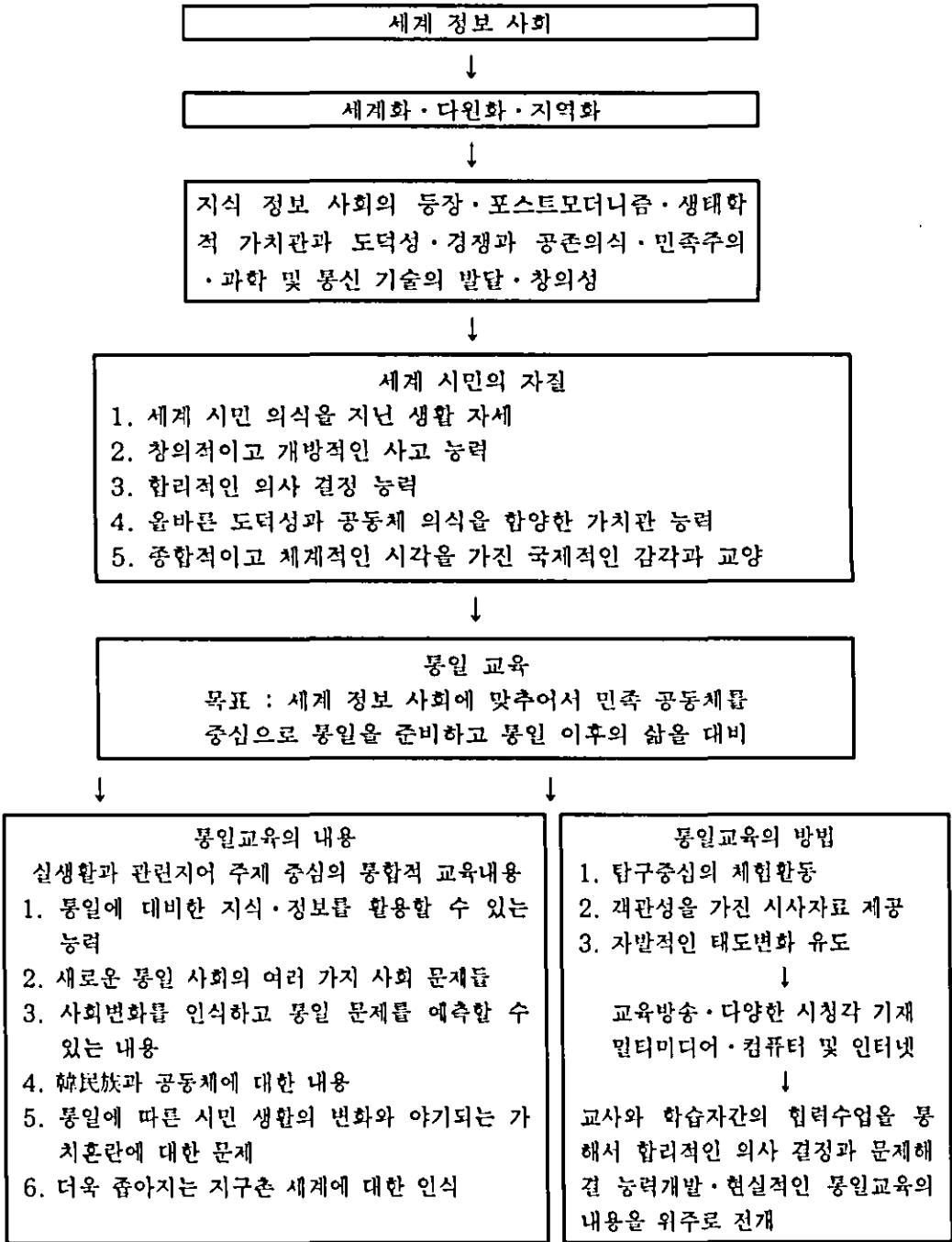
우선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들의 정부와 국가를 알게 해야 한다. 자기 정체성을 통해서 통일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공고히 하고 민주시민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관리 및 행정 담당자들의 특강, 학급 회의나 학생 자치회 활동의 활성화, 특별 활동을 통한 자치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활용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다.74)

둘째, 세계화와 급변하는 통일 환경 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사 위주의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 후 다양한 사회적·가치관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통 가치관 및 도덕성을 함양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화와 따른 민주시민 교육과의 조화를 통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그림 IV-1]에 제시를 하였다. 이런 평면

---

73) 홍종관, “독일 초등학교의 학습 과정과 학습 평가”, 상계서, pp. 275-277.

74) 유현식, 진계서, p. 95.



(그림 IV-1) 세계화에 따른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

적인 제시 외에도 박용헌은 다원성의 가치와 통합성의 가치를 하위 요소로 설정하여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삼차원적인 입체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어서<sup>75)</sup>,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다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 '민주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보다 더 큰 합의의 용어정의가 필요하다. 즉 민주 시민성이라는 말은 이미 모순된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민성 개념이 필요하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처럼 일시적이면서도 다양한 시대적 흐름에 한정되는 것보다는 보다 융통성을 가지는 목표와 연관성을 가지고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통일교육을 실천적으로 일상 생활에 적응시킬 수 있는 문제들과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동들이 특정 시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학문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미래 통일 사회를 전망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정보화 교육 방안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홈페이지나 웹 문서를 활용함으로써 단조로운 교수 학습의 방법을 탈피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도 마찬가지로 기존 가치의 붕괴와 가치 추구의 다원화, 개인화, 脫가치화등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도 바람직한 교육의 이념 정립이 필요하다.<sup>76)</sup>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통일이나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

75) 박용헌, "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 교육의 방안 모색", 『통일대비 시민교육 남북한 비교 대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 부설 자유민주연구소, 1997, pp. 22-29

76) 조화태, "교육 이념과 친학의 정립", 『교육원보』 (181), 교육부, 1997, pp. 68-69.



찾기 위해서는 사전의 기존 지식이나 배경 지식들이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정보검색을 통하여 적절한 자료와 사이트 주소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기성 교사들이 정보화를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인터넷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교육용 웹 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면에서도 비교적 서툴다고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파워포인트(Power Point)를 활용한 학습이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는 실정에서 매우 활성화되고는 있으나, 교육용 웹 문서에 비해서는 다양한 구성능력이나 시각적인 활용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본다. 그래서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만들 수 있는 교육용 웹 문서의 표준용을 보급하여 현장의 교사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교육 현장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실천의 하나로써 교육용 웹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편의상 도덕 교과서 6학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 단원을 제재로 구성하여서 <부록 2>로 제시를 하였다.

### 5) 교사의 전문성 신장

앞에서 살펴보았던 < 표 III-1 >을 보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교육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었다. 몇 시간을 듣고서 곧바로 현장에 나가간다면 과연 무엇을 아동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서 통일과 관련된 수강과목의 증가가 필요하고 내용에서도 보다 충실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통일교육의 전문연수에 대한 시설투자와 철저한 준비와 계획성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는 통일교육의 현장 연구와 각종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정보 자료와 다양한 수업 자료의 홍보 및 제공을 해 주어야 하며, 아동들을 직접 상대하는 교사의 책임상 북한의 체제적 변화와 현 실정의 문제들의 본질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교사의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어야 한다.

- ① 통일과 관련된 전공서적, 보고서, 논문의 제공
- ②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한 자료수집과 스크랩북
- ③ 시사정보 및 통계자료 등의 수집
- ④ 영상매체와 컴퓨터, 인터넷, PC통신, 실험화상기 등의 시청각 자료 활용
- ⑤ 독서 및 논술 지도와 행사 활동, 현장 연수 및 견학지도

무엇보다도 각종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서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경험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교실 위주에서 벗어나서 지역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져 하며, 교육 관계자의 인식 전환과 지역사회인사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각 학교와 국가행정기관 또는 통일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수 학습 자료는 반드시 학생들의 욕구와 흥미, 능력들을 고려하는 차원이 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과 같이 자료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 V 장 요약 및 결론

현재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많은 국제적인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통일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IMF와 함께 닥친 경제적 위기는 새로운 통일환경의 패러다임과 성격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하여 현재의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지금의 통일교육은 문민정부에 의해서 6차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사상 중심의 체제 우월식의 교육을 지양하고 민족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통일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우선 문민정부의 지속적인 추진력이 부족한 채, 무분별한 경쟁 중심의 세계화정책의 시행과 실패를 들었다. 교육개혁의 성과 없는 개혁시도로 아동들로 하여금 경쟁중심 체제의 교육을 유발시킴으로서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켰다. 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능동적 대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통일교육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했고 통일에 대한 의식도 점점 이질적으로 다원화와 자아 정체성의 불안과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 환경도 급변함에 따라서 과거의 체제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민족공동체 중심의 논의가 제기되었고, 열린 민족주의와 정보문화 통일론 등의 제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는 있으나, 아동들의 민족에 대한 의식에서는 이질감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과 탐구도를 조사하여,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교육과정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공동체 중심의 교육을 제시는 하고 있으나,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여전히 비교 중심의 내용들과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내용, 대립적인 묘사의 그림 등이 제시되어 있었으며, 탐구도를 통한 조사에서는 교과서의 활동적인 성격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내용은 설명 위주로 제시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능동적인 탐구 활동의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여 탐구 수업으로 유도한다고 볼 수는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통일론의 방향에 따른 패러다임과 교육 환경을 제시하였다. 먼저 세계화에 맞추어서 민족의 사회·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역동성에 관심을 가지고, 전통과 현대의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결부시켜서 공통성을 수립하고 이를 韓民族의 열린 민족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이룰 수 있는 패러다임의 성격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韓民族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논의의 기초로서 활용하며, 저하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관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준비의 교육적 환경과 통일이후의 교육적 환경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위의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방안을 마련하였다. 미래 지향적인 통일교육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성격과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서의 실천, 내용으로서 민주시민 교육방안, 그리고 정보화에 따른 교육과 이를 전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현장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을 한 교육과정에서 6-1학기를 기초로 하여 새롭게 구성을 하여서 통일교육에 적용시켜 볼 수가 있으며, 내용 구조도를 작성하여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차시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용 웹 문서도 작성을 하여 부록으로 제시를 하였다. 이러한

주제 중심 교육과정의 내용 구조도나 교육용 웹 문서는 현장에서 실천 정도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이 있어서 이를 현장에 어느 정도 실천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단지 계획서의 수준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을 통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및 신문〉

- 공보처, 『문민정부 5년 : 개혁백서』, 1997.
- , 『변화와 개혁 : 김영삼 정부 국정 5년 자료집(3)』, 1997.
- 공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요람』, 1995.
- 교육부, 『교사용지도서 도덕(3-1, 4-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6.
- , 『교사용지도서 도덕(5, 6)』,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7.
- , 『교사용지도서 사회(3-2, 4-1, 4-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6.
- , 『교사용지도서 사회(5-2, 6-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7.
- ,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I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4.
- , 『도덕(3-1, 4-1)』,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6.
- , 『도덕(5, 6)』,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7.
- , 『사회(3-2, 4-1, 4-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6.
- , 『사회(5, 6)』,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7.
- , 『사회과 탐구(3-2, 4-1, 4-2)』,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6.
- , 『사회과 탐구(5, 6)』,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7.
- 국민일보 1997년 6월 6일 27면.
- 경향신문 1997년 6월 24일 21면.
- 김현제·임영득, 『탐구적 과학 지도 기술』, 전파과학사, 1980.
- 노승우, 『민족 통일의 이론과 실천』, 전예원, 1996.
-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요람』, 1997.
- 또 하나의 문화 통일 소모임,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또 하나의 문화, 1996.

박하진 외, 「통일 문제 이해」, 통일원, 1996.  
 세계일보 1997년 3월 22일, 6월 10일 29면.  
 안성호 편저, 「세계화·지방화, 그리고 민주화」, 교육과학사, 1996.  
 운현초등학교, 「열린교육을 위한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 양서원,  
 1998.  
 유영옥, 「한반도 통일 정책론」, 학문사, 1996.  
 이돈희, 「교과학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인천교육대학교, 「대학요람」, 1998.  
 조선일보 1997년 6월 2일, 11월 14일 7면.  
 중앙일보 1997년 9월 24일 4면, 10월 3일 10면, 11월 13일 7면.  
 진주교육대학교, 「대학요람」, 1997.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요람」, 1997.  
 통일원, 「통일백서」, 1997.  
 통일정보신문 1998년 6월 3일, 6월 10일.  
 한겨레 신문 1997년 1월 27일 6면, 5월 13일 26면, 5월 16일 13면, 6  
 월 16일 6면, 6월 24일 27면, 10월 4일 7면, 1998년 2월 25일 7면.

### 〈논문 및 정기간행물〉

고성호, "통일 한국의 사회 체제와 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문제연구  
 구원, 「한반도 통일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김광식, "정보 문화 시대의 통일 주체와 방법을 위한 모색", 「풀뿌리 네  
 트워크가 통일을 만들어 간다」, 풀빛, 1997.  
 김도태·이경화, "통일교육 개선 방향 : 사회 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통일 연구 논총」 (6-1), 민족통일연구원, 1997.  
 김연철, "북한 연구에서 '위로부터의 시각'과 '아래로부터의 시각'", 「통일

- 문제 연구」(26), 평화문제연구소, 1996.
- 김용현, “통일 연구의 현황과 과제”, 『통일 문제 연구』(26), 평화문제연구소, 1996.
- 김운순, 『초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사진의 평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학성, “문화적 이질성 극복과 통일 문화 형성”, 한국문제연구원, 『한반도 통일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 류재명, “사회과 통합 운영과 지리과 교육과정의 계열적 조직방안”, 『사회과학교육』(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교육 연구소, 1997.
- 박용현, “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 교육의 방안 모색”, 『통일 대비 시민교육 남북한 비교 대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 부설 자유민주연구소, 1997.
- 손풍삼, “남북한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도산학술논총』(5), 도산아카데미연구원, 1996.
- 신문섭, “남북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논총』(18-2), 대우공업전문대학교, 1996.
- 안봉수, “통일과 안보의 균형적 시각 정립을 위한 고등학교 통일교육 방안”, 『교과서 연구』(27),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7.
- 안현수, “한국의 민족주의, 민주화 그리고 통일”, 『민족주의와 사회주의』(4), 경기대학교 부설민족문제연구소, 1996.
- 오석중, “사회 통합 모색을 위한 교육 통합 방안-남북한 도덕교육을 중심으로”, 이은죽 외, 『남북한 사회통합론』, 삶과 꿈, 1997.
- 유영옥, “남북한의 교육실상 비교와 이질화 극복 방안(하)”, 『국제문제』(334), 국제문제연구소, 1996.
- 유현석, “통일 한국에 대비한 민주시민 교육 연구”, 『통일연구』(1-2),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 윤영관, “세계화 : 민족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김경원·임현진 공  
 편,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 1995
- 이은죽, “남북한 사회 통합의 이론적 탐색”, 『남북한 사회 통합론』, 삶과  
 꿈, 1997.
- 이용필, “남북한 통합의 패러다임 : 체계론적 접근”, 한림과학원 편, 『남북  
 한의 체계론적 전환』, 소화, 1997.
- 이종일, “영국 초등학교의 학습 진행 과정과 평가 : 비교과적 통합을 중심  
 으로”, 『논문집』 (32), 대구교육대학교, 1997.
- 임상수, “북한 사회 통합 연구에 대한 체계 과학적 접근”, 이은죽 외, 『남  
 북한 사회통합론』, 삶과 꿈, 1997.
- 정진경, “문화 이해지-통일과 심리적 화합”, 또 하나의 문화 통일 소모임,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또 하나의 문화, 1996.
- 조혜정, “북조선과 남한의 동질성과 이질성”, 또 하나의 문화 통일 소모임,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또 하나의 문화, 1996.
- 조화태, “교육 이념과 철학의 정립”, 『교육월보』 (181), 교육부, 1997.
- 지향구,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도덕교육의 비교 연구 : 초등학교 3·4학  
 년 도덕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97.
- 최영표, “중·고등학생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학교교육과 통일교육의 운  
 영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연구-96년도 통일 정책 포럼 자료집』, 민  
 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96.
- 최은수,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내용과 통일 과정에서의 심리적 문제”,  
 『통일 연구 논총』 (6-1), 민족통일연구원, 1997.
- ,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도산학술논총』 (5), 도산아카데미 연  
 구원, 1996.
- 최재현, “세계화와 지방화 : 그 지리적 의미의 연속성”, 『지리교육논총』

- (3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학과, 1996.
- 한경희, 『통일 후 국민 통합을 위한 국민 형성 교육의 내용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한만길, “변화하는 시대의 열린 통일교육”, 『교육월보』 (174), 교육부, 1996.
- 홍성훈·김경수, “포스트모더니즘과 교육과의 상관성”, 『건양논총』 (5), 건양대학교, 1997.
- 홍종관, “독일 초등학교의 학습 과정과 학습 평가”, 『논문집』 (32), 대구교육대학교, 1997.

#### 〈인터넷 사이트 및 웹문서〉

- 박자랑, “문화 공산주의”, (<http://www.21info.com/ser27.html>)
- 부산교육대학교 교육과정. (<http://www.pusan-e.ac.kr/teach.htm>)
- 서울교육대학교 교육과정.  
([http://www.seoul-e.ac.kr/suup/s\\_edu3.htm](http://www.seoul-e.ac.kr/suup/s_edu3.htm))
- 전주교육대학교 교육과정.  
([http://www.chonju-e.ac.kr/departments/curr\\_minor.html](http://www.chonju-e.ac.kr/departments/curr_minor.html))
- 지원중학교, “토론 학습과 행사 참여를 통한 민주 통일 교육방안”, 『97 통일 대비교육 시범학교 운영 계획서(2/2차년도)』, 1997.  
(<http://210.121.210.1>)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과정.  
([www.cune-e.ac.kr/curriculum/curriculum112.html](http://www.cune-e.ac.kr/curriculum/curriculum112.html))
- 통일정보신문. (<http://www.unityinfo.co.kr/surmun/980603/980603-01.htm>)

—————. (<http://www.unityinfo.co.kr/surmun/980610/980610-01.htm>)

한국교육개발원, “남북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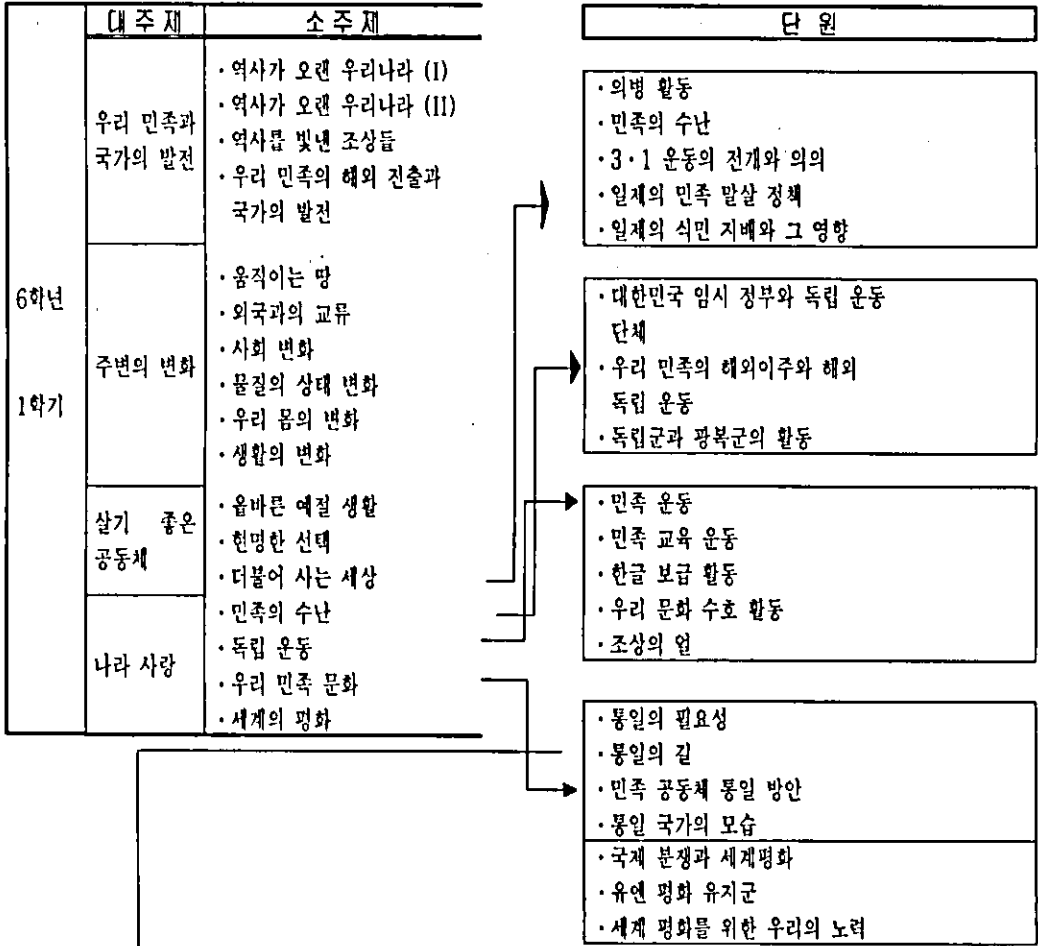
(<http://www.kedi.re.kr/korea/library/lib96/cr/96-37.html>)

한만길, “남북한 학생의 통일 의식과 교육의 과제”, 『제 5회 통일 대비 교육포럼』, 한국교육개발원, 1998.

(<http://203.231.5.3/pub/forum/forum98.hw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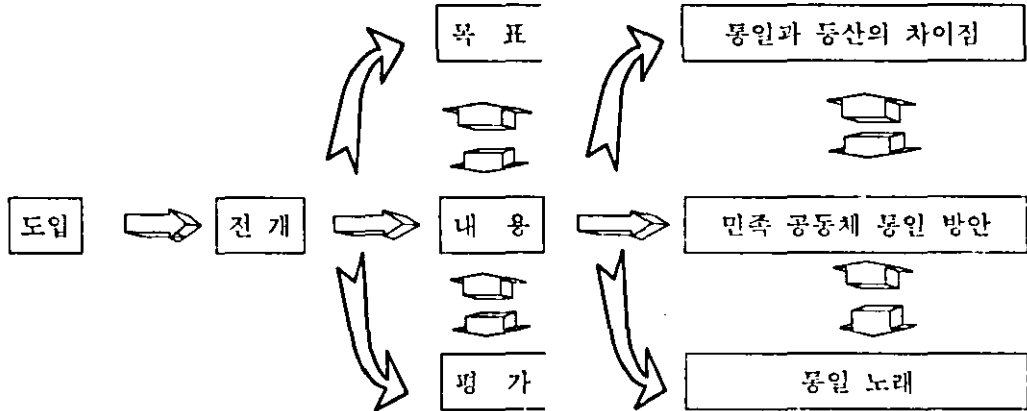
### **〈부록 1〉 주제별 교육과정에 따른 6학년 1학기의 주제별 내용 구조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의 학습 내용을 근거로 하여 운현초등학교에서 지역화와 열린교육에 따라서 재구성하여 놓은 것을 참고로 하였다. 대주제와 소주제, 그리고 소주제 중에서 통일과 관련하여 '나라사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각 교과별로 포함되어 있는 활동 단원들을 제시해 놓았으며, '세계의 평화'를 중심으로 다시 각 교과에 연관성이 있는 하위 단위들을 연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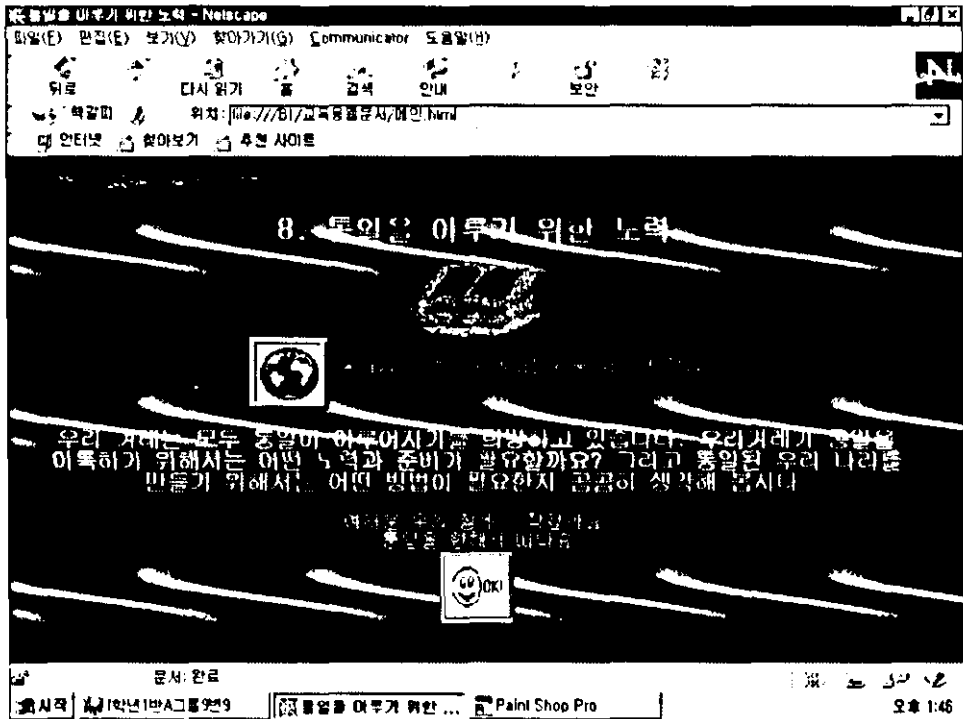


교과 영역	활동 단원
대집단 활동(도덕영역)	8.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pp. 77-88)
말하기·듣기·쓰기 영역	5. 의견을 모아서
읽기 영역	(말하기 : pp. 38-43, 읽기 : pp. 47-55)
수학 영역	11. 여러 가지 문제(2)(pp. 146-160) - 수학 익힘책(pp. 160-175)
사회 영역	3. 국권을 위한 회복 노력(pp. 101-143) - 사회과 탐구(pp. 108-143)
자연 영역	1. 움직이는 땅(pp. 4-35) - 실험관찰(pp. 3-16)
체육 영역	10. 씨름(pp. 53-58)
음악 영역	금강산(pp. 12-13), 고향의 봄(p. 54)
미술 영역	통일을 주제로 하여 다양하게 표현해보기
실과 영역	3. 밥상차리기(pp. 67-74)

〈부록 2〉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 단원의 교육용 웹문서 내용 구조도와 장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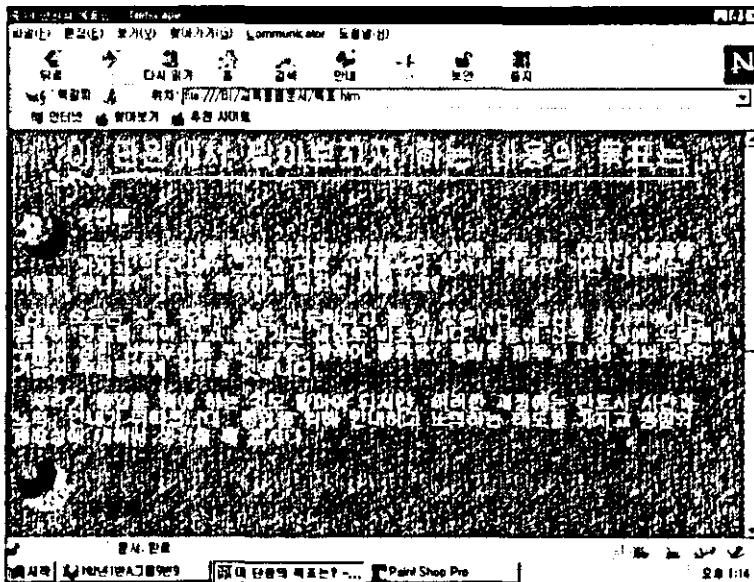
①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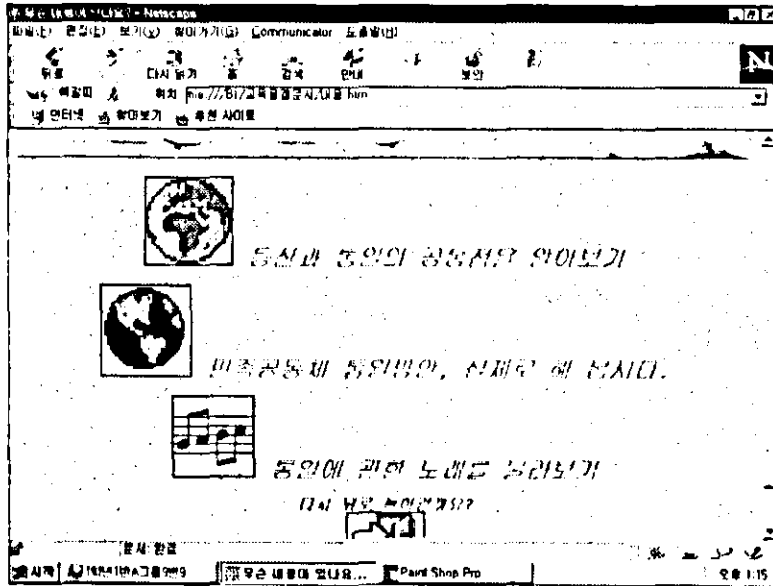
②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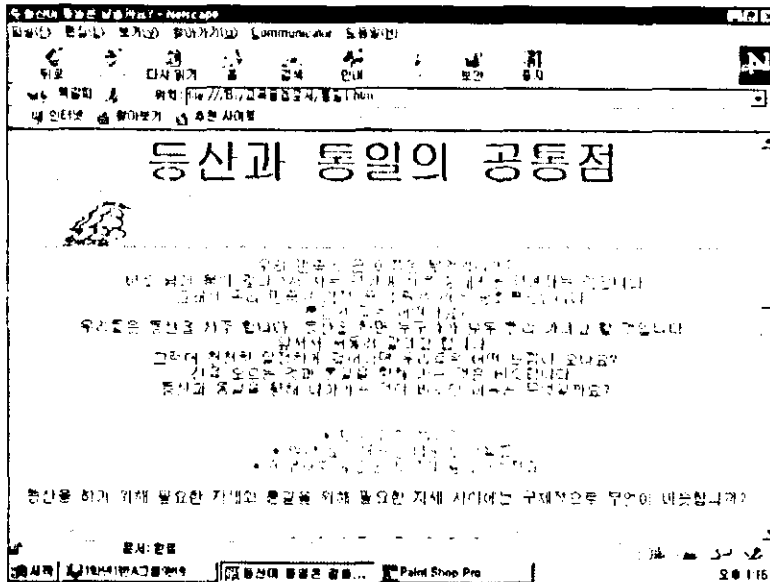
③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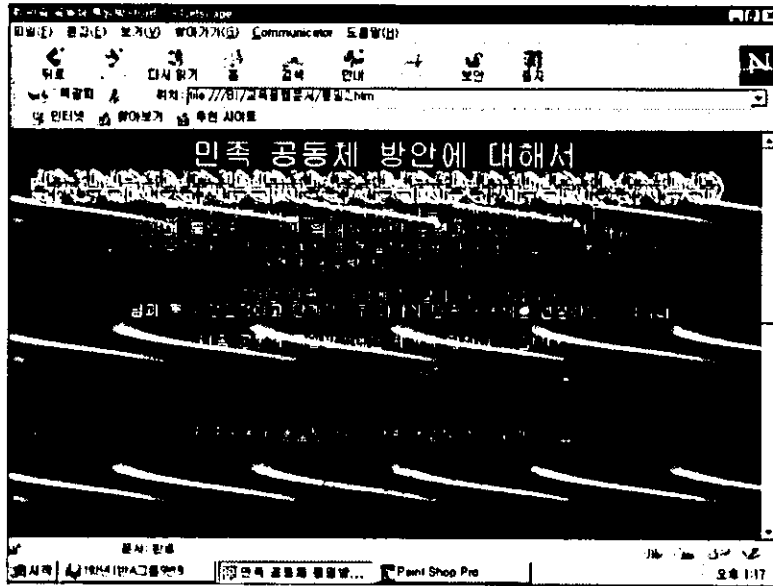
④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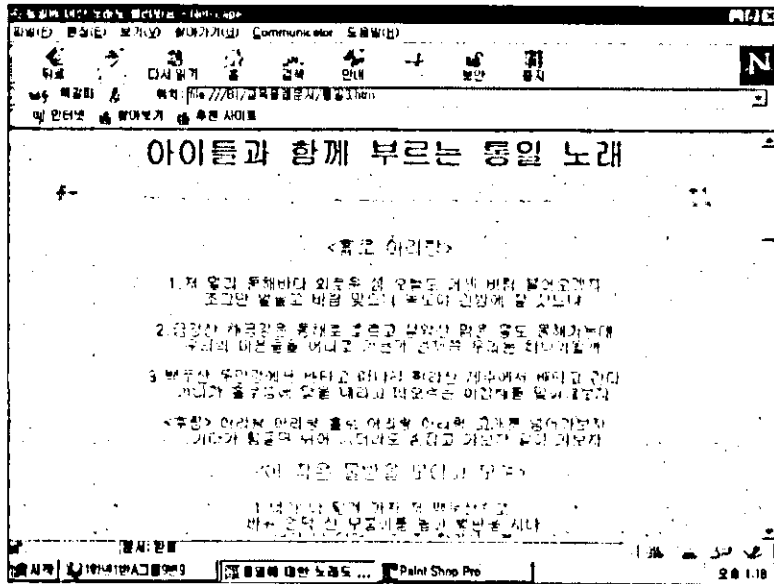
⑤ 통일과 등산의 차이



⑥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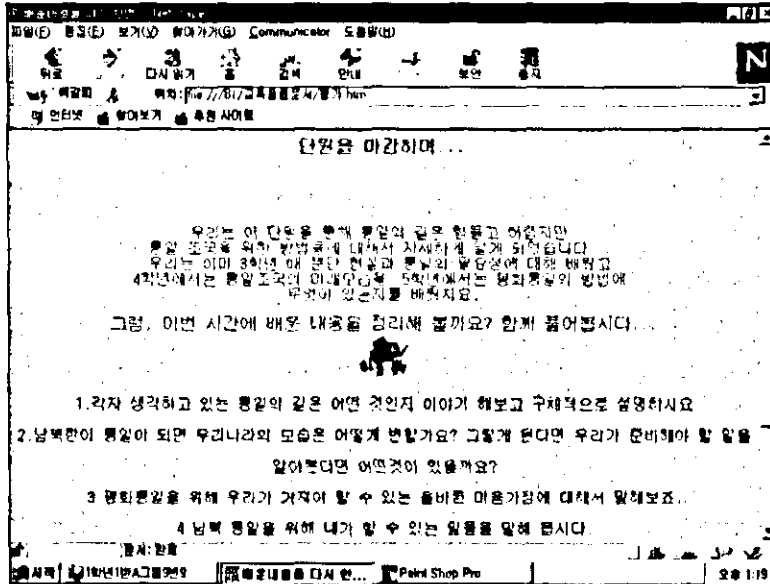


⑦ 통일 노래





⑧ 평 가





# 통일을 위한 언론의 개혁과 역할

- 김대중 정부 이후 조선·동아·한겨레 신문 사설 중심으로 -



성명: 김 양 근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 목 차 〉

- I. 서 론
- II. 한반도 통일문제와 언론
- III. 연구내용 및 방법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V. 통일을 위한 언론의 개혁 및 역할
- VI. 결 론



# 제 I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한반도는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 체제로 남아있다. 그동안 한반도의 남한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으며, 북한은 김정일 체제가 붕괴의 예상을 깨고 안정적인 권력을 구축하며 주석직 취임<sup>1)</sup>을 며칠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새로운 체제는 그 동안의 냉전체제에 새로운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그 동안의 대결국면을 청산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이는 미국등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있다.<sup>2)</sup>

그리하여 정주영씨의 소떼를 이끈 북한 방문과 금강산 개발 사업은 '햇볕정책'의 결과물로 여겨지며 새로운 남북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해안의 잇따른 북한 도발 사건은 또다시 남북관계를 대결과 불신의 장으로 바꿔놓았다.

이와 같이 어렵기만 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언론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분단 이후 계속적으로 언론에 던져진 질문임에 틀림없

---

1) 「중앙일보」, 1998. 8. 3. '남북대화 9월 재개 추진'

'정부당국자는 "북한이 이달말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을 국가주석으로 선출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서 "김정일시대가 본격 개막될 9월 중순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이고 이를 위해 공식·비공식 채널이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막후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라고 보도했다.

2) 「서울신문」, 98. 6. 10. (사설, 北 태도변화 있어야)

불안한 북한을 제재와 봉쇄로 고립시키는 것보다 교류와 협력으로 국제사회에 끌어내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기반조성에 효과적이라는 김대통령의 이른바 '햇볕론'이 이번 방미란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게 된 것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

다. 남북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은 나름대로의 사명을 갖고 활동해 왔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3)</sup>

이러한 시대적 반영속에서 언론이 지닌 기본적 기능 가운데 하나는 국가와 국민의 중간에서 국민이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는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태도나 의견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언론은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국민을 계도해야 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언론이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태도나 의견형성, 국민의 계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문제에 관련된 언론의 역할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언론의 영향이 절대적<sup>4)</sup>이었다는 사실은 김대중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여론형성과 정부정책에 절대적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이 김대중 정부 이후 통일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특히 그 동안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또한 냉전체제의 시각으로만 취급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새로운 통일정책을 제시하며 북한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장에서는 한반도 통일문제와 이에 대한 언론간의 관계를 고찰한 다음 제3장과 4장에서 조선·동아·한겨레 신문의 사실 모집 및 분석방법,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논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에 대한 문

---

3) 이현희. 1995.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신문사설의 내용분석",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

4) 김창수. 1997. "민족화해와 신문의 보도태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도서출판 심지, pp. 333-334.

제점을 살펴보고, 통일을 위해서는 언론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제 2 절 연구방법

이 논문은 신문사설의 내용을 분석하는 내용분석 방법을 도입하였다. 내용분석을 통한 연구방법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법으로서 이는 커뮤니케이션 연구분야에서 정립되었으며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다.<sup>5)</sup> 내용분석은 어떤 자료, 메시지는 물론 그것을 둘러싼 커뮤니케이션의 전체적인 상황(context)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즉 반복 가능한 기술 및 추론적 분석, 수량적·질적 분석을 하는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분석대상은 9대 중앙일간지<sup>6)</sup>중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은 통일문제의 내용을 분류하기 위해 PC통신에서 한국언론연구원의 언론종합정보은행인 카인즈(KINDS : Korean Intergrated Newspapers Database System)라는 데이터베이스(Data Base)망을 이용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의 3개 신문사설중에서 '통일' 또는 '북한'의 단어가 포함되는 내용을 모두 검색하여 탐색·출력하였고, 통일문제 전문서적 및 잡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통해 연구자 나름대로 6개의 주제, 즉 「정치·외교」, 「군사·안보」, 「통일정책」, 「북한실태」, 「경제협력」, 「사회·문화」로 분류하여 분류표를 작성하였다. 이 분류표에는 신문별 번호와 이벤트와 이슈의 구분, 날짜와 제목, 주제와 소주제, 성향, 논조를 작성하여 정리하였다.

5) 차배근, 1992.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세영사, p. 375.

6) 9대 중앙일간지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중앙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이다.

## 제 II 장 한반도 통일문제와 언론

### 제 1 절 한반도 통일문제의 주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과 남북한의 국내상황을 볼 때, 통일환경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과 남한의 IMF사태는 감상적인 흡수통일정책에 젖어있던 환상을 깨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sup>7)</sup>

통일정책에는 통일의 달성을 위해 심리전·공작전 차원의 '대북정책'이 있고, 통일홍보 차원의 각종 '통일방안'이 있으며, 북한의 전략과 전술을 파악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대화정책'이 있다. 또한 '통일외교정책', '군사·안보정책', '경제협력'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통일정책의 하부분야들인 것이다.<sup>8)</sup>

김대중 정부 이후 국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개인적 기호 및 세계관등이 달라 수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3대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

#### 1. 통일문제의 변천

##### (1) 역대 통일정책의 변천

제 1공화국 통일정책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북한에 대해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 지역에서의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7) 백낙청. 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 비평사, p. 29.

8) 이현희, 앞의 논문, p. 5.



1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요구하고 만약 북한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무력을 사용하여 한국의 주권을 회복할 것임을 밝힌 이승만 정부의 북진 통일정책이다.<sup>9)</sup> 제 2공화국은 이승만 정부의 반공정책을 계승하였으나 무력사용을 배제하고 UN감시하의 남북 총선거를 통해 통일을 이루겠다는 정책기조를 제시하였다. 박정희 군사정부에서는 일체의 통일논의가 중지되었으며, 혁명공약에서 반공태세의 재정비 및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이 대북정책의 기조로 등장하였다.<sup>10)</sup> 그러나 1970년 「8·15선언」<sup>11)</sup>을 통하여 북한을 선의의 경쟁대상, 대화협상의 상대로서 그 정치적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이후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의교정책특별선언」 7개항을 통해 북한을 국가는 아니지만 정치실체로 인정하고 남북한간의 평화적인 관계정립을 천명하였다. 제 5공화국 정부는 민족화합·민주통일을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하고, 진정한 통일은 민족적 화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1982년 1월 22일 통일에 대한 구상을 체계화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sup>12)</sup>을 발표하였다. 제 6공화국 정부는 '자유·평화·민주적 통일'을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하고, '통일논의 자유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1988년 7월 7일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외교정책방향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sup>13)</sup>을 천명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 시작

9) 전득주, 1992. "한국의 통일정책, 과거·현재·미래", 「민족통일의 길」.

10) 정규섭, "정부수립 후 민족통일정책과 김일성 사후 남북관계전망", 「한세정책」, 1994년 1월호, p. 29.

11) 8·15선언은 북한에 대하여 선의의 남북체제경쟁을 제의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분단이후 변화된 남북한의 모순과 '특수한 관계'를 현실로서 인정하고 통일에 접근해 나가려는 자세 전환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선의의 남북체제경쟁' 제의는 남북의 통일정책역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효과가 있었다.

12) 통일연수원, 1993. 「민주통일론, 통일문제편」. pp. 10-11.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① 통일될 때까지의 과도조치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여 남북한관계를 정상화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으로써 평화와 화합을 실현시킨 바탕위에서, ②통일헌법을 함께 마련하여 통일민주공화국을 완성시키자는 것이다.

13) 통일원, 1993. 「통일백서」, 정문사, p. 30.

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7월 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회사<sup>14)</sup>를 통해 통일과정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는 기조로 「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 3가지를 천명하였다.

## (2)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 3대 원칙으로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둘째, 흡수통일 배제, 셋째, 화해·협력의 적극추진을 천명하여 북한에 대하여 포용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이후 북한관련 사항을 정리해보면, 199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직후, 북한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았다. 199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이 열려 김대중 정부는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3월에 북풍사건수사와 ASEM회의를 통하여 북한문제는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4월에는 북한의 비료지원에 대한 남북한 차관급 회담이 열려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결렬되었다. 이후 5월의 인도, 파키스탄의 핵실험은 북한에 대하여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게 되었다. 6월 북한의 남북예술축전공동개최 제의와 김대중 대통령의 성공적인 미국방문,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를 이끈 북한방문과 금강산 개발 사업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할 수 있었다. 그러나 6월말

---

7·7특별선언에서는 ① 다방면에 걸쳐 남북한 동포들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며, 해외동포의 남북한 동포들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며, 해외동포의 남북한 왕래를 개방 ②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 ③ 남북한간 물자교역을 개방 ④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 ⑤ 남북간 대외외교 중시하고 국제무대에서 협력 ⑥ 남북한과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 추진등 6개항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14) 통일원. 1994. 「통일백서」, 정문사, p. 53.

이 개회사에서 김영삼대통령은 “내실없는 통일을 감상적으로 바라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자유와 번영’이 있는 통일을 위해 “통일된 조국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복지와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 통일로 가는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통일의 길은 바로 민족번영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집진적·평화적·민주적 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과 7월초의 북한의 잇따른 침투도발 사건은 남북관계를 다시 냉전분위기로 바꾸어 놓았으며, 한국사회에서는 소위 '햇볕정책'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었고,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 김정일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바뀌지 않고 계속 지켜지고 있다.

## 2. 통일문제의 주제 도출

통일문제의 변천과 98년 북한문제를 살펴보면 통일문제는 세계정세와 주변 4강정세, 정상외교, 미국과 남북한 외교 관계등 정치·외교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요컨대 통일문제 그 자체를 정치·외교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통일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외교>를 하나의 큰 주제로 도출하였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주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등의 문제와 북한침투, 국군 포로문제, 1997년 대선당시 안기부의 북풍공작등을 묶어서 <군사·안보>라는 주제로 도출하였다.

남북고위급 회담등 남북간의 각종대화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단위별 통일정책, 남북한 관계 전망등을 <통일정책>으로 도출하였다. 김정일 체제의 전망, 북한의 동향, 식량난, 일반적인 북한의 실상에 대한 보도태도를 <북한실태>로, 남북한 교류 활성화, 금강산 개발사업을 <경제협력>으로 도출하였다. 언론, 문화교류, 통일문화 대축전, 체육, 교육, 종교등을 <사회·문화>로 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 제 2 절 통일문제와 언론

우리 한반도는 분단 50여년 동안 통일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해방

이후 각 정권마다 통일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정권이 없었으며 통일을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감수해내야 할 것이란 의지를 천명해 왔다. 통일논의의 다양한 전개과정에서 논의의 방향과 국민에 대한 여론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언론인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보유통과 여론형성의 중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으로서는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나친 비관도 근거없는 낙관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희망적인 측면과 노력을 요하는 측면이 정확하게 구분될 때 국민적 여론도 올바른 방향에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근거없는 통일낙관론과 무책임한 흡수통일론을 경계하는 동시에 통일 무용론과 통일 비관론의 대두를 억제 하면서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기 위하여 진실을 보도하고 여론을 선도해 나가는 일이 언론의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언론이 통일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그와 관련된 각 사회기구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정보원이 언론이고, 따라서 언론이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태도나 의견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문제와 관련된 언론의 역할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sup>16)</sup>

오늘날 통일문제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자율적 취급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언론은 타당한 통일관 정립과 자율의 운영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체제를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도 언론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언론 내부의 세대별, 성향별, 통일관의 차이도 관련문제에 대한 언론의 정체성 확립노력에 고통을 주고 있다.<sup>17)</sup>

15) 정세현, "몽입환경변화와 언론의 역할", 「신문연구」, 1992년 겨울호, p. 53.

16) 최진봉, "한반도 통일을 위한 언론의 역할", 「북한」, 1994년 4월호 p. 177.

17) 김철, "남북문제를 보는 하나의 관점", 「신문연구」, 1990년 겨울호.

## 제 III 장 자료모집 및 분석방법

### 제 1 절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중앙 9대 일간지중에서 조선일보·동아일보 및 한겨레 신문을 선정하였다.

이 신문들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근거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일간신문중 연륜이 오래되고 대표적인 보수지로 상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판매부수 면에서 어느정도 상호경쟁관계에 있으며 그리고 이들 신문은 한겨레 신문과 소유구조, 표방이념 등에서 상이한 구조속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겨레 신문은 특히 특정 이념을 표방하고 있어 한국 사회에 비교적 진보지로 인식되고 있다.

분석의 대상을 사실로 한정시킨 이유는 사실은 어떤 이슈에 대한 그 신문사의 의견의 표현이고 이는 곧 그 신문의 보도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sup>18)</sup> 또한 사실은 일반대중들의 사고방식에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한편으로는 일반대중들의 정서와 여론을 반영한다.<sup>19)</sup>

분석 대상 기간은 1998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당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 25일로 시작하려 했지만, 199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김대중대통령이 사실상 정권인수위원회를 통하여 국정을 이끌어 나갔고, 언론의 북한 관련 보도도 김대중 정부를 연 관시켰기 때문에 1998년 1월 1일부터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sup>20)</sup>

특히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노선을 취

---

18) 이현희, 앞의 논문, p. 18.

19) Keesoon. park, "North Korea and the Sino-Soviet Conflict", M. A. Thesis, University of Missouri, 1973. P. 46.

20) 참고적으로 1997년 12월 19일 당선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관련 사실은 한겨레 신문만 1건(1997년 12월 22일, 남북관계개선에 거는 기대)을 보도하였다.

해 21) 역대정부의 반공이데올로기와는 확연히 달라, 이에 대한 언론의 논조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여기에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일으킨 6월과 7월의 사실은 우리의 대북 보도 태도와 통일을 위하여 언론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분석대상의 사실건수는 PC통신을 이용하여 한국언론연구원의 언론종합정보은행인 카인즈(KINDS : Korean Intergrated Newspapers Database System)라는 데이터베이스(Data Base)망을 이용하여 1997년 12월 19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의 3개 신문사설중에서 '통일' 또는 '북한'의 단어가 포함되는 내용을 모두 검색하여 탐색·출력하여 북한문제에 직접 관련이 있는 128건을 선정하였다. 그 내역은 <표 1> 과 같다.

<표 1> 조선·동아·한겨레신문의 사실 건수 □ : %

구 분	신 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계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	계	계		
북한문제 직접 관련 건수	46	35.9	45	35.1	37	28.9	128	100.0		

## 제 2절 자료모집 방법

### 1. 분류표 작성

#### (1) 분류표 양식

분석대상 사설과 최근 통일·북한관련 연구보고서의 조사를 통해 분류표

- 21)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3대원칙으로는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둘째, 흡수통일 배제 셋째,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으로 특히 세 번째 원칙은 소위 '햇볕정책'이라 칭해지며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를 작성하였다.

〈표 2〉의 '번호'란에는 신문구별을 위해 조선일보 '조', 동아일보 '동', 한겨레신문은 '한'을 기입한후 날짜순서대로 '조-1, 조-2, 조-3, ...', '동-1, 동-2, 동-3, ...', '한-1, 한-2, 한-3, ...'으로 기입하였다. 날짜는 신문발행일을 7월 20일은 '7. 20'으로 기입하였다. 제목은 사실의 제목을 그대로 기입하였고, 주제와 소주제는 〈표 3〉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

〈표 2〉 분류표 양식

번호	날짜	구분	제 목	주 제	소 주 제	성향	논조	비고

구분에는 '이벤트(Event)'로 '이슈(Issue)'를 기입하였다. 이벤트(Event)란 사건중심의 즉각적보도, 별다른 논평이 없는 경우, 어떤 계기를 다룬 사실을, 이슈(Issue)는 지속적인 여론의 환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보도, 논평·해설보도로 정의한다.

비고란에는 사실의 편정성에 대하여 체크하였다. 편정성의 기준을 정의하자면, 보통 지나친 성(sex)과 폭력을 다룬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성급하고 단정적인 미확인 보도, 보도 논평에 있어서 분별력 미흡, 선입관에 바탕한 추측보도등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와 사실 제목에서의 과도한 미사여구 사용등을 편정적 논조로 취급하였다.<sup>22)</sup>

## (2) 북한문제의 구체화

### ① 주제별 구체내용

주제는 6개분야로 구분하였다. 이는 통일·북한관련 보고서와 책자를 통

22) 이현희, 앞의 논문, pp. 22~23.

해 정했는데, 분류로는 <정치·외교>, <군사·안보>, <통일정책>, <북한실태>, <경제협력>, <사회·문화>로 정한후 이를 다시 35개의 작은 소주제로 세분화하였다. 이는 통일논의의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서이다.

주제별 항목은 <표 3>과 같다.

<표 3> 주제구분

주 제	소 주 제	비 고
정치·외교	1. 세계정세 2. 주변 4강정세 3. 외교(북한문제관련) 4. 북미관계 5. 한미관계	
군사·안보	1. 북한핵문제 2. 주한미군 3. 정전·평화협정 4. 국가보안법(안기부, 북풍조작) 5. 국방 6. 한반도 분단 7. 북한 도발 사건 (간첩사건, 잠수함 사건) 8. 국군 포로	
통일정책	1. 남북대화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대남제의, 대북제의, 4자회담) 2. 통일정책 (대북정책, 대남정책, 남북합의) 3. 통일방향 4. 남북한 관계 전망	
북한실태	1. 북한동향 (대내, 대외, 대남) 2. 주체사상 3. 식량난 4. 김정일체제 5. 귀순	
경제협력	1. 한국경제 2. 북한경제 3. 남북한 경제교류 4. 금강산 개발(소매 방북도 포함)	
사회·문화	1. 통일언론 (신문, 방송, 언론역할) 2. 문화 (예술, 학술, 영화) 3. 교류협력 (인적교류, 이산가족, 기타) 4. 학생운동 5. 여성 6. 교육 7. 종교 8. 환경 9. 인권	

<군사·안보> 분야에 국가보안법문제에는 안기부의 97대선 북풍공작도 포함시켰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북풍의 문제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적대적 공생관계'<sup>23)</sup>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금강산 개발사업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정부의 정경분리사업에서 금강산 개발을 경제문제로 인식하였고, 소떼 방북은 금강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으로 파악하여 포함시켰다.

## ② 성향

신문 사설은 그 신문사의 주장을 표출하여 성향을 나타낸다. 이 논문에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사설제목과 내용을 중심으로 보수·중도·진보로 구분하였다.

㉞ 보수 : 냉전논리, 반북, 북한주장 반대, 학생·재야 심한 반대, 대북 강경책 선호, 온건책(햇볕정책) 반대

㉟ 중도 : 진보·보수 동시제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남북한 입장 객관적 조명

㊱ 진보 : 북한제의 수용, 학생·재야 찬성과 지지, 대북 온건론(햇볕정책) 수용

여기에서 대북 온건론이면 '진보'고, 대북 강경이면 '보수'라는 이분법적 구분으로는 복잡하고, 한 쪽으로만 단정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 ③ 논조

앞의 성향에 기준하여 특정 어휘의 빈도를 파악하고 사설 논조의 강약을 중심으로 긍정, 중립, 부정으로 분석하였다.

㉞ 긍정 : 찬성, 고무, 격려, 만족, 낙관, 암묵적 인정, 묵시적 동조, 유보적 지지

㉟ 중립 : 긍정과 부정의 견해 동시 제시, 견해가 약한 해설이나 재언

---

23) 정상모, 1997, "새로운 세기를 위하여 : 남과 북 그 공생의 비밀", 한겨레신문사, p. 18.

적대적 공생관계란 남북한의 지배세력들이 서로 적대적 대권을 벌이면서도 바로 그러한 관계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토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즉 길으로는 적대적으로 싸우는 관계이면서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공생의 관계'를 형성한 것을 말한다.

㊦ 부정 : 우려표명, 비판, 비난, 경고, 의심

### (3) 신뢰도

연구결과가 타당하려면 연구의 기초 분석 데이터나, 분석과정에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척도로 분석하였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사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2명의 연구원<sup>24)</sup>이 각 신문의 사설 128건을 모두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홀스티<sup>25)</sup>의 신뢰도 공식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내용별 주제분류에 대한 신뢰도 계수 : 0.93

○ 보수·중도·진보의 구분에 대한 신뢰도 계수 : 0.81

○ 긍정·중립·부정의 구분에 대한 신뢰도 계수 : 0.84

신뢰도 계수는 0.81에서 0.93까지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

24) 2명의 연구원으로는 한명은 본 연구원이고, 한 명은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에 재학중임.

25) Holsti, Ole R.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Reading, Ma. : Addison-Wesley, 1969.)

# 제 IV장 내용 분석 결과

## 제 1 절 북한문제 사실의 일반적 성격

### 1. 분석대상 사실의 특성

1990년대 들어와 전체사실중에서 북한문제 사실은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sup>26)</sup> 올해 사실비중은 <표 4>와 같이 불과 11.0%로 저조하였다.

<표 4> 조선·동아·한겨레신문의 전체사실과 북한관련 사실 건수

구분 \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계
전체사실건수	391	387	379	1,157
북한사실건수	46	45	37	128
비 중 (%)	11.7	11.6	0.9	11.0

이는 1997년 IMF이후 모든 언론들이 경제문제에만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 상대적으로 대북 사실은 감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선일보의 3월 5일자 사실은 '선 IMF 후 남-북'이란 주제아래 "IMF한파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남북 직접 대화를 서두르고 있는 느낌이다. ... 시간이 지날수록 조속한 남북대화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등 현 경제위기에 무슨 남북문제냐는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 2. 기간별 특성(월별)

월별 분포는 <표 5>에서 보듯이 6월에 27.3%, 7월에 19.5%, 3월에

26) 이현희, 앞의 논문, p. 32.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북한문제사실은 평균 32%임.

17.2%, 5월에 14.1%, 4월에 10.2%, 2월과 1월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6월과 7월이 전체 128건중 60건(46.9%)으로 가장 많이 다룬 달이며, 이를 매체별로 분류해보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각 21건, 한겨레 신문이 18건을 다루었다. 이는 강릉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과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북한규탄사설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1월에는 4건, 2월에는 11건에 불과해 평상시에는 남북문제에 대하여 다루어지지 않고, 사건·사안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남북문제에서의 사건·사안은 주로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하여 언론은 남북한간의 갈등과 부정적인 어조가 주류를 이루어 언론이 남북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월별 매체별 분포

□ : %

월별	신문		조 선		동 아		한 겨 레		계	
	종	수	종	수	종	수	종	수	종	수
1 월	1	25.0	2	50.0	1	25.0	4	3.1		
2 월	2	18.2	4	36.4	5	45.4	11	8.6		
3 월	9	40.9	9	40.9	4	18.2	22	17.2		
4 월	7	53.8	3	23.1	3	23.1	13	10.2		
5 월	6	33.3	6	33.3	6	33.3	18	14.1		
6 월	9	25.7	13	37.1	13	37.1	35	27.3		
7 월	12	48.0	8	32.0	5	20.0	25	19.5		
계	46	35.9	45	35.1	37	30.0	128	100.0		

### 3. 사실제목

여기서는 남북문제 사실 전체 128건의 제목에서 공통된 단어를 뽑아 분석해 보고, 사실 제목과 이벤트 또는 내용을 연관시켜 제목의 편향성 여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사실제목은 「북한」, 「남북」, 「대북」 등 '북'이란 단어가 포함된 것이 48건으로 사실제목의 37.5%를 차지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북」, 「북한」은 19건, 「남북」은 14건, 「대북」은 10건으로 나타났다.

사실제목은 그 기사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문맥이다. 사실제목을 보면 그 사실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사여구를 사용한 사실제목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나, 어떤 사실제목은 그 내용과는 맞지 않은 사실제목이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북의 DJ떠 보기', '이 간절한 소망을', '남북 안됐지만 잘했다' 등은 사실 제목만 보아서 어떠한 내용인지 잘 알 수 없는 경우로 미사여구를 사용한 제목으로서 편정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미사여구를 자주 사용한 신문은 조선일보가 가장 많고, 다음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핵 터지는 세계', '인도 핵실험 파문', '무너지는 핵 질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에 대하여 논평하다가 결론부분에 이르러 갑자기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마치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처럼 해석된 경우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신문의 성급한 단정, 선입관에 입각한 추측보도의 일례라 할 수 있다.

〈표 6〉 미사어구를 사용한 사실 제목 또는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실제목

신 문	사 설 제 목	게재 일자	이 벤 트 또는 내 용
조 선	북의 DJ 떠 보기	2. 23	대북정책
	이 간절한 소망을	4. 2	이산가족
	남북 안됐지만 잘했다	4. 19	고위급회담 결렬
	핵 터지는 세계	5. 30	인도, 파키스탄 핵실험과 북한 핵
	다가온 세계 식량위기	6. 4	세계 식량위기와 북한의 식량난
	북 소매잡기 경쟁	7. 11	통일운동단체의 교류협력
	동해안이 간첩들 안방인가	7. 13	북한 무장공비침투
	당국은 뭘 했나	7. 14	북한 무장공비침투와 정부의 대응
요구만 있고 응징이 없다	7. 16	국가안전보장회의	
동 아	인도 핵실험 파문	5. 13	인도 핵실험과 북한 핵개발 의혹
	무너지는 핵 질서	5. 30	인도, 파키스탄 핵실험과 북한 핵개발의혹
	역시 도발이었다	6. 27	북한 잠수함침투
	북 공작원 상륙했다면	6. 29	북한 잠수함침투
한겨레	북한은 무엇을 노리는가	7. 14	북한의 잇따른 침투 목적

## 제 2 절 사실의 주제별 내용분석

### 1. 북한문제 사실의 주제

〈표 7〉에서 보듯이 〈정치·외교〉, 〈군사·안보〉, 〈통일정책〉, 〈북한실태〉, 〈경제협력〉, 〈사회·문화〉의 6개 주제중 '군사·안보'가 44건(3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통일정책'으로 34건(26.6%), 정치·외교 18건(14.1%), 사회·문화 15건(11.7%), 경제협력(10.9%), 북한실태 3건(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신문별로 분석해보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 모두 군사·안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6월과 7월에 발생한 북한의 침투공작에 대한 사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를 분류해 보면 조선일보가

17건(38.6%), 동아일보 15건(34.1%), 한겨레 신문이 12건(27.3%)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많이 다루었고, 한겨레 신문은 가장 적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정책 또한 북한의 침투 공작과 더불어 꾸준한 논쟁으로 3개 신문사 모두 비슷하게 다루어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12건(35.3%)으로 같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한겨레 신문은 10건(29.4%)이었다.

정치·외교와 사회·문화, 경제협력은 10%선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북한실태는 불과 3건(2.3%)에 불과 가장 적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상시에는 북한문제에 대하여 거의 다루지 않고, 북한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그 사건에 대해서만 보도하기 때문이다.

〈표 7〉 사실내용의 주제별 분포

□ : %

유형 \ 신문	조선		동아		한겨레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정치·외교	5	27.8	9	50.0	4	22.2	18	14.1
군사·안보	17	38.6	16	33.3	12	25.0	44	34.4
통일정책	12	35.3	12	35.3	10	29.4	34	26.6
북한실태	2	66.7	0	0.0	1	33.3	3	2.3
경제협력	4	28.6	4	28.6	6	42.9	14	10.9
사회문화	6	40.0	5	33.3	4	26.7	15	11.7
계	46	35.9	45	35.1	37	29.0	128	100.0

## 2. 정치·외교

정치·외교 부분의 사실은 〈표 8〉에서 보듯이 전체 18건중 한미관계가 13건으로 72.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중관계와 미중관계외교가 3건으로 16.7%, 세계정세와 주변 4강정세가 각각 1건씩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관계 사설은 취급되지 않았다.<sup>27)</sup>

이를 신문별로 분석해보면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은 한미관계외에는 전혀 다루지 않았고, 동아일보만 다양한 관점에서 사설을 취급하였다.

한미관계의 사설이 가장 높은 이유로는 한반도 분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이 미국과 계속해서 충돌을 빚어왔고, 이에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미국과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가느냐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또한 대북 정책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계속하였고, 특히 지난 6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북한문제를 다루어 이로 인하여 한미관계의 관심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등 주변 4강의 이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외교 분야에서 특이한 것은 1980년대 정치·외교 관련 사설이 65.5%,<sup>28)</sup>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사설은 20.4%,<sup>29)</sup> 이 논문에서의 분석 결과는 14.1%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이다.

---

27) 참고적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사설도 4건이 출력되었지만, 이는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관 추방문제로 인한 사설로써 북한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28) 유재천, "남북한의 통일언론정책", 「언론문화연구」, 제 8집,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1990, p. 100.

29) 이현희, 앞의 논문, p. 37.



〈표 8〉 정치·외교에 관한 신문 사실 주제 비교

□ : %

주제	신문		동 아		한 겨 려		계	
	조 선	신	동 아	동 아	한 겨 려	한 겨 려	계	계
세계정세	0	0.0	1	100.0	0	0.0	1	5.6
주변 4강 정세	0	0.0	1	100.0	0	0.0	1	5.6
외교	0	0.0	3	100.0	0	0.0	3	16.7
-한중관계	0	0.0	1	100.0	0	0.0	1	5.6
-미중관계	0	0.0	2	100.0	0	0.0	2	11.1
북미관계	0	0.0	0	0.0	0	0.0	0	0.0
한미관계	5	38.4	4	30.8	4	30.8	13	72.2
계	5	27.8	9	50.0	4	22.2	18	100.0

### 3. 군사·안보

군사·안보 부분의 사실은 〈표 9〉에서 보듯이 이부분 전체 44건중 북한 도발사건이 17건으로 38.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국가보안법이 13건으로 29.5%, 북한 핵문제와 국방이 각각 5건으로 11.4%, 국군포로 문제가 3건으로 6.8%, 한반도 분단이 1건인 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신문별로 분석해보면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은 북한도발 사건과 국가보안법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동아일보는 북한도발사건과 북한 핵 문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북한 도발 사건은 6월 23일 발생한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과 7월 12일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보도이고, 국가보안법에는 지난해에 치러진 대선 당시 안기부의 북풍공작에 대한 수사 보도와 올해 김대중 정부가 밝힌 준법서약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동아일보가 가장 많이 다루었는데, 5월 30일자 사실 '무너지는 핵질서'에서 보면 서론과 본론부분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실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결론부분에 이르러 "... 특히 우리는 간신히 핵개발을 중단시켜 놓은 북한의 태도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파키스탄과 북한은 우호관계를 맺고 있어 핵기술 이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서남아의 핵실험이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와 같이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고 있어 보수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을 나타내었다.

국군포로문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2건, 1건을 보도하였고, 한겨레 신문은 다루지 않았다.

군사·안보에 관한 사실은 전체 사실 128건중 34.4%(44건)를 차지하여 6개 주제중 제일 많이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외교분야 및 통일정책분야보다 군사·안보에 관한 사실을 제일 많이 취급한 것은 언론인들이 분단 한국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대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법, 언론사 사주와 간부들의 보수적이고 냉전적인 시각, 언론사의 편집정책에 길들여진 기자들의 글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9〉 군사·안보에 관한 신문 사실 주제 비교

□ : %

주제 \ 신문	조 선		동 아		한 겨 레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북한핵	1	20.0	4	80.0	0	0.0	5	11.4
주한미군	0	0.0	0	0.0	0	0.0	0	0.0
정전·평화협정	0	0.0	0	0.0	0	0.0	0	0.0
국가보안법	5	38.5	3	23.0	5	38.5	13	29.5
국방	2	40.0	2	40.0	1	20.0	5	11.4
한반도 분단	0	0.0	0	0.0	1	100.0	1	2.3
북한도발사건	7	41.2	5	29.4	5	29.4	17	38.6
국군포로	2	66.7	1	33.3	0	0.0	3	6.8
계	17	38.6	15	34.1	12	27.3	44	100.0

#### 4. 통일정책

통일정책 분야는 <표 10>에서 보듯이 남북대화와 통일정책이 각각 16건, 47.1%를 차지하여 같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남북한 관계 전망은 2건으로 5.9%를 차지하였고, 통일방향은 없었다.

이를 신문별로 분석해보면 조선일보는 전체 12건중 통일정책에 7건으로 43.7%, 남북대화에 5건으로 31.3%를 차지하였다. 동아일보는 남북대화 7건으로 43.7%, 통일정책이 3건으로 18.8%, 남북한 관계 전망 2건을 차지하였고, 한겨레 신문은 통일정책 6건으로 37.5%, 남북대화 4건으로 25.0%를 차지하였다.

이를 내용별로 분석해보면 남북대화의 경우 대북제의와 4자회담이 각각 4건으로 11.8%, 고위급회담과 대남제의가 각각 3건으로 8.8%, 군사회담이 2건으로 5.9%, 정상회담은 다루지 않았다.

<표 10> 통일정책에 관한 신문 사설 주제 비교

□ : %

주제	신문		조 선		동 아		한 겨 레		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남북대화	5	31.3	7	43.7	4	25.0	16	47.1		
- 정상회담	0	0.0	0	0.0	0	0.0	0	0.0		
- 고위급회담	1	33.3	1	33.3	1	33.3	3	8.8		
- 대북제의	2	50.0	1	25.0	1	25.0	4	11.8		
- 대남제의	1	33.1	1	33.3	1	33.3	3	8.8		
- 4자회담	1	25.0	3	75.0	0	0.0	4	11.8		
- 군사회담	0	0.0	1	50.0	1	50.0	2	5.9		
통일정책	7	43.7	3	18.8	6	37.5	16	47.1		
- 대북정책	6	42.9	3	21.4	5	35.7	14	41.2		
- 대남정책	1	50.0	0	0.0	1	50.0	2	5.9		
- 남북합의	0	0.0	0	0.0	0	0.0	0	0.0		
통일방향	0	0.0	0	0.0	0	0.0	0	0.0		
남북한 관계 전망	0	0.0	2	100.0	0	0.0	2	5.9		
계	12	35.3	12	35.3	10	29.4	34	100.0		

통일정책의 경우 대북정책이 16건중 14건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햇볕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에 대하여 자주 취급한 결과이다. 특히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으로 조선일보는 7건, 한겨레 신문은 6건을 차지하여 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반영하였다.

## 5. 북한실태

북한실태분야는 <표 11>에서 보듯이 불과 3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북한 식량난이 2건, 김정일체제가 1건이고, 북한동향과 주체사상, 귀순에 관한 주제는 없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북한실태에 대한 보도비율이 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 내용으로는 북한의 식량난과 김정일 체제에 대해 다루었는데, 북한 식량난은 96년 북한 식량지원사건 이후 언론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김정일 체제의 주제는 김정일 체제가 공식출범하는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대의원 선거<sup>30)</sup>에 대해서 조선일보만이 보도하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7월 27일 '김정일시대 공식화'란 사설에서 북한의 투표행태에 대해 "... 우리 국민에게는 차라리 회극적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의식」이었지 선거가 아니었다."라고 논평해 보수적인 성향과 부정적인 어조를 나타내었다.

---

30) 북한은 1998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여 김정일을 주석으로 선출하여, 김정일시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번 대의원 선거는 8년만에 실시되어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이는 김일성 사망후 「유훈통치」시대에서 김정일 시대의 모양새를 드러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대의원 선거의 특징으로는 전체 대의원 64%가 교체되어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고, 군부출신들이 전면적으로 부상되었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올 9월 9일에 주석직에 취임한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북한실태에 관한 신문 사실 주제비교

□ : %

주제	신문		동 아		한 거 레		계	
	조	선						
북한동향	0	0.0	0	0.0	0	0.0	0	0.0
-대내	0	0.0	0	0.0	0	0.0	0	0.0
-대외	0	0.0	0	0.0	0	0.0	0	0.0
-대남	0	0.0	0	0.0	0	0.0	0	0.0
주체사상	0	0.0	0	0.0	0	0.0	0	0.0
식량난	1	50.0	0	0.0	1	50.0	2	66.7
김정일 체제	1	100.0	0	0.0	0	0.0	1	33.3
귀순	0	0.0	0	0.0	0	0.0	0	0.0
계	2	66.7	0	0.0	1	33.3	3	100.0

## 6. 경제협력

경제협력 분야는 〈표 12〉와 같이 전체 14건중 금강산 개발이 9건으로 64.3%를 차지하여 역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남북경제교류가 4건으로 28.6%, 한국경제가 1건인 7.1%순으로 나타났다. 북한경제에 대한 사실은 없었다.

이를 신문별로 분석해보면 한겨레 신문이 6건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비해서 더 많이 취급하였다.

금강산 개발에 대해서도 한겨레 신문은 4건을 다룬 데 비해, 조선일보는 2건으로 한겨레 신문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6월 13일자 사설에서는 '소 끌고 고향가는' 이란 제목하에 진보적이고 긍정적으로 평한데 반해, 북한의 침투공작 이후인 7월 24일자 사설에서는 '시인-사과와 금강산 분리'란 제목아래 보수적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동아일보의 경우 5월 11일, 6월 17일, 6월 24일 사설을 통해 중도적이고, 중립적인 성향을 나타냈다.<sup>31)</sup>

한겨레 신문은 북한 침투 공작 이후에도 7월 24일자 사설에서 '금강산 실무협의를 계속해야'란 제목으로 금강산 개발에 대한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다.

〈표 12〉 경제협력에 관한 신문 사설 비교

□ : %

주제	신문		동 아		한 겨 레		계	
	조 선							
한국경제	1	100.0	0	0.0	0	0.0	1	7.1
북한경제	0	0.0	0	0.0	0	0.0	0	0.0
남북경제교류	1	25.0	1	25.0	2	50.0	4	28.6
금강산 개발	2	22.2	3	33.3	4	44.4	9	64.3
계	4	28.6	4	28.6	6	42.8	14	100.0

## 7. 사회·문화

사회·문화 분야는 〈표 13〉에서 보듯이 인적교류·이산가족 등 교류 협력이 7건으로 4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문화 관련 사설이 3건으로 20.0%, 인권 사설이 2건으로 13.3%, 언론, 학생운동, 환경관련 사설이 각각 1건으로 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신문별로 분석해보면 이산가족등 교류협력 관련 사설이 조선일보가 7건중 4건(57.1%)으로 가장 많이 취급하였고, 동아일보는 2건(28.6%), 한겨레 신문은 1건(14.3%)만을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 관련 사설은 한겨레 신문이 전체 3건중 2건(66.7%)을 다루었으나, 조선일보는 다루지 않았다. 언론관련 사설 또한 한겨레 신문만 보도하였다.

반대로 북한의 환경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각각 1건씩

31) 5월 11일자 사설에서는 '판문점으로 가야한다'는 제목으로 보수적이고 부정적이었고, 6월 17일자 사설과 6월 24일에서는 '소매가 연 판문점 길', '금강산 길 열리려나'란 제목에 중도적이고 중립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다루었고, 한겨레 신문은 다루지 않았다.

독일의 통일을 위해 언론이 기여한 바가 크듯이 한국의 언론도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주변국가 및 세계의 언론이 보다 정확하고 우호적인 정보 유통을 하도록 하고 남북한 직접적인 언론교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표>에서 보듯이 언론에 관한 사실은 한겨레 신문 2월 16일자 '북한방송 개방 서둘러라'의 1건만이 있어 우리 언론이 이러한 역할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사회·문화에 관한 신문 사실 비교

□ : %

주제	신문		동 아		한 거 레		계	
	조	선						
언론	0	0.0	0	0.0	1	100.0	1	6.7
- 신문	0	0.0	0	0.0	0	0.0	0	0.0
- 방송	0	0.0	0	0.0	1	100.0	1	6.7
- 언론역할	0	0.0	0	0.0	0	0.0	0	0.0
문화	0	0.0	1	33.3	2	66.7	3	20.0
- 예술	0	0.0	1	33.3	2	66.7	3	20.0
- 학술	0	0.0	0	0.0	0	0.0	0	0.0
- 영화	0	0.0	0	0.0	0	0.0	0	0.0
교류협력	4	57.1	2	28.6	1	14.3	7	46.7
- 인적교류	1	100.0	0	0.0	0	0.0	1	6.7
- 이산가족	3	50.0	2	33.3	1	16.7	6	40.0
- 기타	0	0.0	0	0.0	0	0.0	0	0.0
학생운동	0	0.0	1	100.0	0	0.0	1	6.7
여성	0	0.0	0	0.0	0	0.0	0	0.0
교육	0	0.0	0	0.0	0	0.0	0	0.0
종교	0	0.0	0	0.0	0	0.0	0	0.0
환경	1	100.0	0	0.0	0	0.0	1	6.7
인권	1	50.0	1	50.0	0	0.0	2	13.3
계	6	40.0	5	33.3	4	26.7	15	100.0

### 제 3 절 사설의 성향

#### 1. 성향

〈표 14〉에서 보듯이 조선일보는 보수적인 성향의 논조가 57.1%, 중도적인 논조는 22.9%, 진보적인 논조는 12.5%로 나타났다. 한겨레 신문은 보수적인 성향의 논조가 전혀 없고, 중도적인 논조가 37.5%, 진보적인 논조가 절반을 훨씬 넘는 79.2%를 보여주었다. 동아일보는 보수적인 논조가 42.9%, 중도적인 논조가 39.6%, 진보적인 논조가 8.3%로 나타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한겨레 신문은 진보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신문별 제도적 특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14〉 신문별 성향

□ : %

성향 \ 신문	조선		동아		한겨레		계	
	수	%	수	%	수	%	수	%
보수	32	57.1	24	42.9	0	0.0	56	43.8
중도	11	22.9	19	39.6	18	37.5	48	37.5
진보	3	12.5	2	8.3	19	79.2	24	18.7
계	46	35.9	45	35.1	37	29.0	128	100.0

이를 월별로 분석해보면 〈표 15〉와 같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5월에는 비교적 중도적인 성향(44.1%)이 보수적인 성향(39.7%)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발생한 6월과 7월에는 보수적인 성향(48.3%)이 중도적인 성향(30.0%)보다 높게 나타나 언론이 보수적 성향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월별 성향

□ : %

월 성향	1	2	3	4	5	6	7	계
보 수	2   50.0	3   27.2	7   31.8	6   46.2	9   50.0	13   37.1	16   64.0	56   43.8
중 도	2   50.0	4   36.4	12   54.6	4   30.8	8   44.4	14   40.0	4   16.0	48   37.5
진 보	0   0.0	4   36.4	3   13.6	3   23.0	1   5.6	8   22.9	5   20.0	24   18.7
계	4   100.0	11   100.0	22   100.0	13   100.0	18   100.0	35   100.0	25   100.0	128   100.0

월별성향분포를 신문별로 분석해 보면 〈표 16〉과 같다.

조선일보는 보수적인 성향이 매월 50%선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도발이 일어난 후에는 75.0%로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강하게 나타냈다.

동아일보는 비교적 보수적 성향과 중도적 성향을 비슷하게 나타내었고, 북 도발 이후에도 비교적 중도적인 성향을 나타내 사태를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려 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7월에는 진보적인 성향의 사설이 2건이나 있어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나타내었다.

한겨레 신문은 보수적인 성향은 전혀 없었고, 중도적인 성향과 진보적인 성향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았다. 북한의 도발이 일어난 후에도 보수적인 입장의 글이 없다는 점은 한겨레 신문이 북한문제를 매우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이를 주제별로 비교해보면 〈표 17〉과 같다.

정치·외교의 경우 중도적인 논조가 50.0%, 보수적인 논조가 33.3%, 진보적인 논조가 16.7%로 비교적 중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안보의 경우에는 보수적인 성격이 절반이 넘는 52.3%로 가장 높았고, 중도적인 논조도 3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진보적인 논조는 9.1%로 적게 나타났다.

〈표 16〉 월별·신문별 성향 분포

□ : %

성향	신문 월별	조 선		동 아		한 거 래		계	
		1	2	1	2	1	2	1	2
보수	1	1	50.0	1	50.0	0	0.0	2	1.6
	2	2	66.7	1	33.3	0	0.0	3	2.3
	3	3	42.9	4	57.1	0	0.0	7	5.5
	4	3	50.0	3	50.0	0	0.0	6	4.7
	5	4	55.6	4	44.4	0	0.0	9	7.0
	6	6	46.2	7	53.8	0	0.0	13	10.2
	7	12	75.0	4	25.0	0	0.0	16	12.5
	소 계	32	57.1	24	42.9	0	0.0	56	43.8
중도	1	0	0.0	1	50.0	1	50.0	2	1.6
	2	0	0.0	3	75.0	1	25.0	4	3.1
	3	5	41.7	5	41.7	2	16.6	12	9.4
	4	3	75.0	0	0.0	1	25.0	4	3.1
	5	1	12.5	2	25.0	5	62.5	8	6.3
	6	2	14.2	6	42.9	6	42.9	14	10.9
	7	0	0.0	2	50.0	2	50.0	4	3.1
	소 계	11	22.9	19	39.9	18	37.5	48	37.5
진보	1	0	0.0	0	0.0	0	0.0	0	0.0
	2	0	0.0	0	0.0	4	100.0	4	3.1
	3	1	33.3	0	0.0	2	66.7	3	2.3
	4	1	33.3	0	0.0	2	66.7	3	2.3
	5	0	12.5	0	0.0	1	100.0	1	0.8
	6	1	0.0	0	0.0	7	87.5	8	6.2
	7	0	12.5	2	40.0	3	60.0	5	3.9
	소 계	3	12.5	2	8.3	19	79.2	24	18.7
합 계		46	35.9	45	35.1	37	29.0	128	100.0

통일정책은 보수적인 논조가 47.1%, 중도적인 논조가 29.4%, 진보적인 논조가 23.5%로 비교적 중도적·진보적인 논조가 높아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현 대북정책이 비교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실태는 보수와 중도, 진보가 모두 1건씩 33.3%로 같았다.

경제협력은 보수적인 논조가 28.6%로 낮은 편이었고, 중도와 진보가 35.7%로 같아 비교적 진보적인 시각을 나타냈는데, 이는 금강산 개발이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문화는 중도적인 논조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수적인 논조가 33.3%, 진보적인 논조가 20.0%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중도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여전히 우리 언론은 군사·안보와 통일정책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논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도와 진보적인 논조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언론의 북한 보도가 다소 중도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치·외교와 경제협력, 사회·문화의 경우 중도·진보적인 논조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수적인 논조가 43.0%, 중도적인 논조가 28.3%, 진보적인 논조가 18.7%로 여전히 보수적인 논조가 높게 나타났지만, 중도적이고 진보적인 논조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균형적인 논조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주제별 성향 비교

□ : %

주제 성향	정치·외교		군사·안보		통일정책		북한실태		경제협력		사회문화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보 수	6	33.3	23	52.3	16	47.1	1	33.3	4	28.6	5	33.3	55	43.0
중 도	9	50.0	17	38.6	10	29.4	1	33.3	5	35.7	7	46.7	49	28.3
진 보	3	16.7	4	9.1	8	23.5	1	33.3	5	35.7	3	20.0	24	18.7
계	18	100.0	44	100.0	34	100.0	3	100.0	14	100.0	15	100.0	128	100.0

이를 신문별로 비교해보면 〈표 18〉과 같다.

〈표 18〉 주제별·신문별 성향 비교

□ : %

신문	주제	성향		종도		진보		계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진보
조 선	정치외교	4	80.0	1	20.0	0	0.0	5	10.9
	군사안보	12	70.6	5	29.4	0	0.0	17	37.0
	통일정책	9	75.0	1	8.3	2	16.7	12	26.1
	북한실태	1	50.0	1	50.0	0	0.0	2	4.3
	경제협력	3	75.0	0	0.0	1	25.0	4	8.7
	사회문화	3	50.0	3	50.0	0	50.0	6	13.0
	소 계	32	57.1	11	22.9	3	12.5	46	35.9
동 아	정치외교	2	22.2	7	77.8	0	0.0	9	20.0
	군사안보	11	73.5	3	20.0	1	6.7	15	33.3
	통일정책	7	58.3	4	33.3	1	8.3	12	26.7
	북한실태	0	0.0	0	0.0	0	0.0	0	0.0
	경제협력	1	25.0	3	75.0	0	0.0	4	8.9
	사회문화	2	40.0	3	60.0	0	0.0	5	11.1
	소 계	24	42.9	19	39.6	2	8.3	45	35.1
한겨레	정치외교	0	0.0	1	25.0	3	75.0	4	10.8
	군사안보	0	0.0	9	75.0	3	25.0	12	32.4
	통일정책	0	0.0	5	50.0	5	50.0	10	27.1
	북한실태	0	0.0	0	0.0	1	100.0	1	2.7
	경제협력	0	0.0	2	33.3	4	66.7	6	16.2
	사회문화	0	0.0	1	25.0	3	75.0	4	10.8
	소 계	0	0.0	18	37.5	19	79.2	37	29.0
계		56	43.8	48	37.5	24	18.7	128	100.0

조선일보는 정치·외교와 군사·안보, 통일정책, 경제협력 분야가 70%를 넘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석되었다.

동아일보는 군사·안보와 통일정책 분야에서는 50%가 넘는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었지만, 정치·외교와 경제협력,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60%가 넘는 중도적인 성향을 나타내, 비교적 대북문제를 중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려 하였다.

한겨레 신문은 정치·외교와 북한실태, 경제협력,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었고,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중도적인 성향을, 통일정책 분야에서는 중도와 진보가 같게 나타났다. 특히 군사·안보와 통일정책에서의 중도적·진보적인 성향은 한겨레 신문이 남북문제에서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2. 대북한 보도 태도

여기에서는 사설중 가장 많이 이슈화된 군사·안보와 통일정책에 대하여 신문별로 분석해보았다.

군사·안보에 관한 성향별 분석은 <표 19>와 같다.

보수적인 성향은 조선일보가 52.2%, 동아일보가 47.8%로 높게 나타났다. 중도적인 성향은 한겨레 신문이 53.0%, 조선일보가 29.4%, 동아일보가 17.6%순으로 한겨레 신문이 가장 중도적인 성향을 띠었다. 진보적인 성향은 한겨레 신문이 75.0%, 동아일보가 25.0%로 한겨레 신문이 높게 나타났다.

<표 19> 군사·안보에 관한 성향별 분석 비교

□ : %

성향	신문		조 선		동 아		한 겨 레		계			
	보 수	중 도	진 보	계	보 수	중 도	진 보	계	보 수	중 도	진 보	계
보 수	12	52.2	11	47.8	0	0.0	23	52.3				
중 도	5	29.4	3	17.6	9	53.0	17	38.6				
진 보	0	0.0	1	25.0	3	75.0	4	9.1				
계	17	38.6	15	34.1	12	25.0	44	100.0				

통일정책에 관한 성향을 분석해보면 <표 20>과 같이 보수적인 성향은 조선일보가 절반이 넘는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아일보는 43.8%, 한겨레 신문은 다루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한겨레 신문은 진보적인 성향이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보수적 성향과 중도적 성향이 비슷하게 나타나 비교적 중도적인 성향을 나타내었다.

<표 20> 통일정책에 관한 성향별 분석 비교

□ : %

성향	신문	조 선		동 아		한 겨 레		계	
보 수		9	56.3	7	43.8	0	0.0	16	47.1
중 도		1	10.0	4	40.0	5	50.0	10	29.4
진 보		2	25.0	1	12.5	5	62.5	8	23.5
계		12	35.3	12	35.3	10	29.4	34	100.0

이렇듯 이들 신문 사설의 성향을 비롯, 대북한의 보도 태도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언론은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과 냉전사고방식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중도적인 성향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균형된 논조의 가능성도 비치고 있다.

### (1) 군사·안보에 관한 사설 내용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도발은 곧 북의 손해라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조선 6. 24, 금강산과 잠수정), “또 예인 당시부터 잠수정이 침수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그안에 들어있는 승조원들부터 패널 생각은 하지않고 무려 18시간씩이나 끌고 다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조선 6. 25, 어이없는 잠수정 대처), “저들에게는 남쪽의 분노와 항의따위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왜 저들을 돕지 못해 안달인가”(조선 7. 13, 동해안이 간첩들 안방인가), “과거 50년동안 줄곧 우리는

북한 공산집단의 무력도발과 위장된 평화공세, 그리고 남침을 북침이라며 덮어씌우는 식의 생떼에 면역이 될 정도로 시달려오지 않았던가”(조선 7. 20, 북의 적반하장),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여전하다.” (동아 5. 13, 인도 핵실험 파문), “정부는 이번에는말로 단호하게 대처, 북한의 책임을 묻고 확실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동아 7. 13), “우리가 아무리 화해 협력을 도모해도 북한의 적대정책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다.” (동아 7. 15, 뚫린 방위 책임지라)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한 비난과 정부의 대응이 미온하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한겨레 신문은 “그동안 남북의 권위적인 정권이 주민들의 적대감과 증오심을 부추기면서 내막적으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심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5. 23, 북풍사건이 주는 교훈), “우리는 신중하고 의연한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군사적으로 대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충돌과 도발을 정치·경제와 직접 연계시키다 보면, 항시 불안하고 대결적인 정세가 지속될 것이다.” (6. 24, 햇볕정책과 잠수정 침투사건), “이 고리를 끊는 노력은 남과 북이 함께 해야 한다. 오랜 대결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로 나아가려는 이 시점에 이번 잠수정 사건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 (6. 27, 침투로 드러난 잠수정 사건), “주검을 보내줌으로써 근본적으로 ‘도발’이 필요없는, 진정한 민족화해의 날을 앞당길 수만 있다면 감정을 누르는 슬기로운 때도 필요하다.” (7. 2, 주검 송환 슬기롭게 대처해야)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신중하고 의연한 자세와 감정을 배제하는 공정한 보도를 하였다. 특특

특히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의 경우 언론은 북한의 침투행위를 비판하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다 잠수정 안에서 시체가 발견되자 해군이 예인 작업에만 신경 쓴 나머지 제때 북한 승조원을 구조하지 않았다면서 인도주의적인 태도로 표변했다. 이러한 보도는 예인 도중 잠수정의 해치를

열었다가 폭발물이 터지거나 바닷물이 들어가면 잠수정을 잃게 된다는 것을 간과한 매우 비전문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보도를 한 기자들은 대개 군사분야나 남북 분야 모두에서 비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의 즉흥적인 보도태도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군간부들과 전향적인 김대중 정부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다. 북한 조평통은 이런 허점을 포착해 보수 세력과 진보세력을 이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의 비전문적인 보도 태도가 북한의 책동을 자초한 것이다.<sup>32)</sup>

## (2) 통일정책에 관한 사실내용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우리가 이미 여러차례 지적해 왔지만 남북대화는 서두른다고 성사되는 것이 아니며 서두를 필요도 없다.”(조선 3. 5, 선 IMF 후 남-북), “여기서 한번 양보하면 앞으로 5년내내 질질 끌려 다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조선 4. 7, 남-북 상호주의 원칙을), “그러나 이번 회담 걸릴 책임은 지나날의 회담 패퇴를 또다시 되풀이한 북한에 있다.”(조선 4. 19, 남-북 안됐지만 잘했다), “햇볕정책이라는 틀에 너무 얽매어서인지 경직된 자세로 일관했으며 처음부터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려는 노력마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했다.”(조선 6. 27, 침투도반과 당국), “우리가 햇볕정책을 쓴다고 유화되지도 않고 대결정책을 쓴다고 달라지지도 않는 사실이다. 돈이나 소를 주면 받고 대남전략은 그것대로 추진하는 것이다.”(조선 7. 14, 햇볕에 묶이지 말아야), “우리의 정권교체와 경제위기를 대남적화전략의 호재로 생각할 것이 분명하다.”(동아 2. 13, 대북정책 신중히 하라), “그러나 북한의 태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없다. 일방적으로 남북대화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역이용당한 우려가 있다.”(동아 3. 20, 남북대화 조급증), “한미간 이견 때문에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면 판문점 군사대화는 북한에 역이용당하기

32) 「시사저널」, 1998. 7. 9 p. 8.



쉽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동아 5. 29, 판문점의 대화 복원), “정부는 우방들과 함께 북한의 이런 내부 사정 변화와 긴장고조 책동에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 햇볕정책은 그 다음이다.” (동아 7. 20, 북 핵카드 조짐 차단해야) 등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 북한과의 대화 추구,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에 대하여 매우 강한 비난을 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흔들림 없는 자세다. 과거 정권은 국내정치와 연관해 대북정책을 너무 자주 바꿨다. 일부 보수 세력의 목소리에 이끌려다니다 좋은 기회들을 놓치고 말았다.” (3. 30, ‘전향적 대북정책’ 꾸준해야), “정부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지나치게 환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4. 7, 남북 차관급 회담에 거는 기대), “지금은 차분한 자세로 사건의 성격과 북한의 진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걸맞은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일부의 보수적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긴 안목에서 대북정책을 확고히 유지하기 바란다.” (6. 26, ‘햇볕정책’ 흔들려선 안된다), “그러나 정책의 근본 틀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정부는 북한이 하루아침에 변하리라 보고 이 정책을 들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햇볕론은 북한이 변화를 보여서가 아니라 변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끈질긴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7. 14, 북한은 무엇을 노리는가),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남북 강경파들이 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처지를 더욱 난처하게 하는 것은 국내의 보수적 ‘여론’이다. 정부의 햇볕정책에 늘려있던 보수세력들이 이번 사건으로 때를 만난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햇볕정책을 아예 폐기토록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일부 보수 언론의 ‘안보상업주의’가 상황을 확대하며 햇볕론 공격에 앞장선다. … 여론의 지지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여론’으로 포장된 일부의 강경론이나 일시적 분위기에 떠밀려서는 안

된다.” (7. 15, 간첩침투 의연하게 대처하라) 등 정부의 대화노력,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와 이에 대한 보수언론의 비난에 대한 경계, 정부의 흔들림 없는 자세를 주장하고 있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실의 논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분석해 볼 수 있겠다.

### 3. 논조의 강도(intensity)

신문 논조의 강도는 <표 21>에서 보듯이 신문별로 보면 동아일보가 긍정적인 논조가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호적인 이미지의 어휘들과 통일지향적인 방향으로 논조를 전개한 결과로 보이며 중립적인 논조도 39.5%로 한겨레 신문과 같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어조는 9.5%로 나타났다. 한겨레 신문은 긍정적인 논조와 중립적인 논조가 39.5%로 같게 나타나 통일지향적이면서 중립적인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부정적인 논조가 83.4%로 매우 높게 나타나 통일문제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21> 논조의 강도 분포

□ : %

성향 \ 신문	조 선		동 아		한 겨 레		계	
	3	6.3	26	54.2	19	39.5	48	37.5
긍 정	3	6.3	26	54.2	19	39.5	48	37.5
중 립	8	21.0	15	39.5	15	39.5	38	29.7
부 정	35	83.4	4	9.5	3	7.1	42	32.8
계	46	35.9	45	35.1	37	29.0	48	100.0

# 제 V 장 통일을 위한 언론의 개혁 및 역할

## 제 1 절 북한 관련 보도의 문제점

### 1. 북한관련 보도의 구조적 문제

북한관련 기사는 뉴스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중에 시의성과 근접성에 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언론사 경영진 및 기자의 선입견이나 편견 등이 개입되어 객관성을 상실한 기사도 많은데 그런 기사일수록 보수세력에 대한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경우가 많다.<sup>33)</sup>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대북문제에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sup>34)</sup>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신문사는 형식적으로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소유 내지 개인소유 방식이 일반적으로 관철되고 있다.<sup>35)</sup> 언론기업은 1인의 언론사주와 그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그 친인척 및 그들이 지배하는 계열사등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의 수는 매우 적고 주식분산 정도도 매우 낮아 실질적인 주식회사의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소유구조 및 운영방식은 편집의 독립성에 심대한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것은 결국 편집에 대한 간섭과 인사권 행사에서의 전횡을 초래하게 된다. 즉 언론의 논조를 지배하는 사주들의 입장이 어느 집단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상황에서 논술위원과 간부진, 그리고 기자들은 언론사 사주의 입장에서 보도할 수 밖에 없다.

33) 이범수, "소설쓰기 관행 여진, 최근 북한 관련 보도의 문제점", 「신문과 방송」, 1996년 8월호, p. 41.

34) 이원섭, 앞의 글, 1997, pp. 263~265.

35) 류한호, 위의 글, p. 153.

이는 언론계 내부의 구성이 보수화시키고 남북문제를 다룰 경우 분단체제 아래에서 굳어져 온 냉전 의식과 기득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사주들의 우선적 관심사가 되고, 이러한 생각은 현재의 분단체제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언론의 중추부를 구성하는 간부진들이 대북문제에서 보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의 고위 간부급들은 냉전시대를 실제로 겪으며 살아온 세대들이다. 이들은 해방 전후에 태어나 이승만 정권 이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아래서 강요된 냉전의 논리에 익숙해진 세대들이다. 사회 전체가 냉전에 휩싸여 민족문제를 객관적 시각에서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더구나 사상문제가 걸려있는 군사정권 당시 남북문제를 다룰 경우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에 걸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남북분단 현실에 대해 눈을 감거나 정부에서 내세우는 냉전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냉전논리는 언론에 체질화되고 나아가 보수적 신념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또한 기자들의 대북문제에 대한 인식이 얕거나 설사 바르게 보도하고자 해도 언론의 구조상 제대로 지면에 반영되지 못하는 제약이 따른다. 각 언론사마다 '통일부'나 '북한부'를 따로 두거나 정치부 안에서 함께 처리하지만 절대적인 인원이 부족하다. 각 언론사들은 역량있는 전문기자를 키우려는 투자가 부족하다. 그 동안 일방적인 반공교육을 받아온 데다 냉전적인 편집국 분위기 속에서 지낸 것도 남북문제 이해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북한소식을 알 수 있는 정보원이 부족한 것도 북한 문제의 바른 보도에 장애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북한 취재는 다섯 가지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내외통신, 국내 정보 기관, 외신 보도, 재외 교포, 귀순자의 증언이 그것이다.<sup>36)</sup> 그러나 이러한 취재 수단은 언론의 북한 취재가 '간접적'으로

---

36) 정일용, 1997, "민족화해와 언론의 역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도서출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 주고 있다. 즉 1차 자료가 아닌 어떤 의도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간접 자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북한취재의 기본이라는 내외통신 보도는 언론사가 북한 방송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외통신이라는 중간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전달받은 것이며, 정부 기관의 정보도 그 자체가 몇 번 건너편 것을 언론사가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외신을 통한 것이든 재외 교포를 통한 것이든 모든 것이 몇 단계를 거쳐서 국내 언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 2. 북한관련 보도의 내용적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언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북한 관련 보도 내용은 보수적인 성향을 띠 수 밖에 없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 북한사회에 대하여 '적성국'인식과 '비정상적 집단'으로의 인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로 화해를 시도하면서도 우리 언론은 북한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sup>37)</sup> 북한관련 사안이 발생되기만 하면 그 사안의 원인을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 '집권세력의 지도력 부재', '호화사치로 인한 방탕한 생활상', '비효율적인 제도'등으로 간주하여, 사안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비정상성'을 부각시킨다.

둘째, 우리 신문들의 북한 관련 보도 태도는 좀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해설이나 논평기사는 비교적 비중을 적게하고 명백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분석을 하기 보다는 우선 허상에 대한 스케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사안에 대한 논평을 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보도원칙이 두드러지지 않은 상태이다.<sup>38)</sup>

---

심지, pp. 333-334.

37) 백선기, 「저널리즘 비평」, 1997년 5월호, p. 40.

셋째, 우리 신문의 북한 관련 보도 태도는 상호주의, 즉 북한의 보도태도나 언론인의 자세에 비추어 아직은 완전한 개방성 교류보다는 점진적이며 우리 언론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북한 언론관이나 행태가 바뀌어야 이러한 상호주의를 달성한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언론교류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sup>39)</sup>

넷째, 우리 언론이 남북 문제를 단순한 다른 사건들과 같이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상품적'으로 다룬다는데 문제가 있다.<sup>40)</sup> 남북관련 사안은 관심 있는 사건이고 주목도도 높아, 우리언론들이 이러한 사안들을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시킨다는 점이다. 우리 언론은 남북문제를 여타사건들과는 다르게 좀더 심각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한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안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객관보도라는 미명 아래 사건이나 사안들을 찾는 데만 몰두하여, 북한문제를 들추어내려다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 이전 사건에 대한 마무리도 없이 다른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버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 언론은 남북 관련 사안을 여전히 일정한 '틀(frame)'속에서 다루고 있으며, 전혀 새로운 시각이나 전향적인 시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통일을 전제로 한 시각적 접근이 부재하며, 독자의 주목이나 관심을 끌리기 위한 단순 상품적 가치의 사안으로 치부하여, 그것이 지닌 상대적 중요성을 망각하고, 사안이 발생하면 집중적으로 보도하다가 사안이 시들해지면 갑자기 관심을 끊어 내리는 '냄비식 보도'의 전형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을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집단'으로 전제함으로 인하여 '정상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다.

---

38) 한국언론연구원, 1992. 「남북한 언론교류」, 연구서 19, pp. 111-127.

39) 한국언론연구원, 앞의 책, p. 129.

40) 강준만, 1998. 「언론권력도 교체하라」, 개마고원, pp. 192-197.

## 제 2 절 통일을 위한 언론의 개혁 및 역할

### 1. 언론구조 개혁

통일을 위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구조(system)가 개혁되어야만 한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대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은 매우 높고 성숙해 있음<sup>41)</sup>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초강경노선이 여론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수적 언론의 효과와 무관하지 않다. 즉 보수적 언론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도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 또한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언론의 민주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때 통일에 대한 보도 태도 또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도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언론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중심으로한 소유제도의 개혁과 편집권의 독립이다. 내적 언론자유의 확보를 위해서는 언론의 소유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의 개입<sup>42)</sup>에 의해 잘 성취될 수 있다. 국가는 편집권의 독립과 언론의 공적 기능 보장을 위하여 입법이나 언론정책을 통해 언론 소유제도의 대강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러한 언론기업 소유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은 국가의 성격

---

41) 「동아일보」, 1994. 4. 1.

42) 류한호. 1995. “언론사 내부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언론과 현대사회』, 나남출판, pp. 145-148.

류한호는 언론에 대한 국가 개입에 대하여 “언론에 대한 국가 개입은 언론을 둘러싼 약자(언론노동자, 일반민중)의 권력을 강화하고 강자(언론자본, 경영진)의 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양자간 권력관계를 민주적 관계로 수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그것은 언론조직 내부의 생산관계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생산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한다.” 라고 함. 또한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는 언론에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언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국가가 언론에 대한 개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함.

과 언론기업의 성격이라는 양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적 행동에서 채택되어야 할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언론기업에 한해서는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그 활동이나 조직에서 비영리성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언론조직의 소유권이 특정 소수에게 독과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셋째, 소유에 대한 언론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소유의 경영과 편집에 대한 간섭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언론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언론기업의 가족소유 철폐와 기업공개의 강제, 언론기업 소유자들의 소유지분 제한, 언론기업들의 겸영금지(타 언론조직에 대한 출자 제한), 사원지주제, 국민주 방식에 의한 언론기업 설립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등의 언론 감시활동 또한 언론의 개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갈수록 언론권력의 힘이 비대해지고 그에 비례해 언론사주의 권력과 내부 장악력이 커지고 그 전횡 또한 상식의 궤를 넘어선지 오래다. 이에 따라 소유·경영구조의 개선과 편집권 독립과 같은 언론계 내부의 문제가 보다 본질적인 과제로 떠오른 현실에서 이같은 개혁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리력과 조직력이 동반된 '큰 틀'이 절실하다. 즉 '언론인 운동'<sup>43)</sup>이 '안'에서 문제점을 폭로, 비판하고 '수용자 운동'<sup>44)</sup>이 '밖'에서 그 힘을 실어주는 구조가 일상조직 형태로 꾸러져야만 언론개혁과제를 달성할 수

---

43) "언론개혁시민연대 발족 의미와 전망", 「미디어 오늘」, 1998. 8. 12.

언론인 운동이란 60년대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70년대의 동아·조선 자유언론실천 투쟁, 80·90년대의 언론노동운동등 언론인 스스로가 권력과 자본에 대항한 운동을 말한다.

44) 「미디어 오늘」, 위의 글,

수용자 운동이란 80년대의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대안매체 발간운동과 KBS시청료 납부거부운동, 90년대의 언론수용자 운동등을 말한다.



있다.<sup>45)</sup>

## 2.언론의 역할

이와 같은 개혁이 선행된 이후 통일을 위한 언론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남북 쌍방은 평화적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남북한 주민들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자신감 배양을 위해서는 민족의 동질성을 확대시키는 일에 적극적이어야만 한다.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같은 문화, 같은 풍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국민들에게 통일 마인드를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 쌍방의 현실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 상대방의 정치 선진적으로 비난하거나 힐뜯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현실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신문들의 「북한」, 「통일」들의 지면, 또는 TV의 「남북의 창」, 「통일 전망대」등의 프로그램은 좀더 확장시켜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도하여 북한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한민족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게끔 해야 한다.

셋째, 국가이익 보도가 아니라 민족이익 보도를 추진해야 한다. 두개의 국가를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국가이익 보도는 상대방에게 손해는 물론 불신을 초래하게 됨으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민족이익의 언론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의제, 즉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문제, 경제협력, 물질·인적 교류, 군비축소, 남북한 불

---

45) 1998년 8월 27일 발족 예정으로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등 노동단체, 언론노련, 기자협회등 13개 언론시민단체가 참여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창립은 언론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제도개혁, 대안매체 활성화, 미디어교육의 공고화 등 언론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등을 목표로 하고있다.

가침선언등에 관한 언론활동은 모두 민족이익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넷째, 북한관련 보도를 행할 경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과거와 같은 감상적·감성적이기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석기사를 쓸 수 있도록 전문기자를 육성해야 한다. 특히 통일부의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통일문제연구소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서 내실있게 보강, 운영돼야 할 것이다.

다섯째, 통일 후의 한반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취급해야 한다.

여섯째, 대북정보에 대한 적극성과 개방이다. 그러나 이는 언론계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정부당국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정부는 먼저 북한관계·통일관계자료의 독점방침을 대폭 완화하여 언론사에게 자료를 과감하게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직접취재를 허용해야 한다. 북한의 라디오와 TV를 자유롭게 청취·시청하여 북한측의 동정을 직접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남한 기자들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고 취재보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또 우려되지만 이것 역시 일정한 장치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먼저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언론의 북한 취재 보도를 철저히 통제하는 각종 규제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북한의 신문, 방송 보도의 직접 인용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 지침'은 국가보안법에 뿌리를 둔 것이다. 대통령 영(令)으로 제정된 이 지침은 신문·방송·잡지·영상물등 북한 원전을 널리 전파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취재를 위해 북한 인사를 접촉하는 것도 당국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 주민 접촉은 국가보안법이 아닌 남북교류협력법 소관 사항이지만 남북교류협력법 역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정된 법이므로 국가보안법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언론은 이렇게 경직되고 폐쇄된 사회에 개방되고 자유스런 사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국가를 초월한 초국가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 국민 국가가 무의미해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든 혼자서는 존립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늘의 국제사회이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와 북한 정세의 전망은 50여년 전 분단직후나 20~30년 전이나 예측하기 힘들며 김일성 사망후 실질적인 실력자·후계자인 김정일이 3년간이나 '유훈통치'를 내세워 '최고책임자'없이 운항하는 북한체제의 앞날을 정확하게 자신있게 전망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북한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소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북한을 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가 통일기반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일보도가 지향할 길일 것이다.

## 제 VI 장 결 론

이 논문은 한국 신문의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보도태도를 분석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인식과 보도 태도의 실상을 이해하고, 대북한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여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언론의 개혁과 역할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의 조선일보·동아일보·한겨레신문의 통일문제관련 사설 128건을 분석하였는데 조선일보 46건, 동아일보 45건, 한겨레신문 37건의 비중을 나타내 3개 신문별 통일문제 관심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전체 사설에서 통일문제 사설 비중이 11.0%를 차지하여 비교적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7년 IMF 체제 이후 경제문제 우선으로 통일과 북한문제에 대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진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북한 관련 사설이 적고, 내용적으로는 소극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6~7월의 북한의 침투로 인하여 사설의 분량이 급증하였고, 내용적으로는 부정적인 보도 태도가 주류를 이루면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었다.

이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군사·안보분야의 사설이 3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통일정책이 26.6%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북한실태는 불과 2.3%로 우리 언론이 매우 소홀하게 취급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에 대한 보도 성향은 보수적인 성향이 43.8%로 진보적인 성향 18.7%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우리 언론의 보수성을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며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여 통일문제 상대역인 북한에 대해 여전히 냉전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건설적인 수용의 자세가 부족하였다. 동아일보의 경우 조선일보와 다를

바가 없지만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중립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 신문은 조선·동아일보와는 달리 통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보수언론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표명하며 균형적인 보도를 하면서 통일 지향을 위해 남한 정부의 흔들림없는 정책과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 언론의 대북 보도 문제점으로는 우리 언론의 내부의 구성이 보수화돼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논설위원과 기자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집권과 인사권을 지배하는 사주들의 입장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또한 언론의 중추부를 구성하는 간부진들이 대북문제에 있어 보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자들의 대북문제에 대한 인식은 옳거나 설사 바르게 보도하고자 해도 언론의 구조상 제대로 지면에 반영되지 못한다. 북한소식을 알 수 있는 정보원의 부족도 북한에 대한 보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개혁되어야 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편집권의 독립이 먼저 이루어져 언론 내부가 민주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국가와 시민단체는 언론의 개혁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진후 언론은 통일을 위한 역할로는 남북 쌍방이 평화적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남북한 주민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남북한 쌍방의 현실을 서로 인정하여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 이익 보도가 아니라 민족이익 보도를 추진하며, 대북 보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석기사를 쓰며, 전문기자를 육성해야 한다. 통일 후의 한반도 변화 모습에 대하여 심도있게 취급해야 한다. 국가는 대북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언론은 북한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북한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이 올바르게 수행될 때 우리의 언론은 통일지향적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논문 연구의 한계점을 보면 분석대상 신문을 임의로 선정했으며 신문사별 특성을 발견하는데 미흡했다. 그리고 내용분석 결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보다는 추상적 해석에 의존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매스컴의 내용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통일문제 연구가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1. 국 내 문 헌

- 강만길외 29인. 1997.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도서출판 심지.
- 강준만. 1998. 「언론권력도 교체하라」, 개마고원.
- 김기태. 1989. "통일관련기사의 보도경향과 과제", 「저널리즘」 (봄·여름)
- 김정탁. 1991. 「남한언론의 북한보도 내용분석, 남북통일과 언론」, 한국언론연구원.
- 김지용. 1996. 「현장신문론」, 도서출판 장기.
- 김해식. 1994. 「한국언론의 사회학」, 나남.
- 방정배. 1991. 「한국언론개혁론」, 나남.
- 류한호. 1996. "언론사 내부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 「언론과 현대 사회」, 도서출판 나남.
- 백낙청. 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 비평사.
- 백선기. 1997. 「저널리즘 비평」, 5월호
- 손석춘. 1994. 「신문편집의 철학」, 풀빛.
- 유재천. 1990. 「남북한의 통일언론정책」, 언론문화연구, 제8집,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 윤희상. 1997. "국내외 언론의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보도성향", 석사학위논문.
- 이광희. 1994. "언론의 보도형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광재. 1994. 「저널리즘」, 12월호.
- 이범수. 1994. 「신문과 방송」, 8월호
- 이상철. 1997. 「신문의 이해」, 박영사.

- 이정남. 1996. 「개혁은 국민의 것이다」. 태일.
- 이원섭. 1997. 「새로운 모색」. 한겨레신문사.
- 이현희. 1995.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신문사설의 내용분석",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준수. 1995. 「신문은 편집이다」. 나남출판.
- 전득주. 1992. "한국의 통일정책, 과거·현재·미래", 「민족통일의 길」.
- 정규섭. 1994. "정부수립 후 민족통일정책과 김일성 사후 남북관계전망", 「한세정책」, 1월호.
- 정상모. 1997. 「새로운 세기를 위하여:남과 북 그 공생의 비밀」, 한겨레신문사.
- 조맹기. 1997. 「한국언론사의 이해」, 서강대출판부.
- 차배근. 1992. 「사회과학방법론」, 세영사.
- 최장집. 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도서출판 나남.
- 최진봉. 1994. "한반도 통일을 위한 언론의 역할", 「북한」, 4월호.
- 통일연수원. 1993. 「민주통일론, 통일문제편」.
- 통일원. 1993. 「통일백서」, 정문사.
- 통일원. 1994. 「통일백서」, 정문사.
- 한국언론연구원. 1992. 「남북한 언론교류」, 연구서 19.
- 한국언론연구원. 1995.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연구보고서 95-3.
- 한국언론연구원. 1990. 「독일통일과 언론」.
- 「동아일보」 1994. 4. 1
- 「미디어 오늘」 1998. 8. 12.
- 「서울신문」 1998. 6. 10
- 「시사저널」 1998. 7. 9
- 「중앙일보」 1998. 8. 3.



## 2. 외 국 문 헌

Anthony, L. "America Democracy & the press", Press center.  
July 12, 1996.

Keesoon. park, "North Korea and the Sino-Soviet Conflict", M.  
A. Thesis, University of Missouri, 1973.

Holsti, Ole R.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Reading, Ma. : Addison-Wesley, 1969.)



# 정보화(情報化) 세대의 특성과 통일교육 방향



성명: 김 현 식  
중영대학교 행정학과

## 〈 목 차 〉

- I. 문제제기
- II. 정보화 세대의 개념과 특징
- III. 정보화 세대의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
- IV. 정보화 세대의 통일의식
- V. 정보화 국가와 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 VI. 결론



## 제 I 장 문제제기

그 동안 통일교육은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북한체제라는 반민주적 그리고 국가통합의 문제를 다루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통합과정의 면에서 통일 당위성 문제를 다루었다. 그런 와중에 남과 북은 사회 문화적으로 이질화가 심화되었다. 기성세대는 북한과 어느 정도 사회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공감하지 않는다. 그 동안 통일교육은 남과 북의 대립관계에서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는데 모아졌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서 1991년 동서구와 소련이 무너지면서 체제우월성의 대결은 의미가 없어졌다. 더구나 독일의 경제적 흡수통일 과정을 살펴보면 체제 우월성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협을 주는가를 여실히 보고 느끼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IMF 라는 위기 상황은 남한의 우월과 북한의 변화라는 도식적인 틀 내지는 민족당위로만 설정되는 통일 교육도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국민들 사이에 통일보다는 우리가 당면한 경제 위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인 다양한 사회 문화적 여건을 감안해야 되는 시점이다.<sup>1)</sup>

더구나 사회는 지금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들은 여기에 적응해 가고 사회와 세계 체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와 통일교육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융합해야 할 주체이다. 정보화 사회는 다양성과 창조성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입시위주와 주입식교육은 교육은 다양한 가치관과 창조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주입식 통제 지향의 교육보다는 다양한 가치관과 정보를 가지고 대안과 정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통일 교육은 단순히 당위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판단을 내려하는 것이

---

1) 진 효관, "남북한 사회 문화적 통합과 시민단체의 역할", 『남북예습』 1998.7 통권 36호 p18.

다. 통일 교육은 이제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통일 해결을 위한 정보사회 인간형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 통일교육은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내의 상황이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고 교육구조상 3T체제가 역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교육 내용상으로도 과거의 경험을 답습한 추상적 교육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정보화 사회와 정보화 세대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안은 전무하다. 여기에 통일국가가 정보화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비전도 없다. 당장에도 현재 북한체제의 식량위기와 탈북자의 대량 발생 문제에 대해 우리의 경제 위기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이제는 체제 우월성의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점진적 통합의 길에 맞고 미래 비전적 통일교육이어야 한다. 대화와 점진적 통합은 상호 존중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고 존중과 의사소통은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 공감대는 달라진 사회 문화가 어느 정도 통합되었을 때 가능하다. 여기에도 통일교육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

환경변화와 현재 통일교육의 문제점, 여기에 따른 교육 대상자로서 새로운 세대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맞는 교육 방안을 통일국가모형과 결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 제 II 장 정보화 세대의 개념과 특징

### 1) 세대의 개념과 구분

세대는 부모 자식간의 가계 계층 원리, 30대 40대 같이 연령층에 따른 원리, 청소년 대학생과 같은 생애 주기의 원리, 6.25 전후 4.19 등 어떤 특정한 역사적 경험의 원리에 따라 나눈다.<sup>2)</sup> 정보화 세대는 연령층, 생애 주기, 역사적 경험의 원리가 함께 결합된 개념이다. 연령층은 70년대 이후 출생자들로 10대 20대이고 생애주기로는 초 중 고 대학생까지를 포함한다. 역사적 경험으로는 70년대 이후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서구산업 사회와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이 시기에 서구에서는 정보화가 일어났다.

### 2) 정보화 세대

#### ① 정보화 세대의 개념

정보(情報)란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 과학기술측면에서 데이비스(G.B..Davis)는 정보(情報)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형태로 필요한 형태로 처리된 데이터이며, 현재 또는 장래의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실현되던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사이버네틱스 이론의 위너(N.Wiener)는 인간이 외계와 적응하려고 행동하고 그 조절행동에 결과를 외계로부터 감지할 때 외계와의 교환된 내용이라고 했으며 비트의 창안인 샤논(C.E.Shannon)은 질량화로 정보를 파악했다. 경영 사회의 일반적 측면에서 셔먼 켄트(Sherman Kent)는 정보란 지식이자 조직이며 활동이라고 했다.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측면에서는 정보

---

2) 한국 사회학회 편, 『한국의 세대문제』 나남,1994. p12

(情報)란 여러 개의 데이터(Data)를 목적에 따라 취합 분석하여 결과를 얻은 지식이라고 한다.<sup>3)</sup> 정보(情報)란 지식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결과물을 얻는 것과 그것으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가치판단을 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각 여행지의 숙박요금, 교통요금, 물가표가 있다면 제일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가치 판단 까지를 포함한다.<sup>4)</sup>정보화는 자료 지식을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새로운 사고와 독창적 부가가치를 내놓는 인간형을 지향하는 사회의 흐름이고 이를 주도하는 세대가 정보화 세대이다.

## ② 정보화 세대의 특징

정보화의 세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젊은 그들의 문화가 있으며 그들의 특징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들의 문화가 존재하느냐 에 대한 논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 전개되어 왔다. 미숙한 문화, 하위 문화, 대항 문화, 새로운 문화로 보는 시각이 그것인데 대체적으로 문화가 존재한다 는 의견들이다.<sup>5)</sup> 여기서는 네 가지 특성이 모두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본다.

정보화 세대는 매스 미디어(Mass Media) 세대이자 네트워크(Network) 세대, 자아(Ego) 세대(자아 세대는 극명하다 외부로 표출하는 것과 내부로 숨어드는 이중성을 지녔다) 이다.

## ㉔. 매스 미디어 세대

미디어에는 신문 잡지 영화 라디오 같은 1차원 미디어와 컴퓨터 TV등이 1차원과 복합되어 멀티미디어를 이룬다. 매스미디어는 사회의 각 하부 체제를 연결시키는 상호 작용과 문화 전승의 본래적 기능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인간의 정신세계에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 및 사회에 주요한 영향과

3) 윤은기,『정보화 특강』, 서울:김영사,1988 p178.

4) 전자 신문 98년 4월 8일자.

5) 김신인,『청소년 문화의 의미와 성격』『청소년문화론』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p9.



변화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일반 대중의 인식방법 사고 방식, 행위 방식에 사회적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히 10대의 태도 가치 신념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6)</sup>

매스미디어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세대는 태어나면서 부터 어머니와 더불어 텔레비전과 라디오 음악이나 소리를 배운다. 사물의 움직임에 대한 개념을 텔레비전 광고 화면을 통해서 가장 먼저 터득하게 된다. 광고 음악을 통해서 리듬감과 율동을 일으키게 된다. 할머니의 단순 레퍼토리의 이야기보다 무진장하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미래와 삶을 꿈꾼다.

〈표 1〉 북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가

북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	고2 (N:88)	고3 (N:48)	계(%)
TV신문 라디오방송	52	27	75(55)
북한관련 전문 잡지,책	2	3	5(4)
탈북자 귀순자 기자회견	2	11	18(13)
학교 수업시간	20	23	27(20)
이웃 부모	3	0	3(2)
기 타	4	4	8(6)

자료 : 최인화, "학교 통일교육 현황과 통일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 『통일문제 연구』 98년 상반기호 통권29호 p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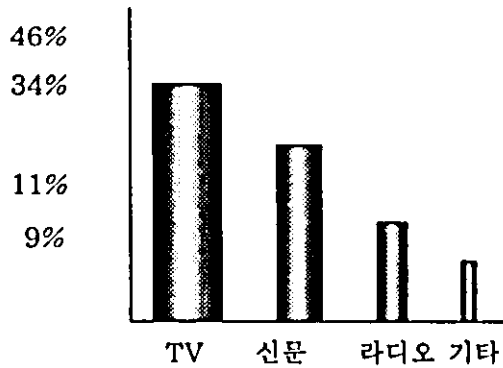
첫째, 포스트 모던한 감각 지향적 문화 세대다. 초현대적이다.<sup>7)</sup> 의상감과 음악적 감각도 순식간에 바뀌어 버린다. 가입하고 싶은 동아리는 체육 레저 동아리 (29.1%) 예술 동아리 (23.3%)를 가장 선호한다.<sup>8)</sup>

6) 한국 청소년연구원, 『현대사회와 청소년문화론』 1992. p151.

7) 권이중(외), 『청소년교육론』, 서울:양서원, 1997. p217

8) 한국 대학신문 97년 10월 13일자

(표 2) 북한에 대한 정보 지식을 주로 어디에서 얻는가



자료: 우리교육 1997. 6. p64.

둘째, 대중문화 세대다 친구 친척 교사 보다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비디오 등 대중매체는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부모 교사보다는 인기 가수나 영화 배우 탤런트 운동 선수들이 더 친근하다.

셋째, 창조적인 상상력과 영상세대<sup>9)</sup>이다. 그래픽 뮤직비디오 만화영화, 화려한 일본 만화의 선호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서의 영상 등이 잘 보여준다. 영상 세대는 비선형적인 영상언어에 의하여 영상 이미지와 개념에 입각한 인상과 사고를 훈련받는 세대이기 때문에 보다 감각적이고 감성적이고 문자세대에 비해서는 창의적이다. 문자는 논리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영상은 직관적이고 의사소통이 빠르게 일어난다. 그들의 정보원은 문자보다는 매스 미디어이고 매스미디어를 통해 지식과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가치 판단을 한다.

9) 위대진보시대개혁단. "신세대, 신세대운동의 가능성을 위하여" 『신세대론-그 혼돈과 질서』서울: 현실문화 연구회 1994. p83.

## ㉔ 네트워크 세대 (Network Generation)

정보 통신이 우리 1-20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지는 아직도 조심스럽다. 우리 보다 앞선 정보화 사회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10)

베이비붐 세대(1946-1964)는 텔레비전과 함께 가치관을 형성 시켰다. 베이비 버스트(Baby Burst 1965-1975)는 컴퓨터에 노출되기 시작한 세대이다. 베이비 에코 세대(1976-1997)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들로 디지털 혁명을 겪게되고 태어나면서부터 네트워크가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여기에서 네트워크 개념이 생긴다.

네트워크 세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기성 세대에게는 어려운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디지털 등의 디지털 기기가 네트워크 세대에게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된다. 기성세대나 교사보다 잘 다루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는 무너지게 된다. 권위 이동(엘 빈 토플러) 둘째,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와 함께 자라나는 이 세대는 미디어의 배어난 특질로 상호 작용성을 뽑는다. 컴퓨터 통신의 채팅은 대표적이다. 상호 작용성의 네트워크 가상 세계에서 자신의 의사나 가치관에 대한 독립성을 갖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붉은 악마다. 붉은 악마의 출발점은 93년 시작된 컴퓨터 통신상의 축구 동호회였다. 통신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보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한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모든 토론을 공개적이고도 민주적으로 진행된다. 그들은 단지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축구 현실을 비판하고 상호커뮤니케이션 서포터로 성장했다.11)

---

10) 이옥화, "하이 피 미디어교육 -정보 통신이 청소년교육에 미치는 영향" 『전자통신 연구원』1998,6. 통권 145호 pp20-21.

11) 안 해룡, "스포츠 군사 문화 온몸으로 거부한다" 『길』, 1998, 7. p128

〈표 3〉 PC통신 서비스 이용현황

PC 통신			
10 대	22.3%	중 학생	16.3%
20 대	21.4%	고 등 학생	23.9%
30 대	15.6%	대 학(원) 생	44.6%
40 대	7.4%	고 졸	6.6%
50 대	2.7%	대학(원)	24.2%

자료 :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사회인식 및 실태조사,1997.

또한 네트 워크 세대들은 네트 워킹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다양성과 폭넓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 끊임없이 혁신적인 보다 나은 사물과 방법들을 찾으려 하고 실제 이 과정에서 능동적이다. 셋째, 정보 통신이 시간적 지리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통신수단 이어서인지 N세대들은 상당히 세계화 된다. 통신의 대상은 더 범세계적이고 코스모폴리탄 적이다. 원하는 정보는 언제든지 웹을 통해서 즉시 주거나 받을 수 있다. 지구 한 곳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세계인들에게 즉각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

〈표 4〉 인터넷 서비스 이용 현황

인 터 넷			
10 대	11.2%	중 학생	7.0%
20 대	12.9%	고 등 학생	11.5%
30 대	8.8%	대학(원)생	31.2%
40 대	8.9%	고 졸	3.5%
50 대	1.7%	대학(원)졸	13.7%

자료 : 한국정보 문화센터, 정보사회인식 및 실태조사,1997.

넷째, 기성세대의 문화에서 정보화의 의미는 N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상호 상호작용 적인 문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용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식을 증진시키며 힘(권력)을 길러 가게 된다. 네트워크 시대에는 일부의 계층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모두에게 권력이 분산되며<sup>12)</sup> 참여자 모두 문화의 창조자가 된다. 그리고 어디에나 산재되어 있는 정보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개인들은 각각의 정보에 대하여 꾸준히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 상호 작용 적인 문화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던 것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것을 고르게 된다. 음악도 끌라 듣고 영화나 비디오도 끌라보는 (Service on mind)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수요자 고객 중심의 교육 개혁과 방향이 일치해 가고 있다. 교과서만으로는 이들의 욕구를 채울 수 없다.

#### ㊤ 자아세대(ego generation)

정보화 세대는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독특한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다. 무한 경쟁시대 국제화 세계사회 정보화 사회라고 대변되는 미래 사회에 근접하고 있다.

첫째, 주체적인 삶을 살아간다. 격식화, 획일화, 기계화된 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지식, 과학 기술, 새로운 오락, 스포츠, 레저, 문학 예술을 갈망한다.<sup>13)</sup> 만화는 이것들의 총아이다. 그들은 유연하고 신축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것, 이익이 높은 것, 편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 개방적이다.

둘째, 자기 일에 대한 높은 성취감과 철저한 프로 의식을 가지고 자기일에 충실하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를 지향한다.<sup>14)</sup> 자기 계발만이 종속된

12) 엘빈 토플러, 『권력이동』 이근행 역(譯), 서울: 한국 경제신문사, 1992. p271.

13) 한림과학원(원),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소화출판사, 1997.), p332.

삶이 아닌 주체적인 삶과 미래를 보장하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15)

〈표 5〉 나는 다른 사람의 간섭을 싫어한다.

	예	아니오	계(%)
전체	76.9%	23.1%	100
남	78.2%	21.8%	100
여	75.5%	24.5%	100
성별			
초	68.6%	31.4%	100
중	78.5%	24.5%	100
고	82.1%	17.9%	100
대	85.1%	14.9%	100

자료 :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삼성복지재단 1994.p15.

셋째. 강력한 국가이데올로기(군사 정권) 다음의 세대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자기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다. 전세대의 집단 논리 의식이 없다.

한국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생존 논리에 대한 고민이 감성적으로 약하며 또한 이성적 수준에서 현실 인식의 수준이 낮다16). 어머니나 교사 집단에 비해 개인주의적 특성이 강하다. 어머니 교사 모두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1-20대 세 집단을 비교했을 때 개인주의 경향이 강하다.17)

자아는 그 양상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한가지는 내향적 자아의 추구로

14) 위대진보사대개척단, "신세대, 신세대운동의 가능성을 위하여" 『신세대론-혼돈과 질서』(서울 ; 현실문화연구 1994.) p83.

15) 중앙일보 1994.5.26. 경향신문 1993.12.20. 동아일보 1993.9.12.

16) 이상현, "신선한 문제 제기" 『우리교육』 중등판 1997, 6. p56.

17) 김의철, "한국 청소년의 가치 체계" 『한국 청소년문화-심리 사회적 형성요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p208.

개인이 내향적 자아만 찾는 개념이다. 집단과 대인관계보다는 자신의 취향 가치관 정체성을 추구하고 그 외 자아외적 개념에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이 자아의식이 외향으로 발산될 때 걸잡을 수 없는 집단의식 즉, 민족의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자아세대를 대표하는 것이 붉은 악마는 대표적이다. 지난 프랑스 월드컵에서 그들은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거절한 채 15박 16일 동안 1인당 경비를 1백50만원으로 잡고 빵과 라면으로 버티면서 기차와 유스 호스텔에서 강행군하는 등 초긴축 재정과 소수정예 회원으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용원을 끝냈다. 가방에 태극기 달기 그리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상품이 마케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18)

---

18) 텔레콤의 신한국인 삐삐는 (출고 기준 1개월 출고가 수량기준으로 29-30%만 팔려도 히트) 5월 말부터 출고해 한달 만에 1만 5천개가 팔렸다. 태극기와 안중근 의사의 서체를 넣었다.(한국 전파신문, 98 / 7 / 6)

## 제 III 장 정보화 세대의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

### 1) 개념과 목적

정부의 공식입장에서 통일교육이란 우리 민족을 위한 한결 같은 영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들 사이에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sup>19)</sup> 통일교육의 목적은 3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자주적 민주적 평화적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범국민적인 이해 기반의 확충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건전한 행위 규범을 온 국민이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통일조국의 형성 과정과 장차 통일조국이 경험하게 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대내외적인 문제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는 상황 판단과 대응능력을 신장한다. 셋째, 세계 속의 새로운 통일조국 및 한민족의 위상과 세계발전을 위한 한민족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한다.<sup>20)</sup>

### 2) 통일교육의 현황

#### ①. 통일교육의 3T체제.

이런 개념정의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일교육은 여기에 복무하고 있지 못하다. 창의적이고 교육활동과 열려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습자료가 다양하지 않다. 있는 것마저 채택이 되지 않고 있다. 교과서 위주의 교육일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 마저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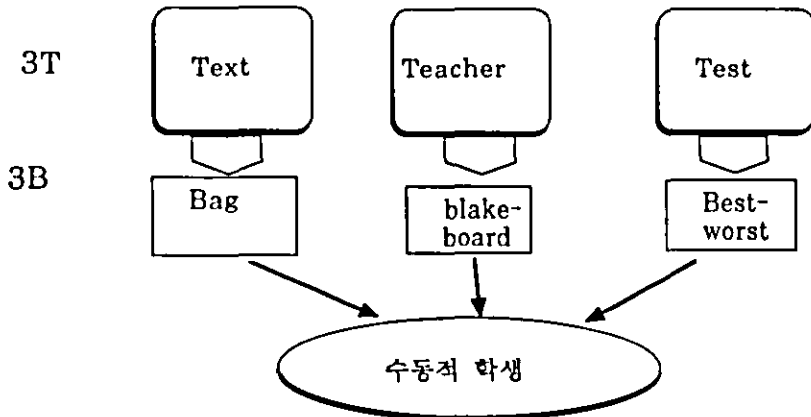
---

19) 통일원, 『통일 기본교육 방향』, 1995, p4.

20) 위의 책, p4.



외우고 있다. 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통일문제에 폭넓은 정보와 창조적 문제 해결 식의 접근으로 유도하기보다는 단편적인 내용을 주입하기에 바쁘다. 더구나 전문성도 떨어져 정보원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스크에 의존하고 있다.



〈그림 1〉 3T체제

## ②. 이데올로기와 정치논리

교과서의 통일문제는 정치 상황과 불가분해서 교사의 재량권이 극히 제한되어있다.<sup>21)</sup> 학교 통일교육 분석 연구중 '중학교, 도덕, 국사, 사회과목의 분단 및 통일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 정책홍보용 통일교육 2) 강자의 논리에 의한 통일교육 3) 배타적 민족주위를 강조한 통일교육 4)체제유지옹호 및 안보 중심 위주의 통일교육 이라는 비판적 연구 성과도 있다.<sup>22)</sup>

21) 김각, "헌법 가치 실현으로서의 통일교육의 한계" 『사회와 윤리』 제 21집, 한국사회과교등학교회, 1995, p65.

22) 정호범, "통일지향의 시민양성을 위한 한국 사회과 연구의 방향" 『사회교육과 연구』 창간호, 한국교원대 사회과교육연구회, 1994.1. pp26-31.

### ③. 텍스트의 내용

국민윤리의 6개 단원 중 2개 단원이 통일교육이다. 2단원을 공산주의와 이데올로기, 조국의 통일로 할애하고 있다. 전자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하여 대립적인 개념으로 공산주의를 상징하고 공산주의의 실체와 본질에 대하여 알도록 하여 허구성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후자에서는 통일과 조국의 미래 번영에 다루고 있다.

통일의 의미(276쪽)에 대하여는 하나의 주권 국가, 단일법체계, 단일군대, 국민통합을 제시하며 국가의 형성과 생활공간의 통합을 통일이라 보고 있다. 그러면서 통일의 실현조건으로(국민윤리 277쪽) 민족내부에서 민족 의식과 통일 의지, 남북한간의 평화 정착과 신뢰 회복 민족적 신뢰 회복, 남북한간의 이질감과 체제사이의 위치극복을 강조하고 있다. 고교 정치경제에서는 첫째, 한국 민족의 정치적 최우선 과제가 분단극복 통일 둘째, 통일의 당위성으로 남북한 물질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해소 셋째,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례나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④. 평 가

이제까지의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통일을 촉진하고 통일과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일 실천 역량의 개방이 아니라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모순과 갈등사태에 대한 감정적 이해와 비판적 내용에서 주류를 이루었다. 그나마 북한 관련 정보의 제한된 활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사도 학습하는 학생도 확신 없이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통일교육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나 과학적 분석을 강조하는 탐구

학습은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교육은 정보화 세대의 특성에 하나도 맞지 않고 시대와 환경이 요구하는 통일교육도 아니어서 통일에 대한 의식을 회미하게 하고 통일역량을 약화 시켜 통일이 전 민족의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질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 3) 문제점과 시사점 검토

#### ① 학생의 통일의식 문제

가.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부정적 통일 인식 통일비용 문화적 이질화로 통합의 어려움, 갈등이나 통일에 대한 경원 성이 팽배하게 된다. 통일에 대해 논의 해봤자 실제 과정에는 영향이 없으며 자신들이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나 장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극단주의적 이기주의 풍토로 창조나 민족 동질성 회복 통일 실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장애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통일이 우리 또는 나와 밀접하고 중요한 현실이라는 인식, 분위기 형성조차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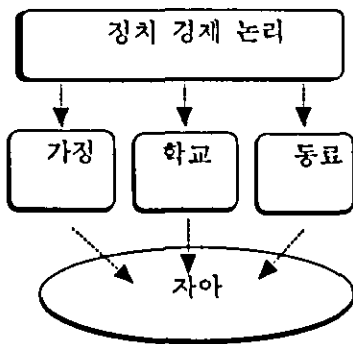
#### ②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첫째, 3T중심의 교육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의 낙후되고, 교과서에 의존하고 있다 다양한 학습자료와 교사의 전문성, 역할 변화, 교사와 학생의 창의적인 활동은 없다 .60년대 통일관을 가진 교사들이 아직도 통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몇 문제 나올지 모른다 하여 통일부분을 가르치고 학생은 문제를 푼다.

둘째, 정보화와 세대의 요구에 맞게 멀티미디어를 통한 교육은 전무하

다. 네트워킹과 자료 가상공간에서의 다양한 접근과 토론문화 등은 없다. 네트워크 상에서 통일 논의의 접근은 정보화 세대의 특성상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셋째, 통일교육이 교실 내에서 파편화 되어 있다. 통일교육이 개인화 되어 있다. 통일은 나와 친구, 지역과 지역의 통합과 같이 현실에서 먼저 생각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 조직과 집단 학습을 통해 사회 속에서 집단과 개인의 타협과 협의의 과정에서의 올바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 유발할 프로그램은 없다.



〈그림 2〉 기존의 통일교육의 자아



〈그림 3〉 현재의 통일교육 자아

셋째, 통일 교육이 남북한의 당국의 관계 및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나 이해 관계가 밀접하고 체제수호나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sup>23)</sup> 민족의 장래보다는 체제 경쟁을 우선 순위에 둔다. 민감한 시기마다 정치권의 정치 논리가 개입한다.

23) 윤기영 이미숙, "학교 통일교육 지침에 입각한 유치원의 통일 교육구현 방법에 관한 방향 모색", 『교육연구』 제14집 (1995), pp39-46

## 제 IV 장 정보화 세대의 통일의식

### 1). 정보화 세대의 통일 의식 현황

#### ① 제도권 교육

정보화 세대를 1-20대라 했을 때 통일에 대한 이해와 의지는 박약하다. 교육개발원팀의 자료에 따르면 중학생의 45% 고등학교 40%만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sup>24)</sup>『우리교육』의 자료에 따르면 잘 모르겠다 10%, 그렇다 49%,원하지 않는다 41%로 나타났다.<sup>25)</sup>

한국교육개발원팀에 의해 수행된〈청소년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에 관심 있다가 전체의 45.6% 관심 없다. 27.3% 특히 응답자중 중학생 37.3%가 고교생 24.3%정도가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통일의지를 나타내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25.2%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sup>26)</sup>반드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 라는 질문에 전체 41.8%에 이르는 청소년이 응답했다.<sup>27)</sup> 한국의교사학회가 1997년. 5월에 1,094.명의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의식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2%에 해당하는 학생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을 가고 14.2%는 아예 외국으로 도망가겠다고 는 패배의식을 보였다.<sup>28)</sup>

24) 황기숙,“중학교 도덕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5. p335.

25) [우리교육] 1997.6. p45.

26) 박성희, “청소년의 통일의식 조사 연구”『교육월보』 교육부 1995년 6월호 pp74-79.

27) 김영작,“청소년의 안보 의식을 생각한다.”『교육월보』 교육부 1997년.9월호.pp12-15

28) 한국의교사학회, <청소년의의식조사> 1997.5.

## ② 제도권 밖교육

제도권밖 교육이라고 했을 때 특히 거론할 수 있는 것이 대학과 재야에서 교육이다. NL, PD 등등 운동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3T체제)을 말한다. 군부 독재 시절이라는 억압의 상황에서는 사회주의적 통일 논의가 어느 정도 여론의 호응도 얻어졌지만 민주 정부가 들어선 이 시점에서는 학생들부터가 회의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대학가 총학생회 선거에서 주류 계열인 민족 해방 계열이 전대협.한총련 11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과반수 장악에 실패했다. 96년의 54.9%에 비해 33.1%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sup>29)</sup> 물론 한총련의 외부에 의한 와해도 있었지만 작년에 2만이었던 참가자가 올해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는 2000명만 참가하여 갈수록 수가 줄고 있다.

## 2) 정보화세대의 학교 통일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생각

〈표 6〉 학생들의 학교 교육평가

학교통일교육 평가	고2 (N:88)	고3 (N:48)	계(%)
이미 알고 있는 내용	11	6	17(13)
사회변화를 고려한 북한 실정을 알아 유의했다.	6	2	8(6)
교과서 중심으로 가르쳐서 재미없다.	7	5	12(9)
신문방송의 보도 따라 못감	38	14	52(38)
북한체제 비판만 배웠다.	26	21	47(35)

자료 : 최인화, "학교 통일 교육현황과 통일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 『통일 문제 연구』 98년 상반기호 통권 29호 p285.

29) 한국 대학신문 97년.12월.1일.

학생들은 이런 결과로 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학교에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현실의 역동적인 변화에 둔감한 교과서 중심 또는 미디어매체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자료의 편협성에 회의적이다. 더구나 정보화 세대에 맞지 않는 주입식 획일적 교육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 제 V 장 정보화 국가와 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 1) 통일 교육의 전개 방향

일반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통일 통일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① 대내적인 면

1)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 형성 2) 조화와 타협의 민주 공동체 형성  
3) 경제 역량의 강화 4) 위기극복을 계기로 통일 의지와 역량 구축

② 대외적인 면 1) 한반도 평화 구축 2) 국제적 이해와 지지 확충 3) 북한의 변화 유도<sup>30)</su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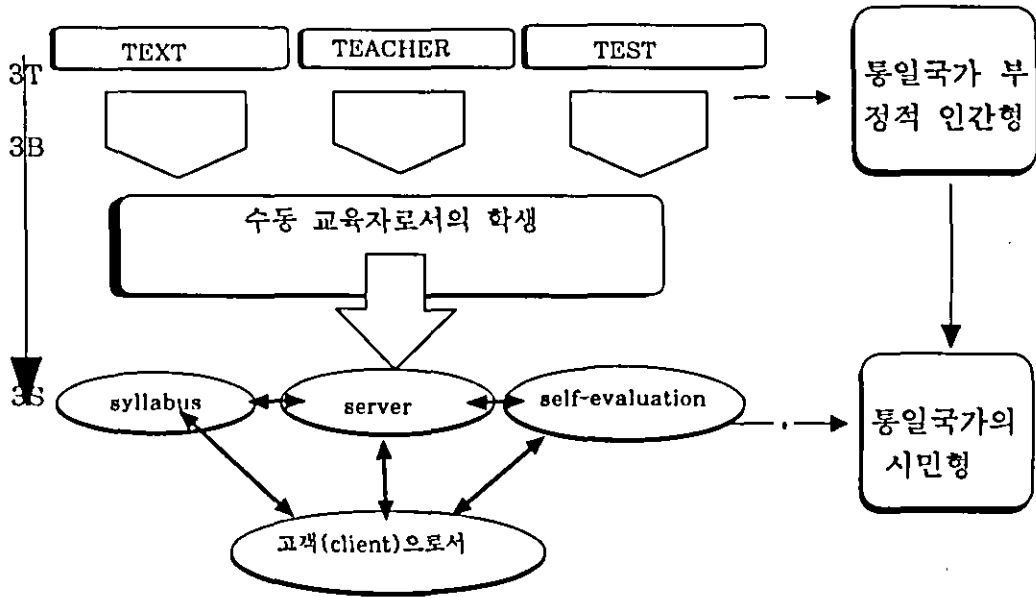
### 2) 3T체제의 개선 방향 (3S로 전환)

통일교육은 국내의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를 다루게 되며 어느 특정한 교과나 교사만이 지도하도록 한정되어 있지도 않고 범교과적으로 지도 해야한다. 즉 통일교육은 도덕 국민 윤리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문학 예술 등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 방법적 측면에서 폭넓게 확대 해야 한다. 이것이 교육개혁과 함께 학습자 중심의 교육 즉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다. 학습자 중심의 통일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통일 환경에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적 근거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통일 시민적 능력을 발달시켜 문제 해결 및 사고 능력을 기르며 통일과 관련된 합리적인 가치와 바람직한 태도를 습득하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

---

30) 통일교육원, 『통일 문제 이해 1997』 통일원 통일교육원, (1996.12). pp 223-234.





〈그림 4〉 3T체제의 3S체제로 변환

영상세대이기 때문에 대중음악 만화영화 비디오 영상 자료의 제작과 활용은 다가오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지향해야 한다. 당장에 인터넷을 교사들이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 통일교육은 멀티미디어로 매개되어 통일교육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다. 학교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통일 정보화교육 척도는 정보 기기를 다루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여 통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판단력을 올바르게 갖출 수 있는냐에 있다.

① 교사의 역할 방향

지금까지 교사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시대적 조류에도 미치지 못하여 더구나 통일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 왔다. 전문적으로 깊게 교육을 받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sup>31)</sup>.

통제자 주입자의 역할만 했을 뿐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올바른 통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주체적으로 자기 문제화 하는 분위기를 조성시켜 통일이 우리 현실 사회 문화와 밀접하여 우리, 나의 문제임을 자각하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억지로 현실과 동떨어진 이데올로기 또는 막연한 당위성만으로 교과서 내용을 주입하고 통제하려 해서는 안된다.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만이 자기 현실의 문제로 느끼게 되며 다양하고 창조적인 통일 교육 방안과 정책 등이 나올 수 있다. 전문성도 중요 하지만 나아가 봉사자, 매개자로서의 서버(Server)는 멀티 미디어매개 교육에서는 그 역할이 당연하게 변할 것이다.

〈표 7〉 3T 통일교육 구조와 3S 통일교육 구조

	3T 통일교육 구조	3S 통일 교육 구조
시간	제한	무제한(멀티미디어 매개)
공간	제한	무제한(멀티미디어 매개)
대상	제한	학습자 중심
주체	교사 (중앙 통제 중심)	개방성
정보 접근성	폐쇄성	개별 학습
학습 형태	집단학습(군집 학습)	실험 학습
교육 유형	압기/주입	실험 창조
참여 유형	수동형	능동형
커뮤니케이션	일방형	쌍방형
범위	지역	지구적
인간형	단순압기형 (반통일적 분단인간형)	통일 창조적 인간형 (정보/학문 연구형)

31) 최 인화, "학교 통일교육 현황 진단과 통일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 『통일 문제 연구』 98년 상반기호 통권 29호, 평화 문제 연구소, p288

## ② 통일교육 Syllabus의 내용

1) 분단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접근 2) 통일의 준비 3) 통일의 대비<sup>32)</sup> 특히 통일의 준비 과정에서 다양하고 가치관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와 타협을 이루어 가는 훈련, 그것이 목표이며 그 과정에서 통일 후에 통일국가 형성 과정에서 과제들을 통일 국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창조적인 문제 접근 방식으로 이룰 수 있도록 문제 접근식, 창조적 사고식 통일 학습을 위해서 교과서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자료 종합하여 자신의 현실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양한 영상 자료와 북한에 대한 자료가 개방되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멀티미디어 매개 교육의 조기 실현과 통일정보 은행이 성립이 향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느냐 하는 문제를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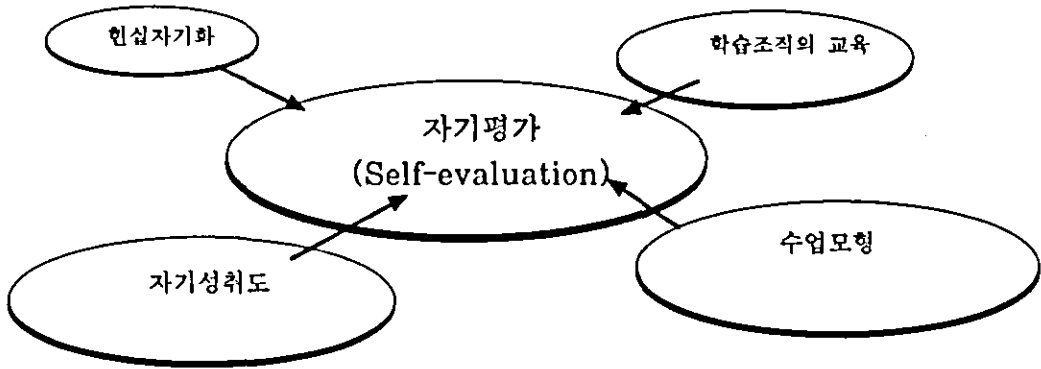
## ③ 자기 평가의 보완도

자기평가는 일방적인 주입과 자기 자신의 성취도와는 상관없이 이뤄지는 획일적 평가가 아니라 자기의 성취도를 스스로가 검증하고 자기의 의사가 반영된 평가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개인이 홀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모형에서 다양한 동료 학습조직에서 자발적으로 현실 속에서 검증 받게 된다.

자기 평가는 시험이 아니라 다양한 수업모형과 학습조직으로 학교 동료 지역 단체에서 자기의 주체적인 해결 능력 즉 현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느끼고 정보와 능력을 축적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

32) 교육부, 『통일교육지도 자료』 (서울 : 교육부), 198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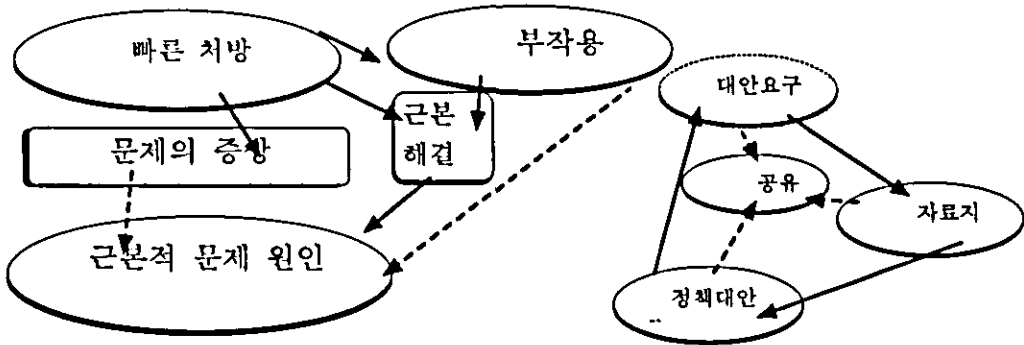
〈그림 5〉 자기평가 상승도

### 3) 수업모형과 학습조직의 개선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한 교사가 수십 명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할 뿐 공유하지 못한다. 더구나 같은 반 급우들끼리도 전혀 공유가 없다. 통일은 교실에서조차 얘기되지 못한다. 통일은 이질화된 집단이 이제 함께 살아가는 것이므로 대화와 토론이 필수적이다. 같은 반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이들의 조율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 정책입안자가 되어 통일과정과 향후 통일국가의 문제를 다루면서 현실에서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화 세대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다. 둘째로는 매스 미디어 세대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매스미디어에서 얻기 때문에 비판적 학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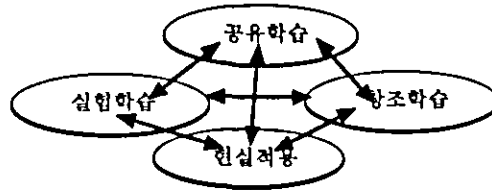
#### ㉑ 수업모형

① 가치 갈등 수업모형은 다원화 사회에서는 가치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가치관은 더욱 더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다양한 가치관속에서 합리적 분석과 도덕적 판단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그림 5〉 집단탐구 학습모형

〈그림 6〉 수업모형 네트워크



〈그림 7〉 조직학습 내용과 구조

② 집단 탐구 수업 모형은 고등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능을 배울 수 있다.

③ 비교 분석모형 남북간에 정책 사회 체제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질성을 강조하고 우월성을 강조해 왔다. 각 체제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다.

④ 개념 학습에서는 남북한간에 합의된 공동 성명과 기본 합의서 등에서 사용된 특정 개념에 대한 학습개념 수업형태 개념이라는 정보에 대한 반응을 처리 과정 학습할 개념에 대해 선정하고 학습한다.

⑤ 토의 수업은 공동체적 정체성과 민족주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자발성 창의성 및 미지에 대한 인내성 등을 요구할 수 있다.<sup>33)</sup>신문은 비교 분석 심층적이지만 있지만 똑같은 내용 또는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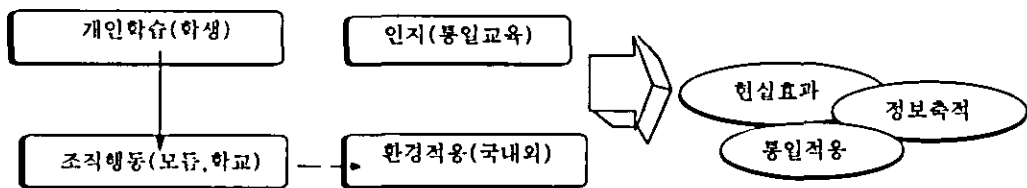
정보가 다르다. 성격에 따라 논조와 시각이 다르다. 텔레비전 모니터 단편적이고 흥미위주로 시청률에 얽매이는 경향이 많다. 각 프로의 시간 순서 자료 화면 등 모든 내용을 모니터 한다.

집단 모듬별로 토론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가 국정 100대 과제중 미래/통일기반 조성정책에 따라 북한의 라디오 텔레비전을 개방했을 때 더욱 유효하다.

#### ㉔ 학습조직을 통한 통일교육

학교에서 수업에서만 존재하는 통일 교육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조직과 단체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통일을 생각하고 북한과 맞부딪히게 될 다양한 상황과 현실 변화 속에서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① 통일 교육을 위한 모듬(학습 팀)을 만든다. 학습조직을 통해 개인화이기주의화되어 있는 학생들을 공동체의 장으로 이끌어 자료 수집 분석 탐구 연구 토론 등의 문제 접근을 통해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조율하여 민주적 시민과정을 통일 시민적 자질로 전환시킨다.



〈그림 8〉 학습조직의 흐름과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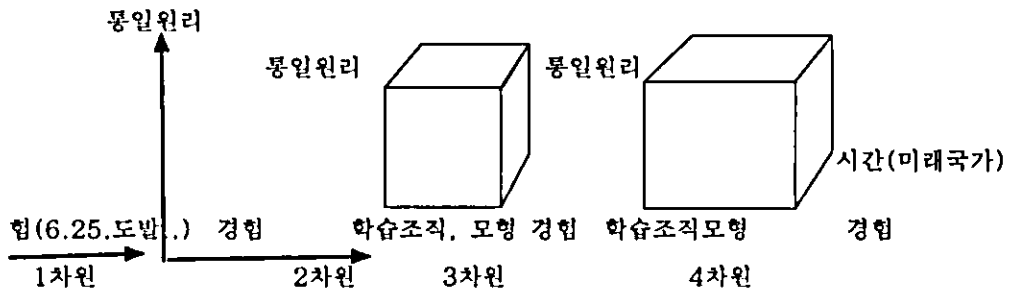
정보화 세대들은 자아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모듬을 주체화 시켜야

33) 박복선, "자기언어로 통일 만들기", 『우리교육』 1997.6. p64-67

한다 이 자아 주체화는 같은 반에서 다른 반 학년 학교 별로 토론과 논의가 벌어졌을 때 강해진다. 나아가 붉은 악마 같은 애국심으로 발전된다.

②인센티브를 준다 자아 세대는 자신이 방면에 프로라고 자신감을 얻게 되면 무서운 열정을 보이게 된다 통일특기자를 대입에 반영시켜야 한다 통일에 대한 연구능력, 통일 시민으로서의 성숙도,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이들에게 우대를 하게 된다면 그들은 영상자료 네트워킹, 프로 적인 열정으로 놀라운 분위기를 만들어 낼 것이다. 물론 개인뿐만 아니라 모둠(학습팀, 학교)별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정책 대안을 현실속에서 창조하고 실험하여 공유함으로써 실제 가능성의 정보를 축적하여 통일 국가를 이루어 가는 능력과 이후 운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림 9〉 통일교육 사고의 4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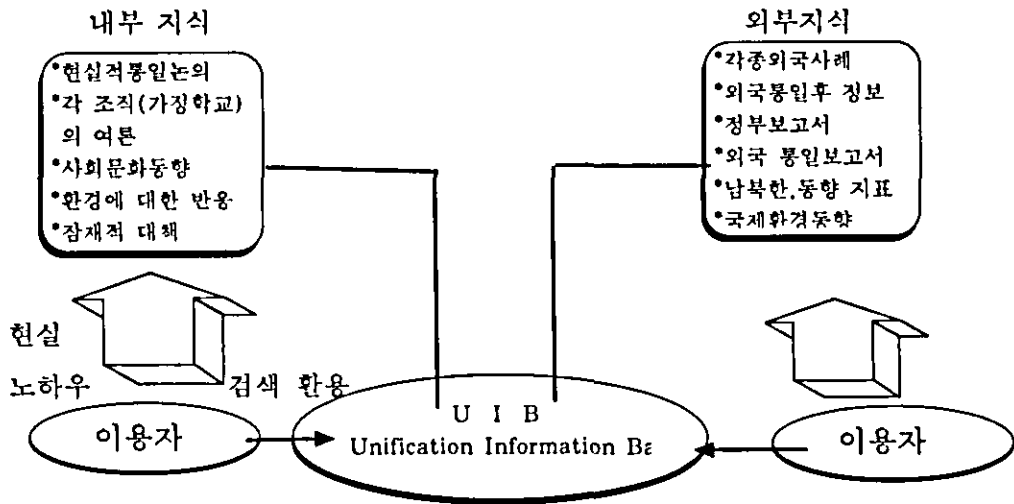
#### 4) 내용적인 측면

두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내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본 원리와 통일 기초 지식 함양이다.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본 원리는 첫째, 통일의 당위성과 목표 그리고 바

랍적 한 통일 상이 국민 개개인 의식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한국 구성원 모두에게 이롭지만 과정은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민족 번영과 동북아 안정 세계평화 이바지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임을 인지하고 여섯째, 민족적 지혜와 역량이 필요한 민족적 과제에 복무해야 한다.<sup>34)</sup>

통일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은 민주 시민의식, 민주적 태도와 심성의 함양 통일 의식의 당위성 인식, 통일 위한 취지 고취,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 공산 체제와 남북한 사회의 비교, 통일의 조건과 장애 요소 통일의 절차와 방안 대한 이해 통일 후의 국가 건설 과정에 제기될 문제 통일후 국가 양태에 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 교육이 구체화되어야 한다.<sup>35)</sup>



〈그림 10〉 UIB(통일정보은행)의 체계도

34) 통일원,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서울: 통일원, 1994 pp15-16.

35) 위의 책.



## 5) 정보화 정책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 할 것은 멀티미디어화, 학교 정보화, 통일정보뱅크화, 북한의 정보화다. 멀티 미디어화와 학교 교육정보화는 궁극적으로 통일정보은행의 운용으로 모아지고 이것은 네트워크 상의 북한과 결합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정보화는 남한의 5%수준<sup>36)</sup>인데 이것은 이미 정보화 세대와 북한의 젊은 세대간에 상당한 문화적 이질감을 형성했다고 보여진다. 차우세스쿠 정권과 소비에트가 무너진 것도 네트워크 상의 정보를 통제할 수 없어 자유 세계의 정보가 흘러들어 감으로써 무너지게 되었다.<sup>37)</sup>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유도하기 위함은 아니다. 북한의 정보화 지원은 이질감 해소와 북한 사회를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결정적 역할의 가능성이 크다.

통일정보뱅크는 네트워크정보 공간상에서 설립되므로 실제 공간에서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비용이나 효율 면에서 이점이 크리라고 본다. 실제일선교육현장에서는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실을 학교나 교육청에 설치하기를 바라지만 비용이 전국적으로 막대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통일교육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 단계로 일단 PC통신이나 인터넷상에서 정책당국과 학생 교사가 통일문제에 대하여 묻고 답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 북한과는 대학에서 학술적인 차원에서 대학생들이 사이버 대학개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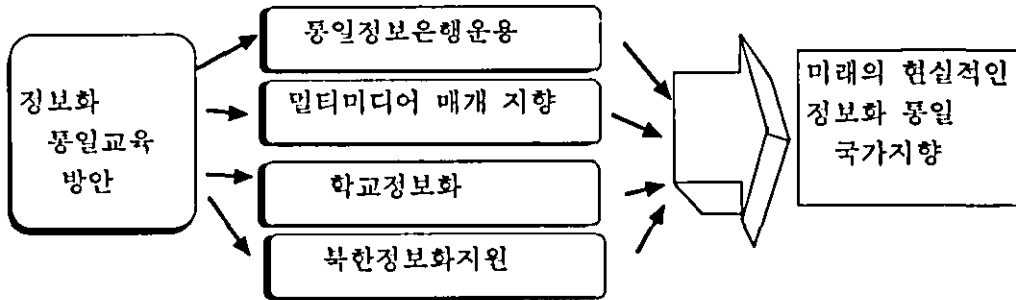
36) 한겨레신문 1997.10.9.-북한의 네트워크 수준은 94년 기준으로 공중전화 보급대수 2720대로 남한(30만)의 1%, 전화가입자는 109만 명으로 남한(1765만명)의 6%, 교환기 디지털율은 4.6%로 남한(61.8%)의 7%이다.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통일』 1998. 4.몽권 199호, p63.-90년대 들어 16비트와 32비트를 조립 생산할 정도로 하드웨어 생산기술이 낮다. 소프트웨어에서는 90년 9월 한글 편집과 인쇄기능을 가진 '창덕'을 개발했으나 기술면에서나 한국의 80년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37) 앨빈 토플러, 『권력이동』 이근행 역(譯),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2. p424.

현재 정부에서 학교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정보화를 추진중이지만 일선의 인식 부족과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일선 현장에서의 전문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멀티미디어 매개 교육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 3S 통일교육과 융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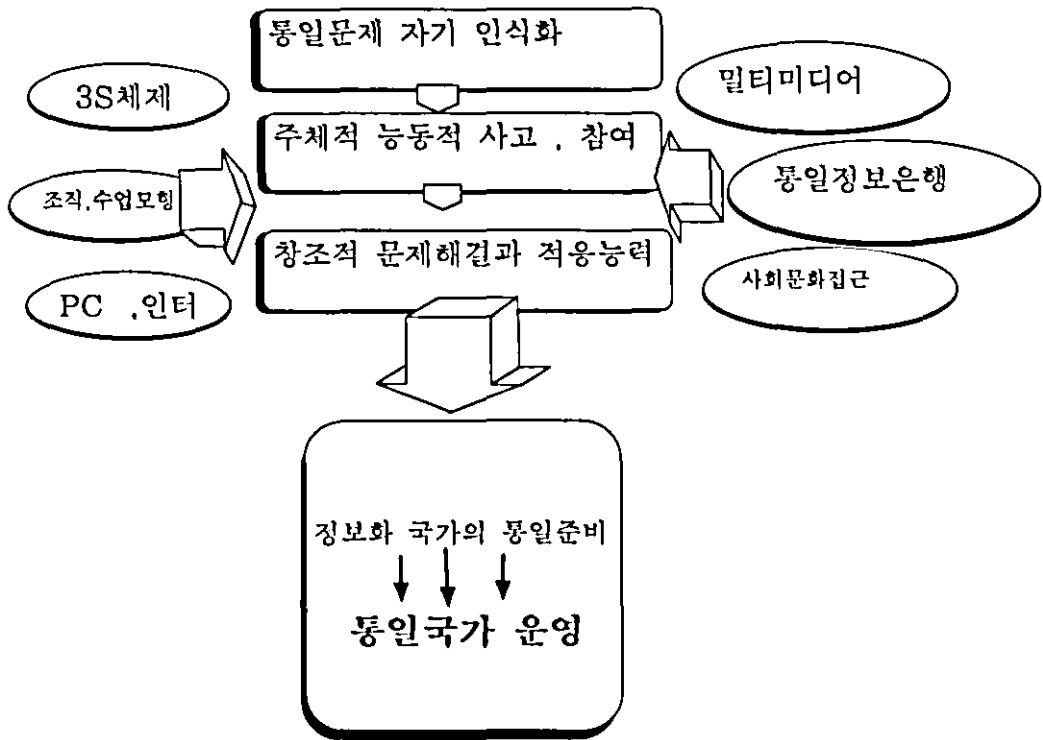
〈그림 11〉 정보화 세대의 통일교육

## 6) 사회 문화적 접근

1) 연예인, 운동선수 등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이다. 그들이 통일을 얘기 해야하며 그들이 통일의 흐름과 분위기를 이끌어내야 한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의 음반에서 통일에 대한 노래를 부르자 젊은 세대들에게서 폭발적인 통일 논의를 이끌어 내었다.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정보화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박찬호 박세리 등 운동선수들이 통일에 대하여 인식을 깊게 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통일에 얘기하고 분위기를 일으켜야 한다. 통일교육강사로 일선 교사만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도 서야 한다. 나아가 전국민의 통일 강사화 추진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교과가 따로 통일을 때어 놓아서 안 된다. 지금 경제 상황의 타개에 온 국력이 모아져 있는데 우리는 번영과 통일이라는 두축을 놓쳐서는 안 된다. 둘은 하나다. 정치, 경제, 법, 제도, 학문은 우선 통일과정상에 문화는 이질감 극복에 초점을 맞추어 주고 교과목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통일을 향해서 다루어져야 한다.<sup>38)</sup> 사회적으로 통일이 미칠 영향에 대한 대중적 교감이 확산되어 주변에서부터 산 교육이 공론화 되어야 한다.

3) 남북한 학생들의 교류가 활발해야 한다. 그들의 문화가 기성세대 보



〈그림 12〉 통일국가대비 정보화 세대 통일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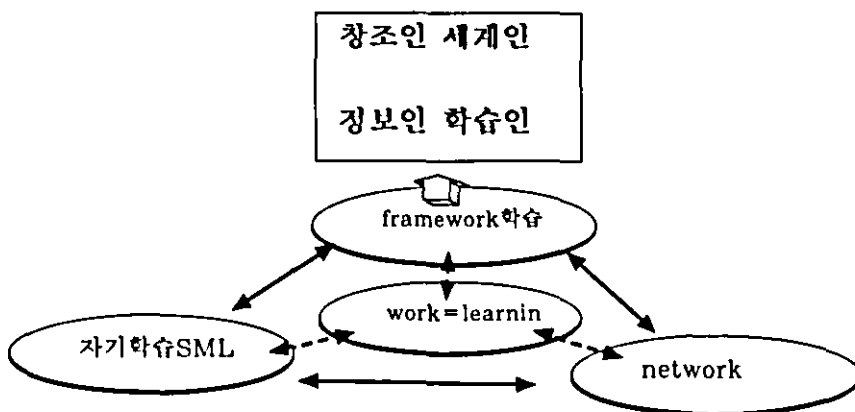
38) 예컨대 들어 정치경제-정치체제 형태, 북한토지의 사유화 방안..., 기술-북한의 정보화 방안 국민윤리-자유민주 사회와 사회주의의 윤리 조화 방안 예술-남북한 전통문화계승 정도와 방향 국어-국어 이질화와 극복 연구...

다 훨씬 더 이질화되어 있어 통일에 대한 두려움마저 일으키고 있다는 현실에서는 사회 문화적 이질감 해소가 중요하다. 우선 스포츠 교류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경진대회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산통일 교육이다. 민족의 미래는 어떠한 국가로 그려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토의가 있어야 한다. 우선 현실적으로 남북한간에 사이버 대학을 개설하여 정보화 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자기 현실화를 불러일으키고 북한에는 개방이 밀거름이 되게 해야 한다.

## 6) 종합적 방향

21세기는 정보화사회이고 이를 움직여 나가는 것도 정보화 세대이다. 통일국가모형을 생각할 때 정보화 통일국가를 상정한다면 통일과 정보화세대는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

통일 교육 패러다임이 창조적 교육파괴를 통한 학습인 창조인 정보인 세계인을 길러 내는데 맞추어야 한다. 자기학습과 수업모형과 학습조직의 프레임웍이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되고 훈련된다. 이것이 나아가 통일국가와 정보화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림 13〉 창조인 정보인 세계인 학습인 지향구조

이의 세부적 실천 사항으로서 자율화 현실화 첨단화 국제화의 네 방향이 있다. 여기에 국내 남북한의 환경변화와 국제환경변화에 항상 민감하면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중장기적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① 자율화에서는 통일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자율교육체제를 개발하여 자기학습을 지원하여 통일에 대하여 학습하고 연구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시키고 받는 교육에서 스스로 하는 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 21세기 미래 환경변화가 정보화 학습사회로 급진전되면서 그 결과로 통일교육도 여기에 연계되어 전환을 해야 한다. 각자가 자신의 현실 문제로 느껴 스스로 하는 통일교육 패러다임이 그것이다.

② 통일교육의 현실화에 있어서는 교육기능을 획일적 권위주의 체제 중앙 중심적 체제에서 탈중심화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학습 팀과 수업모형 교육중심의 공론화로 자기문제로 인식시켜 통일에 대한 대비와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③ 첨단화에 있어서는 교육시설에 있어서 정보화와 멀티 미디어화 해야 한다. 여기에다 통일 정보 은행을 운영하여 누구라도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고 노하우를 쌓아 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낙후된 정보화를 지원하여 이질화된 정보화 세대와 북한의 이념 세대간의 사회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보화 통일국가 미래상 건설과 밀접하다.

④ 국제화는 세계인과 밀접하다. 통일국가가 된 후에 달라진 세계질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외교적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모든 것들이 국내외 상황과 열강들의 국제적 구도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교육이 여기에 복무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21세기 통일국가의 형태로 모아지게 교육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 제 VI 장 결 론

우리는 21세기를 앞두고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민족통일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두 가지가 따로 분리 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통일후 체제를 그려볼 때 통일국가는 정보화 사회 이어야 한다.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사람들이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다. 이미 남한은 세계 22위<sup>39)</sup>의 정보화 사회를 이루었고 젊은 세대들은 정보화 세대라는 사회 문화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과 많은 사회 문화적 이질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기성세대의 사회 문화적 공감대와 당위성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미래국가의 비전과 정보화 세대에 맞는 통일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그들이 통일 과정에서 일정역할을 사회 문화적으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루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의 정보화와 병행해야 하는 문제다. 남한만 정보화 사회이어서는 미래에 민족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통일교육의 전개방향, 3T 체제의 3S 체제화, 수업모형과 학습조직, 내용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종합적인 측면 등을 살펴보았다.

통일교육이 통제와 주입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산업사회에나 적용된다. 통일후의 국가는 지금 정보화 세대의 몫이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으나 방법상에서 문제가 될 뿐이다. 정보화 사회에는 네트워크가 개방을 파고든다. 이제 통일후의 국가에 적용시키는 통일교육이어야 한다. 통일 정보화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형이 통일교육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인간형이자 목표이다.

---

39) 중앙일보 1997. 10. 25.

## 참고문헌

- 권이종(외), 『청소년교육론』 (서울: 양서원), 1997.
- 김자, “헌법가치 실현으로서의 통일교육의 한계” 『사회와 윤리』 제21집, 한국사회과 고등학교, 1995.
- 김신일, 『한국 청소년 문화의 의미와 성격』, 서울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 김의철, “한국 청소년의 가치체계” 『한국청소년문화-심리 사회적 형성요인』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97.
- 김영자, “청소년의 안보 의식을 생각한다” 『교육월보』 1997년 9월호.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통일』 1998년. 4월호. 통권 199호.
- 박성희, “청소년의 통일의식 구조 조사 연구” 『교육월보』 1995년 6월호.
- 박복선, “자기 언어로 통일 만들기”, 『우리교육』 1997년 6월호.
- 안 해룡, “스스로 군사문화 온몸으로 거부한다.” 길, 1998년 7월호.
- 앨빈 토플러, 『권력이동』 이근행 역(驛).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1992.
- 윤기영. 이미숙, “학교 통일교육 지침에 입각한 유치원의 통일교육 구현에 관한 방향”, 『교육연구』 제14집. 1995.
- 윤은기, 『정보학 특강』, 서울: 김영사, 1988.
- 외대진보시대개척단, “신세대, 신세대 운동의 가능성을 위하여” 『신세대론-그 혼돈과 질서』 서울 : 현실문화연구회 1994.
- 이옥화, “하이퍼 미디어교육-정보통신이 청소년교육에 미치는 영향 ” 『전자통신 연구원』 통권 145호 1998년 6월호.
- 이상헌, “신선한 문제제기” 『우리교육』 중등판 1997년. 6월호
- 전효관, “남북한 사회 문화적 통합과 시민단체의 역할”, 『남북예술』 통권 36호 1998년 7월.
- 정호범, “통일지향의 시민양성을 위한 한국사회과 연구의 방향” 『사회교과



연구』 창간호 한국교원대 사회과교육연구회, 1994.

최인화, “학교통일 교육현황 진단과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방안” 『통일문제 연구』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8년 상반기호 통권 29호.

통일원,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1994.

통일원, 『통일기본교육방안』 1995.

통일 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1997』 통일원 1996.12

황기숙, “중학교 도덕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5.

교육부, 『통일교육지도 자료』 1985.

삼성복지재단,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1994.

한림과학원(편),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소화출판사 1997)

한국 사회학회(편), 『한국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 1994.

한국 외교사학회, 〈청소년 의식조사〉 1997. 5.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사회인식 및 실태조사 1997.

한국청소년연구원, 『현대 사회와 청소년 문화론』 1992.

경향신문, 1993. 12. 20.

동아일보, 1993. 9. 12.

전자신문, 1998. 4. 8

중앙일보, 1994. 5. 26.

중앙일보, 1997. 10. 25.

한겨레신문, 1997. 10. 9.

한국대학신문, 1997. 10. 13.

한국대학신문, 1997. 12. 1.

한국전파신문, 1998. 7. 6.



# 통일한국의 국가능력 강화를 위한 정당성 확보 및 바람직한 통일의 모색



성명: 김 선 남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 목 차 〉

- I. 서 론
- II. 정당성의 확보와 국가능력간의 상관관계
- III. 가상 사례 연구 - 북한에 있는 혁명열사의 묘 처리문제
- IV. 통일한국의 국가능력 강화방안과 바람직한 통일의 모색  
- 성숙된 시민사회를 토대로
- V. 결 론



## 제 I 장 서 론

바람직한 한국사회의 미래상을 조망하고자 할 때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남북통일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문제는 단일민족으로서 당연하게 이루어내야할 민족적 과업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남북통일은 그것의 성사여부 또는 결과물에 따라 향후 한반도의 '발전' 혹은 '퇴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일대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은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과 결부시켜, 통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손익관계를 따져가면서 추진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다. 혹자는 통일을 이루게 되면 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으며 ②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고 ③ 통일을 이룸에 따라 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날 수 있으며 ④ 분단비용을 줄여 국가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위와 같은 통일에 대한 기대는 남북한이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경우에만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통일이 되면 기존에 존재했던 분단모순은 사라지겠지만 통일의 부산물로 계급갈등, 지역갈등, 지배엘리트와 다수의 대중간의 갈등 등이 중첩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 이러한 갈등들을 현명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통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을 가져다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다차원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sup>2)</sup>

1) 1998년 8월 15일 KBS저녁 9시 뉴스 방영분.

2) 갈등의 해결(解決 resolve)과 해소(解消 dissolve)는 그 차원이 다르다. 통일이 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의 표출은 너무나 자연스런 현상이다. 따라서 통일이후 정치체의 관심은 통일이후의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순덩어리들(갈등)을 어떻게 잘 '다무어' 합의의 영역을 구축해내느냐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다차원적인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의 표출을

통일과정 또는 통일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 통일국가의 강한 국가능력일 것이다. 국가능력(state capacity)이란 국가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능적, 조직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총체적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강한 국가능력을 가진 국가는 통일이후 발생할 사회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통일국가가 강한 국가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해내야 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성 확보는 국가에게 힘을 제공해줄뿐더러 국민들에게는 통합의 이데올로기를 선사할 수 있다. 만약 통일한국이 정당성확보에 실패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심해질 것이며, 남북간의 사회통합에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 '어떻게' 통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룰 것이냐의 문제는 다른 어떤 연구과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 국가능력의 강화를 위한 정당성의 확보 및 그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을 모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필자는 그를 위해 통일이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혁명열사의 묘지 처리문제를 상정해보고자 한다. '통일한국에서 북한의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북한에 존재하는 혁명열사의 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혁명열사의 묘를 그냥 둘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가 또는 변형시킬 것인가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통일의 모습과 그것을 통한 사회통합의 문제 그리고 국가능력의 강화를 위한

---

인위적으로 '해소'시키려 한다면 통일이후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후술하겠지만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조화'란, 남북한에 존재하는 다차원의 갈등들이 - 통일이후 마련된 일관된 틀 속에서 -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합의의 영역을 구축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성 확보 및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모습을 추출해낼 수 있다.

물론 본 논문의 의도하는 바가 전술한 바와 같지만, 필자는 사례연구와 정당성 확보의 문제를 통해 분단관리에서부터 시작해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통일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냐를 연역적으로 추출해 보고자 한다.

한편 사례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필자는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 동독 주민들의 정체성의 위기 문제를 살펴볼 것이며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사회통합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독일과 미국의 사례는 각각 우리의 현실과 대비시켜 본다면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차이점이 던져주는 제한 속에서도 두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교훈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필자는 또한 본론 부분에서 정당성 확보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에 대한 모색을 시작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의 통일에 관해서는 한국적인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현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밝힐 것이며 지금까지의 통일 논의에서의 문제점 역시 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진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며 이러한 '진보'는 통일과정에서 남북한간 '조화'를 바탕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논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가 능력과 관련하여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할 것이다.

## 제 II 장 정당성의 확보와 국가능력간의 상관관계

국가능력(state capacity)은 “국가가 국가공동체 구성원들간에 합의된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자율적으로 정책이나 국가활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기능적, 조직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총체적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3)</sup>

김석준(1991)은 국가는 국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집약한 위에서 이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를 전제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은 유능한 국가의 목표설정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합의에 의해 설정된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은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을 거쳐야 하며 국가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요구되는 적절한 정책망들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국가의 능력강화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각종 사회정책망과의 ‘합법적-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우선적으로 사회내 존재하는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강한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강한 국가란 권위주의 체제나 전체주의 체제의 경성국가가 억압과 통제를 통해 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sup>5)</sup> 과거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볼 때 남한에

3) 김석준, 1991, “국가론연구의 경향변천과 국가능력개념의 전개”, 강민 외 공저, 「국가와 공공정책-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서울: 법문사, 66쪽.

4) 김석준, 1991, 같은 책, 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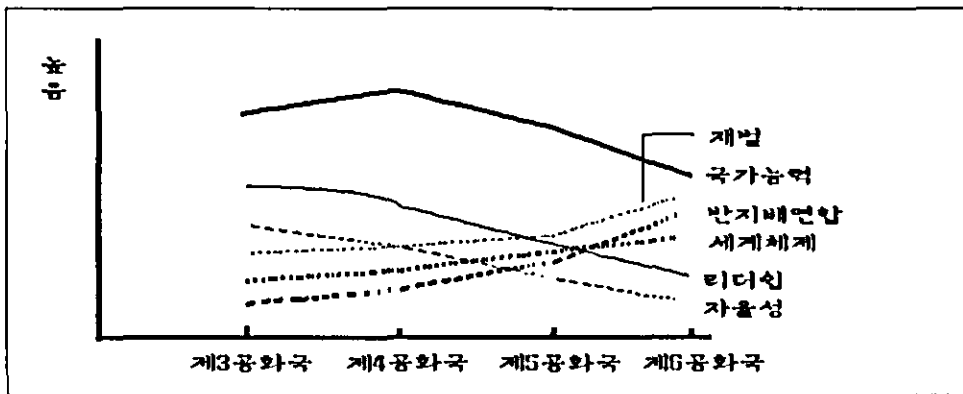
5) 한편 국가강도와 국가경도에 따른 국가성격의 규정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국가와 사회를 분석틀로 사용하는 국가강도에 따른 구분으로는 강성국가(Strong State)와 약성국가(Weak State)가 있다. 강성국가란 사회내 국가의 침투력이 뛰어나서 국가의 힘이 강한 국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중심부 국가를 지칭한다. 반면 약성국가는 사회내 국가 이외의 다른 주도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의 힘이 약하며



서는 권위주의 체제가 북한에서는 전체주의 체제가 존재해왔다. 그러나 권위주의나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는 적절치 않다. 통일한국은 억압과 통제에 의해 사회혼란을 수습해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합리적인 정책과 그것의 실현을 통해 민주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인 통일한국은 강한 국가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권위주의 체제나 전체주의 체제가 반드시 국가의 힘이 강한 강성국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표-1>은 제3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 권위주의 체제를 지속해온 남한의 경우 국가능력은 점차적으로 떨어져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1> 제 3공화국 이후 남한에서의 국가능력의 변화



자료 : 이지영, 1995, "한국의 산업화와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대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91쪽.

주변부 국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국가기구 자체의 성격(국가 경도)을 토대로 구분하면 경성국가(Hard State)와 연성국가(Soft State)로 나뉘는데, 경성국가란 국가기구가 경직적이고 억압적인 권위주의 체제 국가를 의미하며, 연성국가란 국가기구가 민주적이고 유연한 민주주의 체제 국가를 의미한다. 이밖에 국가자율성, 국가능력, 국가강도, 국가경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손호철, 1991, "국가자율성·능력·강도·경도",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125-156쪽을 참조할 것

통일한국이 민주주의 체제여야 한다는 것은 전 한반도 주민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즉 통일한국은 연성국가이면서 강성국가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은 어떻게 민주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강한 국가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까?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전술했지만 국가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합의, 합리적 정책대안의 결정, 제도화 수준의 향상 등의 세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과정에서 통일의 정당성을 확보해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일 테다.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는 국가권력에 정체성을 부여해주며 그들의 정책을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또한 통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는 이질화되었던 두 사회의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정당성의 확보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마련해야 할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연구를 해볼까 한다. 그것은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북한에 있는 혁명열사의 묘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혁명열사의 묘지는 남한의 국립묘지와 그 위상이 같다. 남한의 국립묘지가 남한의 과거를 말해주듯 북한의 혁명열사의 묘지도 마찬가지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통일이후 북한의 과거청산문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성의 확보와 남북한간 주민들의 통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본인은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준비해보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통일의 정당성 확보 문제를 고려할 것이며 나아가 사회통합의 차원까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이러한 작업이 반드시 통일한국의 국가능력의 강화방안에 대한 건실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 제 III 장 가상 사례 연구 - 북한에 있는 혁명열사의 묘 처리문제

## 7. 전제조건

본 논문에서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북한지역에 존재하는 혁명열사의 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전제조건을 설정한다.

- ① 남북한의 통일은 하나의 국가체제 속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② 통일은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sup>6)</sup>
- ③ 이러한 1국가 1체제의 통일은 남한주도로 이루어진다.
- ④ 1국가 1체제를 완성하는 통일과정의 완료는 통일에 관한 남북한의 합의후 적어도 15년 이상의 장기적인 통합과정을 거친다.
- ⑤ 완성된 통일국가의 정치체제는 '한국적' 자유민주주의이며 경제체제는 '한국적' 자본주의다.<sup>7)</sup>

---

6) 통일과 관련하여 효율성 문제를 따지볼 때, 반드시 남북한의 합의가 존재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는 순직히 어렵고 심각한 문제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통일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의 차원에서 별로 성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통일이란 통일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논의로 환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뒷부분인 8. 혁명열사의 묘지 처리문제에 관한 대안의 모색 부분에서 후술하겠다.

7) 여기서 '한국적'이라는 의미는 서구 - 특히 미국식 모델을 기초로 한 - 의 체제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변형시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통일한국의 미래상이 서구의 사조와 동양적 전통을 합리적으로 재수용하여 '자기정체성'을 확보한 체제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 ㄴ. 가상 사례연구의 목적

독일이나 베트남, 예멘의 통일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질적인 두 사회를 통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통일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는 통일국가의 국가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이든, 전쟁에 의한 통일이든, 합의에 의한 대등한 통일이든 간에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독일의 경우 서독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분단을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유지의 필수요건으로 간주하여 동서독 관계의 현상유지를 대동독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러나 1989년 11월 27일 동독의 반정부시위가 일어나는 등 동독에서의 체제 저항이 심해지면서, 통일에 대한 독일인들의 기대감이 증가하였고, 구 소련의 개혁정책의 발전전망이 점점 불확실해지자 서독정부는 기존의 현상유지정책을 조기통일정책으로 바꾸었다.<sup>8)</sup> 이 과정에서 서독정부는 동서독의 통합을 위해 그리고 서독정부의 능력강화를 위해 서독주민들에게는 민족적 역량으로 통일을 이루어냈다는 긍지를 심어주었고 동독인들에게는 통일후 서독인들처럼 물질적 풍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서독정부는 이를 위해 "우리는 한 국민이다" (Wir sind ein Volk)라는 구호를 외쳤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이러한 정당성의 확보는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강한 원동력이 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통일 베트남 정부는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가치관을 통일 이후 남베트남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정당화를 획득해 전베트남 사회의 가치통합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통일베트남 정부는 남부지역에 사회주의 이념을 주입하기 위해 남부의 다원적 사회구조의 개조,

---

8) 황병덕, 1996, 「동서독간 정치통합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31-32쪽

국제주의의 민족주의화, 그리고 이기적 개인주의의 제거와 종교기능의 억제 등을 추진하였다.9) 한편 통일베트남 정부는 1980년 헌법에서 남부의 지주와 자본가 계급을 제거하여 노동자와 농민이 주도하는 단원적 사회 체제를 이룰 것을 밝혔으며 1930년대 이후 베트남 공산당의 투쟁역사를 베트남 민족의 정당한 역사의 산물로 인정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화를 모색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이러한 정당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적 통제와 억압으로 대처하였기 때문에 남북간의 사회통합을 이루는데는 실패하였다.10)

예멘의 경우 남예멘에 대한 소련의 개입이 철회되고, 남북예멘에 대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간섭이 배제됨에 따라 통일협상구도가 다자적 관계에서 쌍무적 관계로 변화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남북예멘 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다. 한편 남북예멘 국경지역에서의 석유의 발견은 예멘인들에게 통일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해주었다. 이에 따라 통일예멘은 통일국가로 석유생산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외세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국민통합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도 성취할 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특히 예멘의 경우 외세에 의해 분단이 되었고 남북이 서로 이질적인 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주민들이 단일민족으로서 공동체의식을 깊게 공유하고 있었기11) 때문에 통일정부의 이러한 구호는 강력한 힘

9) 김국신, 김도태, 여인곤, 황병덕 공저, 1994,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베트남 편 - 김도태', 서울: 한울 아카데미, 99쪽,

10) 김도태(1994)는 베트남 통일정부가 권위회득을 위해 통치이념으로써의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화를 시도하였지만 ① 통치이념의 경직성으로 인해 체제 정당성의 위기가 발생하였고, ② 정치중원의 제한성에서 오는 엘리트와 대중사이의 괴리심화현상이 일어났으며, ③ 관료들의 무능력과 무경험에서 파생되는 관료주의의 확산과 심화과정이 존재했고, ④ 정치지도자들이 전쟁을 통해 획득한 권력의 정당성을 통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리 함으로써 통일정부가 통일 후의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⑤ 경제체제 개혁의 내용과 개혁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시간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플레이, 실업문제, 부패와 부조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베트남 통일이 실질적인 사회통합에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국신 외, 1994,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II」, '베트남편 - 김도태', 서울: 도서출판 한울, 115-123쪽.

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도 통일과정이나 통일후 나타날 수 있는 이질감의 심화나 남북한간 불평등구조의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통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처럼 서독의 정체성이 그대로 독일의 정체성으로 대체되어<sup>11)</sup> 동독인들에게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었던 전례를 남북한이 되풀이한다든가, 베트남의 경우처럼 억압과 강제를 통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남베트남에 주입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남북한에서도 그대로 복제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정당성의 확보는 단순히 남한의 체제를 북한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통일과정에서 생성된 정당성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북한에 강제로 주입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도 안될 것이다. 통일의 정당성은 남북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틀 안에서 생성되어야 할 것이며 정당성의 확보는 서로의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 존재하는 혁명열사의 묘지에 관한 처리문제를 상징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필자가 제시한 통일의 전제조건에 따라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상정했을 경우 통일의 정당성은 단일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새로운 차원에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이후의 국가체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 통일은 과거 북한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인함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북한 주민들은 구체제와 새로운

---

11) 김국신, 김도태, 여인관, 황병덕 공저, 1994,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에덴판-김국신', 서울: 한울아카데미, 190쪽

12) 황병덕, 1994, 12쪽

체제 사이에서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것이며 통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북한주민들은 새로운 체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북한주민들이 겪게 될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남북간의 사회통합은 매우 어렵게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북한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이념적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문제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여 북한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통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통일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생성과 관련하여 필자가 논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북한내에 존재하고 있는 혁명열사의 묘지 처리문제이다. 혁명열사의 묘지는 북한체제의 상징이다. 따라서 혁명열사의 묘지 처리방안에 따라 떠오를 수 있는 몇 가지 논리들을 추적해 본다는 것은 통일과정에서 떠오를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관한 탐구와 직결된다. 만약 묘지의 처리문제와 관련해 남북한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이데올로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찾아보기 위해 독일의 통일과 미국의 남북전쟁에 관한 사례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사례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각각 다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은 현재와 미래에 소중한 교훈을 남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미국의 사례는 한반도의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입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필자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통일과정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살필 것이며 그것이 사회통합에 어떤 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밝힐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일과정에서 개발된 이데올로기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나, 그러한 이데올로기들이 실제로 통

일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사용되었는가에 있다. 따라서 필자는 위와 같은 점들을 엄두에 두고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외국의 사례가 우리의 현실에 정확히 들어맞을 수는 없다. 우리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되 통일에 필요한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이념적 틀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서 찾고자 한다. 필자는 외국의 사례와 우리의 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남북한 사회통합과 관련된 매우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이데올로기를 개발해 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ㄷ. 독일의 사례 - 동독 주민들의 정체성 위기문제

독일은 40여년에 걸친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1990년 마침내 통일을 달성하였다. 독일의 통일은 1989년 5월 동독지방선거 부정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항의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 10월 3일 동독 5개주가 서독연방에 가입함으로써 1년 5개월의 짧은 기간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은 서독에 의한 급격한 흡수통일의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열위체제'였던 동독주민들의 정체성의 위기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다. 통일독일 정부는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다원화된 정치질서와 새로운 자유시장 질서에 대한 적응압력이 동독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과 함께 구서독인에 대한 반감까지 생성되고 있어 동서독간 이질성의 극복은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이다. 동독주민들은 자신들을 2등 시민으로 여기고 정치적 소외감을 느끼는 등 지금까지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있으며 심지어는 통일자체를 거부하는 시민들도 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3)</sup>

전술했다시피 통독정부는 서독주민들에게는 민족적 역량으로 통일을 이



무어냈다는 긍지를 심어주었고 동독인들에게는 통일후 서독인들처럼 물질적 풍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었다. 그러나 통일후 동독에서는 실업자가 증대하고 물가가 상승해 실질 구매력이 감소되는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통일전 동독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물질적 풍요를 향유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은 급속하게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서독에 의해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통합과정만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다.<sup>14)</sup> 서독이 발전시켜온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die soziale Marktwirtschaft)는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대폭 개량시킨 것으로, 흡수통일 방식에 의거하기는 했지만 이에 병합된 동독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회통합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sup>15)</sup> 이런 결과로 최근 들어 동독의 경제도 상승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보고가 있다.<sup>16)</sup>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독일의 통일이 서독에 의해 '준비된' 통일이었기 때문에 5년여의 기간을 거쳐 동독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동독주민들의 정체성의 혼란과 그로 인한 심리적

13) 황병덕, 1995,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33쪽

14) 따라서 독일통일의 사례의 문제집 중 급격한 통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고 단순하게 비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15) 장경섭, 1995, "통일한민족국가의 사회통합-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준비된' 통일", 박기덕, 이종석 편,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서울: 세종연구소, 449-451쪽

16) 1996년 당시 독일의 경제는 상승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있다. 9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던 동독은 94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재무장관 텍스토프트는 "독일 경제는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했다"고 선언하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동독의 생산성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독의 생산성은 96년 현재 서독의 45%선까지 올라왔으며 성장률은 9%에 이르고 있다. 한편 동독주민의 소득수준도 상승하여 원 3,000마르크 이하의 소득 가구수가 91년 75%였던 것이 94년에는 30%로 줄어들었다. 동독의 경제가 이렇게 호진되고 있는 이유는 특히 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공업 등의 제조업과 무역을 주력업종으로 삼아 예상보다 빨리 자유시장 경제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상기, 1997, 「라인에서 엘베까지-통일독일의 문화와 사회」, 서울: 청록출판사, 17-18쪽.

열등감 내지는 사회적 혼란의 문제까지 '준비된' 통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다. 장경섭(1995)에 의하면, 문제는 통일과정에 있어 동독인들의 정치적 의사나 경제적 잠재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는 비록 서독의 경제체제가 동독의 그것에 비해 월등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동독인들은 자신의 경제체제하에서 나름대로의 생산적 기능과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적절한 경제개혁을 함으로써 그 기능과 잠재력을 통일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7)</sup>

독일의 통일은 서독의 정체성을 동독에 그대로 이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동독에 존재했던 구체제는 모두 부정되었고 자유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전체주의 체제의 과거청산이 진행되었다. 한편 구체제의 부정은 이미 독일 주민들의 저항에서 표출된 바 있고<sup>18)</sup> 독일 주민들이 서독의 체제에 흡수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경제적 안정만 보장된다면 독일의 통일에 따르는 부작용도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통일이후 8년여의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동서독 주민간에는 일체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제 경제지표는 안정적으로 돌아섰고 통일정부는 꾸준한 정치교육을 통해 동서독간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서독간 존재하는 심리적 장벽은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찌면 이러한 심리적 장벽은 배틀린 장벽이 무너졌던

---

17) 장경섭, 1995, 451쪽.

18) 이미 동독에서는 체제 저항적인 단체들이 통일 전에 생성되어 있었다. 물론 동독의 경우 다른 동구권 국가들에 비해 반정부적 시민운동이 미약하였다. 그러나 동독 개신교, 「노이에스포럼」(Neues Forum), 「데모크라티 에츠틀」(Demokratie jetzt), 「민주주의 분출」(Demokratischer Aufbruch)로 불리는 시민단체들이 설립되어 동독체제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황병덕, 1996, 24-27쪽을 참조하라.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요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동서독주민간의 심리적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 이유를 '통일과정에서의 동독에 대한 완전한 부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동독주민들이 자신들의 체제에 대해 불만을 느끼면서 그 대안으로 서독과의 통합을 원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독위주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정면부인과 직결된다는 것을 과연 동독주민들이 알고 있었을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그들은 통일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점 -예를 들어 경제적 빈곤에서의 해방이나 인간다운 삶의 보장 등 - 이 해결될 것으로만 생각했지 통일이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전체적인 부정이 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통일이 되었을 때 동독주민들은 물질적 풍요를 이루지 못한 것에서부터 불만족을 느낀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단절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한 불안감에서부터 자기 정체성의 위기를 심각하게 느꼈던 것이다.<sup>19)</sup>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동서독 주민간에는 심리적인 일체감이 형성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서독의 경우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 동독과의 통합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정치적 의사나 경제적 잠재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장경섭, 1995) 결과적으로는 더욱 나쁜 결과를 낳았다. 즉 동독주민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해체·합병시킨 서독의 경제체제하에서 제대로 준비와 적응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거의 예외없이 쓸모 없는 인력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정리하면 독일 통일시 생성되었던 통일에 대한 긍지나 물질적 풍요에 대한 기대 등은 통일을 이루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

---

19) 황병덕(1994)에 의하면 실제로 동독직장인들 중 다수는 자기일과의 상당부분을 새로 도입된 제도를 숙지하는 데 보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국신 외, 1994,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I」, 「사회·교육·환경분야 -황병덕 편」, 서울: 한울 아카데미, 141쪽

나 그것은 '속'을 들여다보지 못한 형식적인 이데올로기에 그치고 말았다. 실제로 사회통합에 필요한 입체적인 이데올로기가 생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은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한반도에 적용시켜보자. 우선 한반도와 독일의 차이점을 찾아보면 독일의 분단경험에는 전쟁이라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분단이후에도 동서독간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진행되었다. 또한 통일전 동독에서는 체제붕괴가 이루어졌으며 동독주민들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불신과 증오의 골이 더욱 깊어졌으며, 분단이후 실질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고, 통일 분위기가 조성된다하더라도 북한주민들의 조직적인 체제저항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는 선택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독일 통일과 우리의 사례에 공통분모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체제에 의해 사회주의 체제가 흡수통합되었다는 점, '2+4' 회담이 상징하듯 주변국가의 상황변화에 따라 통일의 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 40여 년이 넘는 분단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간 이질화의 정도가 심하다는 점,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 등은 우리의 통일과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공통분모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위주로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체제에 대한 정면부인은 남북한 통합에 있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의 경우 통일과정과 통일이후 북한주민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개발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따라 통합을 위해 장기간의 통일준비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몸은 하나이되 정신은 둘인' 비정상적인 체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ㄹ. 미국의 사례 - 남북전쟁이후 남부와 북부의 화해 문제

미국은 독립이후 200여 년의 기간동안 형식적으로는 한번도 분열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미국은 실질적으로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1820년의 유명한 미주리 타협 이후 북부의 자유주와 남부의 노예주로 분리되어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1930년 이후 노예제도에 대한 찬반론은 실질적으로 미국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하였으며 결국 남부의 7개 주는 1861년 2월 8일 남부동맹(Confederate States of America)을 결성하여 기존의 연방을 탈퇴하였고 그해 4월 섬터 요새에서의 총성을 시작으로 남북전쟁이 발발하였다.

남북전쟁의 초기에는 남부가 우세하였다. 그러나 물질적인 자원 면에서 남부는 북부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북부는 2,200만 인구를 갖는 23개 주로 이루어져 있었고 남부는 900만의 인구를 이루어진 11개의 주에 불과했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북부가 우세하여 무기와 탄약, 의류 및 그 밖의 보급품을 제조할 수 있는 풍부한 시설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결과로 북부군은 앤티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해서는 ① 전쟁의 결과 연방이 유지되었고, ②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으며, ③ 공업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고, ④ 서부 개척의 활력소가 제공되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sup>20)</sup> 그러나 전쟁을 통한 분열의 인위적 종식은 두 지역에 상흔을 남기게 된다. 실제로 전쟁이후 링컨을 위시한 북부의 일부 정치인들은 화합과 재건을 강조하였지만 많은 수의 북부인들은 노예제를 옹호하고 연방을 탈퇴했던 남부인들을 사악한 존재로 보았으며 전쟁의 승리는 바로 그들의 도덕적인 의로움을 증명하

---

20) 이구한, 1993, 「이야기 미국사」, 서울: 청아출판사, 231쪽

는 것으로 보았다. 일례로 전쟁이 끝난 해 현충일 날 알링톤 국립묘지에는 북군의 복장을 한 근위병으로 에워싸여 있었고 남군의 전사자들의 묘지에는 헌화를 할 수 없게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sup>21)</sup>

그러나 남부인들은 다른 감정을 갖고 있었다. 전쟁전 남부인들은 북부에 대해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북부인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인들의 생활양식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노예제 해방으로 인한 흑인들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며 심지어 흑백결혼이 강요될 것이라는 등의 선전을 통해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었다.<sup>22)</sup> 한편 북부인들이 남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부의 백인들은 더욱더 북부로부터의 독립을 원했던 것이다. 전쟁결과 남부인들은 전쟁에는 패배했지만 그것은 물질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패배일 뿐 남부의 정신과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몰락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관계로 전후 남부인들은 점점 더 북부인들에 대해 증오의 감정을 키워갔다.

이렇듯 전쟁의 상처는 남부와 북부에 모두 깊게 존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깊은 분열의 늪 앞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였다. 링컨 대통령은 전후 남부와 북부의 화합에 관해 온건하고 관대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남부의 주들을 미합중국으로 재편입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링컨이 암살된 이후 대통령이 되었던 존슨은 과거의 남부배척적인 성향을 버리고 링컨의 노선을 따라 계속적으로 화합정책을 추진하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북부의 급진적 정치인들의 정치적 공작에 의해 탄핵을 받을 위기에까지 몰렸지만 존슨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미합중국의 화합과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다.

필자는 미국의 남북전쟁의 사례에서 링컨과 존슨 그리고 그랜트 장군의

---

21) 최웅, 김봉중, 1997, 「한국인이면 꼭 깊어야 할-미국의 역사」, 서울 : 소나무, 169쪽.

22) 케네스 C. 데이비스, 1992,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미국의 역사」, 진병호 편역, 서울 : 고려원미디어, 218쪽.

화합과 재건의 논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후 미국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었고 전쟁을 통한 갈등의 인위적 해소는 더욱 심한 감정의 대립을 낳았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남부와 북부가 하나의 합중국안에 속해있다는 논리는 남북전쟁이후 미국에서의 급속한 산업화 및 연방정부의 강화를 이루게하는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링컨이 1861년 대통령에 취임할 때 남부의 7개주는 연방으로부터 분리를 선언한 상태였다. 한편 남부연합의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는 남부군대의 소집을 명했고, 그 군대는 연방무기고와 요새로부터 탈취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링컨은 연방으로부터 탈퇴한 남부주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웠다.

“하나이며 전체인 국민여러분, 이 문제 전체에 대해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란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본인의 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공격자가 되지 않는다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는 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연방의 합창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sup>23)</sup>

링컨은 남부의 연방이탈에 대해 그것을 반란이라고 규정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국가내부에서 체제 저항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국가존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반란으로 규정짓는다. 또한 관련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무력으로 응징해야 할 대상이 된다. 링컨이 제1차 취임연설을 할 당시에도 북부의 급진세력들은

---

23) 미국사연구회 편, 1992, 「미국역사의 기본사료」, 서울: 소나무, 129-132쪽.

남부를 적으로 규정짓고 남부를 초토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링컨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남부를 적으로 규정지어 북부주민들을 선동하기보다는 연방의 결속과 미합중국의 하나됨을 강조해 사태를 온건하게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직접, 간접으로 현재의 반란에 가담하였던 모든 이들에게 모든 재산권의 회복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사면이 베풀어질 것을 포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나는...다음의 내용을 선포, 천명하여 알린다. 아칸소,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테네시, 앨라배마, 조지아,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느 주에서든 소위 탈퇴 법안이 제정되기 이전의 선거법에 의해 자격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유권자로서, 위에 언급한 선서를 하고 이후 그것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효가 1860 대통령 선거시 그 주에서 행사된 투표수의 1/10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에 의해서 그 외의 사람들을 배제한 주 정부가 다시금 설립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주 정부는 공화정 체제여야 하고.....”<sup>24)</sup>

위의 내용은 링컨이 남북전쟁이 끝난 후 재건계획을 발표한 내용 중의 일부이다. 링컨은 반란자들에게 즉시 사면을 포고함으로써 남과 북이 힘을 합해 미합중국을 다시 재건할 것을 외치고 있다. 링컨의 이와 같은 발표는 공식적 이데올로기로서 남과 북을 다시 화합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맙시다..... 전능하신 분은 그 자신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보게 하듯이 아무에게도 적의를 갖지 말고 모두에게 자선의 마음으로, 의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처해있는 일을 끝내도록 노력합시다. 이 나라의 상처를 싸매도록 온 힘

---

24) 미국사연구회편, 1992, 139-142쪽.



을 다합시다. 전투에서 쓰러진 사람과 그의 미망인과 그의 고아들을 돌보도록 애씁시다. 정의와 영원한 평화를 성취하고 소중히 간직할 모든 것들이 우리들 사이에서,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 함께 하도록 전력을 다합시다.”<sup>25)</sup>

위의 내용은 링컨이 두 번째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연설했던 내용의 일부다. 링컨은 이 연설에서 전쟁이 초래한 문제점들을 냉정하게 반성하고 미국 연방이 평화와 형제애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다시금 통일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취임연설후 3주가 지난 1865년 4월 13일 암살을 당했지만 암살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기에 이른다. 링컨이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그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연방을 수호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는 통합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남북전쟁이후 미국에 존재했던 화합의 이데올로기를 잘 반영해주는 사례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남북전쟁을 통해 남부의 영웅으로 탄생했던 로버트 E. 리 장군과 관련된 일화이다. 리 장군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를 대표했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그러한 그가 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을 했을 때 반란자들의 상징인 리 장군은 처벌받지 않았다. 리가 그랜트에게 항복선언을 했을 때 그랜트는 그를 처벌하지 않았으며 즉시 석방하였다. 한편 그랜트는 리의 항복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반란군들은 이제 다시 우리나라의 사람으로 돌아왔다”고 말하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건을 통해 패장이었던 리 장군은 그의 찬란한 영도력과 위대한 패배를 통해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그랜트 장군의 태도이다. 그랜트는 남부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25) 미국사연구회 편, 1992, 143-145쪽.

“남부연합의 장교 및 병사들은 항복선서를 한 후 바로 석방한다. 무기와 자재는 북군에게 인계한다. 장교는 허리에 차고 있는 무기를 그대로 휴대해도 좋다. 말을 필요로 하는 병사들은 말을 가져가도 좋다”<sup>26)</sup>

그랜트는 패배한 남부의 군인들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부르면서 그들을 즉시 석방하였으며 굶주린 그들을 위해 식량을 나누어주는 관대함을 보였다. 그랜트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전쟁을 통해 생성된 남부와 북부사이의 깊은 감정의 골을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전후 남부와 북부의 화합에 커다란 기여를 했던 것임에 틀림없다.

한편 링컨의 뒤를 물려받은 존슨은 평소에 남부를 가리켜 “씩을대로 씹어 위협스럽기 짝이 없는 귀족정치 집단”이라고 공격을 퍼붓곤 하였으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링컨의 ‘재편입’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존슨은 대통령의 공포문을 통해 이탈했던 각 주에 대해 주지사를 임명하였고 1865년 5월에는 반란자들에 대한 대사면령을 공포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을 사면하였으며 노예제도의 폐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3조를 인준하는 등 링컨의 재건 정책을 그대로 수행하였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북부와 남부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노예문제로 인해 발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남과 북사이에 존재했던 다차원적인 갈등의 대립으로 인해 발발한 것이다. 전술하였지만 남부인들은 남부가 정치·산업·은행·제조업 등에서 북부의 힘에 밀리고 있다는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북부인들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인들의 생활양식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노예제가 폐지되면 남부는 흑인 세상이 될 것이며 흑백결혼이 강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편 농작물 가격의 결정권을 북부인

---

26) 한편 그랜트는 굶주림에 찌든 리 장군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2만5천명 분의 식량을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이구한, 1993, 261쪽

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남부인들은 북부로부터의 독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의 축적과 폭발로 발생한 남북전쟁은 표면상으로는 북부의 승리와 함께 미합중국의 연방이 유지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그러나 전쟁은 남과 북을 서로 이질화 시켰다. 북부의 급진파들은 남부의 주를 점령지로 취급할 것을 요구했으며 남부연합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해야 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재산까지 몰수할 것을 주장하는 등 남부에 대해 강렬한 적대의식을 표출하였다. 한편 남부 주민들은 그들대로 전쟁의 패배를 합리화시키면서 북부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갔으며 노예제를 존속시키려고 하였고 북부의 공화당을 견제하기 위하여 민주당을 다시 강화시켰다. 한편 큐클릭스클랜(Ku Klux Klans)을 조직하여 흑인들에 대해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전쟁이후 더욱 증폭되는 남북부간 갈등은 링컨 등의 온건책으로 인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했던 링컨, 그랜트, 존슨 등의 확고한 이념은 수많은 미국 국민들을 감동시켰으며 반대파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의 새로운 화합을 이룩하게 하였다. 필자는 남북전쟁의 경험과 링컨 등이 외쳤던 '하나의 미합중국을 만들자'는 이데올로기는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연방제를 지탱하게 해주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서의 정부간섭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표-2>에서 정리해 보았다. 남북전쟁이후 미국에서는 -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진보'와 '보수' 간의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기는 하였지만 - 정부간섭주의가 점차로 강화되었고 연방정부는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각 주에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연방정부가 각 주 정부를 연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커다란 미국사회를 합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한

편 이러한 봉제의 힘은 미국 국민들을 미합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속에 결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갈등의 폭발이었던 남북전쟁의 경험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미합중국의 통합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반란을 일으켰던 남부에 대한 링컨, 그랜트, 존슨 등의 화합정책이었던 것이다.

〈표-2〉 미국에서의 정부간섭주의의 강화<sup>27)</sup>

개편년도	집권당	정부간섭주의의 강화 내용
1850년대	공화당	노예제 문제를 중심으로 휘그당과 민주당의 대립. 휘그당이 공화당으로 개편되면서 링컨이 당선됨. 공화당은 노예제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의 주에 대한 영향력을 늘리고 중앙정부가 경제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의 정책적 변화를 주도함.
1890년대	공화당	민주당 중심으로 대중주의 운동이 일어남. 그러나 공화당의 급진적 정부간섭주의의 우세함. 양대 정당 공히 중앙정부의 팽창정책 추진. 그러나 남부중심의 민주당이 농민의 지지는 획득하였으나 도시노동자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패배함. 그러나 대중주의 운동이후 민주당의 자유주의적 성향 강해짐.
1930년대	민주당	공화당은 하버트 후버대통령의 자유방임주의(정부개입 반대) 노선. 민주당은 루즈벨트의 적극적 정부개입의 입장. 뉴딜정책이후 도시지역의 노동자 계층을 흡수하면서 민주당의 강세.
1960년대	민주당	흑인들의 인권요구 거세지면서, 정부는 각종 인권에 관련된 입법 시행. 진보주의의 절정기. 흑인들의 지지를 민주당이 흡수함. 케네디와 존슨은 각종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면서 정부간섭주의의 확대 심화가 이루어짐.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이념대립문제로 1968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공화당의 닉슨이 승리함.

2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재욱 외, 「정당구조론」, 서울:나남, 1994, 165쪽~188쪽 박경산의 글을 참조함 것.

## ㉑. 한국의 현실 - 정체성 확보를 위한 동질감과 이질감에 대한 논의

통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북한을 연구하는 방법론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할 것이며<sup>28)</sup> 분단 50년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sup>29)</sup> 또한 통일과정 및 통일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며 통일과 관련하여 통일교육, 통일의식, 언론, 통일비용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통일이후 한반도의 미래상을 조망하기 위해 통일한국의 정치이념 및 가치통합, 통일과 관련된 국제관계의 문제, 정치구조와 정치통합, 경제구조와 경제통합, 사회·문화통합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통일한국의 가치통합의 문제이며 이것은 통일한국의 정당성 및 정체성 확보 문제와 직결되는 한편 사회문화통합과 긴밀한 상관관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통일과정에서 가치통합과 정당성 및 정체성의 확보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통일후 사회문화통합이 완성되었다는 판단을 내릴 시점이 되면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합은 이미 완성된 이후일 것이다. 왜냐하면 즉 통일의 제측면 중에서 사회문화통합이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문화통합에 필요한 가치통합의 문제나 이를 토대로 한 통

---

28) 최근 북한의 연구와 관련하여 방법론상의 논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소위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정인 교수는 북한 연구 방법론에 관련하여 외재적 접근과 내재적 접근을 절충하여 사용한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강정인, 1994, "북한 연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 26호, 318-342쪽 참조

29) 김동춘(1995)은 남북한의 분단이후 50년간 서로간의 이질화의 정도를 사회학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그는 시장, 국가 모델의 결합, 굴절과 그 굴절요소에 따라 사회주의 권과 자본주의권을 구별하면서 북한을 '주체형의 사회주의'로 남한을 '한국식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김동춘, 1995, "남북한 이질화의 사회학적 고찰", 역사문제연구소 편,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서울 : 역사비평사 136~139쪽.

일국가의 정당성 및 정체성의 확보의 문제는 통일논의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지속되어야 할 성질을 갖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논의는 정당성과 정체성을 확실히 확보해 가치통합을 이룬 통일한국이 정치, 경제의 차원에서 신속하게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 틀림없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한국의 현실에 있어 '자기 정체성'의 확보란 갈라졌던 두 사회의 현재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이질화된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동질감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시작되며 남북한이 어떤 지점에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에서 종료된다.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분단이후 남북한의 모습을 분석했던 논문들은 거의 대부분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이질성의 극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질성의 극복'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에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그간의 이질성 논의는 남한을 기준으로 북한이 남한과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통일준비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공산이 크다. 북한은 통일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통일의 주체이다.<sup>30)</sup> 이러한 시각에 동의한다면

---

30) 필자가 보기에 이 문제는 상당한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을 통일할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함께 통일을 이룰 주체로 보느냐의 문제에 대한 답은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통일방안에 따라 그 대답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통일을 기본조건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통일의 또 다른 한 주체로 보고자 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합의에 의한 통일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에 대한 전면적 부정은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남한에 의한 일방적 통일을 상정하더라도 북한을 단순히 흡수할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완성적 통일을 같이 만들어가는 주체로

45년 분단을 기점으로 변한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남한 역시 지난 50여년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이질성에 관한 논의는 이제 어느 한쪽을 주체로 정해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가를 찾는 것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이질성에 대한 강조는 자칫 통일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논리는 기왕에 갈라진 상태에서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왜 굳이 통일을 해야하느냐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일비용의 문제와 통일에 대한 불안감 등이 어우러져 이질성에 대한 강조는 오히려 통일논의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셋째,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이질성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을 무시한 남한에 의한 일방적 흡수통일을 강화하는 논리로 오용될 수 있다. 이질성의 강조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 해야만 할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이미 결판이 난 문제다. 그러나 설령 북한이 붕괴하여 남한이 북한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라도 북한을 무시한 독일과 같은 급격한 흡수통일은 통일 후 심각한 경제불안 및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기하학적인 통일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에 의한 일방적인 흡수통일은 수많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결국 이질성에 대한 이해 및 탐구는 통일준비과정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강조할 경우 기대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필자는 남북한의 이질성에 대한 논의는 동질성에 대한 강조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학계나 정부의 통일관련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동질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미흡했다. 그것은 아마도 남

---

상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북한이 단일민족이라는 커다란 동질성을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연구 의미를 덜 부여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이라는 것이 결국 민족의 동질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통일을 이룩하면 으레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계의 논의대로 남북한간 이질화의 정도가 심하다면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논의의 초점은 동질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동질감의 회복은 이질성에 대한 확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동질감의 회복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남북한간의 공통분모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통일은 '다름'에 대한 강조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됨의 완성'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통일은 원래 '하나'였던 것이 잠시 변질되어 이질화된 것을 다시 하나로 합쳐 '하나됨의 완성'을 이룩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제 통일논의는 남북한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동질적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동질적 요소를 찾아내는 과정은 우리의 '자기 정체성'에 관한 탐구와 맥이 닿는다. 만약 우리가 남북한간에 존재하고 있는 동질적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남북통일에 필요한 화합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보로부터 시작하여 통일의 정당성을 제공해줄 것이며 남북한간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놓아줄 것이다.

## Ⅱ.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적 덕성 - 새로운 '진보'

이제 필자는 미흡하지만 남북한간에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동질



적인 요소들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남북한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뉘어 존재했지만 기본적으로 동양사회다. 따라서 지난 50여 년간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는 아직도 동양적 특성이 강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필자는 통일에 필요한 새로운 이념적 틀을 동양의 사상에서 찾아보고자 한다.<sup>31)</sup>

이질적인 두 집단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서로간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존의 논리일 것이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복속되지 않으며 서로 평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통합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에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덕목이 바로 '공존'과 '조화'이다.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갈등의 크기를 줄이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서로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차원에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 - 본인은 이러한 모습을 '진보'라 칭하고자 한다 - 이라고 생각한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남한은 자본주의 사회로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하였다. 이것은 남북한이 유교적 전통의 봉건사회에서 서구의 사상을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서구화를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서구화와 관련지어 본다면 남한의 경우에는 맹목적으로 서구화를 추구해왔다. 이러한 맹목적인 서구화는 남한 사회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여 이제는 완전한 서구도 아니면서 또한 완전한 동양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 역시 사회주의노선을 지향하면서 산업화, 근대화를 지향하였다. 물론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나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이념체계를 마련하였

---

31) 동양이라 하면 동아시아뿐 아니라 서아시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러나 필자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동양의 개념을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로 한정 시키고자 한다.

으나 그것은 동양사상을 그들의 통치이데올로기에 맞게 편의대로 개조시킨 것이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북한 역시 서구화를 지향하면서 과거의 전통을 상당부분 잃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2)</sup>

서구의 사조는 기본적으로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고 있다. 서구 정치사상의 중심축을 이루어온 자유와 평등의 대립에서 서구는 언제나 자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였다.<sup>33)</sup> 이러한 경쟁과 효율의 사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보호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이면서도 배타적으로 추구하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결국 경쟁과 효율의 사조는 '강한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sup>34)</sup>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사회내 존재하는 각 개인들 또는 집단간의 불평등을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조화'를 이루어내기는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남북한 사회는 서구의 사조를 받아들였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사회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러한 덕목을 많이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적 덕성은 서구의 경쟁과 효율의 사조에 밀려 제자리를 찾고 있지

---

32) 북한은 그들의 통치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역사까지도 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의 전통까지도 그들의 통치이념에 맞도록 개조되어 존재하고 있음 가능성이 크다.

33) 물론 서구의 경쟁과 효율의 사조는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과학기술로 대변되는 문명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서양은 동양보다 뛰어났다. 그러나 경쟁과 효율의 사조에는 '조화'라는 덕목이 부족하다. 물론 그들도 평등-형평성의 사조를 강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한 평등-형평성의 사조는 사회내의 갈등이 침에하게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제로 작용했을 뿐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조화를 강조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개인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공간하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 따라서 경쟁과 효율의 사조가 우선했고 평등-형평성의 사조는 그것에 뒤따르는 차선택이었던 것이다.

34) 이러한 적자생존의 논리는 남북한의 통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 즉 강한 남한이 약한 북한을 흡수한다는 흡수통일의 논리이다. 물론 이 논리는 매우 현실적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은 남한이 북한을 점령하여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분단된 하나의 국가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약자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지배와 점령의 대상이 아니며 남한과 동등한 통일의 한 주체인 것이다.

못하고 있다. 현재에 있어 서구의 사조는 우리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구사조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적 덕성을 함께 개발하여 서구의 사조와 우리의 전통적 덕성을 잘 절충시키는 현명함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남북한사회에 필요한 것은 '공존'과 '조화'의 덕목이다. 또한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된 통일한국에서는 이러한 덕목이 더욱 중요시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에게 요구되는 '공존'과 '조화'의 덕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본 논문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있는 '조화'의 덕목은 새로운 차원에서의 '진보'를 의미한다. 진보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sup>35)</sup> 필자가 상정하고 있는 '진보'의 개념은 이데올로기 분포상 '우익'의 개념과 대비되어 나타나는 '좌익'을 의미하지 않으며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에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민주화 세력으로 제한되지도 않는다.

본인이 상정하고 있는 진보의 개념은 비합리적이고 반공동체적인 그 무엇에 대해 저항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진보'다. 물론 이러한 진보의 개념은 서구에서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서구가 개인적인 합리성에 의해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동양사회는 공동체적 합리성에 의해 작동되었다고 본다면 필자가 상정하는 진보는 서구의 것과는 좀 다르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서구는 계약에 기초한 개인적인 합리성을 근간으로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자하며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에서 출발하며 개인과 국가 또

---

35) 유판무(1998)는 「경제와 사회」 1998년 봄호에서 서구에서의 진보사상의 궤적을 더듬고, 사회주의 붕괴의 배경을 추적함으로써 새로운 진보와 진보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그의 논문에서 필자는 한국사회에서의 기존의 진보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유판무, 1998, "20세기 말 진보의 의미변천과 새로운 진보", 「경제와 사회」, 1998년 봄호, 서울 : 도서출판 한울, 8-33쪽 참조

는 사회가 맺은 '공정한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것을 극복하여 더욱 발전된 사회를 건설해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진보를 의미했다.

그러나 동양에서의 사회구조 및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계'에 의해 설정되며 계약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개인 및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문화가 각 개인들의 경쟁문화를 약화시키고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를 강조해 사회내 존재하는 주도적인 권력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가 운영되도록 만드는 약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는 동양사회가 갖고있던 이러한 약점보다 공동체 문화가 갖고 있던 화합과 조화의 미덕을 좀 더 중요시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제는 서구의 경쟁문화와 우리의 공동체문화가 한데 어울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이념적 틀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차원에서의 '조화'이며 '진보'이다. 나아가 이러한 동서양의 절충과정과 함께 기존에 존재하는 비합리적이고 비공동체적인 개인의 의식구조와 사회구조를 개선해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진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이런 의미에서의 '진보'는 통일과정에서 '조화'라는 덕목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남북한간 존재하는 이질성을 극복하고 '공존'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이념적 틀을 마련해줄 수 있다.

## ㅅ. 대안의 모색 - 통일에 대한 정당성의 확보 차원에서<sup>36)</sup>

필자가 위에서 제시한 통일이후 북한의 혁명열사의 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전에, 전술했던 전제조건과 관련해 언급할

---

36) 북한의 혁명열사의 묘지 처리문제는 통일이후 북한의 과거청산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동독의 과거청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독의 과거청산에 관해서는 황병덕, 1996,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85-97쪽 참조할 것.

것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통일과정에서 왜 북한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느냐?' 내지는 '왜 북한과의 합의에 의한 통일을 해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필자 역시 남한주민의 일원으로써 북한의 주도에 의한 통일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 북한을 무시한 - 남한주도의 일방적인 통일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을 통일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통일과정에서 그들의 협상력을 무시하여 남한의 주도에 의해 통일이 된다면 통일이후 북한주민의 정체성의 위기는 물론이고 심각한 지역갈등을 비롯한 북한에 대한 불평등한 구조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은 통일한국의 일부분이 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문제는 바로 통일한국의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대한 불평등구조가 생성된다는 것은 통일한국내에 심각한 균열구조가 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균열구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남북한의 통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일은 한반도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 북한을 통일의 또 다른 한 주체로 간주하고 그들을 포용하여 합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통일후 새로운 불평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사회통합을 가속화 시켜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남한의 정체성이 북한에 그대로 복제되었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기존의 남한의 체제가 완벽한 체제라면 별로 문제시될 것이 없을 것이나 남한의 체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체제다. 따라서 남한의 정체성이 북한에 그대로 복제된다면 그것은 '문제점의 복제'의 차원이 아니라 '문제점의 증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sup>37)</sup>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북한은 함께 통일을 이루어야 할 주체가

---

37) 독일의 사례에서 이미 살펴보았듯 서독의 정체성이 그대로 동독에 이식된 결과 동독 주민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감을 경험하였다. 만약 남한의 정체성이 북한에 그대로

며 남한은 북한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합의를 통해 통일을 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의 차원에서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물론 예멘의 경우처럼 지배엘리트들의 협상에 의해 통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 전쟁의 경험을 통해 심각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분단기간이 50년이 넘는다는 점에서 예멘과 같은 방법으로 통일될 가능성은 거의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북한과의 합의를 통한다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한다는 것도 모순이 된다. 그렇지만 전술했다시피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는 통일이후 바람직한 남북한의 통합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이 될 경우 남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북한에 그대로 이식하려 하지 말고 북한의 체제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대안은 북한이 자체붕괴를 하거나 또는 동독처럼 북한내부에서 심각한 사회균열이 일어나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으로의 통합을 원할 경우에 가능하다. 따라서 필자는 남한주도의 통일을 기본가정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혁명열사의 묘지 처리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혁명열사의 묘지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대안은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는 묘지를 없애는 것이며 둘째는 묘지를 그냥 두는 것이고 셋째는 묘

---

이식된다면 통일한국의 경우에는 통일독일보다 더욱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그 이유는 ①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심숙도 및 제반 여건이 서독의 수준보다 낮으며, ② 한반도는 서독과 달리 전쟁경험과 냉전의 산물로 인해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하였고, ③ 이로 인해 남북한 주민간 서로 교류의 양과 질이 독일 에 비해 크게 떨어졌으며, ④ 동독의 주민들은 서독으로 편입되기를 원했으나 북한 주민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성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지를 변형시키는 것이다.

우선 묘지를 없애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자. 묘지를 없애는 것은 과거 북한의 사회주의나 주체사상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의미한다.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혁명열사의 묘를 없애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북한주민들은 심각한 과거와의 단절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을 지탱해왔던 전체주의 체제가 비록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빈곤과 궁핍을 가져다주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은 그들의 정체성에 커다란 위협을 안겨줄 것이다. 더구나 새로 통일된 사회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 특히 경제적 사정이 눈에 띄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는 그들의 삶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물론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를 매우 선호하고 그들의 지배엘리트에 대해 심한 불만 내지는 적대의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독의 경우에서 보듯 북한의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게 된다면 북한주민 또한 스스로를 '2등시민' 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남한주민과의 사이에서 심각한 이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혁명열사의 묘를 없앤다면 북한의 통치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존립기반에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나, 핵심엘리트에 속하지 못한 지식인을 비롯한 신중간층 계급의 경우에는 오히려 혁명열사의 묘를 없애는 것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신중간층의 경우에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sup>38)</sup> 통해 볼 때 통일이후 새롭게 엘리트계층으

---

38) 서재진, 김병로(1994)는 북한의 사회구조 변화 중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계급구조의 분화에 의한 신중간계급의 성장을 들고 있다. 이들은 현재 북한에서는 위로는 외교관 및 체제불만 중견간부 등을 중심으로, 아래에서는 소한유학생 및 인텔리층을 중심으로 체제비판 분위기가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서재진, 김병로, 1994, 「북한의 변화와 김정일 정권의 장래」, 서울: 민족통일원, 15-16쪽.

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과거체제를 부정하는 것에 동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과거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50여 년간 사회주의 체제에 길들여졌던 그들의 속성이 단 몇 년간의 변화로 인해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묘지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렇다면 묘지를 그냥 둘 것인가? 이 경우 남한주도에 의해 통일이 되었지만 북한의 과거체제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정체성의 위기는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안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남한 주민들의 반발이다. 혁명열사의 묘지를 그냥 둔다는 것은 과거 한국전쟁의 상처를 묻어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전쟁을 발발시켰던 북한 공산당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된다면 남한의 보수 우익세력들의 심각한 반대가 일어날 것이며 이것은 통일한국에서 남북한간 새로운 적대의식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혁명열사의 묘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그것은 북한의 과거청산 및 핵심 엘리트 계급의 처리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통일은 남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들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면해주자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패로 북한주민들을 빈곤과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것까지 용서해주어서는 안된다. 즉, 통일이후 북한엘리트 및 그들의 체제의 문제점은 정확히 지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9)</sup>

---

39) 물론 과거 청산문제는 북한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남북한간 적대적 의존관계는 북한 인방의 책임이 아니다. 남한에서도 분단을 이용하여 남한주민들을 탄압하고 희생시켰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물론 냉전은 남한의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과거 남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들에게 부족한 정당성의 위기를 남북한의 적대적 의존관계를 이용하여 극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통일이후 남북한의 과거에 대한 재평가 작업은 남북한에서



따라서 북한의 혁명열사의 묘를 그냥 두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정체성의 혼란을 격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남북한간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묘지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묘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를 위해서는 분단과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우선 분단에 대해 생각해보자. 분단 이전 남북한은 통일국가였다. 삼국시대 이래로 후삼국시대를 제외하고는 남북한은 계속적으로 통일국가를 이루어왔으며,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면서 언제나 단일민족에 의한 단일국가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분단은 민족내부의 분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민족내부의 동학을 무시하여 분단의 원인을 외세에만 있다고 규정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필자는 분단의 직접적인 원인을 당시 미소를 주축으로한 전세계적인 냉전구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전쟁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한반도에 존재했던 전쟁의 경험은 남북한간 적대적인 의식을 생성하게 함으로써 분단을 고착화시키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전쟁발발의 책임을 지는 당시 북한의 지배엘리트들은 전쟁으로 인해 남북한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고 결과적으로 분단을 고착화시켰다는 점에서 면책을 받을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자. 그간 남한에서는 북한의 존재를 고려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려지지 못했다. 이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그들의 체제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

동시에 일어나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야 하며 그것은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고 본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2조에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들을 반대하여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라고 되어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역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그들이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거나 남한을 혁명기지화 하려는 시도들은 마땅히 응징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실현'이라는 사회주의의 이상까지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남북 전쟁 역시 골육상쟁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남부를 용서하였으며 언제나 미합중국 안에서 남부는 연방의 일원임을 강조하였다. 전쟁이 끝나면서 북부에 항복한 로버트 E. 리장군을 용서하였으며, 전쟁에 가담한자들을 모두 석방하였고 링컨과 존슨은 대사면령을 공포하였다.

이제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미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북한을 통일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나라를 만들어갈 주체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거쳐야만 할 과정이 된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지만 그것의 문제점 역시 정확하게 지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쟁수행 및 경제파탄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이상인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구현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졌던 사회주의의 이상은 존중해주어야 할 것이며, 통일이라는 큰 차원에서 화해

와 용서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혁명열사에 대한 평가도 위와 같은 기준에서 다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만약 묘지에 묻혀 있는 혁명열사가 한반도의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면 마땅히 자격을 박탈당해야 할 것이며, 남북한의 분열을 조장한 경력이 있다면 그 역시 자격을 박탈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혁명열사가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면 그는 마땅히 국립묘지 격인 혁명열사의 묘지에 묻혀 있을 자격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명칭인 혁명열사의 묘지도 그 이름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남한과 같은 '국립묘지'도 좋고 또는 당시 상황에 걸맞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져도 괜찮다고 본다.

이렇게 북한의 혁명열사에 대한 재평가와 묘지의 개명은 남북한의 통일에 있어 북한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관계가 깊다. 또한 필자가 역설하였듯 통일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배려는 통일의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남북한간 주민간의 이질성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다. 이것은 통일한국의 정체성 및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근간이 되며 통일한국은 이를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 제 IV 장 통일한국의 국가능력 강화방안과 바람직한 통일의 모색

### - 성숙된 시민사회를 토대로

전술하였지만 국가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정당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대안의 결정 및 그것의 집행에 관련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체제의 민주성은 그러한 정치체제를 구성해주는 국민들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통일한국을 만들어가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높으면 그 사회의 정치체 역시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않았을 경우 국가의 민주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김석준(1991)은 국가능력이론을 모색하면서 국가능력의 평가기준으로 사회계급과의 정책망에 요구되는 성격을 들면서 사회적 화합(social harmony)능력, 정당화(legitimation)능력, 본질적인 갈등과 문제의 해결 능력에 따라 국가능력의 평가가 달라진다고 언급하고 있다.<sup>40)</sup> 물론 이와 같은 평가기준은 국가의 관리능력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국가능력은 국가자체의 통치수단과 통치기술 등의 관리능력의 발휘만으로 향상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국가와 함께 병행하는 시민사회의 제도적 성숙과 연결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시민사회가 강한 국가능력을 보장하는가? 기존의 국가-시민사회의 논의에서 국가는 억압성의 근원이요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터전

---

40) 김석준, 1991, "국가론 연구의 경향변천과 국가능력개념의 전개", 장민외, 「국가와 공공정책-한국국가이론의 재조명」, 서울: 법문사, 75쪽

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잘못이다. 이미 최장집 교수(1993)는 시민사회가 오히려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진단한 바 있으며<sup>41)</sup> 한배호(1996)는 세계화와 관련하여 강하고 권위있는 국가가 시민사회를 부활, 재충전시킬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sup>42)</sup> 또한 손호철 교수(1995)는 국가의 '장착된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뿌리내려 정책수립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국가가 시민사회에서 장착되어 국가-시민사회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제도'라고 보고 이 같은 구체적인 제도를 분석하는 '제도주의적' 국가론을 제안하고 있다.<sup>43)</sup>

따라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서로 적대적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이유에서 필자는 강한 국가능력을 위해서는 성숙된 시민사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성숙된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필자는 통일에 필요한 이념적 틀을 동양사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전술한 바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필자는 '진보'와 '조화'에 대해 새롭게 규정하였다. 필자가 상징하는 성숙된 시민사회란 동양적인 덕성인 공동체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사회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상술하면 필자가 상징하는 시민사회는 서로가 경쟁하면서도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즉, 성숙된 시민은 과거 한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던 '베타성'과 '폐쇄성'을 배격하고 전 사회구성원에 대한 폭넓은 배려를 할 줄 아는 인간이며, 사회 발전을 위해 그릇된 관습과 제도 등 사회제반 여건을 진보적으로 수정·발

41)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 이론」, 서울 : 한길사, 1993, 78쪽

42) 한배호, 「세계화와 시민사회」, 성남 : 세종연구소, 1996, 60-67쪽.

43) 손호철, 1995,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서울: 도서출판 새길, 47-48쪽.

전시키려는 성향을 갖춘 인간이다. 과거 통념상 국가와 시민사회는 적대적이어야 한다던가, 자본가와 노동자는 대립적이라든가, 지배와 피지배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여 극한의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식의 인식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내에 존재하는 갈등을 표출하지만 대승적인 견지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타협할 줄 아는 인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배타적인 성향을 표출하지 않는 인간, 서로 공존하며 타협할 줄 아는 인간이 바로 성숙된 시민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숙된 시민사회는 자본가집단내에서도, 관료집단내에서도, 민중부분에서도, 종교집단에서도, 스포츠 영역에서도, 어느 계층·어느 집단에서도 서로 상충하기보다는 상호의존을 통한 조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성숙된 시민은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사회내 보수화되고 반동화 되어버리는, 그래서 사회의 진보를 방해하는 '그 무엇'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갖고 사회내의 민주화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상정하고 있는 '진보'이며 '조화'이다.

이러한 성숙된 시민사회는 제도적 수준에서의 성숙을 반드시 그 전제조건으로 한다. 서구의 경우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였음에도 그들 나름의 '게임의 법칙(rules of game)'에 따라 정책적·제도적 차원에서 '일관성'을 확보하여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러한 '게임의 법칙-일관성'이 부재했고,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한국의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의 구현을 가로막는 기제로 작용했다. 따라서 한국의 시민사회의 성숙은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서구의 사조와 공동체안에서의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적 덕성을 바탕으로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뒷받침될 때 가능해질 수 있다.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성숙된 시민사회는 제도화 수준의 향상을 토대로 공동체안에서의 조화를 강조하는 사회다. 이는 전술했던 통일의 정당성 확보와 연결되어 통일한국의 국가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

다. 남과북이 통일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합의 논리이며 이를 토대로 한 남북간 주민간의 동질성의 회복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북한의 과거를 일정정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사회내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들을 성숙된 시민사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국가는 '보이는 손'을 사용하여 사회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 제도화 수준의 향상을 통해 - 해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해주어야 하며, 시민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범위내에서 상호의존의 틀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화합하여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긴밀한 상호협조 및 보완과정을 통해서만이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 제 V 장 결 론

사회통념상 결혼 적령기에 든 남성이 여성에게 청혼을 할 때, “당신과 나는 남자와 여자로 다르고, 집안 배경도 다르며, 살아온 성장 환경도 다르니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혼을 할 때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성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을 강조하다보면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의 시작은 남북한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질성의 강조는 남북한이 한민족으로 서로 같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물론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통일을 이루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자 조건이 된다. 그렇지만 지난 50여 년간 서로 다른 체제로 갈라졌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좀더 체계적인 동질감의 강조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동질감의 강조가 있어야 통일논의 및 통일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쉬워지며, 더불어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성 확보를 통한 국가의 능력강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한편 동질감의 강조와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한사회의 분단관리이다. 분단관리는 통일을 위한 기반다지기과 관계가 깊다. 남한은 통일을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조율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북한과의 활발한 대화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한은 IMF구제금융시대를 지내고 있고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있다는 것을 감안해 통일논의가 소홀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마감하면서 그 동안의 느낌을 적어 보고자 한다. 필자는 본 논문을 준비하면서 커다란 아쉬움을 느꼈다. 통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상황인식을 하고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지만 필자가 발견한 것은 매우 획일적인 자료들이었다. 물론 남북한이 서로 적대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간의 연구성과가 획일적일 수 밖에 없었음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필자가 게으른 관계로 더 심도깊고 다양한 연구자료들을 찾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진한 지적인 '배고픔'을 느꼈다.

통일은 이제 우리 세대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임'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북한 관련학자인 최성은 이제 우리는 '통일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만약 우리세대가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최소한 통일에 필요한 기본적 전제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민족의 역사는 발전과는 거리가 먼 쇠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세대는 다음세대로부터 시대적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

필자는 전후 세대로서 앞으로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세대의 통일 사상이 지금까지 행해졌던 고루한 통일의를 벗어나야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각하에서 또한 이 땅의 정치학도로써 필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이루지 못했던 바를 조금이나마 메워나가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다. 필자는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현재 남한은 IMF구제금융이라는 시대적 위기에 처해있고, 북한은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해 곤경에 빠져있다. 필자는 남북한이 서로 곤경에 빠져있는 상황하에서 통일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는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남북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것은 우리 세대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이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잠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민 외, 1991, 「국가와 공공정책-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서울: 법문사
- 강정인, 1994, “북한 연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 26호
- 강정인 외, 1997, 「현대정치학의 이해」, 서울: 오름
- 김국신, 김도태, 여인곤, 황병덕 공저, 1994,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I, II」, 서울: 한울 아카데미
- 김석준, 1991, “국가론연구의 경향변천과 국가능력개념의 전개”, 강민 외 공저, 「국가와 공공정책-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서울: 법문사, 66쪽.
- 김재용 외, 1994, 「정당구조론」, 서울: 나남.
- 미국사연구회 편, 1992, 「미국역사의 기본사료」, 서울: 소나무
- 박기덕, 이종석 편, 1995,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서울: 세종연구소
- 서재진, 김병로, 1994, 「북한의 변화와 김정일 정권의 장래」,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손호철, 1995,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서울: 도서출판 새길
- 역사문제연구소 편, 1995,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서울: 역사비평사
- 유판무, 1998, “20세기 말 진보의 의미변천과 새로운 진보”, 「경제와 사회」, 1998년 봄호, 서울: 도서출판 한울
- 이구한, 1993, 「이야기 미국사」, 서울: 청아출판사
- 이상기, 1997, 「라인에서 엘베까지-통일독일의 문화와 사회」, 서울: 청록출판사
- 이지영, 1995, “한국의 산업화와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대전: 한남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성, 1997, 「북한학개론」, 서울: 풀빛

최용, 김봉중, 1997, 「한국인이면 꼭 짚어야 할-미국의 역사」, 서울 :  
소나무

최장집, 1993, 「한국 민주주의 이론」, 서울 : 한길사

최혁순, 1997, 「이것이 미국이다」, 서울: 합동국제문화센터출판부

케네스 C. 데이비스, 1992,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미국의 역사」, 진  
병호 편역, 서울:고려원미디어

한 배호, 1996, 「세계화와 시민사회」, 성남 : 세종연구소

황병덕, 1996, 「동서독간 정치통합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황병덕, 1995,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한국정치학회 편, 1993,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서  
울: 한국정치학회



#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Tit-for-tat의 대북정책 적용에 관한 연구 -



성명: 김희연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기존 대북 논의의 기초와 한계
- IV. 새 정부의 대북정책 사례분석 - Case study
- V. 대북정책을 위한 대안적 전략 모색
- VI. 결론



## 제 I 장 서 론

분단이 반세기를 넘는 동안 한반도는 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 상태는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못한 채 남북은 대결구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의 통일이 실질적으로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남북은 모두 불안정한 국내 정치를 공고히 하는데 통일정책을 이용해 왔다. 북한은 외교안보적으로 엄연한 적국이지만, 북한의 존재가 남한 정치권이 안존하는데 기여한 바도 적지 않았다. 통일정책은 대북강경론으로 일관하였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통일정책에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 주기도 하였다.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될 때 그러했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이인모 노인을 송환하는 등 진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때도 당장 통일이 이루어질 듯 보였었다. 통일에 대한 거품은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려 하거나 집권자의 치적으로 추켜 올리려는 의도로 조작된 것들이었다. 이렇듯 통일정책은 현실성을 결여한 채 추진되어 왔다.

이제는 발전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남한에서는 최초로 국민에 의한 여야정권교체가 이루어져 그 어느 때 보다도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몇몇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북한 역시 김일성 사후 붕괴 위기까지 예견되었던 정치적 불안정이 김정일의 주석 취임이 임박하면서 해소되어 가는 듯 하다. 이로써 상대방을 국내정치에 이용할 필요성이 구조적으로 극복된 것이다. 변화된 남북간 경제적 격차가 극심하게 확대되었으나 남한이 IMF관리 체제로 들어가면서 경제적인 격차는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정치경제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알맞은 새로운 통일정책의 모색이 필요하

다. 앞으로의 통일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되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영구히 지속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북 논의들은 새로운 통일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대북강경론은 남한이 접하고 있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흡수통일을 주장했었으나, 힘의 불균형이 파괴되면서 그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해졌을 뿐 아니라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위한 정책으로서도 의미가 없다. 그리고 대북포용론 역시 한계가 있다. 남북 간 평화적 관계 수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이 시대에 부합하지만, 현실적인 상황 인식과 전략의 부재로 인해 평화실현에 있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현 정부가 제시한 햇볕론은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함으로써 포용론의 결함을 보완하였지만, 개념의 모호성으로 양자 관계가 상충하고 있다. 하지만 틈-포-탯(Tit-for-tat)이라는 전략을 도입한다면 햇볕론과 상호주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협력을 달성하는 효율적인 정책이며, 동시에 남북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 제 1 절 연구 목적 및 의의

###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 정착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통일 논의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틈-포-탯 전략이 남북 간에 협력을 유도하는 과정을 밝혀 보겠다. 여전히 적대적 관계를 반복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궁



극적으로 남북 모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전략으로서 틈-포-택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상호주의의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상호주의는 그 자체로 매우 유용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대북관계에서 왜곡되어 적용됨으로써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상호주의 본래의 의미를 살펴보고, 잘못 적용된 상호주의의 특징을 분석한 후 틈-포-택 전략으로 보완된 상호주의를 제시하겠다.

마지막으로 햇볕론과 상호주의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것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틈-포-택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에 햇볕론은 상호주의의 힘을 얻어 북한의 협력을 유도해 내는 데 적절한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햇볕론은 이전의 통일정책에 비해서 분명히 발전한 정책이지만 이것이 당장의 남북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정책이 지니고 있는 내부적인 모순으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게임이론을 통해서 남북문제를 고찰하였다. 1990년 대 초 우리나라에 게임이론이 소개된 이후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게임이론을 통해 현실을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고, 더욱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을 이론적으로 고찰해봄으로써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던 남북관계를 협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소개하였다. 남북비료회담과 잠수함 사건에 대한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상호협력이라는 결과가 이론에

서 뿐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강경론과 포용론 사이에서 갈등과 방황을 거듭하던 대북정책을 극복하여 포용론의 견지에서 강경론이 요구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 가장 커다란 의의일 것이다. 상호배타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햇볕론과 상호주의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이로써 더 이상 정책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4년부터 잠수함 사건이 종결된 1998년 7월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먼저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했던 통일정책을 강경론과 포용론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대북 관련 사건으로 4월에 있었던 남북비료회담과 6월에 발생한 동해안 잠수함 침투 사건을 사례 분석하여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밝혔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가 주로 의존한 방법은 문헌분석(text analysis)이다.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게임이론 및 죄수의 딜레마 그리고 틱-포-택 전략은 국내에 소개된 로버트 액슬로드(Robert Axelrod)의 논문과 이 이론을 설명한 국내 게임이론서들에 의지하였다. 이 밖에도 인터넷을 통한 자료 검색은 이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분석하는 데는 단행본이나 논문보다는 정기간행물과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 제 3 절 연구의 전개과정

제 1 장 서론에서는 연구를 시작하게 된 문제의식과 현재 국내외적인 상황 인식을 밝혔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과 의의,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을 정리하였다.

제 2 장은 연구의 근간이 되는 이론을 소개하였다. 신자유주의론은 게임 이론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기본 전제를 말해주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는 게임 내부적으로는 협력을 도출할 수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최악의 게임에서도 협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적합한 게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죄수의 딜레마 상황은 남북한 관계를 설명하는 데도 매우 적절하다. 틱-포-택 전략은 본 연구를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틱-포-택 전략의 개념과 어떤 유형으로 행동하는지 그리고 장점은 무엇인지에 관해 정리했다.

제 3 장은 새로운 대북 정책기조를 제시하기 위한 장으로 기존의 대북 논의들을 대북 강경론, 대북 포용론 그리고 햇볕론으로 나누어 각 논의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분석했다.

제 4 장은 새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을 사례별로 분석하였다. 비료회담과 잠수함 사건에 대한 조치를 분석하고 그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상호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 5 장은 대북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 먼저 틱-포-택의 충실한 이행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상호주의는 그 동안 노출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즉 순차적 상호주의의 기능으로 햇볕론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북정책으로서 가치가 재정립되는 것이다.

제 6 장은 결론으로 틱-포-택 전략으로 보안된 상호주의와 햇볕론의 의미를 재정리하였다.

## 제 II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1980년대의 냉전 종식과 다양하게 제기되는 국제정치적 요구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현실주의 및 신현실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신현실주의가 국가(state)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하고, 국제관계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sup>1)</sup>으로 인식한 데 반해 신자유주의는 국제기구와 기타 비정부기구를 통한 국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sup>2)</sup> 로버트 코헨(Robert Keohane)과 조셉 나이(Joseph Nye)는 복합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dence)이 현실주의가 간과한 현실을 설명하는 이념형이 될 수 있으며, 국제체제 내에서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sup>3)</sup> 신자유주의는 국제정치를 무정부적 상황으로 인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레짐이나 상호주의 전략 등을 통해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무정부적 상황이란 공동 정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개념은 아니다. 협력이란 이러한 무정부 상태를 전제로 하며,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상호이익을 도출하기 위한 조정을 뜻한다. 코헨이나 크래스너(Stephen Krasner)등은 협력의 방법으로 국제제도 또는 국제레짐을

- 
- 1) 이호재 譯, 한스 모겐소 著, 현대국제정치론 Politics Among Nations. (초판 5쇄 ; 서울 : 법문사, 1993). p. 35.
  - 2) Charles Kegley, Jr and Eugene Wittkopf, World Politics : Trend and Transformation, 6th.,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7). p. 30.
  - 3) 이호철 譯, 로버트 코헨 & 조셉 나이 著, '현실주의와 복합상호주의', 김우상 외 7인 共譯, 국제관계 문장의 I.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7). 참조. 이것은 코헨과 나이의 저서인 '권력과 상호의존' 가운데 2장을 번역한 글이다. 그리고 김우상, 新한국책략, (서울 : 나남, 1998). p. 27. 참조.

활용하는 것을 제시했고, 액슬로드의 게임이론을 통해서 협력이 유도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액슬로드는 게임의 구조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틱-포-탯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여 두 행위자가 협력하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무정부 상황에서의 협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 제 2 절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1950년 경 Merrill Flood와 Melvin Dresher에 의해 처음 고안된 후, Robert Axelrod가 발전시킨 대표적인 게임이론이다.<sup>4)</sup> 이 게임은 행위자들의 '협력'과 '배반'이라는 선택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창출한다.

경찰에게 붙잡힌 두 명의 죄수는 사건의 전모를 자백하는 조건으로 석방으로 제안받는다. 이들은 그 제안을 수용(배반, defection)하거나, 거절(협력, cooperation)하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그 결과에 따라 그들의 형벌은 달라진다. 두 죄수는 격리되어 있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며, 이 게임은 단 한번만 이루어진다. 결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죄수가 서로 협력하는 경우이다. 즉, 두 명 모두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침묵하는 것으로 각각 1년 형을 언도받게 된다.

두 번째는 배신하는 경우로, 한 명은 자백하지만 다른 한 명은 침묵을 지키는 경우이다. 이 때 자백한 죄수는 면죄를 받고 석방되는 데 반해, 침묵을 지킨 죄수는 5년 형에 처해진다.

---

4) How to increase co-operation through Tit-for-tat. <http://newciv.org/GIB/BI/BI-36.HTML>.

이것은 Kevin Mcfarlane의 논문 "The Rational Self Interest of Reciprocity - Robert Axelrod an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에서 발췌한 글이다.

세 번째 경우는 둘 다 배신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들은 각각 3년 형을 살게 된다.

B \ A	협력(Cooperation)	배반(Defection)
협력(C)	1, 1(CC, CC)	5, 0(CD, DC)
배반(D)	0, 5(DC, CD)	3, 3(DD, DD)

죄수는 DC(자신은 배반하나 상대방은 협력의 경우)를 가장 선호하게 된다. 그 다음은 서로 협력하여 1년을 살게 되는 CC, 그 다음은 3년 형의 상호배반의 경우로 DD를 선호하며, 5년 형을 살게되는 CD를 가장 싫어한다. 즉, 죄수의 선호도는 DC > CC > DD > CD의 순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상호배반 즉, DD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바로 균형점이 상호배반에 있기 때문이다. 균형점이란 주어진 게임 상황에서 상대방이 선택을 하였을 때, 자신 혼자만 이 선택을 바꾸어 더 선호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sup>5)</sup> 만일 A가 배반을 선택하였을 때, B가 배반에서 협력으로 바꾼다면 B는 최악의 경우인 CD에 처하게 된다. 이는 DD보다 덜 선호하는 것이므로 B로서는 선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상호배반으로 결과는 귀착된다.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우위전략과 미니맥스 전략이 존재하는 데 그 결과는 마찬가지이다.<sup>6)</sup>

결국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그 자체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5) 김우상, Ibid. p. 82.

6) Ibid. pp. 83-84. 참조. 우위전략은 상대 행위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유리한 선택이 존재할 때 그것을 선택하는 전략이다. 미니맥스 전략은 최소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다.

### 제 3 절 틱-포-택 전략(tit-for-tat)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상호 배반의 결과가 초래된다. 항상 배반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회성 게임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라면 협력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구성원 간의 일회적 관계로 형성되지 않는다. 행위자들은 여러차례의 게임을 치르게 되므로 협력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해진다. 아나키적 국제질서 속에서 협력을 유도해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바로 틱-포-택이다.

#### 1. 틱-포-택의 개념

틱-포-택은 최초의 게임에서는 협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는 전략이다.<sup>7)</sup> 말 그대로 한 대 맞은 것에 대해 나 역시 한 방을 때리는 것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보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틱-포-택은 분명히 보상과 보복을 포함하는 전략이다. 상대방이 배반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 게임에서 배반전략을 채택하고, 상대방이 협력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협력으로 응수한다. 상대방이 배반할 경우 다음에 자신도 배반당하여 게임은 상호배반(DD)이 될 것이기에, 이 보다 선호도가 높은 상호협력(CC)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반대로 상대방이 협력할 경우, 다음 게임에서도 협력으로 응하게 되어 게임이 CD가 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안심하고 협력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다운스, 로크, 사이버슨이 제시한 '수정된(modified) 틱-포-택'<sup>8)</sup>은 상대

---

7) The Prisoner's Dilemma, 1995. <http://www.spectacle.org/995/pd.html>.

8) 김우상, Ibid. pp. 155-56.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 Basic Books, 1984); Downs, Rocke, and Siverson, op. cit., pp. 141-42을 재인

의 배반에 대해 1/2의 확률로 배반한다는 것이다. 즉, 배반의 강도를 반으로 줄여서 반 정도는 배반으로, 반 정도는 협력으로 대응하는 전략이다. 이것은 한 번의 배반으로 더 이상의 협력의 기회가 차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전략으로 Tit for Two Tat<sup>9)</sup>이 있다. 이것은 상대방이 연속하여 두 번을 배반할 경우에만 배반전략으로 응수하는 것이다 한 번의 배반은 용서하는 것으로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어떤 형태이든지 기본적으로 틱-포-탯은 상대가 행동한대로 맞대응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틱-포-탯의 전략

틱-포-탯이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전략이 결정되는 데, 다음의 세 가지 유형<sup>10)</sup>이 수반된다.

첫째는 협력이다(nice). 상대방이 협력할 경우는 물론이고, 질대로 처음 게임에서는 배반해서는 안된다.

둘째는 용서이다(forgiving). 수정된 틱-포-탯이나 Tit for Two Tat에서 행해지는 형태이다.

셋째는 복수이다(retaliatory, provokable). 이것은 먼저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행된 배반에 대해서 배반전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

용.

9) Prisoner's Dilemma. <http://opus.ncifcrf.gov/~toms/prisoner.html>.

10) Social Evolution, 1997.

<http://bionet.edu.people/barrylab/public-html/classes/animal-behavior/SOCIAL.HTM#anchor792588>.



### 3. 틱-포-택의 장점

엑슬로드는 무한히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컴퓨터에서 실행해 보았다.<sup>11)</sup> 무작위(random)로 선택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200회의 게임을 시도한 결과 토너먼트에서 승리한 전략이 바로 틱-포-택이었다. Anatol Rapoport가 제시한 승리전략(the winning strategy)도 틱-포-택으로 나타났다. 그의 연구에서 항상 협력하는 전략을 600점으로, 항상 배반하는 전략을 200점으로 놓았을 때, 틱-포-택은 평균적으로 504.5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엑슬로드의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첫째는 항상 배반이 행해지는 세계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략은 무수히 많은 전략이 존재하는 세계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강건하다(robust)는 것이며, 셋째로는 일단 협력이 이루어지면 협력 그 자체만으로 비협력적인 전략들에 의한 침입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2)</sup> 즉 틱-포-택은 협력을 유도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전략일 뿐 아니라 어떠한 전략에 대해서도 우월하며, 장기적으로 협력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전략인 것이다.

---

11) Robert Axelrod, Complexity of Cooperation Web Site : Citation Classic Commentary, 1992.

<http://pacs.physics.lsa.umich.edu/software/cc/ECHome/ECCitationClassic.html>.

12) Kevin Mcfarlane, Ibid.

## 제 Ⅲ 장 기존 대북 논의의 기조와 한계

### 제 1 절 대북강경론의 한계

보수주의라 함은 강풍론으로 대변되는 시각으로서 남한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제압하고자 하는 강경노선이다. 보수주의자들은 힘의 우위를 배경으로 하는 강경한 대결정책을 통하여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켜 남한체제를 북한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통한 통일정책<sup>13)</sup>, 즉 흡수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한 것으로서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사실 대북정책은 통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남한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른바 통일정치게임(the game of unification politics)은 자신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체제내의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국민동원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때로는 남북 대결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sup>14)</sup> 보수주의 입장에 입각한 대북정책은 적대적 상호의존(antagonistic interdependence)<sup>15)</sup>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였다.

대북강경책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전혀 이득이 될 수 없는 전략이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볼 때 강경책은 배반의 행위와 동일하다. 남한이 배반이라는 전략을 선택한 경우 북한은 반드시 배반으로 응수하게 된다. 북한이 협력한다면 그것은 CD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므로 이 보다는 DD 즉, 상호배반의 결과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은 상호배반이라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4가지 경우에서 3번째

13)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 나남출판, 1996). p. 412.

14) 최완규, 'Icaruse의 비운 :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II 발표 논문, 한국정치학회와 동아일보 공동주최, 1998. p. 13.

15) 최장집, Ibid. p. 414.

선호도에 속하는 결과로서 강경책은 국익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는 전략인 셈이다.

실질적으로도 강경정책은 남북관계는 물론 남한의 국익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을 압박하여 체제 붕괴로 연결시키려는 그 목적과 달리 오히려 국내외적 체제전환기에서 북한이 위기를 넘기는 데 기여한 것이다.<sup>16)</sup> 위기상황 속에서 외부로부터 가중되는 압력은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마련이다. 1994년 남한 강경파에 의한 핵외교, 김일성 조문파동, 주사파 파동 등은 극심한 경제위기와 김일성 사망에 따른 정치력의 부재 등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은 정치적 갈등 없이 김정일에게 권력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북한 정치권은 권력투쟁보다는 당장 직면한 체제존립의 위기를 내부적 단결로 극복한 것이다.

국제질서에서도 북한은 고립되어 붕괴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적으로 체제인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경일변도의 남한은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을 상대했어야 했다. 미국이 두 개의 한국정책을 바탕으로 북미관계를 개선시켜나갔던 데 반해 남한은 북한과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협상은 치킨게임(비겁자 게임, chicken game)<sup>17)</sup>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쉽게 당근을 얻어낼 수 있었다. 협상은 오히려 북한에

---

16) Ibid. p. 425.

17) 김우상, 新한국책략, pp. 84-88.

치킨게임에서는 서로 마주보며 차를 돌진하는 두 행위자가 존재한다. 만일 A는 돌진하고 B는 회피했다면 A는 영웅대접을 받게 되지만 B는 비겁자라는 놀림을 당하게 된다(DC, CD). 그리고 둘 다 회피한 경우에는 영웅은 될 수 없겠지만 놀림도 당하지 않는다(CC, CC). 마지막으로 둘 다 돌진하여 충돌한다면 모두 죽게 된다(DD, DD). DL 게임의 선호도는  $DC > CC > CD > DD$ 로 나타난다. 회피와 돌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는 평판(reputation)이다. 행위자가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은 DD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회피라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는 양상을 띄게 되었고, 그 가운데 남한은 협상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북미관계를 좌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보수주의적 대북정책은 남한이 주도적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남한의 우월한 경제력,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탈냉전의 국제질서,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것은 탈냉전이라는 현실을 구태적인 냉전적 사고로 해결하려 했던 시대착오적 발상과 결국 상호배반이라는 결과를 수반하는 대북강경정책이 자체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 제 2 절 대북포용론의 한계

대북포용론의 시각은 현 정부의 햇볕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누적된 적대관계를 풀어나가고 남북한간 평화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향적인 대북화해 정책을 추진하였다.<sup>18)</sup>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고 분단체제가 평화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남북은 쌍방이 상호안전에 대한 인정을 최우선의 평화적 공존원칙으로 하면서, 민족 내(inter-nation) 협력의 원칙 위해서 상호지원, 상호교류 등을 통하여 민족공영을 추구하는 협력적 상호의존관계(cooperative interdependence)를 수립한다는 것이다.<sup>19)</sup> 이 시각은 남북간의 갈등과 반목을 지양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정착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강경론자들의 대북정책에 비해 바람직하며, 실제적인 통일을 원하는 정책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의 부재로 유화적 대북정책은 북한에게 이용만 당한 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대북포용정책은 죄수의 딜레마에서 협력의 행동에 해당한다. 우리가 협

---

18) 최장집, Ibid. p 426.

19) Ibid. pp. 428-429.

력을 취할 경우 남북관계는 두 가지 양상을 띄게 된다. 하나는 북한 역시 협력해 옴으로써 상호협력이라는 두 번째 선호도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유화책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바램일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이 배반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북한은 최상의 결과를, 우리는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된다. 북한으로서는 협력보다는 배반을 선택했을 때 이익이 극대화되므로 당연히 배반해 올 것이다. 남북한 관계가 단회성 죄수의 딜레마 게임인 한 계속적인 양보는 아무런 개선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sup>20)</sup> 김영삼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을 취하고도 이것이 협력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북한에게 이용만 당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결국 우리는 협력이라는 상호이익을 기대하고 행동을 취했지만 배반당하여 교착상태보다도 더 큰 손실을 보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유화정책은 그 때마다 북한의 배반으로 실패하였다. 1994년 10월 정부는 미국과 틱스피리트 훈련 중단에 합의하였고, 11월 8일에는 핵 경험연계정책을 포기하였다 이는 북미 기본합의서 채택, 북일 수교 등 평화적으로 변화라는 한반도 정세를 지원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1994년 11월 10일 조평통 담화를 통해 김 대통령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전쟁 연습을 중지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은 이루어질 수 없다<sup>21)</sup>는 강력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1995년 6월 인도적 차원에서 쌀 15만t을 지원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인공기 게양을 가용해왔다. 쌀 제공이 6. 27 지방선거라는 국내 상황과 일본의 쌀 제공이 임박해오는 국제 상황으로 인해 급박하게 진행되느라 원산지 표시를 거부하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조치였다. 그런 양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공기 게양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해왔고, 이번

20) 김재한,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 갈등과 협상 및 예측 (서울 : 도서출판 한울, 1995). p. 74.

21) 박건영, '문민정부 대북정책의 반성과 국민의 정부의 개혁 방향',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II 발표 논문. 한국정치학회와 동아일보 공동주최. 1998. p. 3.

조치 역시 북한의 배반으로 인한 남한의 참패로 종결되었다.

북한은 이와 같이 남한의 협력 조치에 대해 번번히 배반함으로써 단기적인 이익을 취해 갔다. 대북유화정책은 남한의 양보(협력)가 바로 북한의 협력을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으로 이뤄지리라고 기대했지만, 북한은 협력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좋은 조건을 이용만 하고 말았다. 전향적 조치를 취한 진보주의자들은 협력을 도출할 현실적인 전략을 간과한 채 이상적인 기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고, 정책의 실패는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남한 내에서 이들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만 가져왔다.

### 제 3 절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기초

이는 기본적으로 진보주의적 논의에서 출발한다. 전 정부가 강경론과 유화론을 일관성 없이 왕복해왔던 것과는 달리 전면적으로 유화론을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햇볕론'이라 칭해지고 있다. 햇볕론은 상호주의 원칙과 정경분리 원칙을 축으로 운영되는데, 전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과 북이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것<sup>22)</sup>이며, 후자는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정치적 상황에 연계시키지 않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sup>23)</sup> 특히 상호주의 원칙은 대북포용론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전략으로 남북간에 서로 주고받는 실사구시적 관계를 정착시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sup>24)</sup>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상호주의는 일관성 없이 적용되었다. 비료회담에서는 북한의 보상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잠수함 사건에 대

22) 통일부 통일정책실, 상호주의란 무엇인가, 통일부, 1998. 5. 21.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31c31/c315.htm>

23)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경분리란 무엇인가, 통일부, 1998. 5.21.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31c31/c314.htm>.

24) 통일부 통일정책실, 상호주의란 무엇인가, Ibid.

해서는 지나치게 관개하게 행동했다. 이것은 진정한 상호주의일 수 없으며, 상호주의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틈-포-땃 전략에 기초해야만 한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의욕적인 대북정책 추진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닌 모호성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햇볕론과 상호주의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 4월에 있었던 비료회담은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에 집착한 나머지 걸릴되었다. 햇볕론이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정책이라면 비료 20만t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지급될 수 있는 것이었다. 반면 7월 북한의 잠수함이 동해에서 발견되었을 때는 지나치리만큼 햇볕론을 의식했다. 정부는 잠수정의 제침투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이 대북기본정책이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정경분리 원칙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sup>25)</sup> 잠수함 사건은 시신의 무조건 송환과 북한의 사과로 매듭지어졌다. 안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보여 준 조치는 아무리 햇볕론이 중요하더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햇볕론 또는 상호주의의 카드를 내밀어 북한에 대응하고 있다. 겉으로는 햇볕론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내부적으로 정책적인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각각의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상호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대남 비방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은 남한에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당분간 대남비방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대규모 경제지원이나 연북정책 등이 이루어지지 않자 태도를 바꾸어서 '국민의 정부'도 과거의 문민정부와 다를

---

25) 정용석, 햇볕정책의 부담과 위협, 월간 <자유>, 제 300 호 (서울 : 자유사, 1998. 8). p.22.

것일 없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sup>26)</sup> 국민의 정부는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sup>27)</sup> 당장 통일을 이루는 것보다 한반도 내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남북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도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은 북한이 태도를 바꿀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남한이 추구하는 평화정책이 효과적으로 북한에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이 혼선은 북한이 남한 정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러한 주관적인 인식은 그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협력이 아닌 배반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대북정책은 상호주의라는 보완책이 있지만 한 편으로는 정경분리원칙으로 인해서 북한에게 이용당할 소지가 충분하다. 경제원조만 받아들여 힘을 키우고 남한 내로 파고들어 <대남공산화전략>을 위한 군사적 모험주의만 강화한다면, 도리어 남한이 지쳐 무너질 수도 있다.<sup>28)</sup> 정경분리 원칙의 일환으로 6월 16일 판문점을 통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소 500마리를 제공했고, 금강산 개발 및 관광 외에도 연간 1천대 규모의 자동차 합작조립공장 건설, 연간 20만t 규모의 고선박 해체사업, 북한 내 철근공장 건설, 제 3 국 건설시장 공동 진출, 서해안 공단사업<sup>29)</sup>을 북한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정경분리는 북한이 대남정책을 바꾸지 않고도 정경분리를 통해 남한의 민간기업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26) 김갑권, 정경분리원칙과 남북관계, <극동문제>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98, 7), p. 33.

27)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기조 : 홍보 해설자료, 1998. 4. 7.  
<http://www.unikorea.go.kr/cgi-kr/srch/ns.cgi?31c31/c313.htm>.

28) 정용석, Ibid. p. 17.

29) 김국신, 정주영씨 방북과 남북 민간교류 전개방향, 월간 <통일> (서울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8. 8), p. 18.



## 제 IV 장 새 정부의 대북정책 사례분석 - Case Study

### 제 1 절 남북비료회담

지난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비료지원을 위한 남북차관급회담은 3년 9개월만에 재개된 남북 당국간 고위급회담이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갖게 되는 남북회담으로 온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입증되었었다. 더구나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의한데다 남한 정부도 비료지원의사를 갖고 임했기 때문에 회담의 성공과 남북간 평화적 분위기 조성에 대한 들뜬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국민적 여망과 상관없이 실패로 귀결되었다.<sup>30)</sup>

회담의 실패는 전술한 바 있듯이 상호주의에 기인한다. 틈-포-텃에 따르면 맨 처음에는 배반해서는 안 된다. 즉 상대방의 행동에 관계없이 행위자는 협력해야 한다(nice). 이것은 협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세현 대표는 "북측이 희망하는 비료지원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측의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담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남북간 게임이므로 남한은 일단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협력을 취했어야 했다. 남측의 부대조건 제시는 북한이 다음 게임에서 흔쾌히 협력하도록 하는데 장애가 됐음은 물론이다.

이것은 평화를 표방하고 나선 새 정부의 평판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평판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협력을 취했을 때

---

30)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당국대표회담, 통일부, 1998. 7.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3k31/c311.htm>.

다음 게임에서 배반으로 독단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역시 협력함으로써 상호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상대방의 협력을 유도해 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먼저 선물을 공개하고 전달해야 자신도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북한에게 남겼다.

보상의 동시교환은 게임이 단 한 번에 국한된다면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 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행위자들 간에 복수의 게임이 존재하게 되며, 그들의 행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보상의 동시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날 뿐이다. 이와 같이 보상의 동시교환을 전제로 하는 상호주의를 '동시적 상호주의'라고 명명하겠다. 현 정부의 상호주의는 살펴 본대로 동시적 상호주의에 속한다. 이것은 배판 것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같은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보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보복이란 본질적으로 협의에 의해 동시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동시적 상호주의는 상대방의 배반 행위를 응징하는 방법을 걸여한 것으로 불완전한 상호주의<sup>31)</sup>인 것이다. 진정한 상호주의는 상대의 배반에 대해 보복할 수 있어야 한다.

비료회담에서 보여진 또 다른 문제는 협상자들이 회담을 단회성 게임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게임이 이어지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성과를 얻으려고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었다. 연속된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처럼 게임이 무한히 반복될 경우 행위자들은 한 번의 배반을 통한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하게 된다. 협상의 안전을 분화시켜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게임을 할수록 협력

---

31)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완전한) 상호주의(reciprocity)는 '한 행위자의 행동이 썩에는 썩으로 썩에는 썩으로 대하는 것처럼, 상대의 이전의 행동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곳에서 대략적으로 대등한 가치가 교환되는 것'이다. 이호재, 신자유주의 국제협력이론에 관한 연구 : 상호주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2). pp. 42-44. 참조.

의 가능성은 커지는 것이다. 한 번에 많은 것을 해결하려는 패키지 제안 (package proposal)<sup>32)</sup>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게임의 수가 적을수록 협력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배반에 대한 응징의 기회도 감소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이러한 인식은 틱-포-택의 실행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틱-포-택은 상대방이 이전에 행한 행동을 바탕으로 다음 게임에서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회성 게임 속에서는 행위자의 행동이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틱-포-택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진정한 상호주의의 실현은 요원해지게 된다. 회담에서 협상자가 해야 할 일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만큼 당신들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sup>33)</sup>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담에서 성의를 보여주면 우리 역시 다음 회담에서 협조할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만일 배반을 한다면 상응하는 응징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겁을 주는 일이다. 상대방이 배반에 따른 피해보다 협력에 따른 보상이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두 행위자 간에 협력은 지속될 것이다.

남북비료회담은 초기의 평화구축 실패로 햇볕론의 의미를 희석시켰으며, 불완전한 상호주의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남북관계를 협력으로 이끄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 제 2 절 잠수함 사건

남북비료회담으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남북관계는 정부가 정경부리원 척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다시 화해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6월 16일 소 500마리틀 이끌고 민간인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 입북한 사건은 북한에 대한 장미빛 환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그 기운이

32) 김재한, Ibid. p. 75.

33) 장인덕,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31c31/c319.htm>

채 가시기도 전인 6월 22일 동해에서 북한의 잠수정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남한의 양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배신 행위이다.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건과 같은 배반 행위는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그러한 결과는 당시 남북관계를 살펴봤을 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약 5개월 간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는데 실패했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회성 게임으로 인식되는 죄수의 딜레마 상태였다. 남한이 협력하든 배반하든 북한은 배반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적대적 대남 정책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남한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다 할지라도 그들이 인식하기에 문민정부와 다를 것이 없는 상태이고, 정권유지가 시급한 북한은 대남적대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다.<sup>34)</sup> 그리고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교류와 군사안보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남한의 정경분리원칙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으므로 잠수함 사건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이었던 것이다.

잠수함 사건 처리 역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상호주의는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였다. 배반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용서(forgiving)와 보복(provokable or retaliatory)의 두 가지가 있다. 이번에 정부의 대응은 용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의 영해에 침투하고서도 사과에 준하는 간단한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북한은 당당한 입장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남한은 잠수함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관대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잠수함의 목적이 대남 간첩 침투용인지 단순한 항해용인지가 밝혀져야 한다는 신중함을 보였다. 이것은 과거 정부들이 즉각

---

34) 전현준,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능성 전망', 월간 <북한>. (서울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8. 8). pp. 37-38.

적으로 반발하여 사건을 감정적으로 몰고 간 것에 비해 상당히 성숙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사건 다음날인 23일 평양 방송을 통해 북한 잠수정이 “기계 고장으로 조난 된 후 통신이 두절돼 선원들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됐다”<sup>35)</sup>는 보도에 대해서도 의심 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물론 오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연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용서는 다음에 이와 같은 배반이 재발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징하리라는 믿음만한 위협<sup>36)</sup>이 수반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는 미래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과거 행동에 대한 사과 요구였다. 북한은 다음 배반에 대해서도 사과와 같이 매우 경미한 조치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므로 유사한 행동은 이후에 더 계속될 것이다.

또 다른 조치는 즉각적인 국가의 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이상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서야 마땅하다. 결국 게임은 상호배반으로 귀결되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지만 남한만 배반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응징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배반 행위에 대한 위협적 조치로서 예방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요구한 조치는 보복이라고 할 수 없는 지극히 미약한 수준의 것이었다. 이번 게임의 결과는 남한은 협력하고 북한은 배반하는 최악의 경우(CD)가 되었다.

### 제 3 절 상호주의의 문제

앞의 두 사건을 분석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상호주의원칙

---

35) 정상현, '동해 잠수함 사건과 남북관계 전망', 월간 <통일한국>,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1998. 7). p. 52.

36) 김우상, 新한국책략, p. 103.

이다. 상호주의는 원칙적으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말았다. 정부는 비료회담에서는 너무 경직된 태도를 보였고, 잠수함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처리했다.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최초의 회담인 비료회담에서는 협력을 위해 다소의 손해도 감수했어야 했고, 잠수함 사건과 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나타난 상호주의는 원칙 없이 적용되어 원래의 의미를 잃고 말았다. 결국 남북관계는 한치이 진전도 없이 과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한 상호주의는 진정한 상호주의<sup>37)</sup>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동시 교환적 성격을 띄고 있다. 남한은 상호주의를 주장하면서 북한에게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즉 전제조건이 이루어져야 남한도 행동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비료회담에서 우리측은 비료지원 문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산가족 문제, 특사교환 문제, 기본합의서 개선 방안과 연계 토의되어야함을 강조했다.<sup>38)</sup> 여러 사안이 동시에 해결되는 것이 상호주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괄 타결의 협상 방식은 게임의 수를 단축시켜 미래의 협력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당장 현 상황의 협력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상호 이해와 호혜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실천해 나가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짚는다는 입장<sup>39)</sup>은 상호주의를 동시 교환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이 되어버렸다.

두 번째는 보복조치가 걸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호주의를 '대북 지원 등 우리측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북한도 일정한 수준의 상응

37) 김대중 정부가 취한 상호주의와 구분하기 위해서 '진정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뜻은 각주 32) 참조.

38)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Ibid.

39) Ibid.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sup>40)</sup>고 규정함으로써 보상만을 상호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잠수함 사건과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시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상호주의가 남북협력을 유도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북한의 배반 행위가 엄청난 기대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시켜 버린 셈이 된다. 북한의 배반에 대해 남한이 적절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없기에 북한은 서슴없이 배반행위를 행할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니는 동시적 상호주의는 북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도 못했고, 우리의 대북정책에도 혼란을 가져와 내부적인 반대 여론마저 초래하였다. 그러나 상호주의는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전략임에는 틀림없다. 동시적 상호주의의 단점을 극복하여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바로 틈-포-텃 전략이다.

---

40) 통일부 통일정책실, 상호주의란 무엇인가, Ibid.

## 제 V 장 대북정책을 위한 대안적 전략 모색

### 제 1 절 틱-포-택의 이행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대방이 추한 행동에 따라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최초에는 비협조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상대방의 배반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 게임이 배반으로만 진행되는 메아리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아리 효과는 첫 게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가 배반이라는 전략을 택했을 때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가 정착, 유지되기 위해서는 배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평판(reputation)

행위자의 인식은 이해관계를 결정한다. 게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행위자가 상호협력보다는 상대적 이득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만약 한쪽이 상대방이 배반을 더 선호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면, 그 자신 또한 가장 나쁜 경우인 CD를 피하기 위해 배반 전략을 택하게 된다.<sup>41)</sup>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배반 전략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협력을 추구한다는 평판을 얻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주관적인 믿음은 상대방이 전략을 행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로 작용한다. 자칫하면 오판이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평화에 대한 평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반에 대해서는 보복한다는 평판을 얻는 것도 상대방의 배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결국 행위

---

41) 김우상 譯, Ibid, p. 415.



자는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자신에 대한 배반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한 것이라는 평판을 얻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 2. 미래의 투영(shadow of the future)<sup>42)</sup>

미래의 투영은 미래가 현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현재의 보상과 비교하여 미래의 보상이 높게 평가될수록 현재의 배반 동기를 감소시키는 원인을 설명해 준다. 즉 다음 번에 자신에 대한 보복이 예상될 때 행위자는 현재의 선택에서 배반이 아닌 협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엑슬로드의 미래의 투영이 협력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건들을 정리하였다.<sup>43)</sup>

(1) 장기적 전망 : Long time horizons

(2) 이해관계의 규칙성 : Regularity of stakes

(3)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정보의 신빙성

: Reliability of information about the other's actions

(4) 상대방의 행위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재빠른 반향

: Quick feedback about changes in the other's actions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 전망과 이해관계의 규칙성 간의 결합이다.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 장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확신과 더불어 엄격한 티트-포-탯에 의해 행동이 규칙적으로 진행되리라는 것이다. 게임이 한 번에 그치거나 그 종점이 예측될 경우 행위자는 언제 배반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알게 된다. 하지만 게임이 무한히 반복되는 연속적인 것이라면 배반에 따르는 미래의 투영이 어느 시점에서든 존재하므로 배반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배반 행위는 배반 행위들, 협력 행위는 협력행위들 초래한다는 규칙이 정확하게 적용된다면 현재의 협력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42) Ibid, pp. 418-422. 및 이호재, 앞의 논문, pp. 34-35. 참조.

43) 김우상 譯, Ibid. p. 419 및 Mansbach, Ibid. p. 185. 참조.

것을 알고 상호협력이 궁극적으로 이익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행위자는 현재 시점에서 협력을 하게 된다.

미래의 투영이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 때, 그 전망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정보의 신빙성은 곧 미래의 신빙성을 연결된다. 신빙성 여부에 따라 현재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믿을 만한 정보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모든 판단은 결국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에 의지하는 데, 국제제도 또는 국제레짐은 그 내부의 제도와 규칙으로 통해서 행위자의 행동을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 3. 실행 능력

평판과 미래의 투영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실행 능력도 결국은 행위자에 의해 위협적으로 인식될 때 예방효과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상대방의 배반에 대해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능력을 갖추는 것에 초점을 둔다.

전략의 실행은 협력 즉, 상대 행위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배반에 대해 보복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상을 줄 수 있는 능력과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전자는 주로 경제력에 해당될 것이다. 북한이 비료제의를 해음으로써 회담이 제게된 것은 우리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북한은 자신의 화해 제스처에 합당하는 경제적인 보상을 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이러한 보상능력은 상호협력에 대한 미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협력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한편 보복 능력은 군사력과 국제질서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교력에 바탕을 둔다. 기본적으로 자국을 수호할 수 있는 군사력은 상대의 배반(군사적 행

위의 경우)에 대한 피해를 완충시키는 기능을 한다. 100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구가에 대한 10의 군사력을 지닌 국가의 배반은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배반에 대한 보복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므로 100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상대방의 배반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제도나 레짐을 통해 상대국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배반을 한 행위자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거나 경제봉쇄정책을 받거나 또는 배반당한 국가의 동맹국으로부터 군사적인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직접 힘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약소국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 제 2 절 순차적 상호주의

순차적 상호주의는 전술한 동시적 상호주의의 단점을 틸-포-텍 전략으로 극복하여 보완된 개념이다. 순차적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핵심은 행위자들의 행동이 연속되는 게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탁구공이 왔다갔다 하듯이 행위자들은 순차적으로 행동을 주고 받는다. 물론 게임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많은 안전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게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결과가 다른 게임에도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이익증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순차적 상호주의는 틸-포-텍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북한의 비협조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히 응징하고, 협력적 조치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마련하고 북한도 이 규칙에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다. 결국 상호주의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틸-포-텍 전략을 잘 이행했는가에 달려 있다.

평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가홍보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평화의지를 널리 알려 국제적인 지지를 얻어 정책에 힘을 실어 주고, 북한

에게 협력에 대한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의 대북정책이 이전과 다를 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주의는 반복되면서 양국간에 협력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전의 대북정책과는 목적을 달리하는 현실적인 정책이다. 효과적인 홍보는 국민으로부터 합의를 도출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다. 국민적인 합의 형성은 우리의 평판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다시 환류된다.

그리고 순차적 상호주의는 보복과 보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안보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안보가 위협당하게 되면 상호주의는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책도 훌륭하다고 할 수 없다. 그만큼 국가안보는 중요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 우리에게 보상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더 이상 우리와의 게임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협력이 정착되었다 해도 미래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적당한 시기에 다시 배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투영이 길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보다 지속시키고, 빈도를 늘리는 노력<sup>44)</sup>이 필요하다. 평판의 확립과 보상 능력의 신장으로 귀결되는 상호주의원칙이 다시 미래의 투영을 길게 하여 이는 상호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영향을 미친다. 결국 앞서 서술한 노력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제 3 절 햇볕론

여기서 언급한 햇볕론은 틈-포-햇 전략으로 무장한 상호주의가 뒤받침하고 있는 햇볕론이다. 햇볕론과 상호주의가 지금까지 상호 모순적으로 현실

---

44) 이호재, Ibid. p. 34.

에 적용되었는데, 이는 효과적인 전략이 없었던 탓이다. 그러나 햇볕론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매우 높다. 민주평통이 교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확고한 안보가 보장되는 가운데 햇볕론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93.4%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sup>45)</sup> 국가 안보와 햇볕론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안보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햇볕론은 일변도적인 유화책도 강경책도 지양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한계는 이미 밝힌 바와 같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염원하는 마음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호되게 혼을 낸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란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칭찬해 주어야 다음에도 그와 같은 좋은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햇볕론은 대북정책의 커다란 기조로서 북한을 협력으로 유도하여 상호이익의 증진을 통해 공존공영하자는 것이다. 한편 상호주의는 그 실천적 방법으로 햇볕론이 성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채찍과 당근을 때때로 섞어주는 것이 필요하다.<sup>46)</sup>

---

45) 민주평통, 1998. 7. 20.

46) Richard. W. Mansbach, *The Global Puzzle Issue and Actors in World Politics*, (Boston : Houghton Mifflin, 1994). p. 292.

## 제 VI 장 결 론

대북정책은 '민족중심주의 논리'와 '국가중심주의 논리'<sup>47)</sup>의 범위 안에서 시계추처럼 왕복되어 왔다. 당연히 대북정책은 극단적으로 추진되었고, 두 시각의 갈등은 태생적인 것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두 시각이 상호배타적인 것만은 아니다. 북한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넓은 마음으로 한민족임으로 잊지 말아야겠지만, 국제관계에서는 북한도 하나의 단일한 행위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국제무대에서는 이익을 좇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것은 남과 북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나 남과 북은 서로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한은 평화, 화해, 협력을 실현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도 남한보다는 그 의지가 미약하지만 최소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자세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단회성 죄수의 딜레마 상태를 무한히 반복되는 게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가능성을 현실로 옮겨오기 위해서 남한에게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 평판을 구축하고, 보상 및 보복 능력을 함양하고, 미래의 투영을 증대시켜서 틈-포-택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안에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관성을 상실하면 곧 북한이 이 기회를 이용할 것이고, 이는 국가의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의 비판을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원칙이 확립

---

47) 최완규, Ibid. '민족중심적 논리'는 북한을 민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데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 정책을 추구한다. 반면 '국가중심적 논리'는 북한을 적국으로 인식한 데 기초하여 북한 지배세력의 무력화 내지 청산은 통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햇볕론은 성공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달성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상호주의와 햇볕론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 틈-포-틈 전략을 통해서 남북의 상호협력을 유도해내는 정책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우상, 新한국책문 (서울 : 나남출판, 1998)
- 김우상 외 7인 共譯, 국제관계론강의 I. (서울 : 한올아카데미, 1997).
- 김재한,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 갈등과 협상 및 예측 (서울 : 도서출판 한울, 1995) 이호재 譯, 한스 모겐소 著, 현대국제정치론 Politics Among Nations. (초판 5쇄 : 서울 : 법문사, 1993).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 나남출판, 1996).
- Charles Kegley, Jr and Eugene Wittkopf, World Politics : Trend and Transformation, 6th.,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7).
- Richard. W. Mansbach, The Global Puzzle Issue and Actors in World Politics, (Boston : Houghton Mifflin, 1994)

### 2. 논 문

- 박건영, '문민정부 대북정책의 반성과 국민의 정부의 개혁 방향',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II 발표 논문, 한국정치학회와 동아일보 공동주최, 1998.
- 이호재, 신자유주의 국제협력이론에 관한 연구 : 상호주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2)
- 최완규, 'Icaruse의 비운 :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II 발표 논문, 한국정치학회와 동아일보 공동주최



### 3. 정기간행물

김갑철, 정경분리원칙과 남북관계, 〈극동문제〉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98. 7)

김국신, 정주영씨 방북과 남북 민간교류 전개방향, 월간 〈통일〉 (서울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8. 8)

전현준,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능성 전망', 월간 〈북한〉. (서울 :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1998. 8)

정용석, 햇볕정책의 부담과 위협, 월간 〈자유〉, 제 300 호 (서울 : 자유사, 1998. 8)

정상현, '동해 잠수함 사건과 남북관계 전망', 월간 〈통일한국〉.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1998. 7).

민주평통, 1998. 7. 20.

### 4. 인터넷

강인덕,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31c31/c319.htm>

통일부 통일정책실, 상호주의란 무엇인가, 통일부, 1998. 5. 21.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31c31/c315.htm>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경분리란 무엇인가, 통일부, 1998. 5.21.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31c31/c314.htm>.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기조 : 홍보 해설자료, 1998. 4. 7.

<http://www.unikorea.go.kr/cgi-kr/srch/ns.cgi?31c31/c313.htm>.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당국대표회담, 통일부, 1998. 7.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3k31/c311.htm>.

How to increase co-operation through Tit-for-tat.

<http://newciv.org/GIB/BI/BI-36.HTML>.

The Prisoner's Dilemma, 1995.

<http://www.spectacle.org/995/pd.html>.

Prisoner's Dilemma.

<http://opus.ncifcrf.gov/~toms/prisoner.html>.

Social Evolution, 1997.

[http://bionet.edu.people/barrylab/public-html/classes/animal-behavior/SOCIAL.HTM #anchor792588](http://bionet.edu.people/barrylab/public-html/classes/animal-behavior/SOCIAL.HTM#anchor792588).

Robert Axelrod, Complexity of Cooperation Web Site : Citation Classic Commentary, 1992.

[http://pscs.physics.lsa.umich.edu/software/cc/ECHome/ECCitation Classic.html](http://pscs.physics.lsa.umich.edu/software/cc/ECHome/ECCitationClassic.html).

# 사이버 세대의 의식구조특성과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성명: 장 은 영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 목 차 〉

- I. 서론
- II.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III. 사이버세대의 통일의식
- IV. 사이버세대의 통일교육 활성화방안
- V. 결론



# 제 I 장 서 론

## 1. 연구목적

1945년 남북한이 분단된 이래로 갈등적 대결 구조속에서 약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서로 민족적 동질성이 상실된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이질화를 방지하고 동질성에 기반을 둔 평화통일은 「6·25전쟁」같은 민족적 비극을 경험한 세대에 의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문제의 복잡한 환경속에서 남북통일은 장기적 문제로서 8·15해방이나 6·25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들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통일은 기성세대에 아닌 미래를 이룰 청소년들, 즉 사이버세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sup>1)</sup>

남북통일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이버세대들은 8·15해방이나 민족분단의 비극을 체험하지 못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려온 세대로서 기성세대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이질감내지는 적대감이 많이 회색되어 있다. 그러나 사이버세대들이 앞으로 사회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주도함으로써 남북통일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북통일문제를 기성세대 중심으로 논의하여 왔기 때문에 사이버세대들은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 무관심 속에서 상당히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특히, 과거 반공교육을 통하여 남한의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적 비판을 하면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감정

---

1) 박성희,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92」,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p.1.

과 경계성을 가지도록 반공교육에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사이버세대들은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북한의 실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북한을 한 민족이기 보다는 붕괴시켜야 할 집단으로 간주하는 적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물질만능주의 풍조와 외래문화의 전래와 전통가치관이 혼란해짐에 따라 사이버세대들은 국가의식, 민족의식, 통일 의식이 희박해져 현재의 분단 시대에 안착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그들은 통일을 민족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기성세대들이 책임질 문제로 혹은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상당수의 사이버세대들은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통일에 대한 신념, 기대와 가능성, 의욕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이버세대들이 갖는 의식구조나 성격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사이버세대들의 이러한 의식성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사이버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통일을 추진할 때 남북통일문제는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이버세대들에게 분단상황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나아가 남북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통일에 대한 주체적 능력과 실천적 역량을 성숙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통일세대인 사이버세대들의 통일의식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즉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사이버세대가 통일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sup>2)</sup>

---

2) Ibid., pp.2-3.

## 2.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분석방법과 설문분석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문헌분석방법은 기존의 통일원 및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및 연구논문과 일반 대학의 학위 논문 및 통일에 관련된 연구소에서 배포한 여러 연구논문을 참고하였다. 또한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직접 보여주는 여러 설문방법을 사용한 연구논문을 참고하였다.

둘째 설문분석방법은 사이버세대의 통일문제와 통일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충북대학교 학생들에게 통일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이버세대의 통일문제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여 설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3. 연구범위

본 논문은 제 I 서론에서는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범위를 살펴보았으며, 제 II 장에서는 통일교육과정, 통일교육현황을 살펴보고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통일교육의 목표변화와 중고등학교를 포함하여 대학교의 통일교육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제 III 장에서는 통일세대인 사이버세대의 통일의식에 관한 설문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이미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사이버세대에 대한 통일교육과 비교하여 우리의 통일교육의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통일교육과정, 통일교육현황, 통일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이버세대를 위한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천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V 장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 제 II 장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1. 통일교육의 내용

#### 1) 통일교육의 변화 과정

통일교육은 시대, 이념, 상황논리에 따라 명칭이 변화되어 사용되었다. 해방이후 통일교육은 반공교육, 멸공교육, 이념교육, 안보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대비교육 등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1945년 해방과 시작된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갈등은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통하여 남북은 각자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관계는 통일을 위한 화합보다는 대결과 경쟁의 논리가 극단적으로 진행되었고, 통일교육도 이러한 남북한간의 이데올로기 우월성 확보에 치중되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와 남북대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종래의 반공교육을 개편하자는 요구가 사회전반에서 제기되면서부터 통일교육은 적극적인 통일대비교육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 (1) 반공교육시기(1945-1987)

해방이후 남북한의 정부가 수립되자 남한 정부는 북한을 통일시킨다는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추구하면서 반공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전쟁이후 반공교육을 더욱더 강화하였다. 해방이후 우리의 통일교육은 반공론에 근거하여 반공교육, 승공교육, 멸공교육 등 표면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모두 반공교육에 포함될 수 있다. 반공론적 교육은 북한의 이념, 체제의 한계와 모순에 대한 비판과 부정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남한의 이념,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교육은 북한에



대한 화해와 수용, 남한과의 협력, 통합과 같은 민족공동체적인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대결에서 적대감과 적개심을 고취하는데 더 큰 목표를 두었다.<sup>3)</sup> 즉, 이 시기의 통일교육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의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안보를 유지하려는 체제유지적 기능에 목적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통일·안보교육시기(1987-1992)

한반도 분단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실시되었던 통일교육은 반공교육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통일을 주장하기보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통일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운동이 통일운동과 결부되어 반공일변도의 통일교육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국제정세의 탈냉전적인 경향과 종래의 반공교육이 반공과 통일 사이에서 상호모순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일교육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sup>4)</sup> 이러한 변화에 편승하여 기존의 반공교육에 대한 규범적 접근이 시도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통일·안보교육이 시작되었다. 통일·안보교육은 기존의 반공교육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통일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통일·안보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통일과 안보를 강조하게 되었다.

## (3) 통일교육시기(1992-현재)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통일환경이 변화되어 통일·안보교육은 통일교육으로 개칭되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 극복의 차원을 넘어

---

3) 고성효,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11-12.

4) 또한 이러한 반공교육은 적대감과 증오심을 유발시킴으로써 반공교육이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문용린 외,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한국교육개발원, 1988. p.15.

적극적으로 통일방안을 모색하고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적 동질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적대적 반공교육은 통일과 화해, 북한에 대한 합리적 이해 등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현 단계의 통일교육은 수세적 입장에서 실시된 반공교육과는 달리 통일달성 및 통일 후 문제까지도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 입장에서 실시되고 있다.<sup>5)</sup>

## 2) 중·고등학교의 통일교육

### (1) 중학교의 통일교육

중학교 통일교육은 도덕교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도덕교과의 “국가·민족생활”영역부분에서 통일교육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통일교육 관련 내용은 점차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자유롭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하여 통일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민족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도덕교과 통일관련 내용은 분단 이후 계속되어 왔던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회복, 민족공동체의식의 고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민족공동체교육은 문화·전통적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민족의 주체성 및 통일의지를 종래의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통일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들과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 민족이 이룩하고자 하는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보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통일대비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통일과 안보 중에서 통일에 많은 비중을 두되 현실적인 안보의

---

5)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39-45.

중요성도 고려할 수 있는 균형된 시각을 갖도록 하였다.6)

〈표 1〉 중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관련 학습내용

교과목	생활 영역	1학년	2학년	3학년
도덕	국가 민족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의 발전과 문화 창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성과 민족 정기,</li> <li>- 민족문화의 우수성,</li> <li>-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li> </ul> </li> <li>▲ 애국심과 민족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민족과 나와의 관계,</li> <li>-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li> <li>- 국가의 상징물에 대한 사랑</li> </ul> </li> <li>▲ 올바른 애국애족의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조상들의 나라</li> <li>- 거래사랑,</li> <li>- 민주시민으로서의 거래 사랑</li> <li>- 중학생으로서의 나라</li> <li>- 거래 사랑</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분단의 원인과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분단의 원인과 과정</li> <li>- 민족 분단과 남북한의 갈등</li> <li>- 민족 분단의 역사적 교훈</li> </ul> </li> <li>▲ 북한의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정치적 현실</li> <li>- 북한의 경제적 현실</li> <li>- 북한의 사회·문화적 현실</li> </ul> </li> <li>▲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환경의 변화</li> <li>- 남북한 통일 정책</li> <li>- 민족통일의 당면과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공동체의 번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람직한 민족 공동체 의식</li> <li>- 민족의 동질성 회복</li> <li>- 민족공동체의 번영과 해외 동포</li> </ul> </li> <li>▲ 통일국가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미래상</li> <li>- 통일국가 실현의 과정</li> <li>- 민족 화합과 도덕 공동체</li> </ul> </li> <li>▲ 세계속의 한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공동체의 위상 제고노력</li> <li>-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li> <li>- 통일과 번영을 위한 노력</li> </ul> </li> </ul>
주 당 수업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자료 :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7. p.52.

6) 황병덕, Ibid., pp.49-51.

## (2) 고등학교 통일교육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윤리 과목의 내용 체계에 통일 과제 영역이 포함되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 민족 통일의 조건, 통일 이후의 전망을 다룬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남북 단절에서 비롯된 민족적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인식하고 통일 과제후 달성을 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국토와 민족이 분단된 이유와 배경, 통일의 당위성과 그 의미를 알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 정책과 통일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문제도 생각하도록 한다. 동시에 통일에 대해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에서부터 통일 장애요인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야 할 필요를 인식시키고 있다. 그리고 통일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예상된 통일의 과정,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통일 과제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 3)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대학 통일교육은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과 더불어 통일교육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이 주로 비전문가 교육을 담당한다면 대학교 통일교육은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교육 부문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통일교육을 심화시키는 이중적 기능을 맡고 있다.

### (1) 대학의 통일교육의 변화

과거 대학의 통일교육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과목은 국민윤리 교과라고 할 수 있다. 1968년 정부는 국민윤리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채택한 것을 각 대학에 권장하였고 2년 후인 1970년 국민윤리 교과목이 설치되었고,

〈표 2〉 고등학교 윤리교과에서의 통일교육 관련 학습내용

교과명	단원	대단원	주제
윤 리	국 가 윤 리	가. 국가 이념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본질과 국가관.</li> <li>◦ 이념의 유형과 전개.</li> <li>◦ 국가 발전의 이념의 역할.</li> <li>◦ 공산주의 쇠퇴와 미래의 이념</li> </ul>
		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 의식과 민족주의.</li> <li>◦ 민주주의 이념과 특징.</li> <li>◦ 민주주의의 원리와 생활양식.</li> <li>◦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윤리</li> </ul>
		다. 국제관계와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관계의 본질과 변화</li> <li>◦ 국제 관계에서의 윤리성</li> <li>◦ 국제화 시대에서의 우리의 자각</li> </ul>
	통일의 과제와 전 망	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li> <li>◦ 남북한의 통일관과 통일정책</li> <li>◦ 남북한 통일의 장애요인</li> </ul>
		나. 민족 통일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질서와 통일환경의 변화</li> <li>◦ 통일국가 실현의 전제조건</li> <li>◦ 통일의 과정과 우리의 자세</li> </ul>
		다. 통일 이후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국가의 미래상</li> <li>◦ 미래사회의 한국인상</li> <li>◦ 국제사회에서의 통일국가의 역할</li> </ul>
주당 수업시간	1시간		

자료: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53.

교육법 시행령 제119조를 개정하여 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1988년까지 국민윤리는 '국책과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국민윤리 교과목은 학생들의 필수과목이 되어 이념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1989년에 국민윤리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채택할 것이 각 대학의 재량에 맡겨지자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민윤리를 교양 선택과목으로 개편하였

다. 1990년에 문교부는 대학 국민윤리 과목의 존폐여부를 대학의 자율에 일임하였고, 이를 계기로 대학 교양 과목에서 국민윤리라는 과목명은 비록 사라지게 되었지만, 이를 대체할 과목들이 점진적으로 개설되었다. 이 가운데 통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과목들으로는 '북한 정치와 통일 문제', '현대 민주주의론', '현대정치와 이데올로기', '북한학', '한반도 통일론' 등이 있다.<sup>7)</sup>

국민윤리 교과목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대학 통일교육은 엄격한 의미에서 통일교육보다는 반공 교육이고 안보교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양 필수로 선정하면서 까지 반공이나 안보교육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던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0년대부터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북한 바로 알기'운동은 학생들에게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것이 재야 통일운동의 시초가 되었다는 사실은 기존의 반공, 안보 교육은 지극히 비효과적이었으며 설득력도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8)</sup>

## (2) 현재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 ① 북한학과의 개설

국민윤리 교과목의 폐지이후 교양과정이나 전공과목에서 부분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되었으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통일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일차적으로 몇몇 대학에서 「북한학과」가 개설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4년 동국대학교를 시작으로 명지대학교, 관동대학교, 고려대학교에 「북한학과」가 설립되어 북한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와 강의가

7) 최완규 외, 「21세기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교육부, 1996, p.203.

8) 이우영, "대학통일교육의 문제점", 「통일연구논총」 제6권1호, 1997, pp.55-56.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부의 북한학과는 아직 초보단계이지만 특수 대학원의 북한학 혹은 통일정책 관련 교육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1998) 서강대학교의 공공정책대학원을 비롯하여 총 13개 대학에서 통일관련 특수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북한관련학과를 개설한 대학의 교과과목은 대부분 북한정치와 체제 그리고 통일정책에 치중되어 있다. 전공기초로 정치학이나 정책학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데올로기 연구, 조선로동당 연구, 북한 지도나 연구 등 북한 정치와 관련된 과목이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에 경제를 다루는 교과목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북한사회나 북한문화, 북한의 일상생활을 다루는 과목은 더욱 적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북한학과는 북한정치학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학과가 북한 정치나 체제문제 등에 치중된 교과과정을 갖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북한학과가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주도로 개설되었고 인원구성도 정치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9)</sup>

## ② 일반교양과목으로서의 통일교육

북한학과가 독립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통일관련 교과목이 교양과목으로 실시되거나 정치외교학과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통일 관련 교양과목의 중심은 북한의 이해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과목이다. 이러한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한 개관적인 이해를 강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북한 체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강의에 담고 있다. 세부 강의 내용은 학교에 따라 담당하고 있는 학과나 담당 교수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

9) Ibid., pp.57-59.

〈표 3〉 북한학과 교과과정

학교	학과	교과목
동국대	북한학과	정치학개론, 북한개론, 사회주의 체제론, 북한 정치론, 해방전후사 연구, 북한 지도자 연구, 남북한 관계론, 정치이데올로기론, 조선로동당연구, 북한경제론, 주체사상연구, 국제관계론, 북한대외행정제도론, 마르크시즘 변천사, 북한학연구방법론, 북한대외관계, 북한사회론,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북한의 대남정책, 비교공산주의의 정치, 동북정치경제론, 북한군사론, 북한무역론, 조총련연구, 사회주의체제개혁론, 한반도통일론, 한국전쟁연구, 제3세계와 북한, 남북한체제비교론, 분단국통일사례연구, 북한문화교육론, 북한헌법과 법체제
명지대	북한학과	사회과학개론, 최근의 북한정세, 북한학 개론, 한반도와 국제환경, 사회주의체제론, 북한정치론, 남북경협과 경제통합,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남북한관계론, 냉전과 분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북한사회론, 조선로동당사,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북한의 문화와 예술, 동북아 국제관계론, 비교공산주의, 북한의 통상 및 산업정책, 북한경제론, 남북한 통일방안과 평화, 맑시즘의 이해, 북한의 미디어 정책, 사회주의정치경제론, 국제공산주의운동사, 북한의 헌법과 법체제, 주체사상론, 북한행정론, 중·리·북한의 경제협력, 북한의 외교, 비교혁명론, 북한의 개혁과 대외개방, 북한학 연구방법론, 사회주의체제개혁론, 북한의 엘리트와 리더십, 한국전쟁사, 동아시아 정치경제론, 북한의 정치문화와 사회화, 공산체제 붕괴와 그 이후, 통일한국과 체제통합, 김일성 연구, 북한군사론, 분단국 통일사례연구
숭실대 통일정책 대학원	통일정책학과	정책학 원론, 북한학,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북한정치론, 남북한 경제체제연구, 한국정치론, 현대정치이데올로기, 서구사회주의 연구, 분단문제와 통일, 강대국 외교론,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남북관계론, 북한행정론, 남북한 법률연구, 북한 군사론, 북한원전감독, 북한특강
서강대 정책 대학원	북한학과	북한학 총론, 주체사상, 북한정치론, 공산주의론,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북한원전감독, 북한행정론, 북한경제론, 북한사회론, 북한외교론, 북한군사론, 북한문화론, 북한의 대남전략, 북한인민 생활연구, 비교공산주의체제론, 남북한체제비교, 북한체제의 개혁·개척, 북한의 인문지리, 북한의 문화연구, 북한의 문화예술, 북한의 언어, 북한 정치사, 조선로동당 연구, 김일성·김정일리 평전, 북한의 산업구조, 북한의 대외무역,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조총련 연구, 북한헌법과 통치구조, 북한의 교육, 북한의 한국사 인식, 남북한 통일정책비교, 북한의 교육, 북한의 한국사 인식,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통일한반도의 미래상, 동북아 국제질서와 통일외교, 남북한 경제협력론, 통일과정론, 독일통일연구, 북한 특강 I·II

자료 :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통일논총』, 제 6권 1호, 민족통일 연구원, 1997, p.58.



〈표 4〉 대학의 통일교육 현황

과 목 명	강좌수
통일문제·한반도통일론	10
북한의 정치	6
북한의 이해·정치학	14
북한의 정치와 사회	6
북한 경제	1
북한 사회의 이해·북한 문화	13

자료 :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통일논총』, 제6권 1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56.

- 조사 대상 103개교
- • 북한학과는 제외

## 2. 통일교육의 문제점

### 1) 체제우월적 시각의 이데올로기 교육

현재 통일교육은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서 구조나 체제의 차원 및 이념적인 문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반면 일상생활 차원은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즉, 통일 관련 강의가 북한의 이념 체제나 권력구조, 남북한 체제 비교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며 통일 문제에서는 통일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교육을 상세히 살펴본다면 첫째, 북한의 실상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의 현실 가운데서 김일성 부자의 개인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북한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고양시키고, 남한의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에 큰 편견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체제인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기존의 통일교육은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또는 자유주의 체제의

우월성 강조 등 체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통일문제를 체제통합의 문제로 인식한 결과 통일교육에서 남북한 체제비교나 통일정책의 적실성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통합이나 심리적인 차원의 인간통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 즉 북한의 언어의 표현부분에서 북한이 호전적이고 투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나, 외래어의 표기 등에서 우리와 달리 쓰이는 용어들만을 주로 부각 시킴으로써 남북한의 이질화된 모습뿐만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을 호전적이고 어수룩한 집단으로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시각으로만 기술한 것이기에 타당한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교과서에 제시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사진 자료들은 오래되고, 낡은 모습만을 담고 있어 학생들에게 북한을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사회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럼으로써 남한의 국민들은 북한을 매우 빈약한 나라라는 편견을 가지게 되고 결국 북한의 실상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을 친편일몰적인 사회로 본다든지 또한 북한 지도층이 요구하는 주장과 실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은 점이나 북한의 사회제도나 방식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객관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질감을 부추기는 것이다.<sup>10)</sup>

## 2) 통일교육의 편중성

통일교육은 단순히 통일에 관련된 교육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정치, 경제, 산업을 총괄한 모든 체제가 만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이라는 것은 한쪽의 시각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시도가 요청되고 있다.

---

10) 고성효, Op.cit., pp.21-22.

따라서 우리의 통일교육은 한쪽으로 심각하게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다.

첫째, 통일 관련 교과목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넓은 의미에서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강의가 몇몇 존재하지만 어떤 대학은 통일과 관련된 강의를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일년에 한 강좌에 불과하다. 특히, 정치외교학과나 사회학과와 같이 통일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학과가 있는 경우에는 교양으로 통일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공 선택 과목으로 통일과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어 학생들이 수강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과가 없는 학교에서는 통일 관련 교과목을 학생들이 수강할 기회가 거의 없다.

둘째, 사회 전반적인 통일교육이나 대학내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받은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강의내용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개별 전공과목 가운데 통일문제와 관련이 있는 교과목과의 연계성이 매우 부족하므로, 전술했듯이 통일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정치외교학과나 사회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가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통일에 관해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공 계통의 학과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담당교수의 전공에 따라 편향적인 강의를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정치학을 전공하는 교수의 강의는 북한 정치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강의를 가능하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강의는 상대적으로 질적 이해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sup>11)</sup>

### 3) 통일교육의 미흡성

우리의 통일교육은 안보, 체제유지적 입장으로 아직까지 많은 제약을 받

---

11) 이우영, Op.cit., pp.64-65.

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제대로 된 학습자료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교과서 위주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흥미 유발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의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및 통일 환경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통일연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학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북한학과 및 통일교육과 관련된 강좌를 듣는 학생들은 수업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을 자료의 부족으로 꼽고 있다. 의욕적으로 공부를 하려 해도 다양한 자료가 부족하고 또한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도 쉽지가 않다. 자료에 대해서는 교수들 역시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히 원전에 대한 활용이 법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sup>12)</sup>

다음으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수업진행의 불만은 강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강의 내용이 추상적인 것은 일차적으로 시간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학기 안에 북한 사회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북한에 대한 심층적인 강의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능력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을 전공하는 학자일지라도 각각의 고유전공이 있기 마련이고 자신의 전공과 동떨어진 내용을 강의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초빙강의 등이 요청되지만 이 경우 강의의 일관성의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sup>13)</sup>

---

12) 현재 일반인들이 북한에 대한 자료를 가장 쉽게 집할 수 있는 곳은 통일원 산하의 북한 자료센터이다. 그러나 이곳 역시 일람이 1인 10권, 대출은 1인 5권(1주일), 복사는 1인 40매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남기고 있다.

또한 김일성 저작집, 김정일 선집, 주체사상총서 등의 원전은 특수도서로 구분하여 이러한 특수도서는 일람목적과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대출, 복사시에는 특수자료 취급인가중 소지자에 한하는 제약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3) 이우영, Op.cit., pp.62-63.

통일교육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존의 통일교육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교육체제와의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파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왔다. 또한 통일교육과 관련있는 정부부처들 간에도 통일교육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없었다. 또한 정치논리에 따라 통일교육의 흐름이 변하는 등 일관된 체제가 아닌 유동적인 형태였다.

## 제 III 장 사이버세대의 통일의식

### 1. 사이버세대의 정의

#### 1) 사이버세대란

사이버세대란 젊은 세대들의 호칭이었던 '신세대'와 의미상 크게 차이는 없다. 단지 달라진 것이라면 좀더 컴퓨터 및 영상산업에 큰 영향을 받고 그것에 몰입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논해 보기로 하겠다.

사이버세대는 연령구조상 젊은 사회구성원 중에 상당수를 차지한다. 사이버세대란 흔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까지의 나이에 속하는 인구 집단으로서 전체 인구의 39%(10대 19%, 20대 20%)에 이르고 있다.<sup>14)</sup> 또한 이들은 연령적으로 이른바 유신시대인 1972년 이후에 태어나 1980년 광주민주항쟁 뿐만 아니라 1987년 시만항쟁조차 어린 시절에 경험하여 한국현대사에 대한 자각의식이 거의 무감각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세대이다.

그리고 이들은 인구분포상으로도 다수일 뿐만 아니라 가치분 소득이 가장 높은 세대이기도 하다. 자신이 일해서 번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팽창에서부터 이른바 국민소득 만불시대의 풍요를 누린 세대이다. 즉 우리 사회의 갖는 소비성향은 이들이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즐기고 멋내는 소비가 활성화되었다.<sup>15)</sup>

---

14) <http://www.inote.com/~chwlim/15.htm>.

15) <http://www.inote.com/~chwlim/15.htm>.

## 2) 사이버세대의 차별성

사이버세대의 차별성을 위하여 우선 전 세대들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5·60년대의 전쟁세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들은 6·25라는 전쟁 속에서 극도의 궁핍한 상태를 경험하였고 또한 그러한 전쟁의 피해의식 속에서 그들의 모든 가치들은 선과 악으로 구분된 흑백논리 속에서 살았던 세대이다.

다음으로 현재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세대, 즉 7·80년대의 세대들을 살펴보겠다. 그들은 박정희·전두환이라는 군사독재시대의 세대들이다. 이들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시기였으나 이와 아울러 산업사회의 계층 갈등이 뚜렷해지고 확대되었던 시기였다. 이념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사회전반에 팽배해졌고 후반기로 갈수록 더욱 급진적인 저항성을 갖게 되었다.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인 문화수단이 가정에 보급되었고 점점 문화의 기술의존성이 대폭 증대되면서 생존욕구에서 문화적 욕구로 전환되던 시기였다.

마지막으로 90년대 이후부터 나타난 사이버세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시기는 보수적인 정치세력들이 점진적인 개혁이 점차 실효성을 가지게 되었고 진보세력의 정치진출 시도가 계속하여 좌절되었던 시기였다. 아울러 지역감정과 정치적 허무주의의 확대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시기였다.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자본주의적 시장으로 세계가 단일화 되는 동시에 세계경쟁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다양한 세계관들이 다원주의적 공존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혼란과 모색을 거듭하는 시기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전 세대에 나타났던 기술 의존적인 문화 성격이 증대되면서 '차별적 동질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형태들이 자본주의 소비 구조에 포섭된 시기였다.<sup>16)</sup>

## 2. 사이버세대의 기본적인 의식구조

### 1) 기존사회체계에 대한 일탈의식

사이버세대들은 대략 70년대생이 해당된다. 이들은 고도성장기의 산업사회에서 국가의 가족계획에 따른 핵가족화의 영향하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컬러TV를 보며 자라온 세대이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입시교육이라는 획일화된 교육을 통해 개성을 박탈당하였고, 대중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문화생활이 급속하게 확대된 세대이다.

한편으로는 90년대 초반 사회주의의 몰락 등으로 여러 정치사상적 혼동 속에서 과거의 모든 유산들이 철저히 파괴되고 부정되는 현상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결국 과거의 유산들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누리지 못하고 좌절과 불안으로 고뇌와 혼란을 발산하고자 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사이버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사회체계에 대한 저항 및 일탈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70년대 세대들이 당시의 군부독재에 저항했듯이 기존의 것이 대한 저항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사이버세대들에게 있어서 저항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기존의 저항과는 다른 것이다. 즉 그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부조리와 기성의 경직성이었다.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 그들은 폐쇄된 제도권 교육 속에서 느낀 것은 극심한 기성의 권위였다. 이것은 이제 이들에게 역으로 반권위적 개성에 대한 강렬한 저항과 권위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sup>18)</sup>

---

16) <http://www.inote.com/~chwlim/16.htm>

17) 중민청 [터] 편집부, "신세대란 누구이고 신세대란 무엇인가", -현대사교실 자료집 3-, <http://www.inote.com/~chwlim/16.htm>에서 재인용.

18) <http://www.inote.com/~chwlim/16.htm>.



## 2)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사이버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뽐냈다고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이버세대들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점 역시 사이버세대가 특별한 세대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성장해온 환경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과거의 기성세대들은 일반적으로 대가족 혹은 여러 형제들 속에서 그리고 동네나 마을 공동체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요즘의 사이버세대들의 성장은 이와는 매우 다른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다. 당시 핵가족화가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두 자녀 혹은 한 자녀 낳기운동들이 사회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것이 현재의 사이버세대들이기 때문이다. 사이버세대들에게는 형제가 없거나 있어도 하나 정도이다. 그리고 아파트가 보편화되어 가는 도시의 주거 양식에서 성장했으므로 과거와 같이 이웃간에 정을 나누는 공동체적 요소를 거의 겪어보지 못하였다. 또한 점점 전문화의 추세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핵가족화, 개인화, 전문화, 세분화되어 가는 사회환경속에서 성장한 사이버세대가 자기중심적이 되어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sup>19)</sup>

## 3) 뚜렷한 의식이 없는 가치관

전술하였듯이 사이버세대들은 기성의 지배체제에 대해서 많은 반발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세대들 자신들 역시 그러한 지배체제 내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일 뿐 그 체제를 변화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세대들의 저항의식은 결국 기성세대에 대

---

19) 채백, "신세대론에 관한 몇 가지 논의", 『대학 교육』, 1994, p.68.

한 무관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몰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세대들은 자신들이 체제를 변화시킬 적당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완전한 정치적 허무주의로 변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기존 가치관에 대한 이해보다는 새로운 형식의 가치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식을 강하게 내포한다. 하지만 사이버세대의 가치관은 객관적이고 실천적인 가치관에 따른 형성보다는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전개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 3. 사이버세대의 통일외식 설문조사<sup>20)</sup>

#### 1) 조사개요

사이버세대의 통일외식에 대한 설문조사는 충북대 신문이 실시하였다.

- 일 시 : 1998년 5월 26일 ~ 28일
- 장 소 : 충북대학교
- 부 수 : 300부가 배포되어 276부가 회수되었다.

#### 2) 분석

##### (1) 사이버세대는 통일에 대하여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161명인 58%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통일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가 84명인 30%였고, '별로 상관 안한다'가 23명인 8%, 그리고 '통

---

20) 충북대신문, 1998.6.3. 6면.

일이 되면 안된다'가 4명인 1%였다. 88%가 통일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2) 그러면 통일은 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통일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111명인 40%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으로 경제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고 34명인 12%가 응답했다. 그리고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응답은 6명인 9%였다. 그 외에 '국방비 절감'이 6%, '남학생은 군입대에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가 3%, '북한 지역 개발에 따른 실업구제를 응답한 학생은 2%였고, 기타는 6%였다.

통일을 위해 본인이 받게 되는 혜택이 줄어들거나 세금 등을 더 내더라도 '받아들인다'는 응답이 115명인 19%, '기꺼이 받아들인다'가 54명인 19%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가 11명인 3%, '기타'가 17명인 6%였다. 즉 60%이상이 통일을 위한 고통분담을 감수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통일을 위해 본인은 어떤 활동이나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199명인 72%가 '특별히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해 현실적으로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관심이 없다'가 35명인 12%, '북한 관련 정보를 찾아본다'가 16명인 5%, '북한동포돕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가 8명인 2%, '기타'가 11명인 3%로 나타났다.

통일시기에 대하여는 6-10년 사이가 83명인 30%, '11-20년 사이'가 81명인 29%를 차지했고 '21-30년 사이'가 31명인 11%였으며, '1-5년 사이'가 26명인 9%를 차지했다.

통일방식에 대해 '남한이 흡수 통일을 한다'가 141명으로 51%를 차지했고, '1국가 2체제'와 '기타'가 모두 39명으로 14%를 얻었다. 그 외 '양체제를 인정하고 현재 남북 상황을 유지한다'가 38명인 13%를 '2국가 1체제

로 되어야 한다'기 7%를 차지했다.

### (3) 통일후 발생하게 될 사회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문화차이로 인해 갈등이 빚어질 것이다'로 123명이 응답해 44%를 차지했고, '빈부격차로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102명이 응답한 36%를, '통일 후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가 55명인 19%를 차지했으며, '기타'가 9명인 3%,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가 5명인 1%를 차지했다.

### 3) 결 론

설문조사를 통해 사이버세대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은 조사할 당시 우려했던 것보다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통일이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나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은 실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사이버세대의 통일의식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통일의식보다는 다분히 형식적이면서 명분론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일을 위한 통일교육이 지나치게 규범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을, 특히 사이버세대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4. 독일의 사이버세대의 통일교육의 방향

### 1) 독일과 한국의 입장차이

독일은 40여년에 걸친 민족 분단을 극복하고 1990년 통일을 이룩하였다. 동독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가졌던 서독은 많은 희생을 감수한 결과

동독을 흡수·통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독일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한국과 독일은 분단의 원인, 분단국가간의 관계, 민주주의적 정치문화의 성숙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에 관념과 그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서독의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독일의 분단이 극복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통일'보다는 '분단관리'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분단 상태하에서 동·서독간의 교류는 남북한간의 경우에 비교하여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다. 따라서 서독의 통일교육은 이러한 역사적 인식에 기반을 두고 출발하였다.

다음에서 동서독과 남북한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은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상호간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으나 독일은 오랜 동안 인적·물적 교류의 증진으로 민족동질성을 유지하였다. 이렇게 통일장벽을 가지고 있는 남북한은 남북 협상에도 협상성과에 집착하여 빈번하게 교착상태에 빠지는데 그 주요 원인은 남북한간의 이념적 차이와 6.25전쟁과 관련된 깊은 심리적 장벽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다.

둘째, 동서독간에는 체제경쟁에서 서독이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으나 남북한간에는 체제경쟁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흡수·통일이 쉽지 않다

셋째, 페레스트로이카의 동구 확산과 이에 따른 동독국민의 무혈혁명이 동독정부를 붕괴시키고, 독일통일을 급진전시켰는데 남북한간에는 밀로부터의 혁명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동독은 처음부터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독에 비하여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동독은 호네커 정부 이후부터 통독을 포기하고 경제적 실리만을 추구해 왔으나 북한은 무력에서의 우세를 가지고 아직도 적화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등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독일과 남북한은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갈등원인이 없는 독일의 경우는 국내정치에서 이념적·지정학적 장애가 제거되자마자 통일을 위한 희망찬 협상을 시작할 수 있었다.<sup>21)</sup>

## 2) 독일의 통일교육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적인 시민을 기르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다원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어떠한 특수 목적을 위한 인간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특히,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익히고 자신이 당면해 있는 사회적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계몽적인 정치교육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다.<sup>22)</sup> 통일교육은 이러한 정치교육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독일 분단의 역사적 상황과 배경 및 분단실상에 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었고 국민들이 분단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 및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통일교육은 이념적 접근방식이 강화되어 분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서독의 정치교육에 나타난 통일교육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 (1)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통일교육

독일의 정치교육은 주입식 방법이 아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다.<sup>23)</sup> 즉, 그들의 정치 교육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정치 참여 능력과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의 일부인 통일교육도 마찬가지로 통일문제에 대한 지식

---

21) 고성효, Op.cit., pp.18-19.

22) 황병덕, Op.cit., p.16.

23) 고성효, Op.cit., p.16.

의 전달보다는 개인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면서 통일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사회의 가치 및 제도를 이해,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사회·정치적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하여 행동하여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기본정신에 바탕을 두어 서독은 동·서독간의 청소년 상호교류에 주력했다. 서독은 동독에 될 수 있는 한 청소년들을 보내어 동독 청소년들과 공동프로그램 속에서 공동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했고, 토론을 통하여 서독 학생들이 얼마나 자유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가를 확일화한 동독학생들에게 심어 주도록 하였으며, 학교 대 학교, 도시 대 도시의 자매결연을 맺어 동·서독인들의 상호신뢰와 우호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서독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동독인들에게 서독사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이것은 독일이 통일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되었다.

## (2) 분단과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

독일인들은 민족 분단의 실상과 동질성을 확인하면서 이산과 분단을 극복하려는 구체적 노력이 교육을 통하여 나타내었다. 이들은 우선 학교수업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분단의 현대사와 현실을 교육시켰다. 여기서 그들 자신의 역사적 성격과 분단의 원인 및 통일의 장벽 등을 학생들 스스로 느끼게 하였다.<sup>24)</sup>

이러한 독일인들의 통일교육정책은 70년대에 들어서 사민당 정부에 의한 신동방정책이 추진되자 활발히 전개되었다.<sup>25)</sup> 이 결과 독일문화교육성

---

24) 임정택, "통일 지향적 남북한 동질성 회복방안(교육, 경제, 언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6, pp.61-62.

25) 교육개발연구원, 「독일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연구」, 교육개발연구원, 1993, p.110. 민족통일연구원, "독일의 정치교육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서의 시

협의회는 독일민족의 통일의를 계몽·발전시키려는 목적하에 독일문제 교육지침(Die deutsche Frage im Unterricht)을 합의· 발표하였다. 독일문제 교육지침은 기본적으로 독일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달성될 전망이 없다고 가정하에 당장 해결할 수 없는 통일문제로 인간의 존엄성과 내면생활이 희생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한 동방정책에 따라 독일 내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sup>26)</sup>

독일문제 관련 교육지침은 독일분단의 원인을 히틀러 국가사회주의로부터 찾고 있었다. 또한 이 지침은 국가사회주의 폐망과 더불어 연합군의 진주로 인해 독일의 분단은 시작되었지만 민족통일을 위한 독일민족의 노력은 정당하다는 점을 직시하였다. 즉 이 지침에서는 국가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하고 타민족을 강점하는 팽창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서독의 독일정책은 종족의 우월성을 토대로 통일을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 속에서 민족통일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통일의 정당성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들은 통일교육에서 독일통일이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꾸준히 국경 양쪽의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독일 양국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한다”는 정신, 그리고 “국가 통일을 목표로 한 정책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독일의 통일과 모든 독일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인도주의적 요청이 장기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기본정신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기본 정신에 따라 서독의 통일교육의 목표는 당장에 국가 통일의 불가능한 것처럼 이해되었을 지라도 독일의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데 기여하였다.

---

사적 분석-”, 「연구보고서95-12」, 1995, p.26에서 재인용.

26) KMK, *Die deutsche Frage im Unterricht*(Bonn, 1978) p.4. 민족통일연구원, Ibid., p.27에서 재인용.



### (3) 통일교육의 진담기구 편성(연방정치 교육본부)

서독의 통일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를 주관하는 기관 즉 연방정치교육본부(BPB: 1963에 신설, 1952년에 창설된 '향토봉사를 위한 연방본부'를 개칭)에 의하여 실행되었다. 이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통일교육을 포함한 모든 정치교육을 담당하였는데 독일국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통일에 대한 견해를 확고하게 하며 통일문제에 대한 자발적 공동 참여도를 높이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또한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연방정부가 통일의식, 통일에 대한 자발적 판단을 환기·강화시키기 위해 통일과정에 대한 가능한 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에 따라 모든 시민이 국가와 시민 안에서 자신의 위상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며, 시민들이 기본법에 명시된 사회적 법치국가의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수용하도록 도와주는 한편 통일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통일의식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다른 통일교육담당자들에게 재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다른 여타의 정치 및 통일교육 담당기구들과도 일련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sup>27)</sup>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정치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모든 대중매체 종사자들을 재교육시키는데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한편, 통일교육업무에 적절한 출판물을 발행·장려·보급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특히 연방정치교육본부는 교수법과 방법론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통일교육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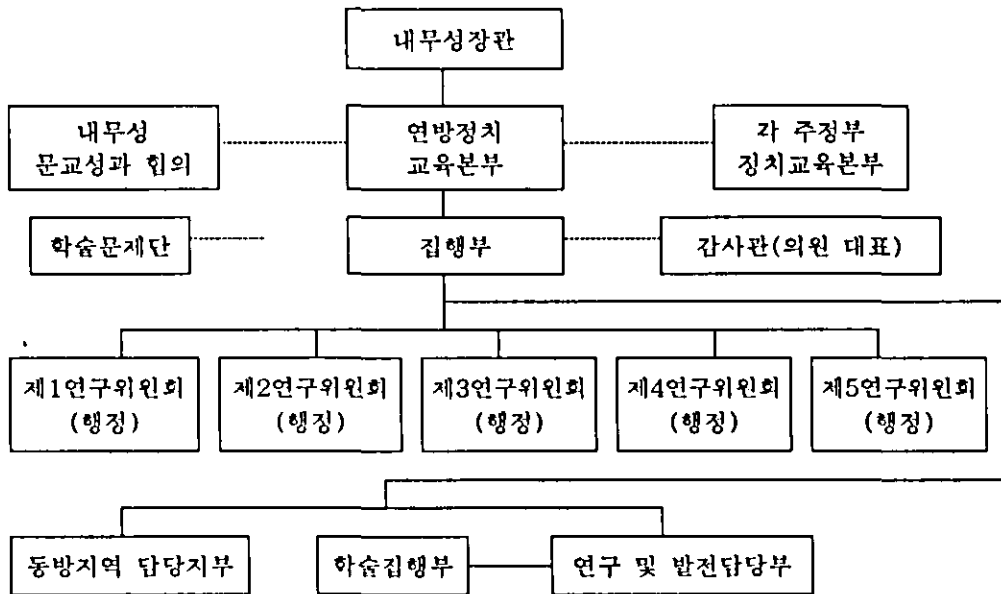
이러한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포함한 정치교육을 체계화시키기 위해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주의 동의하에 정치교육 방법론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각 주의 정치교육 본

---

27) 독일의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기구는 학교 뿐만 아니라 교회, 노동단체, 시민대학, 정당산하의 재단등이 있다.

부와 긴밀한 협의 아래 정치교육의 내용에 관한 초지역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sup>28)</sup>

〈표 5〉 서독의 정치교육체계



자료 : 민족통일연구원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 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연구보고서 95-12」, 민족통일연구원, 1995. p.64

### 3) 독일의 통일교육의 시사점

독일은 장기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관계개선을 도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심각한 휴유증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교류·협력 경험이 없는 남북한의 경우에는 급진적인 흡수통일이 실현될 경우 통일 휴유증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과 같은 급진적 흡수통일을 지양하고 점진적, 단계적인 통일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이에 통일교육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8) 민족통일연구원, Op.cit. pp.62-69.

독일통일의 내적 요인으로 동독에 대한 서독체제의 절대 우위 확보에는 통일교육의 역할을 제외할 수는 없다. 서독의 통일교육은 1민족·2국가·2체제하에서 민족동질성을 추구하며,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에 접근한다는 것을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분단 40여년간 서독에서 실시해 온 통일교육은 독일 국민들의 통일 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은 그 내용과 교과체제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 경제, 사회, 국제정치,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통일의식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sup>29)</sup>

그러나 이런 통일교육을 받지 못했던 동독 지역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의식구조는 40여년간의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받은 교육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정치로부터의 도피, 정치문제의 탈정치화, 민주주의 다원성에 대한 이해 부조, 마르크스·레닌 사상의 잔류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서독 사람들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감정에 북받쳐서 서로 끌어안기도 했지만 통일 후 서서히 드러나는 현상은 동·서독 사람들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감정에 북받쳐서 서로 끌어안기도 했지만 통일 후 서서히 드러나는 현상은 동·서독 사람들 사이에는 감정과 생활방식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원래 같은 형제자매였던 그들이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오는 동안 너무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sup>30)</sup>

---

29) 황병덕, Op. cit., p. 36.

30) 고성효, Op. cit., p 20.

## 제 VI 장 사이버 세대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 1. 기본 방향

통일교육의 기본목표는 한마디로 통일지향적 인간상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길러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목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므로 기존의 통일교육을 받아온 사이버세대들은 전반적으로 통일 의식이 저조한 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공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세대의 통일교육은 반드시 거쳐 나가야할 필수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몇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은 통일의 당위성을 일깨워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남북한은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사적 당위성을 지니며, 통일 후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현재 남북한은 분단에 따른 심각한 갈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민족 이질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민족 이질화 경향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통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통일의 당위성도 점차 약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일차적으로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역사, 언어 등 문화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 및 민족의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민족공동체 교육을 통해 한민족의 일원임을 항상 자각하게 하고 분단된 우리 민족을 통일하여 한민족공동체를 이룩하겠다는 통일의지를 함양시켜야 한다.<sup>31)</sup>

둘째, 통일교육은 합리적인 통일대비 능력을 배양하는 것과 더불어 통일

---

31) 황병덕, Op. cit., p. 66.

이후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비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국민들에게 분단배경과 분단과정, 남북한 체제의 비교 및 현실,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들을 분단현실에 맞게 객관적으로 조명해 주어야 하며, 더 나아가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 남북한 통일 노력과 문제점 등의 통일준비과정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통일조국의 미래상 및 조건, 통일국가 형성과정과 과제 등 통일이후에도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적 갈등과 혼란 등에 합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인식과 대응능력을 신장시켜 국민들이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은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단순히 안보교육의 언장이 아니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안보문제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교육이어서는 안된다. 통일교육은 통일과 안보의 두 축 가운데 통일에 보다 많은 비중을 할애하되 현실적인 안보의 중요성도 고려할 수 있는 균형된 시각을 갖게 해야 한다. 따라서 안보교육은 통일교육의 한 영역으로 계속 존재하면서 통일관련 교육과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sup>32)</sup>

넷째, 통일교육은 개방적인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통일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된 사회로 발전하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정치적인 민주화는 우리 사회를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통일교육은 성숙한 민주사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북한사회와 통일환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통하여 다양한 논의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문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사이버세대들이 습

---

32) Ibid., p. 67.

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33)</sup>

통일교육은 통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통일 후 예상문제들을 통제 가능한 영역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안보위주 및 정부정책 홍보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통일대비 교육이어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통일 후유증 뿐만 아니라 분단 비용 및 분단으로 인한 사회 심리적 고통 역시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이러한 통일을 계기로 세계 속에 한 민족의 위상이나 국제경쟁력의 부상가능성 역시 인식시켜 통일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34)</sup>

## 2. 실천적 방안

### 1)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 교육

#### (1) 현실에 기반한 통일지향적 교육

이제 통일교육은 안보의식과 이념교육이 중심이 된 체제 지향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남북한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통일 지향적인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의지 및 사명감 등 명분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통일에 대한 태도나 체계적인 지식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및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남북한 통일에 관련된 세 문제들을 보다 정확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해하

---

33) 한만길, "대학생의 통일 교육의 방향", 「통일논총 제15집」,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7, p. 73.

34) 이서행, "통일교육 내용의 재정립 방향", 「통일교육 변화와 통일교육 발전방향」, 통일원 1994, pp. 34-35.

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통일이 단순히 남북한 두 개의 정부 통합이라는 제도적인 의미 이전에 민족사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의 발전을 추구하는 통일을 강조하여 통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실상을 축소평가 하거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단지 경계와 적대의식을 일으키는 감정적인 차원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북한의 실정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그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북한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강의가 대부분인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내용을 TV, 슬라이드, VTR, 사진 등 다양한 시청각 기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감각을 높임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력을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결국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요소를 벗어나 현실적인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인지적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바탕으로 명확한 주관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일관된 태도로써 통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sup>35)</sup>

## (2)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

남북한 청소년간의 이질화, 적대화 현상을 극복하고 한 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것은 사이버 세대들이 민족공동체로서 '우리'라는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 국토순례대행진 그리고 음악·미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북한을 직접 방문하고, 북한 주민과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접

---

35) 방성희 외, Op. cit., p. 132.

축함으로써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형성된 단일민족 의식을 실제 몸으로  
절실히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sup>36)</sup>

기존의 통일교육은 현장적인 요소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이론적인 접근만  
을 시도하였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본의 통일교육은 현실감이 떨어진 경향  
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체제우월성에 바탕을 둔 현실적인 통일교육을 시  
작하여야 한다. 그것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남북한간의 청소년의 교류방문  
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 2)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영역의 확대

### (1) 통일에 관련된 연구영역의 확대

현재 정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으로 한정된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영역을  
확대하여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통일문제의 중심연구과제인 북한  
의 정치와 이데올로기, 한반도 주변의 국제적인 관계, 남북관계의 변화 등  
정치외교적인 주제를 탈피하여 각 학문영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즉, 인문·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분야에서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필  
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면  
서 대학교육에서 통일문제를 폭넓게 다룰 수 있는 소재로 삼아야 한다. 물  
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각 분야 강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모든 학문분야에서 북한에 관한 연구주제를 개발해야  
한다. 북한의 문화,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기술 등 모

---

36) Ibid., p. 133.



든 분야를 포괄하여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국문학에서는 북한 언어와 문학, 그리고 우리와의 차이점, 그리고 남북한 문학의 차이점이나 유사점 등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예술 분야에서는 북한의 미술, 음악, 무용, 체육, 민속, 오락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37)

## (2) 통일 및 북한관련 강좌의 확대 설치

대학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관한 강좌를 확대하여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북한관련 강좌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몇몇의 학자들이 북한학과의 증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한 방안이라 보여진다. 그 이유는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몇 명의 학생들이 입학할 것이며 또한 졸업자들 역시 앞으로의 진로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남북한의 상황에서는 소수의 북한 전문 연구가보다는 북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다수의 교양인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다. 만약 제도적으로 북한학과의 증설이 꼭 필요하다면 학부과정에서보다는 대학원 과정 쪽에서 증설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측면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통일문제 및 북한관련 강좌는 우선 교양과목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하여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북한사회의 통일문제, 북한사회의 이해, 민족통합문제, 분단과 통일 등 다양한 이점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통일은 많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통일에 접근하는 방식이 단순하기보다는 복잡하면서도 다방면에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는 접근 방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의 강좌들은 학제간 연구와 협력을 바탕으로 폭넓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

37) 한만길, Op. cit., pp. 81-82.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일괄적인 형식을 탈피하여 자율적으로 교과과정이 편성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도 각 강좌의 내용을 특성에 맞게 북한문제, 통일문제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경제학과에서는 북한경제, 사회학과에서는 북한 강좌가 대학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38)</sup>

### (3) 생활문제를 소재로 하는 교육

통일에 대해 좀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소재를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이념이나 체제 또는 사상과 제도와 같은 추상적인 소재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통문화, 관습, 의식주 생활, 가정생활과 가족관계 또는 자연지리나 관광 자원을 말한다.

종래에는 통일교육에서 이념과 체제, 또는 사상과 제도 같은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어 학생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도록하여 통일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측면이 강조되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일교육내용들에 대하여 무의식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학습내용들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데에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통일교육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일생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도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활문화를 소재로 하는 통일교육을 실천한다면 사이버 세대들은 북한 사회가 우리와 다른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집단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

38) Ibid., p. 82.

와 일상생활에서 동질성이 있어 진실성 있는 자세로 노력한다면 공유된 문화를 가질 수 공동체 사회의 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민족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의식이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sup>39)</sup>

---

39) 한만길. *Op. cit.*, pp. 82-83.

## 제 V 장 결 론

1990년대 들어 개방화, 개혁화의 바람이 동구권을 개방하였으며 또한 이에 따라 독일통일이 이루어지자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희망은 더 이상 이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가 되어 통일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통일의 주역이 될 사이버세대들은 아직 통일교육다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이버세대들의 통일의식은 책임감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입장에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은 새로운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통일에 대한 강좌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의 개방이다. 즉, 학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통하여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그 결과가 강단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북한자료에 대한 이용을 지금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개방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 관하여 남아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정보를 개방하여 사이버세대들이 우리가 접하는 문화와 북한의 문화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동질감과 이질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세대들이 통일에 관하여 다양한 시각과 바탕이 될 수 있는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민족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만의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냉전체제의 종언이라는 세계사의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세대들은 통일을 남한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세계인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에 대한 태도도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과제에 대하여 능동적인 해결방안과 접근방식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통일교육이 단지 이론 중심의 교과목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일통일에 가능하게 하였던 동서독 청소년들의 상호방문이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통일을 단지 지식차원에서 전개시켜 진정한 통일이 주는 의미를 희석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과목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사들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이해를 가지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빨리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에게 북한자료를 자유로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연수나, 세미나 등의 학습과정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통일은 더 이상 이론적인 논쟁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북한과 통일이라는 과제는 민족사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전개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이라고 해서 꼭 '통일'이라는 단어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통일교육은 문자 그대로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제세화립, 즉, 행동능력, 가치와 의식, 역사인식 등을 키울 수 있는 바탕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즉, 통일준비교육의 방향은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뿐만 아니라 통일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변화에 대한 기초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측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이라는 한정된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이버세대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실 우리 나라가 언제 통일이 될 지 확실히 장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기성세대보다는 통일의 주역이 될 사이버세대들이 통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물론 사이버세대들을

통일세대라는 인식에 기성세대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사실이다. 즉, 기성세대가 보기에 사이버세대들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소비지향적이며, 뚜렷한 자기 개성만을 중요시 여기는 계층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세대들은 어디까지나 '악법도 법이다'라는 격언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여야 한다. 사이버세대라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무모하게 방북을 감행하기도 하고, 집회에 참석하다가 구속이 되는 등 통일문제의 접근방식은 커다란 차원의 통일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강조하는 통일논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결국 사이버세대들은 개인중심적이며, 소비지향적인 면도 있지만 뚜렷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그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세대들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사이버세대에 있어 통일교육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통일을 외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성효,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 교육의 방향",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문용린외, 「통일 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한국교육개발원, 1988.
-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향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최완교외, 「21세기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교육부, 1996.
- 이우영, "대학 통일교육의 문제점", 「통일연구논총」 제 15집,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7.
- 이서행, "통일교육 내용의 재정립 방향", 「통일교육 변화와 통일 교육 발전방향」, 통일원, 1994.
- 박성희외, "청소년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92, 한국 청소년연구원, 1992.





# 재정위기하에서의 통일정책의 방향

- 민간참여를 중심으로 -



성명: 최 은 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목 차 》

- I. 서 론
- II.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고찰
- III. 경제위기에 따른 통일정책의 변화와 문제점
- IV.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통일정책의 방향
- V. 요약 및 결론



# 제 I 장 서 론

## 1. 연구의 의의

21세기를 목적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에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건국 5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자유화·개방화·세계화·정보화 등 수많은 용어의 범람이 암시하듯 지금까지 세계를 양분 하였던 군사력에 바탕을 둔 힘의 균형의 시대는 가고, 이제 각국은 자국의 실리에 바탕을 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의 흐름은 동남아의 금융위기를 초래하였고, 우리 나라 역시 이러한 변화의 조류에 휘말려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나라는 경제자립의 달성을 기본목표로 하여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연평균 8%가 넘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연쇄도산과 금융시장의 위기 등이 야기한 한국 경제의 총체적 파국은 그동안 정부주도 일변의 모순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던 우리에게 커다란 적신호로 다가서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가 이끌어 가는 자동차에 올라 정부가 가는 곳으로 이끌려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부가 몰고 가던 경제라는 이름의 자동차에 대해 모든 생산라인의 정비를 모색하고, 심지어 운행법규까지 수정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IMF체제 유입에 따른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대규모의 조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극심한 혼란과 대립과 불가피해지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정부와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부조리나 이상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 온 정부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각종 정부 정책의 전

환을 모색하게 하고 있고, 통일정책에 관한 문제 역시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의 통일정책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누르고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강했다. 그런 까닭에 정부가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고, 결국 통일정책은 상징적인 정책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확산과 함께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들이 대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른바 “햇볕 정책”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로 자리잡으면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 잠수정을 침투시켜 무리를 빚고 있고, 그 때문에 햇볕과 강풍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는 일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회의와 자민련, 그리고 신한국당 사이에서의 통일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큰 의견 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치권에서조차도 제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고,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 하에서 자칫 정치적인 목적으로 변색되기 쉬운 무리한 통일정책은 정부의 재정 위기를 심화시키고, 이는 결국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무산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 현재의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고통분담을 약속했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절한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대안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남북간의 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해 경제적 이익의 증진과 함께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는 정치·사회적 이익을 제고하여야 하며, 현대·통일·한진 그룹 등이 북한에 진출하여 관광사업을 하기로 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민간기업의 대북진출에 대해 정책적인 대응이 부족한 탓에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고, 자칫 민간기업의 무모한 경쟁 유발로 인해 남한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의 통일정책이 경제적 위기의 영향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민간의 통일정책에 대한 참여가 통일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평가해 보고 이해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다 하겠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제 위기 하에서의 바람직한 정부의 통일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각 정권별 통일정책의 기초와 방향을 살펴보고 남북한의 경제체제를 비교하여 현재의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이에 따른 통일정책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남북한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민간기업의 대북진출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와 민간의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연구논문과 신문기사 등을 통한 문헌조사와 경제적 위기 이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통일정책에 대해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1998년 8월 3일에서 8월 21까지 피설문자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 제 II 장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고찰

### 1. 통일정책의 의의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sup>1)</sup>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그것이 국제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든 국내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든 간에 국민 생활의 모든 부문에 침투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통일정책은 “주어진 대내외 통일환경을 합목적적으로 변화·유도하여 하나의 민족 국가 건설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sup>2)</sup>을 말한다. 따라서 통일정책은 분단이라는 현상태를 통일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통일에 관한 기본방침 및 그 대안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일정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집행하는 데에는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작용하게 된다. 현재 남한의 경우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용자받고 이에 따라 대규모의 경제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 극심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는 결국 정부의 재정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정부의 정책의 운영 방향에 대한 대규모의 조정이 불가피해지게 되었다. 통일은 분명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가장 커다란 과제로 해방 이후 줄곧 논의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부족했고, 현재 경제적 위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

1)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8, p.52.

2) 윤병익,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통일문제 이해, 서울 : 통일연수원, 1995, p.38.

으로 인해 적극적인 지원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그룹을 중심으로 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진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종래의 통일정책의 방향이 관중심에서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이라는 전환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통일정책의 모색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 2.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과 문제점

우리 정부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통일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끊임없이 통일논의를 해 왔으나 이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나 실천능력의 부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sup>3)</sup> 다만 북한을 적대시하는 입장에서 점차 북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아래 <표-1>은 각 정권별로 나타난 통일정책의 특징을 나타내 주고 있다.

### (1)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 : 북진통일론

제1공화국은 제헌국회를 형성하면서 북한을 위해 100석의 의원석을 북한을 위해 남겨 두었다. 이는 일종의 흡수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는데<sup>4)</sup> 이 통일방안이 거부되자 제1공화국은 '무력북진통일'을 주장하였다. 물론 이것은 당시 남북한의 군사력·경제력 어느 면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제1공화국이 북진통일론을 주장한 것은 통일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 국민적인 일체감의 조성파 동원 및 정치적 반

3) 라종일, "통일정책의 허와 실," 평화전략연구(참간호), 경북경산 : 경산대학교 평화전략연구소, 1997, p.56.

4) 민병천, 신통일론, 서울 : 고려원, 1992, p.87.

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상징적 차원의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이러한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은 국민적 합의나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반대세력을 용공세력으로 몰아 정권유지를 장기화하고자 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5)</sup>

〈표-1〉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개요

구 분	대 북인식	통 일 접 근 방 식	주 요 발 표 계 기
제1공화국	• 실체 불인정 • 실지회복의 대상	• 유엔결의에 의한 북한지역에서만 총선 •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	• 제헌국회, 「북한 동포에 보내는 결의문」(48.6.12) • 변영태 외무장관 「제네바정치회의 연설」(54.5.22)
제2공화국	"	•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	• 민주당 「통일외무 정책채신방안」(60.7.26)
제3공화국	"	•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 * 선건설 후통일	• 제6대 국회 제25차 본회의 결의안 (64.11.29) • 「평화통일구상선언」(70.8.15)
제4공화국	• 실체 인정 • 평화공존의 대상	• 도착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 「6·23선언」(73.6.23) •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천명 (74.8.15)
제5공화국	"	•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 실시 -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 협정 체결	•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천명(82.1.22)
제6공화국	• 상호체제인정 • 신의의 동반자	• 남북연합의 과도단계를 거쳐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 실시	• 「7·7특별선언」(88.7.7.)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천명(89.9.11)
문민정부	• 상호협력인정 • 화해·협력의 대상	•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완성」이라는 3단계접근방식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천명(94.8.15)

(자료 : 통일원, 통일백서(1997), p.33)

5) 서중석, "이승만과 북진통일 : 1950년대 극우반공독재의 해부," 「역사비평」(1995년 여름호), p.108.



## (2) 제2공화국의 통일정책

제2공화국은 제1공화국이 정치적 수단으로 통일정책을 이용하였던 것에 반해 실제적인 통일의 논의보다는 경제 건설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선건설 후통일'의 논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2공화국의 '선건설 후통일'의 논리는 당시 학생권이나 재야세력의 급진적인 통일논의의 전개로 인해 보수세력의 불만을 고조시켰고 결국 군부세력의 정치개입의 구실을 제공하였다.<sup>6)</sup> 즉, 제2공화국은 제1공화국과 달리 정권이 스스로 통일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보수세력이 다시 이것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군사쿠데타의 명분을 제공해 준 셈이었다. 따라서 여전히 통일에 대한 논의는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안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자 상징정책에 불과한 것이었다.

## (3)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

제3공화국은 일체의 비정부적 차원의 통일논의를 금지하면서 '선건설 후통일'의 통일논리를 강조하였다. 제2공화국의 선건설론이 비정부적 차원의 통일논의를 억제하는 소극적 방어책이었다고 한다면 제3공화국의 논의는 통일의 논의 자체를 말살하고 통일추진세력, 즉 민족주의자들을 용공분자로 투옥하는 적극성을 띄고 있었다.<sup>7)</sup> 그러다가 남한에서 유신체제가 그리고 북한에서 주석체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공존을 표방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던 제3공화국이 타개책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즉 통일정책을 활용해 유신 독재체제를 굳히고 독재를 장기화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6) 노중선, "분단시대에 있어서의 통일논의의 전개," 송건호 외, 변혁과 통일의 논리, 서울 : 사계절, 1987, pp.48~49.

7) 서중석, "분단과 통일," 「창작과 비평」(1992년 가을호), p.29 (라종일, 앞의 논문, p.59에서 재인용).

#### (4) 제5공화국의 통일정책

제5공화국은 이전에 어떤 정권보다 강력한 통일정책을 표방하였다. 10·26사태와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간접선거를 통한 집권 등을 통해 정통성이 약화되었던 제5공화국은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5공화국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이러한 의미에서 실제로는 통일에 기여할 수 없었고, 오로지 정통성이 약했던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었다.<sup>8)</sup>

제6공화국의 경우 제5공화국의 경제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1987년 6월 항쟁이후 돌아오른 민주화의 열기에 대응해 정치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이에 따라 출범 초부터 적극적인 통일 및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엄격주의적 통일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 (5) 문민정부의 통일정책

군부통치의 종식과 함께 등장한 문민정부는 이데올로기의 폐쇄성과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다변외교를 전개하고 보편주의와 국제주의에 근거한 현실적 상호주의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민족복리, 공존공영, 민주적·국민적 합의의 3기조에 바탕을 둔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단계, 완전통일국가의 3단계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역시 종래의 정권과 달리 통일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유달리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만에 3기조를 폐지하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형태로 수정을 가하였다. 즉 국민적 합

---

8) 정연선, "한국의 통일정책과 방안," 민병천 편, 전환기의 통일문제, 서울 : 대왕사, 1990, p.246

(라종일, 앞의 논문, 61에서 재인용).

의에 기초하지 않은 통일방안이 다시 국민적 토론의 과정 없이 자의적으로 수정되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sup>9)</sup> 이것은 또한 북한에 대한 쌀지원에서도 정부가 베타적인 방식으로 정책 운용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 (6) 신정부의 통일정책

제1공화국에서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표면적으로 끊임없는 통일정책을 제시해 오면서 실제로는 분단체제에 더 집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며 통일이라는 구호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고, 또한 그러한 논의조차도 북한의 붕괴상황을 기정 사실화하고, 이후 북한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정부내 강경세력은 북한이 확실히 붕괴할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비교적 온건한 “햇빛론”을 주장하는 입장 역시 북한의 점진적인 붕괴를 가정하고 있다. 즉, 양자가 모두 북한의 흡수통일을 기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다.<sup>10)</sup> 그러나 현재 국회가 정계개편을 둘러싸고 파행적인 갈등을 표출하고 있듯이, 각당이 주장하는 통일정책이 여전히 정치적인 논리에 일관하고 있다. 즉 각 대안들이 합리적인 분석의 과정을 통해 평가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정치적 알력의 일부분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3. 통일정책의 성격과 전망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한의 정권별 통일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

9) 라종일, 앞의 논문, p.63.

10) 박찬석, “민간 통일 운동의 주요 논의 동향과 통일 정책 수용여부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환경 I

(’97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서울 : 통일원, 1997, p.323.

따라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공통적으로 통일에 관한 문제에 있어 실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상징적인 의미만을 부각시켜 왔다. 일반적으로 상징조작(symbol manipulation)은 정책의 형성과 집행 그리고 일반공중의 정부에 대한 요구의 투입과 관련하여 매우 중시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의 수용성 확보나 국민들로부터의 순응을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Cobb과 Elder는 이러한 상징이 정부를 운영하는 정권에 반대되는 갈등을 억제하고 이러한 쟁점의 확산을 막는데 이용된다고 보고 있다.<sup>11)</sup> 남한에 있어 통일정책이 지니는 상징성은 이러한 측면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남한의 각 정권별로 표방한 통일정책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정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했고,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반정부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정권별 통일정책은 공통적으로 '관주도형'으로 설정되어 왔고, 민간차원에서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해설수준의 연구'에 그쳤다.<sup>12)</sup> 비록 6월항쟁 이후 민주화의 확산과 더불어 민간차원에서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것은 통일정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이고 관주도에 의한 의사결정에 의존해 관행으로 정책의 형성과정에 철저하게 민간이 배제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건국 50주년 8·15 경축사에서 김대통령이 제시한 6대 국정과제 중에서 "권위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물론 "남북대결주의에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남국교류협력시대"로의 전환이라는 또 다른 국정목표가 있

11) Cobb, Roger W. and Charles D. Elder,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 the Dynamics of \_\_\_\_\_ Agenda-Building, Boston : Allyn and Bacon, Inc., 1972, p.124.

12) 홍성후, "한국 통일정책 연구," 김계수 외, 한국정치연구의 대상과 방법, 서울 : 도서출판 한울, 1993, p.347.

지만 이것은 민간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련의 정책적인 조치들이 수반되지 않는 한 과거와 같이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먼저 강구하여 새로운 통일정책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제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경제 위기에 따라 정부의 재정운영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되면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하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제 III장 경제 위기에 따른 통일정책의 변화와 문제점

## 1. 정부재정위기의 의의와 요인

재정위기란 재원부족이나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과도한 재정지출로 정부가 기본적으로 공급해야 할 공공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기능이 정지될 가능성이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정위기는 국가·지역·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환경적 요인, 조직적 요인, 재정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게 된다. 이를 좀 더 세분하면 <표-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2> 재정위기의 성질별 분류

	내 부 적 요 인	외 부 적 요 인
정 치 사회적 요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욕구의 분출</li> <li>- 조세저항의 증대</li> <li>- 정치적·대중적 재정운용</li> <li>- 내적 통제기능의 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시행</li> <li>- 세원배분에 대한 갈등, 조세경쟁</li> <li>- 경비부담상의 갈등</li> </ul>
경제적 요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한 과세기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경제의 위축</li> </ul>
기술적 행정적 요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 및 재무정보의 부족</li> <li>- 재정진단시스템의 미비</li> <li>- 조세징수노력의 미비</li> <li>- 세무행정조직상의 불합리성</li> <li>- 예산운용의 비효율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행정지원의 미흡</li> </ul>

<표-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재정위기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데 이를 현재의 경제적 위기 상황과 대비해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열기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기대욕구가 급속히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방만한 재정운용을 벌여 왔다. 특히 이것은 시장의 힘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결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욱 커졌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해 많은 개혁의 요구들이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적으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재벌중심의 산업체제를 조정하지 못했고, 금융시장을 판치화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부실화를 촉진시켜 왔다.

셋째,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탈루세원이 존재하고 조세 부과 과정상의 전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혁의 의지 역시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정치·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기술·행정적 요인으로 인해 그동안의 정부재정의 운영은 지극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WTO와 같은 국제적 무역규범의 등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특히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조류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정경유착의 관행을 청산하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배태된 부정부패의 문제로 인해 대외 신인도의 급락을 초래하였다.

## 2. 남북한의 경제정책의 추진과 경제적 위기의 상황

구 소련과 동구권에서 사회주의 통제경제 체제가 붕괴한 이후 이들 국가

의 경제개혁은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행해 급진전되어 왔다. 이들 국가의 경제체제 붕괴는 일시적인 정책실패에 기인하기보다는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업률의 증가, 국가재정의 마비,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sup>13)</sup> 북한의 경우도 1990년 이후 6년간 계속된 마이너스 성장은 식량, 에너지, 외환뿐만 아니라 생필품의 부족 현상이 되었고 식량난과 함께 커다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적 위기 상황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의 시장체제와 무관하게 전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현상이다. 특히 냉전의 종식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각국의 경제페권주의의 영향으로 절정에 이른 거품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전세계 경제가 총체적인 파국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때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로 자처했던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위해 북한과 남한의 경제적 위기를 먼저 진단해 보고 이에 따른 통일정책의 변화 방향을 살펴본다.

### (1) 북한의 경제정책과 실태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여 왔고, 남한의 경우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로 상이한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1960년대 이후부터 경제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가 중심이 되어 경제력의 향상을 도모해 왔다. 북한의 경우 1961년 제1차 7개년계획을 시발로 하여 본격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북한 경제정책의 기조는 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견지하고, 산업화전략에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중공업

13) 김준기, "북한경제의 개혁 : 동구권과 중국 경제개혁의 교훈," 「행정논총」(제35권 제2호, 1997. 12), 서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pp.125~126.



우선 정책·군사 및 경제의 병진책을 추구하며, 경영관리 방식으로 청산리 방법·대안의 사업체제·독립채산제·사회주의 노력경쟁 등을 채택하여 왔다. 이를 통해 1960년대이래 해외원조의 지속적인 감축을 자립경제를 구축해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농업 및 소비재산업의 경시와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한 자급자족 노선은 북한 산업 구조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 북한은 1960년대 후반에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방에서 자위'노선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결국 북한의 중화학공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더욱 심화시킴과 동시에 생산자본의 상대적 감소효과를 가져왔다.<sup>14)</sup>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외연적 성장 정책에 기반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하였으나 해외원조의 감소·군사비부담의 증가·국가재정의 성장하락 등으로 경기침체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해외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듯이 북한도 서방의 차관도입이나 합영법을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고, 199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식량난은 탈북현상을 초래하는 등 이러한 위기상황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북한은 1993년 12월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총회에서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완충기를 설정하고 완충기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설정하였다.<sup>15)</sup> 이 완충기(1994~1996년) 동안 북한은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 등을 통해 경제자립을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대외경제관계의 방향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현재까지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지금의 경제적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감에 따라 북한의 경제적 여건 역시 더욱 악화된 조짐이다.

14) 함택영, "북한의 경제위기에 대한 실증적 고찰," 「동북아연구」(제2권),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6, p.67.

15) 전홍택, "북한의 경제적 - 실상과 전망," 북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서울 : 서울신문사 국제전략연구소, 1997, p.84.

〈표-3〉 북한의 경제계획의 목표와 실적

구분	기본과업	주요목표	실적
제 1 차 7개년계획 (196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공업발전</li> <li>경공업·농업의 동시 발전</li> <li>진국적 기술혁신</li> <li>문화혁명과 국민생활 향상</li> <li>국방·경제 병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소득 : 2.7배</li> <li>공업총생산 : 3.2배</li> <li>곡물수확고 : 600~700만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업총생산 : 3.3배</li> <li>기계금속공업성장률 : 18.4%</li> <li>노동생산성 성장률 : 147.5%</li> <li>※ 계획기간 3년 연장</li> </ul>
6개년계획 (197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 건고화</li> <li>산업설비 근대화</li> <li>기술혁명 촉진</li> <li>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소득 : 1.8배</li> <li>공업총생산 : 2.2배</li> <li>곡물수확고 : 700~750만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소득 : 1.7~1.8배</li> <li>공업총생산 : 2.5배</li> <li>기계금속공업성장률 : 19.1%</li> <li>곡물수확고 : 800만톤</li> <li>※ 1976~77년 완충기 설정</li> </ul>
제 2 차 7개년계획 (1978~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li> <li>생산원가 인하</li> <li>질약운동 강화</li> <li>수송의 근대화</li> <li>주민생활 향상</li> <li>독립채산제 강화</li> <li>대외무역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소득 : 1.9배</li> <li>공업총생산 : 2.2배</li> <li>곡물수확고 : 1,000만톤</li> <li>1980년대 10대전망 목표와 4대자연 개조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업총생산 : 2.2배</li> <li>전력생산성장률 : 178%</li> <li>철강생산성장률 : 167%</li> <li>곡물수확고 : 1,000만톤</li> <li>시멘트·합성수지·직물생산 목표 달성</li> <li>※ 1985~86년 조정기간 설정</li> </ul>
제 3 차 7개년계획 (1987~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민경제 주체화·현대화·과학화</li> <li>기술혁신</li> <li>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소득 : 1.7배</li> <li>공업총생산 : 1.9배</li> <li>농업총생산 : 1.4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업생산 : 1.5배</li> <li>전력 : 1.3배</li> <li>석탄 : 1.4배</li> <li>유색금속광물 : 1.6배</li> <li>강철 : 1.3배</li> <li>화학비료 : 1.5배</li> <li>지방공업 : 1.7배</li> <li>주택건설 : 100여만 세대</li> <li>※ 1994~96년 완충기 설정</li> </ul>

(자료 : 「'95 북한개요」, p.176.)<sup>16)</sup>

16) 통일연수원, 북한이해, 서울 : 통일원 통일연수원, 1995, p.121에서 재인용.

## (2) 남한의 경제정책과 실태

남한의 경우 제2공화국에서부터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고 국토건설사업을 촉진하였으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사쿠데타로 제2공화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실행에 들어가지 못했고 1962년에 처음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5차부터 명칭을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 바뀌었으며 7차계획은 시행 도중 신경제 5개년계획이 이를 대체하여 왔다.<sup>17)</sup>

남한의 경제정책 역시 일관하여 경제자립의 달성을 기본목표로 삼고 추진되어 왔다. 다만 남한의 경우 재벌을 육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양적인 성장에 성공을 거두었다. 남한의 정권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성장이 자신들의 정권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길이라 여겼고 이를 위해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은 수출주도의 대외지향적 발전전략과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1962년에서 1979년까지 18년동안 연평균 9.3%라는 경이적인 고속 성장을 달성하였다.<sup>18)</sup> 이러한 경제발전이 석유파동으로 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제5공화국의 경우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낮은 국제금리, 에너지 등 자원의 저가유지, 그리고 낮은 환율이 결합되어 다시금 경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sup>19)</sup> 그러나 제6공화국과 문민정부에 접어들어 그동안 물량 위주의 성장을 거듭해 온 경제기반을 정비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정치와 해외부문의 압력 속에서 스스로 좌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1997년 동남아의 외환위기와 때를 같이 하여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응자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17) 김운태·오석홍 공저, 한국행정사, 서울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p.404.

18) 정정길, 대통령의 경제리더십,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1994, pp.289~290.

19) 위의 책, p.301.

### (3) 남북한의 경제체제의 비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북한의 경제체제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경제계획을 통해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북한은 상이한 경제 체제와 구조를 지니고 있었던 까닭에 그 성과면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아래 <표-4> 20)는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형성해 온 남한과 국영기업의 형태로 경제체제를 운용해 온 북한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표-4> 남한과 북한의 경제 구조의 비교

	남한의 재벌중심의 경제 체제	북한의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기업 소유 형태	개인의 사적 소유	국가 소유
경 영 형 태	개인소유자의 경영 지배	당에 의한 경영 지배
자원·인력의 배분	시장	국가 계획
자 극·유 인	물질적 유인	정신적·정치적 유인
장 집	생산성·효율성 제고	노동소외의 부분 극복, 평등
경제구조의 문제점	개인의 경제력 집중	국민생활의 하향 평준화
	정치사회의 비민주화	유일당의 정치 독점
	시민사회의 굴절	유일당의 시민사회 독점
당 면 과 제	소유의 분산 및 경영 투명성 제고 재벌위주의 거시적 경제구조 개편	시장 기능의 도입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남한의 경우 다른 제3세계의 국가들과 달리 재벌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가 경제정책을 직접 운영하여 효율성의 개선보다는 요

20) 홍덕환, "통일후의 바람직한 기업구조 연구,"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96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II)), 서울 : 통일원, 1996, pp.180~181.

소투입에 비중을 두어 외형적인 경제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sup>21)</sup>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민주성·형평성 등의 논의가 배제되었고, 이로 인해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구축할 수 없었다.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당에 의한 계획경제 아래 자립경제의 달성을 추구하면서 지극히 폐쇄적인 형태의 전략을 채택하면서 양적·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왔다는 점이다.

### 3. 통일정책에 대한 경제적 위기의 영향

#### (1) 금융공황과 러시아의 경제실패

재산의 공유화, 중앙계획에 의한 자원배분과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sup>22)</sup>는 오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냉전이 종식된 이후 세계를 양분하였던 군사력에 바탕을 둔 힘의 균형의 시대는 가고, 전세계는 자국의 경제적 실리에 바탕을 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동남아의 금융위기를 초래하였고, 이것이 곧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냉전시대의 한 축을 이끌었던 러시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지 7년만에 외환사정의 악화 등으로 경제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심각한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1998년 8월 17일 민간부문의 외채에 한해 90일간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지만 사실 차후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제적인 금

---

21) 최배근, "통일한국의 경제체제 : '상호주의적 변혁'에 기초한 체제구상," 한국문제연구원 편, 한반도 통일문 : 전망과 과제, 서울 :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p.112.

22) 주성환, "북한의 경제개혁," 「민족통일연구」(제10집), 서울 : 건국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1996, p.23.

금융공황의 발생이 예견되고 있다. 엘친 대통령의 사임설이 나도는 가운데 남한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간 러시아와 외교상의 마찰을 빚어 왔던 상황에서 러시아가 시장중심의 경제개혁을 중단되고 계획경제체제로 복귀하기로 결정함<sup>23)</sup>에 따라 남북한은 공히 정치·경제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금융공황의 여파는 결국 남북한에게 다시금 상당한 충격을 안겨다 줄 것이 자명하다. 우선 북한의 경우 경기침체가 누적되어 온 상황 속에서 외부환경의 극심한 혼란에 따르는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그동안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해 투자를 진행해 온 선진자본국들의 경제적 위기는 북한에 대한 투자자본의 유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고, 남한의 경우도 이에 관한 한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2) 경제위기에 따른 통일정책의 방향 변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까지 통일정책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충분한 정치·사회·경제적 여력을 갖추고 북한의 붕괴를 가정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남한이 IMF체제에 돌입하게 된 지금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는 결국 남북한이 동시에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야기하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 통일비용에 대해서 1991년 한국개발연구원이 남북한의 통일비용을 2,5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로 추산한 이래 각종 추계치가 발표되었고 그 추계치는 최고 2조 5,000억 원 달러에 달한다. 1999년 예산이 86조원으로 잡힌 것을 감안하여 2,00

---

23) 조선일보, 1998년 8월 29일자.

억 달러로 보더라도 통일 비용은 내년도 예산의 39배나 된다. 이러한 사실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 것이 당분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 준다.

〈표-5〉 통일비용 지불의사 및 지불금액<sup>24)</sup>

여론조사주체	조사 시기	통일비용지불 의사(%)	지불금액	비고
세종연구소	1995년	20.9		조선일보, 1995년 11월 14일자
한국일보	1996년	78.1		한국일보, 1996년 6월 23일자
중앙일보	1997년	65.1	약간부담(35.3%) 기꺼이 부담(29.8)	중앙일보, 1997년 9월 24일자
LG경제 연구원	1993년	-	매월 19,100~ 23,900원	중앙일보, 1993년 3월 28일자
대구경제 연구소	1994년 1995년 1996년	59.5 54.9 57.4	26,800원 28,700원 28,500원	동아일보, 1997년 4월 18일자
롯데제과	1997년	70.5	임금액의 10.8%	동아일보, 1997년 6월 24일자

서독의 경우 우리 보다 원등하게 우월한 경제적 기반 속에서 동독을 흡수통일 하였다. 그러나 과중한 통일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했었다. 통일 비용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실제로 독일의 경우 국내적인 갈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에 대해 지원하였던 막대한 양의 자금이 러시아의 모라토리움의 선언과 함께 회수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다시금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위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의 경우 경제

24) 김영하,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안," 통일정책·환경 I('97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서울: 통일원, 1997, p.45에서 재인용.

적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통일비용에 대한 지불의사에 관한 연구는 대개의 경우 지불용의는 있으나 그 금액은 통일에 따르는 통일부담을 감안한다면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통일에 있어 비용의 크기가 통일의 기회를 선택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회를 달성하는데 있어 경제력을 포함한 우리의 총체적인 국력이 이를 용이하게 해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거시적으로는 자유시장주의체제의 바탕 위에 민간의 경제력을 키우고 건실한 경제구조를 이룩하는 일이 필요하고, 미시적으로는 통일과정에서의 비용절감을 위한 정책대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sup>25)</sup>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은 통일을 전제로 한 여타의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일부 역시 지난해까지 흡수통일에 대해 준비를 해왔지만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대북정책의 기초에서 흡수통일을 배제한다고 밝힌바 있다.<sup>26)</sup> 즉 최우선 통일과제는 무엇보다도 통일한국을 대비한 경제적 기초를 다시 공고히 다지는 일이고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바로 통일의 기초를 다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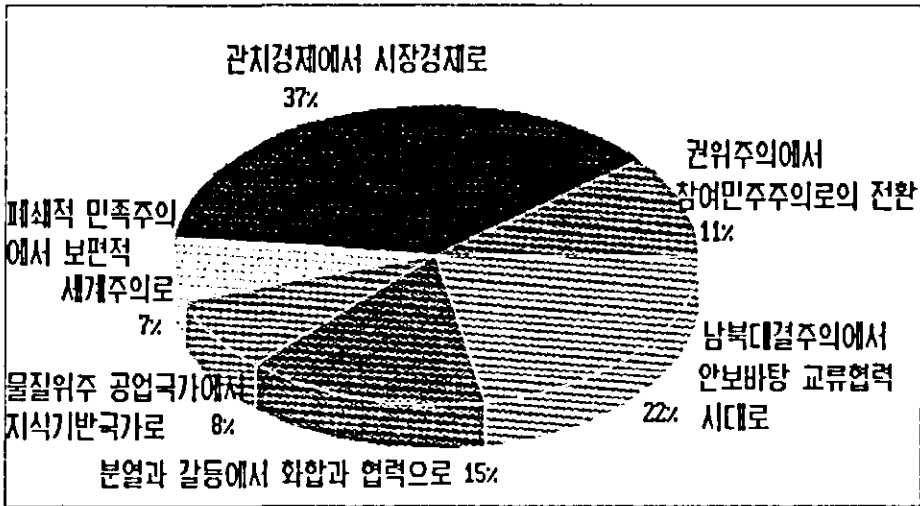
아래 <그림-1>은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한 6대 국정과제 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과제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피설문자의 다수가 경제적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통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피설문자의 다수가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그림-2>에서 보듯이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여건이 진정 국면에 돌입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

25) 이영선, “공인,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영선 편, 통일준비, 서울 : 도서출판 오름, 1997,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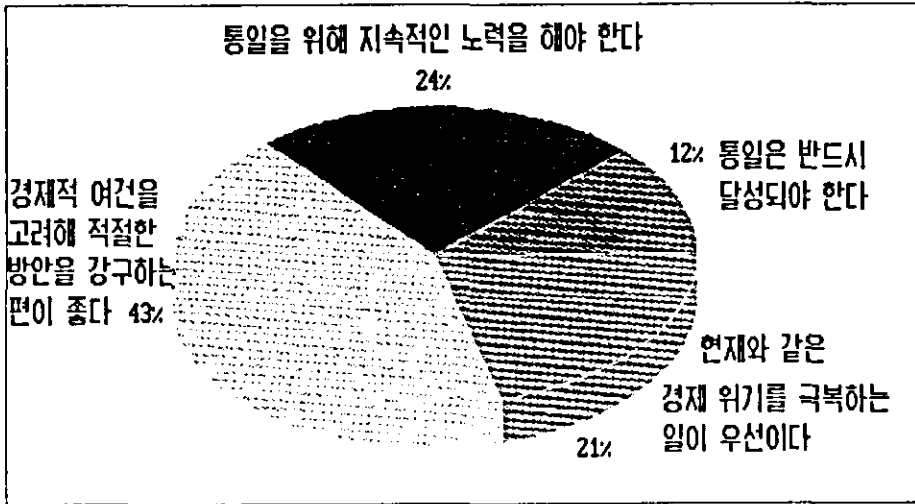
26) 매일경제신문, 1998년 8월 14일자.





〈그림-1〉 정부가 추진해야 할 역점 과제

여기서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이제 남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이나 원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민간차원의 대북진출과 경제교류는 그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의 접근은 경제교류에 따르는 직접적 경제이익도 중요하지만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남북한 단일경제공동체 형성에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향후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갑작스런 상황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2〉 경제적 위기 하에 통일에 대한 인식

## 제 IV 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통일정책의 방향

### 1. 민간참여 기회의 확대

#### (1) 민간참여의 배경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필수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따른다. 국민은 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가능한 한 적은 비용부담으로 제공받기를 원한다. 또한 분명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의 정부가 당면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자연히 공공서비스 공급에서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전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공공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최근 민간부문의 활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분명히 현재 겪고 있는 극심한 경제적·사회적 변화는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안겨 주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변화과정에 성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분명히 고통스러울 것이며, 실패한다면 더욱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든지 그것이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들의 생활과 미래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정부활동의 과정에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 이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sup>27)</sup> 정부의 재정활동에서 민간의 참여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대두되고

---

27) Kim Quaile Hill & Kenneth R. Mladenka, Democratic Governance in American States & Cities, Pacific Grove, California :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92, pp.23~25.

있는 민간부문의 활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즉, 민간부문의 활용은 본질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고, 보다 능률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시장기제(market mechanism)에 익숙한 민간영역을 하나의 공공정책적 이용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Ahron은 이러한 민간부문의 활용이 대두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sup>28)</sup>하고 있다. 첫째, 대처나 레이건의 집권 이후 보수주의의 영향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된 점이다. 둘째, 민간부문의 활용이 서로 다른 정치적 행위자들의 권력변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치적 우선 순위의 변화가 민간부문을 활용을 추진케 하는 힘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민간부문의 활용에 대한 설명은 권력에 대한 정치적 경쟁이론과 자원에 대한 통제에서 찾아진다는 것이다. 넷째, 평판이 나쁜 의사결정에 대한 정치적 반응을 피하려는 욕망이 민간부문을 활용의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배경에 더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적 압박은 공공서비스에 있어 민간부문의 활용 대안을 찾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sup>29)</sup> 1980년대 이후 영미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기 시작하여 전세계적인 붐을 형성하고 있는 행정개혁은 이러한 의미에서 그동안 정부가 독점하여 오던 영역을 민간에게 개방하고, 정부실패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보정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도 민간 자율성 없이는 더 이상 발전을 기약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관존민비적 사고가 잔존해 있고 '정부가 아니면 안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는 정치권을 개혁하고, 민간 자율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

---

28) Yair Aharon, "Why do Governments Privatized?" in R. M. Burton · J. D. Forsyth · B. Obel(eds.), Organizational Responses to the New Business Conditions : An Empirical Perspective, Amsterdam : Elseveer Science Publishers, 1989, pp.17~19.

29) 정순관, "공공서비스공급 시장모형의 이론적 준거의 틀," 「한국정책학회보」(제6권 제2호, 1997), p.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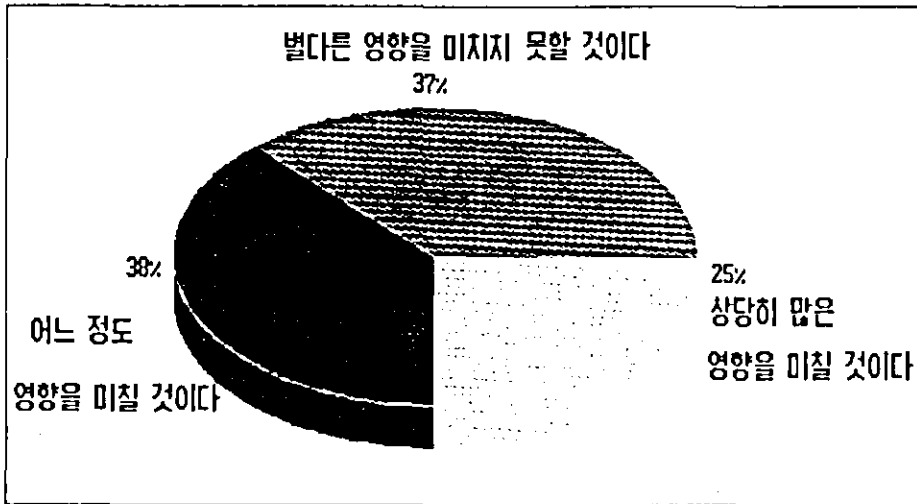
하지 않을 수 없다.

## (2) 통일정책상 민간참여의 의의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는 일이다. 단순히 영토적 차원에서 분단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의 통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분단을 극복한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은 우선 남북한 주민들간의 삶의 수준과 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며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이질감을 극복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립하는 어려운 작업이라 할 것이다.<sup>30)</sup> 특히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감의 극복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일정책의 운용으로는 곤란하다.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에도모될 때에 비로소 통일을 위한 온전한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일정책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 온 측면이 강했다. 다만 1990년대 이후에 이르러 급격한 사회 변화, 한국의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 민간에 의한 통일운동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정치 행태로 인해 단순히 정부정책의 피동적인 대상자에 불과했던 민간이 민주화의 과정과 더불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민주화의 열기는 민간의 통일운동의 새로운 기회가 가능성을 불어 일으켰고 이러한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 기운의 확산은 한국 사회의 보수적 인식의 폐쇄성을 개방성으로, 변혁적 통일 운동의 무모성을 참여적 대안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시키고 있다.<sup>31)</sup>

30) 김영하, 앞의 논문, p.13.

31) 박찬석, 앞의 논문, p.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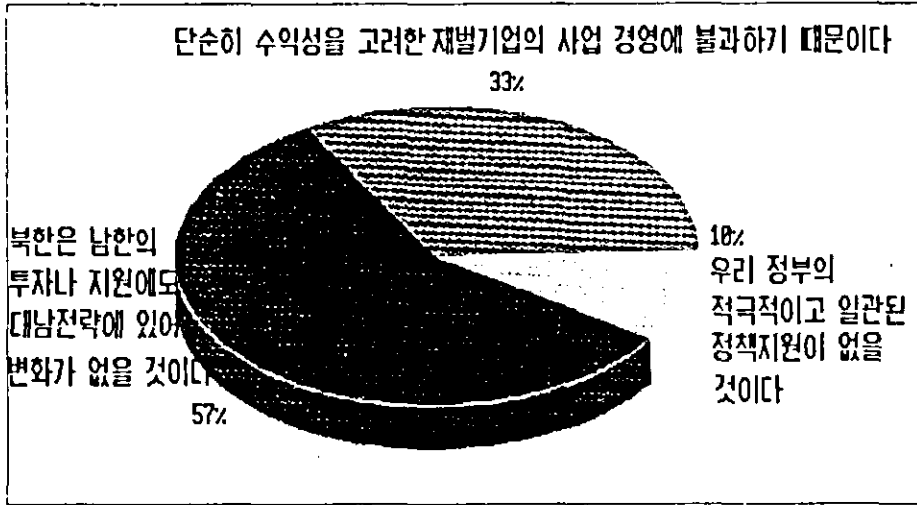


〈그림-3〉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인식

위의 〈그림-3〉은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이 통일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설문 결과 현대 그룹의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이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이 63%에 해당하였다. 이 설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기업을 통한 통일정책 상의 민간참여는 어느 정도 통일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한간의 이질감을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현대그룹의 금강산 개발이 통일에 대해 실제로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37%에 해당하는데 〈그림-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민간기업의 진출이 북한의 대남전략이나 노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한다는 점에 가장 큰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해 여러 차례 대북지원과 투자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잠수정 침투사건과 무장공비침투 사건에서 나타났듯 그들의 대남전략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분명히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의 대북진출이 그들의 대남전략이나 노선의 변화에 급진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는 없고 다만 남북한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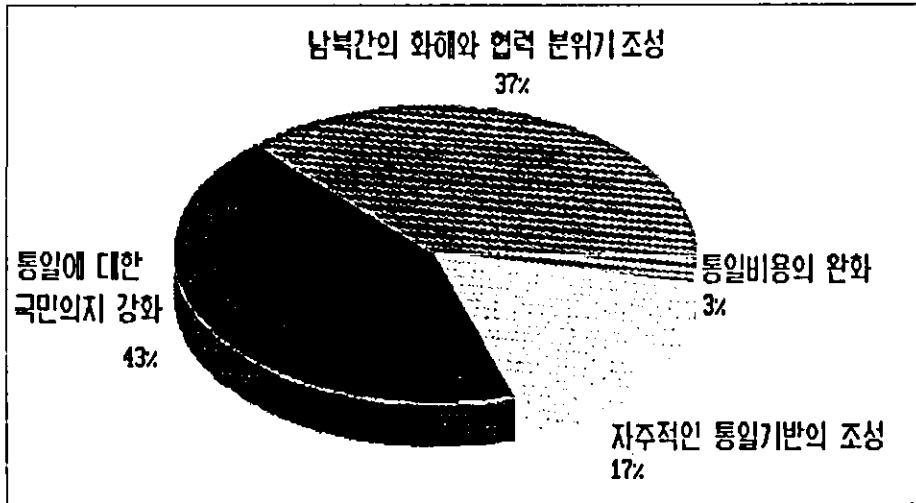
· <그림-4> 금강산 관광사업이 통일에 대해 효과를 타내지 못하는 이유

### (3) 통일정책상 민간참여의 기대효과

- 지금까지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정체상태에 놓이게 된 원인에는 남북한간의 관계가 긴장 및 악화된 정치적 이유와 함께 경제교류가 북한에 미칠 정치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북한 정부의 의구심과 불안감에 기인하여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한과의 직접교류를 기피하고 불가피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홍콩 등을 경유하는 간접무역 원칙을 채택하여 왔다.<sup>32)</sup> 북한이 그동안 개방정책을 이룰 수 없었던 근본원인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달성

32) 김홍락, "김일성 사망후의 남북한관계 현안과 개선방안,"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안정적 변화유도('97 세계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 결과보고서), 서울 : 통일원, 1997, p.20.

이라는 정책목표가 국가이념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도입이나 사유재산의 도입 등 본격적인 경제개혁의 추진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진-선봉지역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경제개방이 이루어져 적극적인 외국자본의 유치가 곤란했던 것이다.<sup>33)</sup>



〈그림-5〉 민간기업의 대북진출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현재 남한이 경제적 위기에 시달리는 것 이상으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폐쇄적인 경제체제가 더욱 완화되어 가고 있고, 해외자본의 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협력이나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의 의미 이상의 것을 지닌다. 〈그림-5〉에서 나타난 설문 결과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진출한 것과 같이 민간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는 것이 통일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 피설문자 중 대부분이 민간기업의 북한진출은 통일에 대한 국민의지를 강화

33) 위의 논문, pp.28~29.



하고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 2. 민관협력의 증진을 위한 역할 배분

### (1) 경제위기 하에서의 민관협력의 의의

흔히 재정자원을 피로 비유한다. 특히 민간의 피는 정부의 피보다 진하다. 민간은 시장에서 경쟁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이 활기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수혈이 필요하다.<sup>34)</sup>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사업을 쉽게 모색할 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정경유착의 심각한 폐해로 인해 국민 일반의 불신을 증대시켜 왔기 때문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재벌의 형성과 성장은 우리 경제의 특징적인 구조를 규정하는 요인이 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배태되어 온 재벌문제는 1980년대 이후 가장 중요한 정치·경제·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 이후 우리 나라의 재벌은 지나친 독과점으로 자본주의의 장점인 시장경제에서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엄청나게 축적된 경제적 부를 부동산, 증권투기 등의 재테크에 이용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후발공업국가에서 선진국형 거품경제로 이끌어 왔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재벌들의 무모한 경영의 비관련 다각화와 해외 단기자본의 유치가 외환위기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이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다만 정경분리 원칙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면서 상황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금강산 관광사업과 대북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sup>35)</sup>

34) 배득중·김성수·유평준, 민간유치론, 서울 : 박영사, 1995, p.3.

35) 조선일보, 1998년 7월 16일자.

## (2) 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 현황과 전망

현재 남북한간의 물자교류와 대북투자(협력사업)가 현대·통일·한진그룹 등과 같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북한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정부의 몫으로 남아있다. 현재 정부는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과 함께 경수로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규모의 쌀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sup>36)</sup> 하지만 총체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한의 민간과 정부는 공히 북한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남한 정부는 아래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대북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①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유도하고, ②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③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잠수정 사건, 무장간첩침투 등과 같은 적대적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로 햇볕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상식적인 대남야욕의 표출과 경제적 위기 상황은 이러한 정책의 기조에 대해 많은 의구심과 비난을 낳고 있다. 분명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을 개방하고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적인 능력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논의가 종래의 통일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실현해 가지 위한 경제 회복에 총력을 두어야 한다. 현재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밝힌바 있다.

36) 최수영, "북한의 경제개방정책과 남북관계," 「사회과학」(제35권 제2호, 통권 제43호), 서울: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p.171.

〈표-6〉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현황

(‘95.6-’97.12)

연 도	지 원 품 목	금 액	비 고
1995	• 국내산 쌀 15만톤	2억 3,200만 달러	• 직접지원
1996	• 아동용혼합곡물	200만 달러	• WFP 경유
	• 국산분유 203톤	100만 달러	• UNICEF 경유
	• 기상장비	5만 달러	• WMO 경유
	소 계	305만 달러	
1997	• 아동용혼합곡물	1,000만 달러	• WFP 경유
	• ORS 공장 복구 비용	34만 달러	• UNICEF 경유
	• 중국산옥수수, 국산분유	1,352만 달러	• WFP 경유
	• 보건의료지원	130만 달러	• WHO, UNICEF 경유
	• 농약	50만 달러	• FAO 경유
	• 농지복구장지	120만 달러	• UNDP 경유
	• 국제적십자사 모니터 비용	50만 달러	• 한적 경유
	소 계	2,737만 달러	
	총 계	2억 6,242만 달러	

(자료 : 통일원, 「통일백서」, 1997, p.196)

민간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은 북한 식량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때를 같이 하여 실시되어 왔다. 현재 정부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창구를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단체들간의 무질서한 경쟁적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역기능을 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 나온 조치였다. 97년 12월까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규모는 2,229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자료 : 통일원, 「통일백서」, 1997, p.203)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어느 정도의 감소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3) 경제적 위기하의 민간과 정부부문의 역할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민간과 정부는 현재까지 정부의 주도에 의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에서 초래된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지원이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대북지원으로 이루어졌던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방향을 다시금 재검토 해 보아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에 착수하여 9월 하순부터 금강산 유람선이 운행될 계획이다. 이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과는 달리 북한과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유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북한과 남한 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현재 남한은 대규모의 경제구조의 조정과 함께,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으로의 산업이전이 진지하게 논의되어 왔고, 현대 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의 유치는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규모의 실업난과 함께 경기침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남한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재정구조가 취약한 남한의 부실 재벌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물론 정부는 민간기업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간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적·행정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과밀한 경쟁의 유발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대규모 유출에 따른 경기침체의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국내 경제적 여건과 함께 대북진출 기업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종래 기업별 중점 육성 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및 틈새 시장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차원에서는 무모한 경쟁을 자제하고 단순한 시장의 창출 외에 남북한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을 분위기를 조성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사명감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 제 V 장 요약 및 결론

현재 우리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시키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의 경우 자력갱생의 원칙을 바탕으로 자립경제 건설에 힘을 기울여 왔고, 남한의 경우 차관을 도입해 수출지향적 산업을 육성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경제적 폐쇄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고 1990년대 이후 대규모의 식량난에 허덕이면서 체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반면에 남한의 경우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가 비약적인 외형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재벌기업의 비관련 다각화 심화와 무리한 해외투자로 인해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특히 북한은 오래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남한을 비롯한 대외 환경의 악화는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잠수정과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는 등 적대적인 도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쌀의 무상지원과 같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적 위기 상황이 더 이상 이러한 조건없는 무상지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경제적 위기에 따른 정부의 재정위기에 대응해 그동안의 정부정책에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그룹이 금강산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남북경제교류는 제3국을 경유한 간접무역의 형태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의 심화는 더 많은 해외자본의 유치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직접적인 대북투자가 어느 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 그룹이 북한에 진출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다수의 민간기업이

북한에 직접교역을 추진하게 될 서막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적 위기에서 보듯이 그동안 재벌들 무모한 비관련 다각화를 벌여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칫 북한으로의 사업 진출이 과대경쟁으로 인해 기업의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남북한간의 경제적 위기가 더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과다경쟁이 유발될 수 있는 동종 사업진출의 제한, 자기자본비율 등을 고려해 대북진출 기업의 자격제한, 북한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정치적 논리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던 방식을 버리고, 사업의 타당성과 남북한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경제적인 논리에 입각해 민간기업의 북한진출을 지워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이 북한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남북한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므로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일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관주도에 의해 상징적인 의미에 그쳤던 통일정책이 민간이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그동안 정치적인 목적으로 통일정책을 이용하던 관행을 버리고, 실질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운태·오석홍 공저, 1996, 한국행정사, 서울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민병천, 1992, 신통일론, 서울 : 고려원
- 배득중·김성수·유평준, 1995, 민간유치론, 서울 : 박영사
- 정정길, 1998,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 정정길, 1994, 대통령의 경제리더십,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 통일연수원, 1995, 북한이해, 서울 : 통일원 통일연수원
- 통일원, 1997, 통일백서, 서울 : 통일원 통일정책실
- 김영하, 1997,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안,"  
통일정책·환경 I ('97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서울 :  
통일원
- 김준기, 1997, "북한경제의 개혁 : 동구권과 중국 경제개혁의 교훈,"  
「행정논총」(제35권 제2호, 1997.12), 서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홍락, 1997, "김일성 사망후의 남북한관계 현안과 개선방안,"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안정적 변화유도('97 세계한민족 통일문제 토  
론회 결과보고서), 서울 : 통일원
- 노중선, 1987, "분단시대에 있어서의 통일논의의 전개,"  
송건호 외, 변혁과 통일의 논리, 서울 : 사계절
- 라종일, 1997, "통일정책의 허와 실,"  
평화전략연구(참간호), 경북경산 : 경산대학교 평화전략연구소
- 박찬석, 1997, "민간 통일 운동의 주요 논의 동향과 통일 정책 수용여부  
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환경 I ('97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서울 :

통일원

서중석, 1995, "이승만과 북진통일 : 1950년대 극우반공독재의 해부,"

「역사비평」(1995년 여름호)

이영선, 1997, "통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영선 편, 통일준비, 서울 : 도서출판 오름

전홍택, 1997, "북한의 경제력 - 실상과 전망,"

북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서울 : 서울신문사 국제전략연구소

정순관, 1997, "공공서비스공급 시장모형의 이론적 준거의 틀,"

「한국정책학회보」(제6권 제2호, 1997)

주성환, 1996, "북한의 경제개혁,"

「민족통일연구」(제10집), 서울 : 건국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최배근, 1997, "통일한국의 경제체제 : '상호주의적 변혁'에 기초한 체제구상,"

한국문제연구원 편, 한반도통일론 : 전망과 과제,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최수영, 1996, "북한의 경제개방정책과 남북관계,"

「사회과학」(제35권 제2호, 통권 제43호), 서울 : 성균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윤병익, 1995,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통일문제 이해, 서울 :

통일연수원

합택영, 1996, "북한의 경제위기에 대한 실증적 고찰,"

「동북아연구」(제2권),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홍덕률, 1996, "통일후의 바람직한 기업구조 연구,"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96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II)), 서울 : 통일원



홍성후, 1993. "한국 통일정책 연구."

김계수 외, 한국정치연구의 대상과 방법, 서울 : 도서출판 한울  
매일경제신문, 1998년 8월 14일자.

조선일보, 1998년 8월 29일자.

조선일보, 1998년 7월 16일자.

### 국외문헌

Cobb, Roger W. and Charles D. Elder,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 the Dynamics of Agenda-Building.  
Boston : Allyn and Bacon, Inc.

Hill, Kim Quaile. & Kenneth R. Mladenka, 1992. Democratic Governance in American States & Cities. Pacific Grove, California : Brooks/Cole Publishing Co.

Aharon, Yair., 1989. "Why do Governments Privatized?"  
in R. M. Burton · J. D. Forsyth · B. Obel(eds.),  
Organizational Responses to the New Business Conditions : An Empirical Perspective. Amsterdam :  
Elseveer Science Publishers

## 별첨자료

### 설문조사에 관한 개관

- ▷ 조사기간 : 1998년 8월 3일 ~ 1998년 8월 21일
- ▷ 조사방법 : 피설문자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실시
- ▷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성 별	남 성 62%	여 성 48%		
연 령	20대 45%	30대 25%	40대 20%	50대 10%
학 력	고졸이하 5%	대졸(전문대 포함) 68%		대학원 이상 27%
직 업	생산직 6%	일반사무직 44%	주부 22%	학생 38%

### ▷ 설문조사표의 내용

1.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6대 국정과제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권위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전환
  - ②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 ③ 폐쇄적 민족주의에서 보편적 세계주의로의 전환
  - ④ 물질위주 공업국가에서 지식기반국가로의 전환
  - ⑤ 분열과 갈등에서 화합과 협력으로의 전환
  - ⑥ 남북대결주의에서 안보바탕 교류협력시대로의 전환
  - ⑦ 기타(                    )

2. 현재 우리는 총체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 하에서 남북한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통일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
- ② 통일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③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는 편이 좋다.
- ④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우선이다.
- ⑤ 기타( )

3. 현재 현대그룹을 중심으로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이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4-1번으로).
-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번으로)
- ③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번으로)
- ④ 기타( )

4-1. 현대그룹의 대북투자자와 지원 등 민간의 북한 진출에도 불과하고 통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① 단순히 수익성을 고려한 재벌기업의 사업 경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② 북한은 남한의 투자나 지원에도 대남전략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 ③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지원이 없을 것이다.
- ④ 기타( )

4-2. 현대그룹의 대북투자자와 지원 등 민간의 북한 진출이 어느 부문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 조성

- ② 통일에 대한 국민의지 강화
- ③ 자주적인 통일기반의 조성
- ④ 통일비용의 완화
- ⑤ 기타(                    )

5. 올해 집중 폭우로 인해 북한에 다시 대규모의 식량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에 대해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없다.
- ② 경제적 여건을 감안 대북지원을 자제해야 한다.
- ③ 적절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범위 한도에서만 지원해야 한다.
- ④ 군수물자로 전용되지 않는 한 지원해야 한다.
- ⑤ 조건없이 지원해야 한다.
- ⑥ 기타(                    )

## 대학생 통일논문집

---

---

1998년 12월 21일 인쇄

1998년 12월 23일 발행

발행처 **통일교육원 기획과**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901-7122 / FAX. 901-7024

인쇄처 **진명인쇄공사**

---

---

<비매품>

2